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2025. 8.

국정기획위원회

CONTENTS

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의의 01

1. 국정기획위원회의 출범 배경과 역할 3
2.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의의 4

Ⅱ. 이재명정부 국가비전·국정원칙·국정목표 11

1. 이재명정부 출범의 의의 13
2. 국가비전,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6

Ⅲ. 123대 국정과제 23

1. 국정과제 체계 25
2. 추진전략별 국정과제 26
3. 123대 국정과제 주요 내용 31

Ⅳ. 12대 중점 전략과제 177

1. 개요 및 추진방향 179
2. 중점 전략과제별 주요 내용 180

Ⅴ. 지역공약 추진방향 261

1. 현황 및 경과 263
2. 추진 원칙 264
3. 실천 방안 264

Ⅵ. 재정지원 계획 275

1. 개요 277
2. 재정투자 계획 278
3. 향후 계획 282

Ⅶ. 입법 추진계획 283

1. 의의와 필요성 285
2. 추진 방향 285
3. 입법 필요사항 286
4. 입법계획 관리·지원체계 287

Ⅷ. 후속조치 계획 289

1. 국정과제 추진체계 291
2. 국정과제 관리방안 292
3. 국정과제 공유·확산 293

[부록1] 대상별 과제

[부록2] '모두의 광장' 정책제안 국정과제 반영 현황

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의의

1. 국정기획위원회의 출범 배경과 역할
2.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의의

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의의

1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배경과 역할

□ 이재명정부 출범 시의 여건

○ 위헌적 비상계엄과 이에 대한 국민 저항 속에서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엄중한 국내외 환경**과 **분출하는 국민적 요구** 속에서 시작

- 우선 **무너진 국정 체계를 바로 세우고, 정치적 분열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국민통합, 민생 안정**과 **성장** 등을 동시에 이루어 내야 하는 과제 부여
- 대외적으로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탄탄한 국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한반도 번영**과 **평화공존**을 실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

○ 감당해야 할 과제가 많음에도 **긴급하게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 확보 곤란

-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혼란을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신속한 국정 체계 복원과 국정과제 수립 필요**

□ 국정기획위원회의 출범과 역할

○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임기가 시작된 이재명정부의 어려운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출범

○ 긴급한 국정 현안에 대응해야 하는 정부를 도와 치열한 논의와 소통을 통해 **5년간 국정운영의 청사진이 될 국정과제를 선정**

- 55명의 **기획위원** 중심으로 **전문 분야별 분과**를 구성했으며, **국민주권위원회** 및 **자문단**을 통해 전문가 의견과 함께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
-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선거 공약과 각 부처의 업무 계획을 종합하고,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은 물론 국민의 정책 제안까지 반영

○ 집중된 정부 권한의 분산과 기후 위기 대응, AI 대전환 등 시대적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검토도 진행

□ 국정기획위원회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국정기획위원회는 상황의 복잡함과 엄중함을 고려해 **국정운영의 방향과 과제를 신속하게 정립**하는 동시에

- 구체적 과제 실행 방법과 계획에 대해 **치열하면서도 최대한 효과적으로 논의를 진행**

○ 국정여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통해 **이재명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의 목표와 시점을 명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

2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의의

1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필요성

□ 국정운영의 길잡이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이재명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

○ 추진해야 할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과제 간 연계성을 파악하여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하기 위한 설계도

○ 실제 정책의 집행 단계에서 국정목표와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책들이 이재명정부의 국정 방향에 맞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유용한 도구

□ 국정운영의 청사진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그리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분들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이재명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청사진**

○ 국가의 주인인 국민과 국회, 행정부, 기업과 단체 등 각 주체에 향후 국정운영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국정운영의 예측 가능성 제고**

○ 5년간 국정운영의 주안점과 계획을 공개함으로써 국민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과 정부 간 소통 토대 제공**

□ **국정관리와 평가의 기준**

○ 각 부문의 과제들이 국가비전과 국정목표에 따라 일관성 있게 효과적, 통합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기준

○ 국정 여건 변화에 따라 국정운영 방향의 전환 또는 주요 과제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화 방향과 수준을 설정**하는 데 도움

◈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정부가 **무너진 국정 체계를 신속하게 재건**하고, 분출하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 성장 기반 확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필수적

2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

□ **국정기획위원회가 직면한 복합적 요구**

○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급작스럽게 국정운영을 맡게 된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좌우하는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완결성**과 함께 인수위 없이 출발하는 상황을 고려한 **신속성**이 긴요

○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로서 **국민의 참여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동시에 당면한 민생 안정, 통상 문제 대응 등 현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으로 인해 계획의 **정합성**과 **전문성**도 요구

□ **전문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국정기획위원회**

○ 전문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위해 **적재적소에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조직을 구성**했고, **분과위와 TF, 특별위** 운영을 병행

- 국정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총 7개 분과**를 구성해 전문적·체계적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

- ▲국가비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정부조직 개편 ▲국민주권 강화와 통합 ▲조세·재정 제도 개편 ▲규제 합리화 ▲인공지능 ▲기본사회 ▲사회연대경제 ▲기후·에너지 **총 10개 TF**를 구성·운영

-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위해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 균형성장 전략과 지역공약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추진

○ 속도감 있는 국정운영 계획 수립을 위해 기관 보고, 분과 토론, 분과 간 토론, 전문가·관계자 간담회 등을 동시 진행

- 총 108회에 걸쳐 업무 추진 현황과 공약 이행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8회의 전체 회의, 707회의 분과별 회의, 200회의 TF 회의를 개최

- 각 분과 자문위원과 전문위원 간 비공식 토론도 상시 진행

- 이행계획 수립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주행 기술개발(현대차 남양연구소), AI 데이터 센터(삼성 SDS), 방위산업 강국(HD 현대중공업), 재난·안전(이태원 참사 현장) 등의 정책 현장도 방문해 생생한 의견 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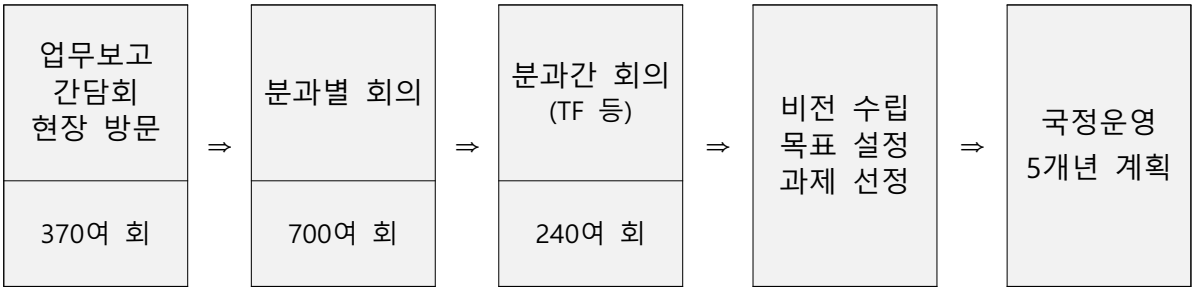
□ 국민과 당·정·대의 역량을 모은 협업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국민주권 확립을 위한 소통 노력**으로 국정기획위원회 아래에 **국민주권위원회**를 두고 '**모두의 광장**'을 통해 **총 1.4만여 건**의 **국민제안**을 검토해 **국정운영 계획**에 반영

○ 계획의 전문성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과 기획위원과 전문위원은 의정 활동을 통해 전문성이 검증된 **국회의원**과 각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한 **전문가**, 정책 실무에 뛰어난 **각 부처 국장급**을 중심으로 위촉

○ 이재명정부를 구성하는 3대 축인 여당, 대통령실, 정부를 대표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해 당·정·대의 모든 역량을 집중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과정>



□ **새정부 국정과제 선정**

○ 국정기획위원회 7개 분과별로 소관 공약을 분석, 공약의 내용과 정책 분야,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국정과제**로 재구성

○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뿐만 아니라 선거 유세 과정에서 제시한 분야별 **정책발표문**까지 자세히 검토하여 국정과제에 반영

○ 각 분과별로 부처 업무보고,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심층토론을 통해 **공약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추가

○ 선거 과정에서 각종 협회·단체와 체결한 **정책협약** 및 **야당**이 제시한 공약과 정책제안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도 충실히 검토하여 반영

○ **국민주권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 중 공약과 관련성이 높거나 정책화가 필요한 사항을 국정과제에 포함

○ 분과별로 제안한 국정과제안은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의 종합 검토,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이행가능성**, **과제 간 정합성** 등을 검증

○ **비전,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체계를 구성하고, **123대 국정과제**를 내용에 따라 **23대 추진전략**별로 배치하여 국정과제 체계 완성

참고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제안 및 국정과제 반영 현황**

□ (구 성) 위원장(신필균·조승래), 부위원장(송창욱), 운영위원, 지원기획단

*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참여기구로서 '국민주권위원회' 설치·운영

□ (제안현황) 6.18일 개통 이후 7.31일까지 **접수된 의견 총 1,809,829건 중 민원 1,796,241건, 정책제안 13,588건**

○ AI 정책제안 분석 결과 산업·과학기술·미래직업(22%), 복지·노동·건강생활(18%), 교육·문화·환경(12%), 법질서·행정·청렴사회(10%) 등 분포

□ (제안검토·관리) 접수된 국민의 모든 정책제안에 대해 처리여부 및 결과를 회신(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회신)

○ (토론) '모두의 토론' 게시판 운영하여 토론의제 매일 3~5건 상정 → 총 146건 토론 실시(국민참여 추천수 35,687건)

○ (부처검토) 소관 부처의 검토를 거쳐 국민께 답변 회신 → 총 59개 부처에 9,417건 검토요청 및 답변 4,189건 회신

○ (분과검토) 국정과제 반영 위해 주요 정책제안을 선정하여 매주 2회 소관 분과에 검토보고서 제공 → 총 259건의 검토보고서 송부

□ (국정과제 반영) 국정기획위 분과 및 소관 부처 등의 검토를 거쳐 **총 237건을 국정과제에 반영**(및 수정반영)*

* (사례) 청년 자산형성제도 부활 요청(국정기획), 배달앱 수수료 완화(경제1),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경제2), 느린학습자 청소년 자립 지원(사회1), 교권 침해 방지대책 요구(사회2), 마약청정국가를 위한 강력한 정책 요구(정치행정),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외교안보) 등

□ 국민주권위 향후계획

○ 접수된 정책제안에 대한 토론, 검토, 회신 등 마무리 : ~8.14

※ '모두의 광장'을 통한 정책제안 접수 : ~7.31

3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특징

□ 국민 중심 계획

○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자 국민주권 정부로서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 정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국정운영 패러다임 전환**

○ 국정과제 설정과 이행계획 수립의 최우선 기준은 '**국민**'이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께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국정과제를 검토·조정

□ 행동 지향형 계획

○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추어 부문별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세부 정책을 제시**

○ 국가비전과 국정원칙, 국정목표 그리고 부문별 과제, 재정 및 입법계획과 함께, 주관부처 등 추진 주체까지 명시해 **체계화**하고 **실행력 담보**

○ 정부가 역점을 두고 성과를 낼 **중점 전략과제**를 별도로 설정해 세부 과제와 추진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국민과 함께 만드는 계획

○ 국민주권위원회가 운영하는 '**모두의 광장**'과 현장 소통 플랫폼인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에서 모인 국민 정책 제안을 검토해 국정과제에 반영

□ 국민 대상 공개적 약속

○ 국민 참여 속에 당·정·대가 함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해 공개함으로써 정부와 여당에 **국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실천할 책임과 의무 부여**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이 참여해 만든 행동 지향형 국정운영 계획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약속**

Ⅱ.

이재명정부 국가비전, 국정원칙, 국정목표

1. 이재명정부 출범의 의의

2. 국가비전,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Ⅱ. 이재명정부 국가비전, 국정원칙, 국정목표

1 이재명정부 출범의 의의

1 한국 사회의 선 자리

□ 한국사회 압축 발전 과정에서 **국민국가 형성**, **산업화**, **민주화** 등 **시대적 국면 교체**

[시대적 국면의 변화]

시 기	시대 규정	핵심 이념
1919년 체제	3.1운동/임시정부	민주공화제
1948년 체제	정부수립/분단체제	반공주의
1961년 체제	산업화	발전주의
1987년 체제	민주화	(절차적) 민주주의
1997년 체제	세계화	신자유주의
2025년 체제	국민행복	(주권자) 민주주의

□ **광복 80년 대한민국의 두 얼굴**

○ 불과 80년 만에 전쟁과 가난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선진국의 문턱**을 **통과**

- 경제적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례없는 성취
- **K-컬처**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문화국가의 상징으로 각인

○ 그러나, 이러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

- 오늘날 대한민국은 **저성장**과 **불평등 심화**, **정치의 실종**과 **민주주의의 위기**, **사회갈등**의 증폭,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의 **위기**, **한반도의 긴장** 증대라는 문제적 상황에 직면

□ 지구적 차원의 시대적 과제

○ 지구적 차원에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지난 17년은 대침체 이후 **'암중모색'**의 시기

※ ('08년 이후 지구사회 변동 주요 풍경) ①경기침체와 뉴노멀의 시작 ②AI 혁신과 산업구조의 변동 ③미·중 경제전쟁의 개막과 신냉전 질서로의 재편 ④포퓰리즘의 발흥과 민주주의의 위기 ⑤불평등 심화와 사회갈등의 증대 ⑥정보사회의 진전과 '탈진실(post-truth)' 시대의 도래 ⑦지구적 인구 증가와 100세 시대의 시작 ⑧기후위기 심화와 지구민주주의의 요청 ⑨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위험의 증가 ⑩개인주의와 부족주의의 동시 강화 등

○ 현 시대를 규정하는 특징은 **'거대한 후퇴'**와 **'끝없는 변화'**의 공존

- 세계질서가 후퇴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모습은 동요하는 **세계화**와 **불평등의 강화**, **포퓰리즘**의 발흥과 **민주주의의 퇴조**, 연대와 통합의 시민문화의 고갈 등으로 표출

- 한편으로 **AI 기반**의 **과학기술혁명의 가속화**, **플랫폼 경제**의 만개,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집단지성의 영향력 강화** 등으로 경제는 **'혼동 속 성장'** 중

□ 지구적 시대정신의 모색

○ 거대한 후퇴에 맞서는 **'새로운 회복'**이 필요

- **저성장**과 **불평등의 강화**를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만연한 불안과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포용적 성장**과 **불평등의 해결**이 절실한 **시대적 요구**

○ 끝없는 변화에 맞서는 **'민주적 혁신'**이 필요

- 경제 측면에서는 **과학기술 혁명**과 이와 연관된 신경제에 내재한 승자독식 경향을 완화할 **제도개혁** 필요

-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탈진실과 포퓰리즘에 맞서서 **다원적 공론장**과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사회의 자율적 활력**을 북돋울 필요

2 한국 사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

□ 한국 사회의 시대적 과제

○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 민주화 이후 보수의 '선진화'와 진보의 '복지국가' 담론은 현 한국사회가 직면한 **AI 혁신**과 그에 따른 **일자리의 불안정성 증대, 저성장과 불평등 심화, 인구위기·초고령화** 문제, **기후위기** 가속화 등 시대적 문제 해결에 한계

- 더욱이 우리 사회는 '**피크 코리아**'라는 경제적 두려움, '**늙어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적 불안, '**시대 역행적인 계엄**'이라는 정치적 위기 직면

○ **2025년 체제**는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국가적 수준의 **목표**로 설정 필요

- **거시적·미시적 불안 해소**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경제성장**과 승자독식의 무한 경쟁구조를 낳는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의 해결**이 중요

- 저성장·저출생, 급변하는 대외환경 극복을 위해 **침체된 경제 회복**과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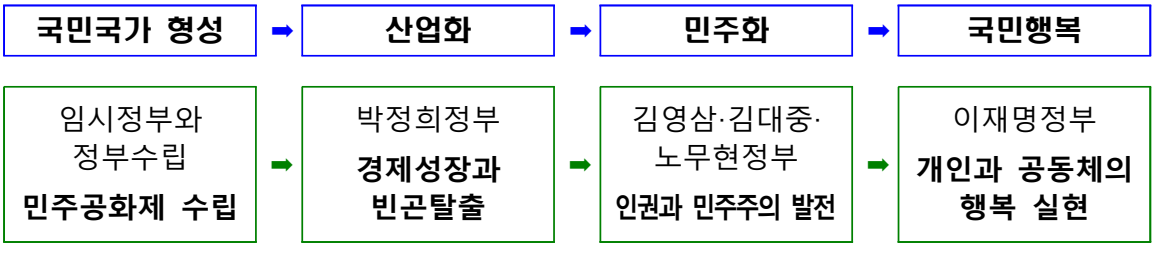
- 나아가 **국민 모두가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경제구조**를 조성하고, 구조화된 **불평등**을 **완화**할 **사회경제적 전환** 필요

○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누구나 **존중**받고 서로 **화합**하는 토대 위에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

□ 한국 사회의 새로운 시대정신

○ **이재명정부의 역사적 소명**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성장과 빈곤 탈출'과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성장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국민행복의 실현'**

[시대정신의 역사적 변천]



2 국가비전,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 국가비전

국가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 왜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가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요한 시대적 변화의 하나는 '국가의 시대'에서 '**국민의 시대**'로의 변동

- 지능정보사회의 등장 및 진전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개인들의 능동적 참여와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시대'와 '주권자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 제공

['국가의 시대'와 '국민의 시대'의 특징과 의미]

구분	국가의 시대	국민의 시대
시대 규정	민주화	지능정보화
국가의 주체	특권 엘리트 중심	평범한 국민 주도
작동 원리	관료제 기반	집단지성 기반
역사적 사건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2025년 빛의 혁명
국정운영 패러다임	국가 중심의 국정운영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
사회발전 패러다임	양적 성장 위주의 국가발전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증진
국정운영 원리	통치(government)	협치(governance)
정부-국민 관계	수혜자·소비자로서의 국민	참여자·협력자로서의 국민
정책 과정	정부의 일방적 추진	협력적 문제 해결
참여방식	제한적 참여	참여와 숙의의 일상화
사회적 관계	파편화된 개인	네트워크로 연결된 개인
문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연대적 개인주의

○ 이재명정부는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을 **국정운영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의 구현 추구

- 국민주권은 공동체 대한민국 의사 결정의 최종적 지위와 권위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적 원리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제2항)

○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국민 모두**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체**임을 명확화

- 한국 사회가 그동안 쌓아 올린 경제적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의 성취, K-컬처의 세계적 도약은 어느 한 집단의 독점물이 아닌 시민, 노동자, 농민, 기업, 관료, 정치인 등이 함께 축적해온 성과

- 1997년 외환위기 당시 350만 명의 자발적 **금 모으기 운동** 동참,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서 보여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은 국민이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위기 극복의 실질적 주역**임을 확인

○ 나아가 2025년 평화적 방식으로 계엄을 물리친 '**빛의 혁명**'은 **국민**이 국난의 순간에 스스로 **헌법적 질서를 지켜낸 주체**임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

- 세계가 직면한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K-민주주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시키며 세계인에게 뚜렷한 모범으로 평가

○ 이런 의미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국민이 이루어놓은 성취 위에서 그간 한국이 추구한 '추격', '모방'의 발전모델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새로운 표준'**이 되어 **세계의 미래를 주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시대적 열망**을 표현

○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지향

- 국민 개개인이 국정 전 과정에 참여하여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

○ 아울러,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국민 모두의 정부를 추구하며, 분열과 적대의 정치를 넘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차이를 좁히고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며 사회갈등을 조정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새로운 정치 실현

□ 왜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인가

○ 한국 사회는 성공적인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적 현실에 직면

- **불평등 구조화, 저출생·고령사회 가속화, 공동체 해체** 등으로 인한 불안, **AI시대** 개막, **기후위기** 심화, 탈진실 시대 도래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 이러한 상황 아래서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는 낮은 수준**

- OECD 국가 중 **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고, 산업재해사망률도 매우 높은 수준이며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

- 경제지표 세계 순위는 상위권에 해당하는 반면, 행복 지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이나 경제력에 비해 행복감이 낮은 상황

[한국의 행복지수 순위]

항목	세계 순위		지표 (2025년)
	2024년	2025년	
행복 점수	52위	58위	주관적 삶의 만족도 평가 (6.038점, 10점 기준)
1인당 GDP	25위	21위	경제적 풍요 (51,099달러, 구매력 평가(PPP) 기준)
사회적 지지	83위	84위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도와줄 친척·친구가 있는가 (78.7%)
선택의 자유	99위	104위	인생에서 무엇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만족하는가 (75.6%)
관용	46위	55위	최근 수개월 내에 기부한 적이 있는가 (34.1%)
부패 인식	88위	54위	정부·기업에 부정부패가 널리 퍼졌다고 여기는가 (72.7%)
긍정적 감정	-	111위	일상에서 즐거운 기분을 느끼는가 (58%)

* 자료: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SDSN), 「World Happiness Report 2024, 2025」 (갤럽 세계여론조사 2021~2023년, 2022~2024년 데이터 평균. 143개국, 147개국 대상)

○ 양적인 성장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높이는 국가 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

○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 추구**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국가 정책의 궁극적 목표와 지향을 제시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

○ 행복은 물질적 풍요와 마음의 풍요가 결합할 때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혼자보다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증대

-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실현함과 동시에 '각자도생(各自圖生)'을 넘어 '**공존동생(共存同生)**'을 시대적 가치로 추구

○ 이는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삶**의 **보장**과 **역량의 발현**, 이를 통한 **행복증진**을 국가정책의 목표와 성과의 중심에 놓는 새로운 사회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

○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형평성 제고, 일과 삶의 균형, 건강, 안전, 환경, 사회적 관계망** 등 **삶의 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목표의 전환을 의미

-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선순환이 필요하며, '질적인 경제성장'과 '질적인 사회발전'으로 정책목표의 전환을 요구

○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조성하기 위해 행복, 삶의 질 추구라는 새로운 국정방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원배분 구조**도 **개편**될 필요

- 정부는 행복과 삶의 질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결정 및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설정

○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시대의 '민주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의 물질적·정신적 행복 구현'**을 이뤄내는 것이 이재명정부 **국정철학의 핵심 요소**

○ 요컨대, 이재명정부의 국가비전은 **헌법 제1조**와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의 **헌법 정신**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미

2 3대 국정원칙

3대 국정원칙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 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인가

○ 첫째, 21세기는 소통보다 '**경청**'**의 시대**로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 추진

○ 둘째, ‘**공정**’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철학의 핵심 원리**로 공정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 추진

○ 셋째, **국정 추진의 핵심 방법론**은 문제 해결의 ‘**실용**’으로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추진

① 경청과 통합

○ (**경청**)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공공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 민주주의**’를 현대 **정치의 핵심 원리**로 강조

- 구체적인 **민생 현장**으로부터 들려오는 다양한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국정 추진 필요

○ (**통합**)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동일성은 더 이상 통합을 보장하지 않으며, 에밀 뒤르케임(Émile Durkheim)은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 속에서 **상호 의존적 관계에 기반**하여 **결속**을 이루는 **통합**을 강조

- 분열과 갈등을 넘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공동체의 가치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 추구

② 공정과 신뢰

○ (**공정**) 존 롤즈(John Rawls)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사회 제도의 제1의 덕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필요

○ (**신뢰**) 로버트 퍼트남(Robert Putnam)은 신뢰를 규범, 네트워크와 함께 ‘**사회 자본**’**의 핵심 요소**로 파악하고, 이 사회 자본이 경제와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를 이룬다고 주장

- 이재명정부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를 강조하고, **책임지는 국정**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를 지향**

③ 실용과 성과

○ (**실용**) 정약용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실상(實狀)을 살피고 실제(實際)에 따라 행해야 한다'는 **실사구시**(實事求是)를 강조하였고, 존 듀이(John Dewey)는 '이론은 문제를 다루는 도구'일 뿐이고, 고정된 이념보다 **유연한 문제 해결의 실용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

- 복합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혁신**함으로써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용적 정책**을 추진

○ (**성과**) 정치는 객관적 판단과 책임성을 발휘하여 현실적 성과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필요

※ 막스 베버(Max Weber), '정치의 치명적인 과오는 객관성의 결여와 무책임성에 있음'

- 이재명정부는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를 강조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중심의 국정운영을 추진

3 5대 국정목표

5대 국정목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정치적·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복원**하여 **국민통합의 정치와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 국민이 배제된 정치, 분열을 조장하는 권력을 탈피하여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치 시스템을 확립하여 '두 국민(two nations)'을 '**한 국민(one nation)'의 공동체**로 **통합** 추구

②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한국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기간산업이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성장의 축이 흔들리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 AI를 위시해 에너지·바이오·문화산업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산업 혁신**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의 시대'로 전환

③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지역간·계층간 불평등**을 **해결**하여 모두가 함께 잘사는 균형성장을 이루는 것은 절실한 시대적 요구

○ **성장**은 일부의 특권이 아닌 **모두가 누려야 할 기회**

-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공정 경쟁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와 노동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지향

④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가며 미래를 꿈꾸는 기본적 삶을 위해 소득·주거·의료·돌봄·교육을 보장하여 **모두가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

○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여 그 속에서 각자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

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 **급변하는 21세기 세계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은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평화와 번영의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는 **전략적인 행위자**가 될 필요

○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안정적 정착을 추진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당당하고 실용적인 외교**를 펼치며, 국제 상생·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지향

Ⅲ.
123대 국정과제

1. 국정과제 체계
2. 추진전략별 국정과제
3. 123대 국정과제 주요 내용

Ⅲ. 123대 국정과제

1 국정과제 체계

□ 국가비전 – 5대 국정목표 –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

○ 국가비전 및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23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추진전략별로 핵심정책을 **123대 국정과제**로 선정

국가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원칙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국정목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추진전략	1.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2.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3.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1. AI 3대 강국 도약 2.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3.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4.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5.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1.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2.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3.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4.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1.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2. 내 삶을 돌보는 복지 3.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5.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6.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7.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8.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1.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2.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3.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123대 국정과제	19개 과제	29개 과제	23개 과제	37개 과제	15개 과제

2 추진전략별 국정과제

국정목표 ❶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주관부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19개)	■ 전략 1 :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국정01]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국조실
	[국정02]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국방부
	[국정0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법무부
	[국정04]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경찰청
	[국정05]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감사원
	[국정06]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법무부
	[국정07]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방통위
	[국정08]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선진국	인권위
	■ 전략 2 :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국정0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국조실
	[국정10]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
	[국정11]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보훈부
	[국정12]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보훈부
	■ 전략 3 :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국정13]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국정14]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행안부
	[국정15]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	국조실
	[국정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권익위
	[국정17]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기재부
	[국정18]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	기재부
	[국정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국조실

국정목표 ❷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주관부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29개)	■ 전략 1 : AI 3대 강국 도약		
	[국정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	과기정통부
	[국정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과기정통부
	[국정22]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과기정통부
	[국정23]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사회' 실현	과기정통부
	[국정24]	세계 1위 AI 정부 실현	행안부
	[국정25]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개인정보위
	■ 전략 2 :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국정26]	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과기정통부
	[국정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과기정통부
	[국정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과기정통부
	■ 전략 3 :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국정29]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산업부
	[국정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산업부
	[국정31]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국토부
	[국정32]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복지부
	[국정33]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로 내수·수출 활성화	기재부
	[국정34]	제3벤처 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중기부
	[국정35]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중기부
	[국정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국조실
	[국정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산업부
	■ 전략 4 :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국정38]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축	산업부
	[국정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산업부
	[국정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환경부
	[국정41]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산업부
	[국정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환경부
	[국정43]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환경부
	[국정44]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환경부
	[국정45]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환경부
	■ 전략 5 :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국정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금융위
	[국정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금융위
	[국정48]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금융위

국정목표 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주관부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23개)	■ 전략 1 :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정49]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행안부·국토부
	[국정50]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토부·행복청
	[국정51]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국토부·산업부
	[국정52]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행안부
	[국정53]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행안부·기재부
	[국정54]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행안부
	[국정55]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교육부
	[국정56]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해수부
	[국정57]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국토부
	■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국정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금융위
	[국정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금융위
	[국정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기재부
	[국정61]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중기부
	[국정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국토부
	[국정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국토부
	■ 전략 3 :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국정64]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국정65]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
	[국정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위
	[국정67]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중기부
	■ 전략 4 :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국정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농식품부
	[국정69]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농식품부
	[국정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농식품부
	[국정71]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해수부

국정목표 ❹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주관부처
기본이 튼튼한 사회 (37개)	■ 전략 1 :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국정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행안부
	[국정73]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행안부
	[국정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법무부·경찰청
	[국정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고용부
	[국정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해수부
	■ 전략 2 :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정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복지부
	[국정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복지부
	[국정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복지부
	[국정80]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농식품부
	[국정81]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기재부
	[국정82]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	금융위
	■ 전략 3 :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국정83]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복지부
	[국정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복지부
	[국정85]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복지부
	[국정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
	■ 전략 4 :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7]	아이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복지부
	[국정88]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여가부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국조실
	[국정90]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복지부
	[국정91]	인구가족구조 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복지부
	[국정92]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고용부
	■ 전략 5 :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국정93]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고용부
	[국정94]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부
	[국정95]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고용부
	[국정96]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고용부
	■ 전략 6 :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국정97]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가부
	[국정98]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여가부
	■ 전략 7 :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국정99]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교육부
	[국정100]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부
	[국정10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교육부
	[국정102]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육부
	■ 전략 8 :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국정103]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문체부
	[국정104]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문체부
	[국정105]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문체부
	[국정106]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문체부
	[국정107]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	문체부
	[국정108]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방통위

국정목표 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주관부처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15개)	■ 전략 1 :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국정109]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	국방부
	[국정110]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부
	[국정111]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	국방부
	[국정112]	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국방부
	[국정113]	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강국 진입	방사청
	■ 전략 2 :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국정114]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통일부
	[국정115]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통일부
	[국정116]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국정117]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통일부
	[국정118]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통일부
	■ 전략 3 :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국정119]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외교부
	[국정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외교부
	[국정121]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외교부
	[국정122]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추구	외교부
	[국정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외교부·동포청

3 123대 국정과제 주요 내용

국정목표 ❶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전략 1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 12·3 비상계엄으로 드러난 **권력 사유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은 전 국민적 실망과 분노로 연결, 결국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진정한 국민주권정부의 수립에 대한 열망**으로 귀결

○ 이재명정부는 그 뜻에 따라, 국가 위기 재발을 막는 **새로운 헌법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기관이 권력 사유화에 동원되는 흑역사를 방지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실시하며, **국민이 존중받는 사법개혁 추진** 필요

□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적 고려 차원에서, **국방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실효적으로 구현**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보장

□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으로, 검사를 공소 및 사법통제 기능에 집중토록 유도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 한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실질적인 경찰권 분산을 위해 **국가경찰위원회** 강화 및 **자치경찰제도** 시행

□ 업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된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바른 **봉사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개혁

□ 사법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사법개혁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국민참여** 및 **인권 중심의 선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법개혁 지속 추진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과제명	주관
[국정01]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국조실
[국정02]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국방부
[국정0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법무부
[국정04]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경찰청
[국정05]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감사원
[국정06]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법무부
[국정07]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방통위
[국정08]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선진국	인권위

1 ‘진짜 대한민국’ 을 위한 헌법 개정 (국조실)

□ 과제목표

○ 개헌의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헌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

□ 주요내용

○ (**국민투표법 개정**)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현행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황 해소**

* 국회 계류 **국민투표법 개정안 주요내용** : ▲재외국민 투표제도 마련 ▲투표 연령 18세 하향 ▲선상·사전 투표 도입 등 투표제도 개선 ▲투표운동 자유 확대

○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청**) 개헌 관련 **주요 의제 논의** 및 **개헌안 발의**

> * **개헌 주요 의제**
> -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
> -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 -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 국회 개헌안 마련 논의 지원 및 정부 의견 제출

○ (**국민투표 실시**)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투표 **실시**

□ 기대효과

○ 비상계엄 이후 훼손된 헌법정신 복원으로 **헌정체제에 대한 국민자긍심 고취**

○ 지방분권 강화와 다양한 기본권 보장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2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국방부)

□ 과제목표

○ 국방 문민화 및 군 사법체계 개혁 등을 통해 **군의 정치적 개입 차단**

○ 군 정보기관은 **부여된 임무**와 **정체성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개편

□ 주요내용

○ (**민주적 통제 강화**) **부당명령**과 **계엄**에 대한 **통제강화** 및 장병의 인식 제고

- 계엄 시 국회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계엄 발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절차** 강화
-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 등 법령 정비
- 민주주의와 헌법수호에 대한 **장병교육** 강화

○ (**국방 문민화**) 국방부 **문민통제 강화** 및 **군 인사시스템** 개선

- 국방부·국방부직할기관 고위급 직위에 **현역·예비역 최소화** 및 **문민 임용** 확대
- 각 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및 **관행화된 군인사 시스템 혁신**

○ (**군 정보기관 개편**) 군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면적 **조직 개편**

- **방첩사**는 세부 기능별로 필수기능 분산 이관 후 폐지

○ (**군 사법개혁**) 군 수사·검찰기능의 국방부 통합, 군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 구축**

○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 **군 교육기관**의 단계적 통합 추진 및 장교 양성체계 혁신

□ 기대효과

○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도록 하여 **국민 신뢰 회복**

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법무부)

□ 과제목표

○ **수사·기소 분리** 및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 **공수처**의 **역량 강화**

□ 주요내용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 법무부에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종전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수청**이 전담

- 공소청과 중수청 등 관계 기관의 상호 파견·겸직 등을 법률로 금지하여 인적 교류를 통한 유착 가능성 원천 차단

○ (**법무부 불가역적 탈검찰화**) 법무부 내 보직 검사 및 국내·외 기관 파견 검사 인원을 검사 정원에서 감축하고, 그 인원만큼 특정직인 **'법무부 법무관'**을 **임용하여 대체**

- 검사가 법무부 주요 실·국장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근거 법령 개정

○ (**공수처 역량 강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인력을 보강**하고, 그 **임기를 연장**하여 역량 강화

-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수사절차에 관한 기존 입법 흠결 보완

□ 기대효과

○ 수사·기소 **권한 남용 방지**,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력** 강화

○ 법무부의 **지휘·감독 권한 실질화**, 전문적인 법무행정 역량 축적·발전

○ **고위공직자 범죄**에 **엄정 대응**, 공수처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4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경찰청)

□ 과제목표

○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실질화

○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경찰 수사**의 **책임성·전문성** 강화

□ 주요내용

○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치안 정책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법적 지위 강화, 심의·의결 대상 확대 등 추진

- **행정위원회**로서 **지위·역할 강화**, 위원회 산하에 경찰 관련 법안·주요 정책 검토 등 지원을 위한 사무기구 운영
-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경찰청의 **조치 보고 의무화** 및 **불이행시 감찰·징계 요구권** 부여

○ (**경찰국 폐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으로 **즉시 폐지**

○ (**수사 책임성·전문성 강화**) **사건 지휘·관리 강화** 및 **수사 연계 법령 정비**로 주체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책임성 제고, 교육·인프라 확대로 전문성 향상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국가 치안 역량의 총량을 유지하되 지역 주민의 안전 수요에 부합하도록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기능을 시·도로 이관

- 제도 변경에 따른 치안현장 혼선 등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 구성, 세부방안 협의 및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

□ 기대효과

○ 경찰의 민주성과 분권성 강화로 **경찰권 비대화 우려** 해소

○ 법령·제도·인프라 개선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 확립

5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감사원)

□ 과제목표

○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의**의 **실질적 권한** 확대

○ 감사 운영의 **내부통제** 강화와 **정책감사 논란** 방지를 위한 법제화

□ 주요내용

○ (**감사위원회의 권한 강화**) 모든 **감사계획** 및 주요 **공익감사청구** 사항의 **감사위원회 의결** 의무화, 범죄 혐의 사건 **고발 원칙**을 **「감사원법」**에 규정

- 감사 결과 **발표** 및 **공직감찰** 사항도 감사위원회의 **사전 의결** 등을 통해 결정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 및 **절차**를 명확화

○ (**인권 친화적 감사**) 감사 과정에 **변호사 참여권** 보장과 디지털 저장매체 **포렌식 선별추출** 원칙 및 **감찰관**의 **외부 인사** 임용을 **「감사원법」**에 규정

- **이의제기 신청제도** 정비와 감사 절차 준수 **특별감찰** 정례화로 감사 절차의 정당성 확보, **인사위 외부 인사** 참여 등 내부통제도 강화

○ (**감사체계 재정립**)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직무감찰 제외** 사항으로 **「감사원법」**에 명확히 규정

- **공공감사기준** 정립 및 자체감사기구와 **역할 분담** 확대, **국회 지원기능**도 강화

○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감사**) **사전컨설팅** 신청 주체 확대 및 법제화, **적극행정 면책**기준 완화 등 제도 활성화*, AI 등 **혁신지원형 감사** 분야도 확대

* 각 기관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감사원감사도 면책 추정

□ 기대효과

○ 합의제 기구로 설립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감사** 운영으로 국민 신뢰 회복

○ 공직사회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6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법무부)

□ 과제목표

○ **국민참여** 및 **인권중심의 제도 개혁**을 통해 신뢰받는 사법체계 실현

○ 인력 증원 및 사법 AI 시스템 구축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재판** 보장

□ 주요내용

○ (**국민 중심의 사법제도 개혁**)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 수사·공소심의위원회 구성 다양화 및 기속력 강화 등 일반 **시민의 사법절차 참여** 대폭 확대

-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설치하여 수사기간 법정화, 수사·재판결과 전자통지 의무화 등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수행

○ (**인력 증원·처우 개선**) 대법관·판사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며, 수사인력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

○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진술조력인** 등 전문인력 확충,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등 권리 보장 강화

○ (**변호사 조력권 강화**) 국제기준의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로 누구나 변호사에게 안심하고 조력을 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사법 AI 도입**) 인공지능 기반 **사법지원·법률구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취약계층 법률지원 범위 확대 및 범죄예방 정책 고도화

□ 기대효과

○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제도** 구현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

7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방통위)

□ 과제목표

○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법·제도 정비

○ 미디어의 **지역성·다양성** 강화를 위한 **지역·중소방송** 지원체계 구축

○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

□ 주요내용

○ (**방송 공공성·자율성 회복**)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공적기능 강화, **방송 보도·편성 자유**, 방심위 **심의**의 **독립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절차 개선 등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여 방송 관계법령 정비

○ (**온라인 미디어 신뢰성 확보**) 확증편향 등 서비스 부작용 해소를 위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 관련 제도개선

-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통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및 규율 체계 마련, SNS **과의존 예방** 등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 마련

○ (**미디어 사회적 책임 강화**)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국민 소통·참여 역량 제고,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방송 접근권** 보장 지원

- 전국민이 이용가능한 **EBS 교육콘텐츠** 제작 지원, **재난 시 국민행동 요령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제도** 개선

○ (**지역·중소방송사*·공동체라디오 방송 지원**) **지역 밀착형** 및 **지역 주민 참여 콘텐츠 제작 지원**, 방송사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지역방송사(케이블TV 지역채널 포함), 중소방송사(종교방송 포함)

□ 기대효과

○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 회복**과 **다양성 강화**로 누구나 **격차 없이** 고품질의 **방송미디어 서비스**를 활용·향유

8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선진국 (인권위)

□ 과제목표

○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와 **책임성 확보**

○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혐오·차별 방지**, **노인·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 주요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인권위원**의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 및 **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 확보로 인권보장 기능 강화

- 인권위원장 등 선출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인권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인권위원 **다양성 확보** 및 **겸제장치 도입**

- **의사의 비공개 대상**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등 회의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국제인권기준 상시모니터링 및 확산, **유엔 인권권고 국내 이행** 촉진 및 인권위 **사회권 조사** 기능 부여

○ (**혐오·차별 방지**) 혐오표현 실태파악, 혐오방지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혐오·차별 방지 법제화 검토 및 **공론장** 마련으로 인권존중문화 확산

○ (**노인·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노인·이주민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정책개선** 및 **권리구제** 통합 대응체계 구축

- 노인 건강권·돌봄·고독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권고, 의견표명 및 이행점검 강화

- 이주 아동·여성·노동자 등의 인권보장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 기대효과

○ **인권위 정상화**와 책임성 확보로 국민 신뢰 및 **인권보장 기능** 회복

○ 주요 인권과제 선제 대응으로 국민 **인권수준 향상** 및 **인권선진국** 위상 강화

전략 2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 우리 사회에 심화되고 있는 **이념·젠더·노사·지역·세대 간 갈등**과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 가중된 국민 분열 속에서 **통합**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치 실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증대

○ **정부**와 **국회** 간 **협치체계**를 제도화하고, 국가 주요정책 결정과 갈등 현안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설공론화기구**를 통한 **숙의공론절차**를 도입하여 이념과 진영을 넘어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대화와 타협으로 **시민참여, 국민통합의 대한민국** 실현

□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진정한 명예회복** 등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여 **인권신장과 국민통합**에 기여

□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국가와 개인의 **영예**가 되도록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소명으로 실천

○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에 이바지한 **특별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도록 **전 국민이 함께 기억함**으로써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국정과제	주관
[국정0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국조실**
[국정10]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
[국정11]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보훈부**
[국정12]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보훈부**

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국조실)

□ 과제목표

○ 성숙한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

○ 여·야 협치, 시민참여, 숙의공론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통합** 실현

□ 주요내용

○ (**정부·국회 및 여·야·정 협치**) **상설협의체 설치** 및 합의 절차에 관한 규정 마련으로 당·정 사전 협의와 여·야·정 협의체의 안정적 운영

- 상설협의체 운영지원을 위한 정부 내 입법전략 관리체계 수립·운영

○ (**대화·소통의 국민통합**) **다름의 인정과 존중**을 기반으로, 사회갈등*의 구조적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가는 **대화기구**로서 **국민통합위원회** 실질화

* 5대 사회갈등 : 이념, 젠더, 양극화, 지역, 세대

- 부처 협업체계 강화, 주기적 대국민 보고회 등으로 **제안 실효성** 확보

○ (**시민참여와 숙의공론 활성화**) **시민참여**와 **숙의, 민주시민교육**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담당하는 (가칭)**'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근거법령 마련

- 국가 주요 **의제별**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숙의공론 진행

○ (**사회개혁을 위한 소통 협력**) 정치·사회 개혁정책에 관해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참여**하여 논의하는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 설치 추진

- 주요 정책에 관한 논의 결과의 이행상황을 관리하여 책임성 확보

□ 기대효과

○ 국민통합의 제도화로 **국정운영의 안정성** 및 **지속성** 담보

○ 시민참여와 숙의공론화를 통해 **정책결정의 정당성** 제고 및 **국민주권** 체감

10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

□ 과제목표

○ 신속한 사건조사, 희생자·유족 결정 등으로 미해결된 **과거사**의 **진상규명**

○ 희생자 유해발굴·봉환, 추념식, 트라우마 치유사업 등으로 **실질적 명예회복**

□ 주요내용

○ (**여수·순천 사건 진상규명**) 여수·순천 10·19사건 **조사기한 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심사 완료** 추진

-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합동 추념식 지원**, 희생자·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등으로 **명예회복** 지원

○ (**노근리 사건 명예회복**) 노근리 사건 **추념식 개최, 유족회 지원**,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지원, **희생자·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추진 등** 명예회복 조치 지속 이행

○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사건 진상규명**)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사건 진상규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노력

○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지원**)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의 체계적인 **유해조사** 및 **최신 기술**을 적용한 **신원확인 확대** 실시

- 유해 봉환을 위한 **국제인권단체, 종교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외 추모조형물** 추가 건립 등 지원

□ 기대효과

○ **과거사 진상규명**과 **실질적 명예회복**으로 희생자와 유족 등의 아픔 치유

○ 과거사에 대한 **정의 실현**과 **사회적 연대 강화**로 **인권신장**과 **국민통합**에 기여

11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보훈부)

□ 과제목표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가치를 정립하고, **보훈의료 접근성 확대**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보장

○ 병역의무 청년들의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

□ 주요내용

○ (**합리적 보훈보상체계 재정립**)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 확대

* 생계지원금 및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 확대 시 2만여 명 보훈대상자 추가 수혜

-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대상에 대한 보훈급여금 추가 인상, **지자체 간 참전수당 격차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강화 방안 마련

○ (**보훈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보훈병원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보훈의료 위탁기관 대폭 확대**

* (현재) 900개소(시·군·구 평균 약 4개) → (개선) 2,000개소(시·군·구 평균 약 9개)

- 전문인력 확충,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의료환경 개선 등 **보훈병원 진료역량 강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서비스 제공** 및 복지시설 확충

○ (**조국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 **공공부문**에 **군 경력 반영 의무화** 등 제대군인 권익 보장 및 구제 방안 마련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및 간병비 추가 인상, **독립유공자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규정 폐지** 등 추진

□ 기대효과

○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헌신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구현

12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보훈부)

□ 과제목표

○ **독립-호국-민주**의 **균형 잡힌 보훈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통합을 견인

○ **일상에서 보훈의 가치를 공유**하는 보훈 환경 조성과 높아진 국민 눈높이 및 **국격에 걸맞은 보훈**의 역할 확대

□ 주요내용

○ (**국민통합 보훈 추진체계 정비**) 국가보훈위원회의 **대표성·투명성** 강화, 보훈 공공기관장 등의 역량·책임성 확보* 등 보훈 거버넌스 체계 확립

* 기관장·임원 추천 절차 개선 및 대국민 공개검증 등 제도 정비

- 보훈문화 진흥 관련 법·제도 마련 및 대국민 보훈문화 의식 실태조사 등 추진

○ (**보훈문화 체감도 향상**) **'25년 광복 80주년 기념행사**의 차질 없는 이행 등 **국민 참여 보훈기념사업** 추진, 국민 체감형 보훈콘텐츠 및 교육 지원

- 현충시설 건립, 국립묘지 조성* 시 국민 접근성 강화 및 관리 체계 개선

* 독립의 전당 건립, 연천현충원·횡성호국원·장흥호국원 조성

○ (**보훈으로 국격 제고**) **유엔참전국** 및 **해외 독립운동 관련 국가**와의 **교류·협력** 확대 등을 통해 **균형잡힌 보훈외교 기틀 확립**

-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및 활성화*, 국외 독립운동가의 묘소 실태조사 및 유해봉환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실태조사 및 개보수 지원, 주요 국가·도시 거점 역사관광 벨트 조성

- 유엔참전용사 유해봉환 및 재방한 사업 활성화, 참전국과의 교류협력 강화

□ 기대효과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함께 기억**함으로써 공동체 정신 고양,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자긍심 제고 및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

전략 3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 지난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가 리더십과 정부에 대한 신뢰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와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과 불안을 초래

○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나라,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정부의 변화와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 이재명정부는 국민이 다시 정부를 믿고 실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다가가 현장 중심**으로 **국정 전반을 재설계**하고, **충직하고 일 잘하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시급한 책무

○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다수의 불편도 미리 해결**하는 **진짜 국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

□ **투명한 예산 공개,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으로 쓸 곳에 제대로 쓰고 낭비를 줄여 **내 돈처럼 예산을 쓰는** 국정운영 추진

○ **공공기관**도 국가와 지역의 발전, 국민 삶에 도움이 되도록 **성과와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비**

□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보호**하는 규제는 **보완**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창업 및 영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는 해소**하여 **국민중심으로 규제 합리화**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국정과제	주관
[국정13]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국정14]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행안부**
[국정15]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	**국조실**
[국정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권익위**
[국정17]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기재부**
[국정18]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	**기재부**
[국정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국조실**

13 충직 · 유능 · 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 과제목표

○ 공무원의 책임성 제고와 능력 중심 인사로 국민께 충직하고 **일 잘하는 정부** 구현

○ 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 개선**

□ 주요내용

○ (**공직사회 책임성 강화**) 공무원의 **헌법 가치 함양**, **적극행정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공직사회 정립

*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확대,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및 소송 지원 확대

○ (**능력 중심 인사시스템 구축**) **국민추천제 활성화**, **전문분야 장기재직** 확대, 공직 내 **AI 인재 육성** 등 **전문성**과 **직무 중심**의 인사체계 마련

- 유능한 공무원 발탁을 위한 **역량 기반 특별승진 절차**(6급→5급) 신설

○ (**공직윤리 확립**) **주식 관련 이해충돌방지** 강화 및 **부동산 거래내역신고제** 도입, 취업 제한 내실화, 중대 비위 엄벌 등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

○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 조성**) **저연차 실무직·현장공무원** 처우개선*, 신규공무원 보직 전 기본교육 강화 및 **육아친화적 공직여건** 조성

* 7~9급 및 군 초급간부 보수 인상, 재난·안전담당 공무원 인센티브 강화

-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 및 **위법·부당한 지시 불복절차** 마련,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등 공직문화 개선

□ 기대효과

○ 공무원의 사명감 및 **청렴도 제고**, **적극행정** 구현으로 국민 기대 부응

○ 전문성 강화 및 인사시스템 개선으로 **공직 생산성** 및 **정부 경쟁력** 제고

○ 합리적 공직문화 조성 등으로 **우수인재 유치** 및 공직몰입도 제고

14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행안부)

□ 과제목표

○ 국민소통 활성화, 국민중심 민원처리 등으로 **국민 맞춤 공공서비스 제공**

○ 정부위원회 내실화, 정보공개 강화 등으로 **정책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 주요내용

○ (**국민중심 소통 및 민원처리**) '**모두의 광장**'(국민소통플랫폼)을 **범정부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국민과의 소통 일상화 및 제도화 추진

- 인·허가 등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현장 중심**으로 **신속 민원 해결, 실질적 민원 해결 중심**으로 평가·보상체계 개선

○ (**선제적·통합적 공공서비스 제공**) 공공서비스 이용자격, 신청방법 등을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통해 선제적·통합적으로 제공

- 4대 보험료 상담·납부·환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처리**하는 플랫폼 구축·운영

○ (**주민주도 문제해결**) **주민참여 리빙랩*** 추진, 주민이 발굴한 문제를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대학 등이 함께 해결하는 협업체계 구축

* 지역 단위의 생활형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주민이 직접 실험하고 해결

○ (**위원회 구성·운영 내실화**) **정부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과 함께** 지역·세대·직능·사회적 약자 등 **대표성 확대**

- **회의록, 예산집행, 운영실적 등**을 **공개**하고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

○ (**정보공개·기록물관리 강화**) 정보공개 기준과 절차의 합리적 개편으로 **정보공개 확대, 공공기록물** 등의 생산·지정·열람·공개 등 서비스 개선

□ 기대효과

○ 국민소통플랫폼, 신속한 민원해결, 국민 알권리 보장으로 **참여·소통 일상화**

○ 주민주도 문제해결,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15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 (국조실)

□ 과제목표

○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 실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

○ **국가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강화 및 **국민 참여·실천** 활성화

□ 주요내용

○ (**지속가능추진체계 회복**)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이행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국가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 확대 및 **중앙-지방 지속가능발전책임관 협의체** 구성,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 추진
- **중장기 행정계획***과 **법령의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강화

* 국가기본전략과 관련된 중앙행정계획 198개

-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26-'45) 마련, 중앙 추진계획 수립 및 지방 전략 연계 확산

○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확산**) **지역소멸 대응** 등에 대응, 지방 지속가능발전 사업 발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지원 방안 검토

○ (**정책과정에 국민 참여 활성화**) 지속가능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대해 **숙의에 기반한 공론화장** 마련

○ (**글로벌 리더십 강화**) **국가이행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주요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

□ 기대효과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사회 실현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

○ 국제사회가 합의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충실한 이행으로 **국가 품격 제고**

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권익위)

□ 과제목표

○ **부패방지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부패·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

○ 국민 생활과 직결된 **갈등과 고충민원**을 적극 발굴·조정해 신속히 해결

□ 주요내용

○ (**부정부패 엄정 대응**)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 강화, 부패행위 실태조사

- 고위공직자 민간 업무활동 내역 공개,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규정 위반 시 처벌 기준 상향, **행동강령 강화**로 **소극행정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대상 확대, 보호 신청 처리 공정성 제고

- **신고대상에 횡령·배임·뇌물·내란 포함**, 중요 보호사건 민관위원회 심의

○ (**글로벌 반부패 경쟁력 제고**) 준법감시 제도 확산, 민간 부문 부패 개선

- 기업·공공기관의 **자율적 부패 예방**을 위한 **준법감시 인증 제도** 도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이익 적극 환수, 미래세대 청렴교육 의무화 추진

○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민원·제안 신청 편의 증진, 민원 분석 고도화

- **대화형 AI**가 만드는 **맞춤 신청서**, 빈발민원 분석으로 정책개선 방안 도출

○ (**국민고충 적극 해소**) 집단 민원 선제 대응 및 표류하는 **갈등** 사안과 부처간 떠넘기기 **민원**을 **적극 발굴**하여 범부처 **협업**으로 해결

□ 기대효과

○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여 **글로벌 반부패 리더**로 위상 강화

○ **사회 갈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사회적 비용 저감

17 재정운용의 투명성 · 책임성 강화 (기재부)

□ 과제목표

○ Top-Down 예산제도는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운영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 및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 강화

○ **정부 예산안** 관련 **국회**에 **충분한 정보** 제공, **규정 명확화** 등을 통해 **국회 심의권** 강화

○ **성과평가**의 **예산 환류** 강화 및 재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

□ 주요내용

○ (**재정운용 자율성·책임성 확보**)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 확대** 및 **지출한도 미준수 페널티 강화** 등 Top-Down 예산제도 실질화

-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국가재원배분회의**로 전환해 재정투자방향을 결정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구체화하여 국회 보고
- 계획과 실적 차이, 재정의 경기대응 및 성장 기여도 등에 대한 충실한 분석을 통해 **평가·분석보고서 내실화**

○ (**예산안 국회심의 강화**) **정부 증액 동의**가 필요한 헌법상 '**각항**'의 의미 **명확화**, 원활한 국회 심사와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비비 사용내역** 국회보고 강화

- 신규 대규모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 구체화
- **세수오차**가 **일정규모 이상**일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추경사유**에 추가

○ (**재정집행 투명성 제고**) 회계·기금간 자금 **전·출입 요건 구체화** 및 **실적 국회 보고**, 고액·대규모 국유재산 매각·교환시 정부심의 강화 및 국회 사전보고

○ (**성과평가 강화·재정이해도 증진**) 다수 부처에서 운영중인 **재정사업평가 체계**를 **정비**하여 평가결과와 예산 연계 강화

- 재정교육 강화, 온라인 재정박물관 구축 등을 통한 대국민 재정이해도 증진

○ (**지방 행정·재정 운용의 효율성 향상**) **지방자치·교육자치**의 행정·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개편 추진

□ 기대효과

○ **재정운용 전반을 혁신**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더 나은 공공 서비스 제공

○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 **알권리 보장**

18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 (기재부)

□ 과제목표

○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책임성**을 동시에 강화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지배구조를 개편하여 민주성 및 독립성 확보

○ **지방공공기관**의 지역균형성장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체계 개편

□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경제·사회적 역할 강화**) 공공기관별 **국가전략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보유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핵심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

- **자산**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공개·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공공기관 **ESG경영 확산**을 위한 **'공통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 (**경영 자율성과 책임성 동시 강화**) 핵심과제 소요를 위한 조직·인력을 재정비하고 **기관장 경영성과평가 실시**, **임기규정 개정** 등도 병행 추진*

* 임기·임명권자·임금수준 등을 규정한 공공기관 임원현황 목록(한국판 플럼북) 발간·공개

-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확대 및 활성화 추진

○ (**맞춤형 경영평가로 성과·역량 제고**) **유형별 지표·배점·평가주기** 차별화 및 **상설 평가지원기구** 지정 등 전문성 강화, 평가 결과를 사업·기능조정 등에 적극 활용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독립성·대표성 강화**) 공공기관 정책이 민주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확대**(구성원의 2/3 이상),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공운위원·노동계·공익위원·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운용지침 사전심의** 제도화

○ (**지방공공기관 대응성 강화**) 지방공공기관도 지역균형 성장과 국가 현안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정보공시 확대 등 **자율적 구조개혁** 추진

○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역량 강화**) 경제인문사회·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정부수탁 사업비 제도**(PBS)를 **폐지***하여 출연(연) 본연의 역할 강화

* 경인사연 출연(연)은 '26년 완전 폐지, 과기계 출연(연)은 '30년까지 단계적 전환·폐지

□ 기대효과

○ **공공기관**의 **전면적 경영 혁신**으로 국민 편의 제고, 국가경제 발전 및 지역균형 성장에 기여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국조실)

□ 과제목표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대상 규제애로 해소**, **국민생활·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점검·개선하여 체감 제고

○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되, **생명·안전 보호**와 **공정·상생**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의 성숙한 규제개혁

□ 주요내용

○ (**민생 규제 합리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규제** 및 **사회적 약자** 대상 **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개선

- 행정·복지·교통·재산권 등 **생활 불편 해소**, **부처 훈령·자치법규** 원점 재검토 및 공공기관 인증·평가제도 등 **유사 행정규제** 심사체계 마련

○ (**주력산업 맞춤형 규제개선**) 내수 활성화 효과가 큰 **콘텐츠**, **관광**, **의료** 등 **3대 서비스산업** 분야의 **현장 규제 애로** 중점 해소*

* (예) 게임 등급분류 민간 이양,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시행, 의약품 허가·심사절차 간소화 등

- 조선·방산·반도체 등 **경쟁우위 산업 고도화**를 위한 규제혁신, 형벌 중심 제재에서 **민사적 책임** 중심으로의 전환 등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 (**규제개선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규제애로·건의 플랫폼 일원화**, **현장방문·소통** 확대(규제합리화 현장캠프 운영), 지자체별 규제혁신 평가를 통해 경쟁 유도

-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 적정성 점검을 위한 **사후규제영향 평가**, **규제법령 일괄정비** 통한 개선 성과 확산, **공무원 감사 부담 완화** 등 적극행정 활성화

○ (**AI 활용 전국민 규제정보서비스 제공**) 창업·영업활동 등 **맞춤형 규제상담**, **지리정보**를 **활용**한 지역별 **규제정보** 제공, **유사·중복규제** 발굴·정비 등

□ 기대효과

○ **국민 생명·안전** 등 **삶의 질 향상** 및 **민생경제·산업활동**의 역동성 제고

○ 규제혁신 전 과정에서 **국민 참여 확대**로 국민주권 실현

국정목표 ❷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전략 1 AI 3대 강국 도약

□ AI는 **경제·사회**는 물론 **외교·안보 전반**에 **대변혁을** 일으키는 **범용기술**이자 **국가 전략자산**으로, **범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독자적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가 AI 대전환**을 추진할 필요

○ 이를 통해 **AI 3대 강국 도약**과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실현하고, **국민-정부-기업 모두**가 **AI를 가장 잘 활용**하며, **혜택**을 **누리는 사회 구현**

□ **AI인프라·데이터 확충**과 **초고성능·초지능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수준**의 **AI모델을 개발**하여 산업·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확보

○ 저전력·고성능 **AI반도체**, **범용AI** 및 **피지컬AI** 등 **초격차 AI 기술 확보**와 함께 AI 시대를 이끌 **최고급 AI 인재** 양성·확보

□ **공공 부문 AI 대전환**을 위한 **30대 핵심과제 추진** 등 **세계 1위 AI 정부**를 구현하고, **AI를 활용하여** 경제·사회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AI 제로리스크 사회'** 프로젝트 기획·추진

○ **AI·디지털 안전·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개인정보의 'AI 학습용 원본 정보 활용 특례'** 도입 등 **안전한 활용 체계** 확립으로 **국민들이 AI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 실현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국정과제	주관
[국정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	과기정통부
[국정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과기정통부
[국정22]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과기정통부
[국정23]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사회' 실현	과기정통부
[국정24] 세계 1위 AI 정부 실현	행안부
[국정25]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개인정보위

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 (과기정통부)

□ 과제목표

○ **AI인프라·데이터**를 확충하고,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AI고속도로**' 구축

※ '26년부터 **국내 GPU 수요** 대비 **정부공급률 30% 이상** 유지('24년 5% 比 6배↑)
6G 글로벌 표준특허 30% 선점(現 5G 26%(글로벌 2위) 比 4%p 상향)

□ 주요내용

○ (**AI컴퓨팅인프라 확충**) **세계적인 AI 역량 확보**를 위해 학계·연구계 및 중소·벤처기업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GPU 5만장 조기 확보** 등 안정적 공급*

* GPU 기종과 수요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요에 대응한 탄력적 지원
※ GPU(Graphic Processing Unit) : 대규모 데이터 동시 처리에 특화된 반도체로 AI 연산에 적합

- **AI데이터센터**(AIDC)에 대한 **세제지원·특별법** 제정, 비수도권 **전력계통 영향평가** 우대, **친환경장비 실증** 등 민간AIDC 생태계 육성

○ (**초지능 네트워크 구축**) AI에 최적화된 **6세대 이동통신**(6G) **상용화**와 실시간·초정밀 AI 서비스를 위한 **지능형 기지국** 확산

○ (**데이터 구축·개방**) **국가 전체 공공·민간 데이터 통합 플랫폼**(~'26) 및 **분야별**(의료·제조 등)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AI 가독성** 확보를 위한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 등

-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안심구역 간 연계** 및 「데이터산업법」 정비

○ (**국가AI위원회 역할 강화**) **민·관**의 **AI혁신역량**을 총결집하고 **범부처 AI전략·정책**에 대한 조정력을 발휘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격상

- **규제샌드박스**(AI트랙), **국가AI위원회**를 통해 **AI규제** 선제적 발굴·개선, 규제최소화 원칙 하 「**AI기본법**」 시행령 마련('25.下) 및 유관 법령 정비

□ 기대효과

○ **컴퓨팅자원** 확보를 통해 **학계·연구계** 및 **중소·벤처기업**에 충분히 제공

○ 국가 전체 **데이터 연계 및 구축**으로 **국민·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

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과기정통부)

□ 과제목표

○ **AI**가 **국가 핵심 인프라**이자 **필수재**가 되어 **국민 모두의 삶**에 풍요롭게 기여

○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공존**에 기여하는 나라 구현

※ 글로벌 수준의 AI 파운데이션 모델(최신 글로벌 AI모델의 95% 이상 성능) 개발
국내 산업의 AI 활용률 : 30.3%('23) → 60.6%('30)
취약계층 AI·디지털 수준 : 77.5%('24) → 82.5%('30)

□ 주요내용

○ (**독자 AI모델 개발 지원**) 민·관 협력 기반으로 **AI 정예팀**(최대 5개팀)에 **GPU·데이터·인재**를 **집중 지원,**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모델** 확보(개발→오픈소스화)

- **AI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국민 AI접근성** 증진, 공공·경제·사회 **AX**** 도모

* 대규모 데이터로 광범위하게 학습되어 다양한 작업 등에 범용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지식과 패턴 인식 능력을 갖춘 AI 모델

** AX : 'AI 전환(Transformation)'의 약자로 AI를 활용하여 업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 (**'모두의 AI' 기반 구축**) 누구나 **AI 서비스**를 **체험·개발**할 수 있도록 통합환경을 제공하고, AI 혁신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전국민 **AI 캠페인·공간** 조성

- AI·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역별 사회기반 시설**을 활용한 (가칭)**AI디지털배움터** 조성 추진

○ (**산업AI 전환 촉진**) **중소 제조기업**에 **AI팩토리 전환**, 중소기업 대상 **AI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서비스업**(법률·의료 등)의 **AI 전환** 지원

○ (**지역AI 전환 지원**) **지역특화산업**의 AI전환거점인 광역별 **AI혁신거점**을 구축하고, 첨단 산단을 AI로 전환하는 **AX실증산단**(지원프로그램 집적) 조성

○ (**혁신AI스타트업 육성**) **AI혁신펀드** 운영 및 **성장 사다리 지원**(장기간, 대규모 지원), 예비·초기 창업가 **AI창업패키지** 등 AI벤처·스타트업 창업·스케일업 지원

□ 기대효과

○ **독자 AI모델** 개발·활용으로 **AI·데이터 분야 주권** 확보

○ **모두의 AI 기반** 구축으로 **지역·기업·국민**의 **AI 리터러시** 제고

22 초격차 AI 선도기술 · 인재 확보(과기정통부)

□ 과제목표

○ AI 시대 성장을 견인할 **최고급 AI 인재 양성·확보**

○ **범용인공지능**, 저전력·고성능 **AI반도체** 등 **초격차 AI 선도기술** 확보

※ 글로벌 AI 인재 역량 5위 확보 및 AI반도체 상용화(양산) 기업 10개 육성(~'30)

□ 주요내용

○ (**핵심인재 양성·확보**) **SW 중심대학**을 **AI 중심대학**으로 전환·확대(30개), **대학·대학원 간 패스트트랙** 운영 및 **국내외 우수인재** 확보(신진연구자 200명 등)

○ (**융합인재 양성**) **다양한 산업 수요** 기반 **AX 인재** 양성을 위해 **3無**(교재·강사·학비) 기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확대 및 AX대학원 설립 추진(15개)

○ (**차세대 AI원천기술 확보**) 거대언어모델(LLM) 등 **한계를 극복**하는 초격차 기술, 미래 AI 판도를 흔들 **차세대 원천기술**(범용인공지능(AGI)) **확보** 추진

-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 AI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AI연구소**' 육성

○ (**AI반도체 산업생태계 확립**) 다양한 **국산 NPU + AI서비스 패키지**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확대** 및 **사업화** 적시 지원

- NPU·PIM* 등 **차세대 AI반도체 기술력 선점**을 위한 R&D 추진

* NPU(Neural Processing Unit) : AI연산에 특화된 프로세서로 전력 소모를 최소화
PIM(Processing-In-Memory) : 메모리에 연산을 담당하는 프로세서 기능을 통합

○ (**피지컬 AI 적용 가속화**) 사람처럼 행동하는 AI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공장·로봇·자율주행·자율운항선박** 등 주요 산업 적용 가속화

□ 기대효과

○ **AI 인재 부국(富國) 실현**으로 **AI 3대 강국** 도약 견인

○ 우리나라 **자체 기술 확보**를 통한 글로벌 **초격차 AI 기술 선점**

23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사회' 실현(과기정통부)

□ 과제목표

○ **AI 안전·신뢰 확보**를 통해 **국민이 AI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글로벌 AI 협력 강화** 및 **확산 지원** 등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추진

※ 민간정보보호 투자액 : 2.1조원('24) → 3조원 달성('28)
딥페이크 탐지 정확도 : 80%('24) → 90% 이상으로 향상('29)

□ 주요내용

○ (**제로리스크 사회 구현**) **AI로 금융·식량·재난 리스크**를 분석하여 국민의 삶을 지키는 '**AI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프로젝트 추진

- 사회적 파급력,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 **AI를 활용**하여 **사회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프로젝트 과제 선정

○ (**AI윤리·안전·신뢰 기반 조성**) **딥페이크 탐지**, AI 모델의 **유해 콘텐츠 생성 사전차단** 등 AI **오남용 대응**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 (**디지털 보안·안전 확보**) **AI로 지능화**된 **사이버위협**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정보보호 제도 개편, **AI기반 보안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보안이 취약한 지역·중소기업 등 **보안 사각지대 지원 강화**, 피싱, 스미싱 등 민생을 위협하는 **디지털 역기능 해소** 및 정보보호 산업의 전략적 육성

○ (**글로벌 AI협력 강화**) 다수 국가 참여 **글로벌 AI공동기금 조성** 및 아태 지역 인재와 기업을 끌어들이는 허브(Hub)로서 **AI특화 지구** 조성 추진('27)

- 우리 **AI 기술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하고, **글로벌 AI 규범·표준** 정립 선도

□ 기대효과

○ **AI 융합 기반** 미래 예측력을 높여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제로리스크 사회**' 구현

○ AI **오남용 및 사이버 침해 근절** 등 **AI 안전 사회 구축**

24 세계 1위 AI 정부 실현 (행안부)

□ 과제목표

○ 30대 핵심과제 추진 등 **공공부문 AI 도입**으로 **대국민 서비스**와 **업무방식 혁신**

○ AI 공통기반 마련, AI 역량 강화,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AI 정부 모델** 구축

□ 주요내용

○ (**30대 핵심과제 추진**) **대국민서비스 혁신**, **정부효율성 제고**, **분야별 전문화** 등 3대 분야에서 **AI 정부 실현**을 위한 30대 핵심과제 선정·추진

- AI를 활용하여 **국세·관세 등 민원처리**, **탈세 적발**, **공공조달** 지원 등 서비스 혁신과 **정부업무 효율화**

○ (**공공 AI 기반 구축**) 각 부처별 공공 AI를 빠르고, 안전하게 도입하는 핵심 인프라로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 전 공무원 **AI 역량 강화** 및 **인재양성**

○ (**공공 AI 시장 창출**) AI 혁신제품 공공조달 및 수요예보 등으로 **공공 AI 시장 창출**

- 공공 AI 산업박람회, 공공 AI 성공사례 해외수출 등으로 **AI 기업의 성장 기회 제공**

○ (**공공데이터 개방**) AI 서비스 개발수요나 기업요구가 많은 **공공데이터**를 중심으로 역점 개방 및 공유 확대

- 기업 애로사항 파악 등을 위한 **상시 접수 창구 운영** 등 연구·개발 지원

○ (**공공 AI 신뢰기반**) 공무원의 AI 윤리 내재화, AI 영향평가 도입, AI 활용 서비스 현황 공개 등 **공공부문 AI 활용**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확보**

□ 기대효과

○ AI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행정서비스 접근성·편의성 대폭 향상**

○ 유능하고 효율적인 공공 AI 기반 행정서비스로 **세계 1위 AI 정부** 도약

25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개인정보위)

□ 과제목표

○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강화 및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 보장** 확대

○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마련하여 **AI 혁신을 지원**

□ 주요내용

○ (**유출사고 신속·엄정 대응**) 포렌식랩 등 **기술 분석 인프라** 확충, 피해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 가중 및 **중대피해** 발생 **즉시 유출공지** 의무화

- 다크웹 등 온라인 유·노출, 불법유통 개인정보의 탐지·삭제 시스템 고도화

○ (**정보주체 권리보장 강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권리** 적용범위 확대, 딥페이크 등 합성·변조된 개인정보의 **삭제 요구권** 도입

- 정당한 열람권 보장 및 안전한 CCTV 관리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법」 제정

○ (**사전예방 보호조치 확대**) 기업 등의 **개인정보보호** 예산·인력 **투자 준칙** 마련('25.12), 개인정보 **평가·인증** 고도화 및 취약 분야 **선제 점검**

○ (**개인정보 법제기준 확립**)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국민·기업의 **고충·중복 규제**를 **정비**하고 생활밀접 10대 분야로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

- 서울 국제 프라이버시 총회('25.9)를 계기로 개인정보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

○ (**안전활용 증진**) **AI 학습용 원본정보 활용특례**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원스톱 가명·익명정보** 활용 혁신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R&D 확대

- 디지털 통상,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외이전 수단** 다양화

□ 기대효과

○ 공공과 민간 전 영역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정보의 안전 활용을 증진하여 **국가 AI 경쟁력** 제고

전략 2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 **3·3·5 대도약**(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을 위한 기본 토대는 **R&D 투자**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튼튼한 국가 과학기술시스템**

○ **창의·도전·실용** 기반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구축 필요

□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해 **안정적 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구축

○ **R&D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과학기술** 정책 결정에 **민간 참여** 확대

○ 기술주권 확립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및 **지역 주도 R&D** 강화

□ **청년연구자**가 **걱정 없이 장기간 연구**에 **전념**하며 성장하는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 국가 차원의 **우수 인재 양성**과 전략적 **해외인재 유치** 추진

□ **국가 임무** 기반, **민관협업** 방식의 **전략적 R&D 투자**로 **NEXT 전략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차세대 핵심 신산업**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 **N**ew, **E**merging, e**X**ponential **T**ech : 차세대·신흥기술 중 미래산업을 주도할 분야

○ **민관협업 방식**의 **초대형 'NEXT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초격차 **원천기술** 및 **인프라·인력** 확보

○ **우주항공기술 자립**과 역량 있는 **민간기업 육성**을 통해 K-Space 실현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국정과제	주관
[국정26] 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과기정통부**
[국정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과기정통부**
[국정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과기정통부**

26 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과기정통부)

□ 과제목표

○ **지속 가능한 R&D**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 삼극특허 수 4위(現 5위), 총연구개발인력 5위(現 6위), 피인용 10% 논문수 7위(現 12위), 하이테크산업 수출점유율 7위(現 12위), 딥테크 유니콘 50개 창출 등

○ 국제협력 강화로 **첨단기술 주권**과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십** 확보

□ 주요내용

○ (**R&D 투자시스템 혁신**) 훼손된 **연구생태계 복원**을 위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D 예산 확대 노력**, R&D 예산 심의의 전문성·전략성 제고

* 예산 배분 조정 기한을 충분히 확보(6월 말 → 7월 말)하고, R&D 예산 심의 범위 확대

- 투자의 적시성·유연성 제고를 위한 **R&D 예타 폐지**, **개방성 강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R&D 예산 배분·조정 전 과정에 **민간 참여 확대** 추진

○ (**연구전념·성과창출 환경 조성**) 불필요한 연구행정 부담 대폭 완화하고, R&D 성과를 국가 성장으로 연계하는 (가칭)**'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마련

○ (**출연연 PBS* 단계적 폐지**) '30년까지 **재정구조**를 **출연금 중심**으로 단계적 개편, 단기·파편화된 연구시스템을 **중장기·임무중심형**으로 전환

* **P**roject-**B**ased **S**ystem: 출연금 外 수탁 과제를 통해 연구비·인건비 등을 충당하는 제도

- 국가·기관 임무 중심으로 **통합 성과평가 체계** 구축

○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연구자·기관 중심의 **국제협력 전략**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연구안보 체계** 마련과 **첨단기술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

○ (**지역 자율 R&D 강화**) 부처별로 집행되던 지역 R&D 사업을 지역이 스스로 기획·집행하고, 부처가 함께 성과를 관리하는 **'지역 주도 R&D' 체계**로 전환

- 5극3특 **지역 수요**에 맞춰 **융합연구** 및 **대규모 실증**을 지원하고, R&D+서비스가 집적하는 **'연구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과학문화' 인프라 확대

□ 기대효과

○ **연구개발 생태계 복원**을 통해 예산 삭감 등으로 실추된 과학기술인의 **자긍심 고취**

○ **R&D 시스템 혁신**으로 연구자 **자율성 제고** 및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과기정통부)

□ 과제목표

○ 기본연구(소규모, 장기) 사업 복원 등 **기초연구 생태계를 회복**하고, **청년 연구자** 등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 확립

○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인재양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신진·석학급 해외 우수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확보

□ 주요내용

○ (**기초연구생태계 확충**) **과제 수 대폭 확대**(現1.2만개 → '30년1.5만개) 및 장기·안정적 과제를 확대, 글로벌 TOP 수준의 국가연구소 선정·육성

- **선도적 연구**를 위한 **대형 연구인프라 확충**(가속기·핵융합·연구로 등) 및 첨단장비 국산화, 안전한 연구생활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지원체계**' 확립

○ (**청년 과기인 전주기 성장 지원**) **청년과기인 성장 3종 패키지*** 및 **거주·병역** 지원, 대학에 박사후연구원 별도 직위 명문화

* 1종국가우수장학금(대학·대학원생), 2종연구생활장려금(STIPEND), 3종기본연구비(신진연구자)

○ (**지원체계 일원화**) 국가 과학기술 **인재양성 청사진** 제시 및 범부처 인재 정책·예산 조정* 기능 강화, **데이터 기반 통합관리 체계** 구축

*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조정기구인 과학기술자문회의 기능 강화

○ (**우수 해외인재 유치**) **전략기술 분야** 위주로 **포닥, 신진연구자, 석학** 등을 유치하여,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국가 프로젝트인 'Brain to Korea*' 추진

* '30년까지 AI, 바이오, 방위·우주항공, 에너지, 양자 등 분야에 2,000명 유치

- 범부처 협업을 통해 비자·주거·교육·취업 등 **전주기 정착 지원 서비스** 강화

○ (**처우개선**) 기업연구인력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확대, 출연(연) 연구자 **외부강의료** 상향, **기업연구자 육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적 처우 강화

- **여성 과학기술인** 경력 복귀 및 **고경력 은퇴 과학기술인** 지원프로그램 신설

□ 기대효과

○ **청년** 등 **연구자**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하며 성장하고, 성과를 내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 **입학부터 은퇴까지** 국가가 책임져 **과학기술 우수인재**의 **성장 경로** 안정화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과기정통부)

□ 과제목표

○ **국가전략기술 세계 최초 5개** 이상, **세계 1위 10개 이상** 달성(~'30)

- **우주기술 자립화**를 위해 누리호 **반복 발사**(4차/'25~6차/'27) 및 **성능개량** 발사(7차/'28)

○ 민관협업·국민참여 기반 **'K-Tech 국민기업' 5개** 창출 및 정부 R&D 성과 기반 **중대형 기술이전·사업화*** 및 **딥테크 창업**** 촉진

* ('30) 연간 400건(기술이전 계약액 1억원 이상), ** (~'30) 누적 3,000건('23, 1,642건)

□ 주요내용

○ (**민관협업 전략기술 육성**) 국가임무에 기반한 민관협업 방식의 초대형 **'NEXT 프로젝트'** 추진 및 혁신형 관리전문기관 운영

* ①주력기술(반도체, 이차전지) ②미래혁신기술(AI, 바이오, 퀀텀) ③기반기술(첨단미래소재, 미래에너지) 등

- (단기)**5년 내 핵심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핵심 공정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등 지원
(중장기)미래 성장산업의 씨앗이 될 **초격차 원천기술** 및 인프라·인력 확보

○ (**우리 기술로 K-Space 도전**) **우주과학탐사 로드맵*** 마련, 대전·전남·경남 **우주산업 클러스터** 완성**, 메탄엔진 기반 **재사용 발사체** 개발 추진

* '32년 달 착륙, '45년 화성 탐사 등 / **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체험시설 구축·운영 등

-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드론 부품·기체 국산화, 미래형 항공기 개발

○ (**딥테크 기반 혁신성장**) R&D 성과기반 **실험실창업 지원** 강화, **산학연 조인트 벤처** 설립, **민간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육성, 혁신조달 시장 진출 확대

○ (**기술사업화로 성과창출 촉진**) 기업 밀착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기술금융** 확대, **국제표준** 개발 및 **기술판로 개척** 지원, 민·관 협력 **메가 프로젝트** 등 추진

○ (**특허정보 연계 R&D**)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 전략기술R&D 전략 제시, 민간·공공 R&D를 위한 지식재산 데이터 개방·활용 확산

□ 기대효과

○ 민관 협업으로 **NEXT 전략기술** 확보하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

○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보에 기여

전략 3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 우리의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주력 제조업**은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경쟁국의 급속한 추격, 혁신역량 저하 등으로 **내우외환**에 직면

○ 세계 주요국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강력한 산업정책 추진을 통해 제조업 기반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과거와는 다른 접근**이 요구

○ 우리 기업의 시장이자 활동무대였던 세계시장도 세계화 퇴조와 보호무역의 파고 속에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 지속 확대

□ 우리의 강점인 **산업의 경쟁력**을 **근원적으로 혁신**하여 산업강국 실현

○ 주력 시장 외에도 글로벌사우스 등 **신시장 개척**으로 **무역 구조**를 **혁신**하고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과 **기술유출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함

□ **미래 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주력 산업 혁신**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공급과잉 업종의 **사업재편 활성화** 지원

○ 경제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과 글로벌 역량까지 갖춘 빅테크로 도약하도록 **성장사다리 구축**

□ **산업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산업·통상 전략과 **진짜 성장**을 이끌 **경제성장 로드맵**을 마련하고, 신성장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혁신**과 인력 양성 등 **산업혁신 기반** 마련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국정과제	주관
[국정29]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산업부
[국정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산업부
[국정31]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국토부
[국정32]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복지부
[국정33]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로 내수·수출 활성화	기재부
[국정34] 제3벤처 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중기부
[국정35]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중기부
[국정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국조실
[국정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산업부

29 신성장동력 발굴 · 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산업부)

□ 과제목표

○ AI 팩토리·휴머노이드로 **산업AI와 제조업 글로벌 리더십** 확보

○ 바이오, 문화, 방산·항공, 기후테크 등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 '30년 목표 : (AI) 산업AI 활용율 70%, (바이오헬스) 수출 35% 증가, (드론UAM) 핵심부품 국산화율 70% 달성

□ 주요내용

○ (**여건조성**)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전략 수립** 및 **기반 조성**

-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지원 등을 위한 **범부처 전략 수립** 및 추진체계 가동
- 신성장동력 분야 관련 **규제 혁신** 및 **인력양성·인재유치** 가속화

○ (**A: 산업AI**) AI팩토리·휴머노이드 등 **AI 확산으로 제조업을 혁신**

- 세계 최고 수준 제조 데이터를 활용하는 '**AI 팩토리**' 확대('30년, 500개)
- **휴머노이드** 양산 돌입과 **산업용 AI로봇** 확산으로 인력난 완화 및 공정혁신
- 유통·디자인 등 **제조서비스, 뿌리산업** 등 **제조업 전반**으로 AI 적용 확산

○ (**B: 바이오**) 생산 인프라·R&D·데이터 등 **3종 세트로 바이오헬스** 육성

- **첨단 바이오 소재 후보물질 개발·생산**이 가능한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25~'29)
- 100세 시대 바이오 제품 개발과 AI 첨단 의료기기 상용화(범부처) 추진

○ (**C: 컬처**) K-콘텐츠·컬처·푸드 등 문화산업이 이끄는 **소프트파워 강국** 구현

- 게임·음악·영상·웹툰 등 **K-콘텐츠 장르별 제작지원·해외진출** 지원 강화
- 10大 대표 K-푸드 품목 육성으로 **K-푸드 수출 150억불 달성**('30년)

○ (**D: 방산·항공·드론**) 소부장 등 **핵심기술 개발**로 **방산강국 도약**

- 전차용 파워트레인, 첨단 항공엔진 개발로 K-방산 위상 강화
- '저고도 경제' 구현의 핵심인 미래형 비행체(AAV) 개발 등 드론 산업 육성

○ (**E: 기후테크**) 기후 대응 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그린 강국** 도약 실현

- **탄소감축 공정기술, 사용후 배터리, 전력기기, 청정수소** 등 기후테크 육성

□ 기대효과

○ 미래형 첨단산업 육성으로 **잠재성장률 3%**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

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산업부)

□ 과제목표

○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조선·기계** 등 주력산업 **세계적 위상** 공고화

* '30년 목표 : (반도체) 수출 1,700억불, (자동차) 글로벌 생산 5강, (이차전지) 글로벌 시장점유율 25% 달성

○ **석유화학·철강산업**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기술** 중심으로 고도화

○ **소·부·장 핵심기술** 개발 확대와 자립화로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

□ 주요내용

○ (**전략산업 혁신**)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등 **우리 강점 산업** 업그레이드

- 제품 탑재형 AI반도체·초격차 HBM 등 **세계 선도형 반도체** 기술개발
-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및 충청·영남·호남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
- 친환경차·소프트웨어차량(SDV)·AI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혁신 생태계** 조성

○ (**공급망 강화**) 산업의 허리이자 기반인 **소부장 산업·뿌리산업의 경쟁력** 확충

- **200대 핵심 소부장 기술 R&D 투자 확대** 및 으뜸기업 200개 육성('30)
- 투자보조금·생산보조금·대체기술 개발로 **고위험 핵심광물** 국내 생산 확대
- 자동차·기계·조선 등 **15대 수요산업 적용 핵심기술개발** 등 **뿌리산업** 혁신

○ (**기술혁신·생산기반 확대**) **초격차 기술개발**과 **국내 생산 확대**로 산업기반 강화

- 북극항로 선박·초격차 디스플레이 등 **경쟁국 추격을 따돌리는 미래기술** 개발
- 반도체 레거시 파운드리 구축, 바이오 위탁생산시설 장비구축 등 **생산 인프라** 보강

○ (**구조혁신 지원**) **사업재편**으로 군살을 덜어내고 **혁신제품 개발**로 미래 준비

- 범부처 합동 **사업재편 촉진방안 마련**과 함께 인센티브 제공도 병행
- 수소환원제철(철강), 스페셜티 소재(석유화학) 등 **탄소감축·고부가가치화** 추진

○ (**상생협력 확대**) 대·중소기업이 함께 크는 **동반성장**으로 **산업 생태계** 혁신

- 공동 기술개발, 대기업 기술이전, 공급망 협력 등 **협력모델** 확산·지원
- 반도체 실증팹,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등 **업종별 성공사례** 창출

□ 기대효과

○ 주력산업 혁신과 생태계 조성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4대 제조강국** 실현

31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국토부)

□ 과제목표

○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3대 강국, 드론 5대 강국** 도약

○ **도시공간** 전역에 **AI 기술 구현** 및 **K-AI 시티 선도모델** 확립·확산

□ 주요내용

○ (**미래 모빌리티 실현**) **자율주행·UAM·드론·차세대 고속열차** 등 상용화

- (**자율주행 실현**) **레벨 4 자율차 출시** 및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 활용, 자율주행 **AI 학습센터** 등 인프라 구축, **E2E 차세대 모델 기술** 개발

- (**UAM 조기 상용화**) **공공서비스 우선 상용화** 이후 **민간 상용화** 추진, **UAM 허브**(김포공항 등) **구축** 지원, **AI 기반 교통관리 체계** 고도화

- (**드론산업 육성**) 5대 중점분야(소방·농업·물류 등) **핵심기술 국산화, 스마트 드론 팩토리** 등 제조생태계 구축, 해안순찰 등 **드론활용 공공서비스** 확대

- (**차세대 고속열차 도입**) **400km/h급 철도** 단계적 구축,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 (**AI 시티 조성**) 거주하며 실증하는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확산

- (**기술개발·실증**) 도시 각 분야의 **AI 민간·공공서비스** 발굴 및 실증 테스트

  * 특화 콘셉트 도입, 공공(기반조성)·민간(앵커기업), 산학연 연계(거주·개발·실증), 규제프리존

- (**AI 인프라 구축**) **AI 도시지능센터·AI 빌딩** 등 결합으로 인프라 고도화

- (**AI 전환 가속화**) **디지털 트윈 국토, AI 물류·건축·에너지** 등 도시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 미래 모빌리티 조기 상용화로 **교통서비스 혁신** 및 **글로벌 신시장** 선점

○ 국민 일상에 AI 서비스를 구현하여 **삶의 질 향상** 및 **K-시티 신산업** 육성

32 의료AI · 제약 ·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복지부)

□ 과제목표

○ **바이오헬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로 **수출 500억불** 달성

○ **mRNA 백신 국내기술 개발** 및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국산화율** 제고*

* '30년까지 백신 2종 개발을 통해 국산화율을 ('25년) 27.3% → ('30년) 36.4%로 제고

□ 주요내용

○ (**보건의료 R&D 강화**) 고령화·필수의료 위기 등 **난제 해결*** 및 **바이오헬스 유망 분야** 성과 창출을 위한 R&D 확대

*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 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확보, 복지·돌봄 개선, 필수의료 혁신

- **의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학부부터 박사 취득, 연구까지 **의사과학자** 체계적 지원, 신기술·현장 수요 기반 **바이오헬스 핵심 융복합 인재 양성**

○ (**의료AI 혁신성장 지원**) 한국 의료환경에 맞는 **의료AI 기술 개발**부터 **의료현장 활용**까지 전주기 투자 확대

- **의료데이터 상호연계·공동활용 기반** 마련 및 디지털 기반의 병원을 활용한 연구플랫폼·테스트베드 구축

○ (**혁신적 제약·바이오 육성**) 신약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약가보상 개선**, **과감한 규제혁신** 및 인프라* 강화

* 도심집적형 바이오클러스터 육성, 클러스터 간 시설·장비를 공유하는 버추얼플랫폼 구축

- **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수출 증대 및 **K-의료·뷰티**(화장품) 글로벌 진출 지원

○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mRNA 백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기술 개발**, **수급불안정 의약품** 생산기업 **지원 확대**, 국산 원료 의약품 인센티브 확대

□ 기대효과

○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및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

33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로 내수 · 수출 활성화 (기재부)

□ 과제목표

○ 우리 경제의 핵심 축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 기반 강화

*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 부가가치의 61%, 고용의 72%를 창출('24)

○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및 국민체감형 생활밀착 서비스 질 제고

□ 주요내용

○ (**체계적 육성기반 구축**) (가칭)**「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업종별 육성방안** 마련·추진

* 서비스 산업의 정의 및 범위 규정, 서비스 R&D투자 확대,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등 포함

○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AI를 활용한 교통·물류·안전 등 **핵심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및 **新서비스 발굴**과 함께 제조업 등과의 **산업간 융합** 지원

- 공공, 의료, 법률, 미디어·문화, 재난·안전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AI 활용 新서비스 발굴 및 개발 추진

- 콘텐츠+관련 상품 제조(K-팝+굿즈·화장품), 디지털 헬스케어(플랫폼, 진단기기, 치료제 등), 관광-뷰티 연계 등 산업간 융합 및 확장 지원

○ (**생활밀착형 서비스 질 제고**) 표준화·규모화 등 **업종별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돌봄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및 공급기관 성장 지원

○ (**서비스 수출 활성화**) **K-뷰티, 콘텐츠, 헬스케어** 등 유망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모델 발굴부터 현지화**까지 **패키지***로 지원

* 컨설팅, V-카탈로그 제작, 상담회, 쇼케이스, 전시참관, 글로벌 파트너링 등

- 서비스 수출 전문인력 양성 및 서비스 수출 전용 금융지원 확대 추진

□ 기대효과

○ 서비스산업 발전으로 **내수·수출 증가** 및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 향상

34 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중기부)

□ 과제목표

○ 연간 **40조원** 규모 **벤처투자시장**을 조성하여 **혁신 유니콘 50개 육성**

○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창업도시 10곳 조성 등 **지속가능**한 지역 **창업생태계** 구현

□ 주요내용

○ (**벤처투자시장 확대**)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및 **정부출자 확대**,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확대·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 모험자본시장 유입을 위한 금융권의 벤처투자 위험가중치 합리화 등 **투자규제 완화**, 벤처투자자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인센티브 강화

- **벤처투자 시장 확대**에 따라 **기술혁신형 M&A** 촉진, **세컨더리 펀드** 확대 등 회수시장 활성화 및 벤처·스타트업 친화적 코스닥 시장 조성

○ (**유니콘 50개 육성**) **AI** 등 **딥테크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집중 육성·투자(13.5조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개시

- **모험자본 조달, 기술거래, M&A**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확대·개편하고, AI 등 빅테크기업 육성 전용 **성장사다리 프로그램**을 신설

○ (**창업국가 실현**) **딥테크 창업패키지** 신설 및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지정, **벤처스튜디오** 활성화 및 외국인의 국내창업을 지원하는 인프라 확산

- **스타트업·벤처 해외캠퍼스** 및 **글로벌 모펀드** 조성, 해외 빅테크 기업과 정부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Around X) 확대

○ (**지역창업 활성화**) 5극3특별 **거점 창업도시 10곳 조성**, 권역별 엔젤투자 허브(+10곳) 등 **투자 인프라 확충** 및 **지역성장펀드** 조성(3.5조원)

○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 신산업 분야 창업가 **세제특례 확대** 검토 및 **주식연계보상** 확대, 신산업 분야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설

□ 기대효과

○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벤처·스타트업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지역특화산업 분야의 창업 확대로 **지역균형성장 도모**

35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중기부)

□ 과제목표

○ 스마트팩토리 3만개 추가 보급, 공공조달시장 170조원 확대, AI 등 전문·연구인력 2.5만명 채용지원 등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혁신**

□ 주요내용

○ (**강소기업 육성**) AI 등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점프업 프로그램 500+**, **기업승계 활성화** 등 지속성장 기반 마련

- **ABCDEF 산업육성 전략**을 반영해 **지역주력산업을 재설계**하고, 지역거점 도심형 연구타운 조성, 선제적 구조개선 등 지역 중소기업 지원체계 확충

○ (**성장중심 R&D**) **한국형 STTR*** **사업** 추진, 중소기업 R&D 예산 회복·확대, 성장단계별 **민간투자연계형(TIPS)** R&D 지원체계 확립

* 美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Program : 10억 달러 이상 R&D 예산을 지닌 미국 연방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연구기관간 R&D 협력·사업화 지원을 의무화

- 시장수요기반 **민관공동 R&D** 및 **기술협력 프로그램** 신설, R&D 성과 **후속 사업화** 및 **투·융자 자금 지원** 도입, 전문·연구인력지원 확대(+2.5만명)

○ (**AX 대전환**) 기초·AI 고도화 등 수요기반 **스마트공장** 지원 다양화·확대(+3만개), **제조AI** 전략 R&D 추진 등 뿌리부터 첨단기업까지 **AX 대전환**

○ (**공공조달 시장 확대**)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시장 130→170조원**까지 확대(~'30), **민수시장·해외조달시장** 진출 촉진 등을 위한 **「판로지원법」** 전면 개정

- 외산 짝퉁의 국산 둔갑 등 **조달시장 교란행위** 차단 및 '**우선구매 기술개발제품'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는 2조원 이상으로 확대('30)

○ (**글로벌 시장 진출**) 중소기업 **수출 품목·국가 다변화 촉진** 및 **K-수출전략 품목**(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역량 제고

- **수출 10대 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및 **탄소중립 고효율 설비전환** 지원 등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역량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기대효과

○ R&D 혁신(기술역량)→DX·AX(생산성)→중견기업 성장(BM혁신) 및 글로벌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중소기업의 성장모멘텀** 제고

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국조실)

□ 과제목표

○ AI 융복합 시대에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혁신**을 촉진하고 3·3·5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

○ **지역특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 공간을 조성하고, 갈등 조정 등을 통해 **규제 합리화** 성과 신속 창출

□ 주요내용

○ (**AI, 바이오헬스 규제 제로화**) **국가 핵심 신산업**에 대해 **일정 기간**(3년, 5년 등) **규제적용 배제***, **글로벌 미니멈 규제**를 목표로 규제 설계

* 기술개발, 사업화, 인프라 등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유예

- 법령 조사 등을 통해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추진, **사후 위험관리**를 위한 **민사적 책임**(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디스커버리) 강화 병행

○ (**규제샌드박스 성과 제고**) 부처별 분절화된 운영에 따른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신청-심의-실증-법령정비-상용화** 전 주기 통합 관리

- **실증특례 종료시** 원칙적으로 **법령 정비**, **상용화** 중심 **성과관리**, 기업의 **재심의 요청 과제** 등은 **규제개혁위원회가 특례 부여***(전략기획형 샌드박스)

* (가칭)「규제샌드박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메가특구 신설**) **지자체**의 **규제특례 설계**와 **중앙정부**의 **정책패키지**(정책금융, 인프라 등) 제공을 통해 **대규모**(초광역 포함) **특화산업 성장 공간** 조성

○ (**컨트롤타워 강화**) 대통령 중심으로 규제 합리화 **추진체계**를 **단일화**하여 성과 조기 창출, **전문연구기관** 및 **지자체 역량** 확충, **정부·국회간 협력**체계 구축

□ 기대효과

○ 단편적·분절적 접근에서 벗어나 글로벌 최소 수준을 목표로 **신산업 분야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설계**하여 신기술·신산업 기업 성장 토대 구축

○ **지역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 균형성장 견인

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산업부)

□ 과제목표

○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국익 우선 통상정책 추진**

○ **무역안보·투자안보·경제안보** 강화로 **국가 핵심 산업기반** 보호

○ 밀착 지원, 과감한 지원, 수출 다변화(제품·국가·기업)로 **수출 1조불 시대** 준비

□ 주요내용

○ (**경제안보 대응**) **무역안보·기술안보·투자안보·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
- 수출통제 협력, 핵심기술 보호, 전략적 투자유치, 투자안보심의 등 철저 대응
- '**경제안보 점검회의**' 정례화로 **통상·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가동

○ (**무역구조 혁신**) 수출 7천억불에서 **1조불 시대**로 가기 위한 기반 구축
- **품목 다변화, 시장 다변화, 주체 다변화**(수출스타 500개) 등 수출저변 확대
- 무역금융 확대, 지역 전시회 육성, 기술장벽·탄소규제 대응 등 **수출 인프라** 확충

○ (**주요국 협력**) **미국·중국·일본·EU** 등 주요 교역국과 통상·산업 협력 심화
* (미국) 반도체·이차전지 등 투자협력과 함께 조선·에너지 등으로 협력 영역 확대
* (중국) 서비스 신시장 개척, 핵심광물 협력, 섬유·가전 제3국 공동진출 등 추진
* (EU) 탄소규제·공급망 규제 등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신통상 협력 강화
* (한미일) 한미일 3국간 첨단 산업 및 에너지 분야 기술·산업협력 강화

○ (**글로벌 사우스 진출**) **신남방**$^{2.0}$, **신북방**$^{2.0}$, **글로벌 사우스** 협력으로 경제영토 확대
- **미래 성장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유상원조·개발금융** 등 개도국 진출 지원
- 맞춤형 통상협정 체결 및 **공급망·디지털·기후** 등 **신통상협정** 확대

○ (**보호무역 피해 지원**) 수출기업·투자기업·중소기업 등 **보호무역 애로기업** 적극 지원
- **상담·정보제공·무역보험·대체시장 발굴, 물류비용 절감** 등 다각도 지원
- 관세 부담 등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유턴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
* (지원요건)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지원규모) 지원보조율 10% 상향 (~'26년 限),

○ (**무역안보 단속 체계 확립**) **국산 둔갑 우회수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행위 대응역량 강화

○ (**공공비축 강화**) **핵심물자 비축물량 확대와 비축기지 확충**으로 공급망 관리
* (비축목표) 희소금속 100일 → 180일, (인프라) 새만금 전용 비축기지 착공('26)

□ 기대효과

○ 경제안보 강화, 무역구조 혁신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수출 1조불** 기반 마련

전략 4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 기후위기는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을 촉구

○ 기후정책 후퇴로 약화된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동력**을 **회복**시키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 추진 필요

□ 이재명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 있게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고,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203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제시

○ 기후위험이 **경제·사회에 미칠 영향**을 정교하게 **예측**하여 **국가 인프라**와 **사회·경제 대응력**을 높이고, 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세심한 보호 대책을 추진

□ 전국 산업 거점과 재생에너지를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재생에너지 기반의 경제성장 벨트**를 **완성**하고, 지역 균형성장과 첨단 산업 지원

○ 탄소중립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주력산업**의 **저탄소화**와 **탄소중립 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통해 '**산업 성장지향형 탄소중립**'의 선도국 도약 추진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국정과제	주관
[국정38] 경제성장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축	**산업부**
[국정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산업부**
[국정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환경부**
[국정41]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산업부**
[국정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환경부**
[국정43]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환경부**
[국정44]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환경부**
[국정45]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환경부**

38 경제성장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축 (산업부)

□ 과제목표

○ 전국 주요 산업거점과 재생에너지를 잇는 **한반도 첨단 전력망** 신속 확충

○ **재생에너지** 등과 연계한 **기후테크 산업** 성장동력화

○ **AI기반 첨단 에너지시스템** 구현 및 **전력망 거버넌스·제도 혁신**

□ 주요내용

○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 **서해안 HVDC**(고압직류송전)를 **조기 구축**, **한반도 U자형 전력망*** **완성**('40년대)을 위해 전력망 건설역량 혁신

* 서해안-남해안-동해안을 잇는 HVDC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 ESS 등 계통안정화 장치 확대 등을 통해 **호남권 접속제한 단계적 철회**
- '**전력망 위원회**'를 통한 전력망 건설 **갈등 관리·소통** 추진

○ (**기후테크 육성**)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활성화, **수요반응자원***을 수급관리에 적극 활용,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 **히트펌프** 산업 육성

* 전력수요가 높고 공급이 부족할 때 전력수요자가 소비를 줄여서 보상받는 제도

○ (**AI 에너지시스템 구축**) **AI**를 **활용**하여 **전력시장과 전력망을 효율화**하고, AI기반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 및 **에너지데이터 공개** 확대

- **AI데이터센터 지방분산**으로 전력 수요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전력망 거버넌스 혁신**) 전력망 조기 건설을 위해 **민간 건설역량을 활용**하고, 계통의 안정성·효율성을 위한 **전력망 운영·관리 체계 개선** 검토

○ (**전력시장 혁신**) 전력수급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시장** 도입,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지역별 요금제** 신설

- 공정한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

□ 기대효과

○ 산업과 지역의 **성장지도를 재설계**하고 에너지 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재생에너지 인근에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지역 균형성장과 경제성장 기여

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산업부)

□ 과제목표

○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 **햇빛·바람연금 확대**, RE100산단 구축 등 **지역 균형성장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재생e 확대**) **재생e 목표**('30. 78GW)를 상향하는 **로드맵 수립·이행**

- **계획입지 발굴, 집적화단지 신속 조성, 인허가 의제** 처리 등을 통한 **서남해·제주 해상풍력 단지** 구축
- 산단·영농형·수상·주차장·지자체 소유 공공부지 등 **태양광 입지 다각화**
- **조력·수열** 등으로 재생에너지 다각화, **'40년 석탄발전 폐지** 추진

○ (**재생에너지 제도 개선**)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를 **계약시장**으로 **단계적 개편**,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자체의 **이격거리 완화·폐지** 추진 등 규제 혁신

* 정부주도 계획입지 도입, 전파영향평가 기준 완화, 풍황계측기 설치허가 개선 등

○ (**산업 경쟁력 강화**) **차세대 태양전지** 조기상용화, **해상풍력 터빈·부품·기자재 기술개발, 설치선 건조** 및 **전용항만** 설치

○ (**지역 상생**) **햇빛·바람연금 확대,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등으로 지역소득 증대

-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재생에너지 모집·인허가·설치·유지보수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육성·활용을 통해 주민 수용성 제고

○ (**RE100산단**)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지산지소**'형 RE100산단 조성

- **파격적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
- 기업유치를 위한 **분산형 모델**(재생e 직접 거래) 및 **재생e 요금** 강구
- 기업투자와 인재유치를 위한 **정주·교육 여건조성** 및 신도시 기반 마련

□ 기대효과

○ 에너지 대전환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 RE100산단을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첨단기업의 경쟁력** 강화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환경부, 국조실)

□ 과제목표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책임 달성('18년 대비 40% 감축)을 위한 이행기반 조성

○ 2035년 감축목표 수립 및 2050년까지 **장기 감축 로드맵** 마련

○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 탄소중립산업 및 기후 신산업 육성

□ 주요내용

○ (**2030 감축목표 달성**) 산업·건물·수송·전환 분야 감축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이행전략 수립, 기업의 실질적 탈탄소 전환을 위한 향후 5년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 (**2035 이후 로드맵 수립**) 2030 목표 대비 진전된 2035 감축목표 수립('25.下), 미래세대를 고려한 탄소중립 **장기 감축 로드맵** 마련

○ (**이행기반 강화**) **기후대응기금** 수입원 확충, 예비타당성 효과 분석 시 탄소저감효과 반영, 대중교통 건설사업 등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 (**산업 탄소경쟁력 강화**) 기후 신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신속한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마련

- 녹색 공공조달 확대, 지역 소재 **기후테크** 기업을 우대하는 특화 펀드 조성,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교체 시 전환지원금 지원, 전기차 충전소 확대

○ (**국민참여 확대**) 기후 **공론장** 마련(기후시민회의), 탄소중립 국민 실천에 대한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강화, 정부-시민사회 협력 탄소중립 실천단 운영

○ (**국제사회 논의 주도**) 감축·적응·그린ODA 분야 국제논의 주도 및 지원 확대, 한·중·일 기후위기 대응 공조 강화, 남북 기후·환경협력 과제 발굴·추진

□ 기대효과

○ 국가 탄소중립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산업의 탈탄소 전환** 확대

○ 탄소중립 및 기후 신산업 신성장 동력 확보, **글로벌 기후·환경 리더십** 강화

41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산업부)

□ 과제목표

○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함께 이끄는 **탄소중립 선도국** 도약

○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순환경제 활성화 등으로 **탄소중립 촉진**

□ 주요내용

○ (**주력산업 탄소중립**) 산업부문 2035 NDC 달성을 위한 **전략·수단** 전면 개편

- **수소환원제철**(철강), **바이오 원료전환**(석화) 등 대규모 R&D 예타 추진
- 탄소감축을 위한 **혁신적 제도*** 도입, **탄소감축 설비투자 융자** 등 지원

* 감축효율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규모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 등

- 녹색인증제 등 **저탄소 제품의 국내외 수요 촉진** 지원 기반 확충

○ (**해외 탄소규제 대응**) 탄소국경세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지원** 및 **기반구축**

- 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감축을 원스톱 서비스**로 밀착 지원
- 공급망 내 기업들과 탄소배출 정보를 주고받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디지털제품여권** 등에도 대응

○ (**건물의 에너지효율화**) **제로에너지 건축물·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하고, **국산목재 활용 시범사업** 추진 및 **녹색건축인증 개편** 등 제도개선

* 공공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보급·확산

○ (**산업부문 순환경제 활성화**) **재제조**(자동차 부품), **재사용**(폐배터리), **재자원화**(재생원료) 등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및 기술개발·인증 지원

-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자원효율등급제** 및 **재생원료인증제** 마련

□ 기대효과

○ **해외 탄소규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국내 신시장·신산업 창출**에 기여

○ 산업부문 순환경제를 통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구현

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환경부)

□ 과제목표

○ 플라스틱 감량부터 생산·회수·재활용까지 **전주기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국제수준으로 강화, **CE(순환경제)100** 확산

□ 주요내용

○ (**탈플라스틱 추진**) 국민 참여 숙의과정을 거쳐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 수립('25),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 **'30년까지 30%**로 상향

○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추진, 제품의 수리 용이성 평가 제도화('25), 포장재의 손쉬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재질·구조 개선 촉진

○ (**회수체계 고도화**) 분리배출 체계 개선, 완구류·일회용컵을 생산자책임 재활용 대상으로 추가, 무인회수기·회수보상제·역회수 등 회수 촉진방안 검토

○ (**순환이용 활성화**)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

- (**폐배터리**)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사용목표제 도입·시행, 핵심 원료(리튬)·소재(음극재, 분리막) **회수기술 고도화** 추진
- (**태양광 폐패널**) 고속·저에너지 재활용 처리공정 및 **자원화** 기술개발
- (**폐의류**) 폐의류 자동 분류·선별 및 **물질재활용** 기술개발

○ (**순환경제 경쟁력 강화**) **CE(순환경제)100** 참여 촉진 및 특화산단 지정, 순환경제 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운영, 유해성 적고 자원가치 높은 품목의 순환자원 인정 추진

○ (**순환경제 확산**) 폐기물 소각열을 RE100산단에 공급하는 **히트링크** 사업, 제로웨이스트 매장(알맹상점 등) 활성화 등 순환경제 선도 사업 추진·확산

□ 기대효과

○ 손쉬운 수리와 순환이용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새로운 **순환경제 일자리** 창출

43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환경부)

□ 과제목표

○ 기후 감시·예측부터 기후위험 영향 평가까지 **적응 정책**의 과학적 기반 강화

○ **기후위험에 대비**한 **국가 인프라 대전환** 및 경제·사회 전반의 **적응력** 강화

□ 주요내용

○ (**과학적 기후변화 감시·예측**) 고해상도 한반도 **기상·기후 감시 위성**(천리안 5호) 개발·발사, 1개월~10년까지 예측하는 국가 기후예측시스템 개발

○ (**기후위험 영향 평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사회·경제의 기후위험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기후위험 통합평가모델** 구축

○ (**국가 인프라 대전환**) 예측 범위를 벗어난 기후재난에 대비하여 **철도, 항만, 댐, 하천** 등 국가 인프라에 대한 안전성 진단 및 설계기준 강화·보강

○ (**도시 기후 탄력성 제고**) 도시열섬 완화 숲, 생활정원 확충 등 **녹색공간** 조성, ESG 경영 등과 연계한 민간 참여 **자연환경 복원사업** 추진

○ (**경제 적응력 강화**) 산업계 업종별 기후변화 대응 매뉴얼 보급·시행, 기후위기 시대 **식량 안보** 대응체계 구축, 안정적인 **반도체 초순수** 공급체계 구축

○ (**사회 적응력 강화**) 온열·한랭질환 감시 및 건강영향평가, AI 감염병 스마트 감시 확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맞춤형 인프라 지원

○ (**기후적응 컨트롤타워 정립**) 기후 감시·예측부터 기후위험 영향까지 적응 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추진

□ 기대효과

○ 국민이 기후재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기후위험 영향 정보** 제공

○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지역, 산업 보호** 및 기후적응 역량 강화

44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환경부)

□ 과제목표

○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 13㎍/㎥** 수준 달성, **안전한 물 공급** 및 먹거리 안전망 강화

○ **유해화학물질** 및 **환경사고**에 대한 촘촘한 사전예방·사후구제 체계 구축

□ 주요내용

○ (**미세먼지 저감**) 사업장, 수송, 생활 등 전 분야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

- (**사업장**) **대기배출허용총량** 단계적으로 축소,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전환(~'40), 소규모 사업장(4·5종) 저감시설 교체
- (**수송**) 차종별 및 수요자별 여건을 고려한 **내연기관차 퇴출 전략** 수립, 노후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 확대, 국내 전 차종 **전동화 모델** 출시 유도
- (**생활**) 오존유발물질·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 및 중점 관리

○ (**녹조피해 예방**) **녹조 독소 기준 신설**('25) 및 기준과 연계한 대응체계 개선(조류경보 강화, 예측지점 확대 등), 산단폐수·하수·가축분뇨 방류수 수질기준 상향

○ (**안전한 물 공급**) 낙동강 상·하류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 **반도체·RE100 산단** 등 대상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 추진

○ (**화학물질 안전관리**) 발암성·생식독성물질 등 **고독성 화학물질**의 제한물질 지정 확대, 환경오염취약지역 역학조사·사후관리·피해구제·도시재생 확대

○ (**화학제품 사고 예방·대응**) 불법유통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온라인 감시 강화, 사고 조기감지 – 피해 긴급조사 – 신속 구제까지 **전주기 대응체계** 구축

○ (**안전한 먹거리 제공**) AI 자동예측시스템 도입 등 식중독 사고 예방시스템 혁신, 어린이·노인·장애인 급식지원체계 확충 및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 단계적 확대

□ 기대효과

○ 일상 속 **환경오염** 및 **고독성 화학물질** 등에 대한 **불안감 해소, 안전한 먹거리** 제공

45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환경부)

□ 과제목표

○ **4대강 보 개방 확대**,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로 물이 흐르는 하천 환경 조성

○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달성**, 국제 수준의 **생태계·생물다양성 보전**정책 추진

□ 주요내용

○ (**4대강 재자연화**) 시설별 여건에 맞춰 **4대강 보 개방** 및 **취·양수장 개선** 사업 신속 추진, 4대강 보 처리·운영에 대한 논란 종결

○ (**자연 친화적 하천관리**) 하천 연속성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천 횡단 구조물 개선·철거**

- **낙동강 하굿둑** 개방·확대,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계 복원방안 검토

○ (**보호지역 확대**) 보호지역·자연공존지역 확대로 **보호지역 국제목표 30% 달성**, 훼손된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국가 생태계 평가 보고서 발간

○ (**생물다양성 회복**) 유입주의 생물 지정 확대 및 외래생물 세관검사 강화 등 **생물안보 강화**, 멸종위기종 종 보전에 더해 **서식지까지 보전**하도록 체계 강화

○ (**생태관광 활성화**) 국립공원 지역 명소화를 위한 테마시설 확충, **국가 휴양공원** 등 지역 특화 관광자원 개발, 민간 참여 생태계보전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공탁제** 도입 추진, AI·빅데이터 활용으로 평가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제고, 평가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제도 신뢰성 제고

□ 기대효과

○ 강과 자연 건강성 회복에 따른 **공간 향유**와 **여가활동 증대**로 삶의 질 향상

○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투명성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반 마련

전략 5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첨단전략 산업·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긴요

○ **정책금융**과 **민간자금**이 협력하여 **AI,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는 **100조원 펀드**를 조성하고, 해당 전략산업의 **유망 벤처·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충분한 **성장**(Scale-up) **자금**을 **공급**

□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활성화**할 필요

○ **불공정거래**를 **엄단**하여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 **기업성장**의 **과실**을 **국민**들과 **향유**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 주식 **수요기반 확충**, **시장구조 재편 등**으로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디지털자산**의 **시장 확대**와 **세계적인 제도화** 흐름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받는 **디지털자산 산업 성장** 및 **투자자 보호환경 조성**이 요구

○ **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 등 생태계 정비를 통해 **산업육성기반**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연계자산 제도화** 등 **안전**하고 **건전**한 **투자기회**를 제공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국정과제	주관
[국정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금융위**
[국정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금융위**
[국정48]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금융위**

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금융위)

□ 과제목표

○ 전폭적인 투자로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회수가 선순환**하는 벤처금융생태계 조성

○ **기후금융** 공급 확대 및 **ESG 공시** 관련 인프라 제고

□ 주요내용

○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신설) AI 등 **미래전략산업**과 **에너지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민·관 합동의 대규모 펀드 조성

- **벤처·중소기업**은 **장기 지분투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설비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은 **초저리 대출** 등 맞춤형 지원
- **국민공모** 및 **연기금·민간금융사 자금**이 함께 참여하여 기업성공의 과실을 국민들과 공유

○ (**벤처·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딥테크**(바이오·반도체 등) **맞춤형 보증** 신설, 혁신벤처기업 특화 **기술특례상장제도** 마련 등 **원활한 자금조달** 환경 조성

- **지역 벤처·중소기업**의 성장(Scale-up) 지원을 위한 **정책펀드** 조성 및 **벤처·혁신기업 집중 투자기구**(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 신설

*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 주로 성장성 있는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 (**ESG금융 강화**) **재생에너지, 기후기술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고탄소 제조기업의 **탄소감축 활동**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 **ESG 공시기준** 및 **로드맵**(대상·시기)을 마련하고, **ESG**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등의 **금융지원 확대**

□ 기대효과

○ AI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과 **벤처·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로 경제활력 제고

○ 산업구조의 녹색전환 등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금융위)

□ 과제목표

○ **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 주요내용

○ (**주주가치 제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위한 개정 **「상법」**의 시장 안착 및 추가입법 단계적 추진(법무부)

- **주주이익 환원**을 위한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 검토
- **합병·분할 등 과정**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 합병·분할시 공정가액 적용,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배정 및 의무공개매수 도입 등

-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확대 및 이행여부 점검·공시 등 내실화 추진

*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주주권한을 행사토록 유도하는 지침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를 엄단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불법이익은 철저히 박탈

- 불공정거래 **탐지·적발 역량 제고**를 위해 **AI기술 도입·활용** 및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담당 조직·인력 확충

○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MSCI 및 글로벌 투자자 등과 대외소통 강화

- 공모주 우선배정 확대 등 **코스닥벤처펀드** 활성화
-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감안하여 **주식시장**을 **재구조화***하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등으로 건전한 IPO 환경 조성

* (예) 코넥스(벤처·중소 위주) - 코스닥(성장·중견 위주) - 코스피(우량·대기업 위주)

□ 기대효과

○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고, 기업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과 공유

48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금융위)

□ 과제목표

○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 ETF·토큰 증권** 관련 제도 정비

○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로드맵과 「블록체인기본법」 마련

□ 주요내용

○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디지털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유형별 영업 행위 규제 마련 등을 통한 **건전한 시장기반** 조성

-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관련 **이용자 보호, 글로벌 정합성, 통화·외환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마련

○ (**디지털자산 관련 상품 제도화**) 금융·디지털자산 시장간 연계에 따른 리스크, 실물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하여 **현물 ETF 도입** 추진

- 이에 더해 분산 원장 기반의 효율적 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이 가능한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제도** 도입

○ (**블록체인산업 지원 강화**) 블록체인 생태계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해 **「블록체인산업 경쟁력 강화방안」**(혁신로드맵), **「블록체인기본법」** 마련

- 디지털자산 혁신 서비스를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성장을 위한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여 **블록체인 특구 실효성 제고** 추진

□ 기대효과

○ 건전한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 성장 및 투자자 편익 제고

○ **통화의 디지털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송금 등 **지급결제 편의** 향상

국정목표 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전략 1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 **수도권 일극 집중**과 **지방 경쟁력 약화**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저하**

○ 특정 지역에 자원을 집중투자하는 **불균형 성장**과 중앙정부 주도의 **기존 균형발전 전략**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

□ **5극3특 초광역권** 중심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 전략** 추진

○ 5극3특이 **좋은 일자리**, **매력적인 정주·교통 여건**, **우수한 지역 대학**과 **교육 환경**, **첨단산단**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새만금·부산 등 **균형거점** 육성, **중소도시** 경쟁력 강화, **소멸위험지역** 활력 제고로 **균등하고 고른 삶의 질** 뒷받침

□ **지역**이 **자기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실질적 자치분권 체계 확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기반 구축**

○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주재정권 확대**, **자치입법권 강화**로 **지역 혁신동력 확보**

○ 5극3특 실현을 위해 **특별지자체·자치도**에 **맞춤형 특례 확대** 등 제도 개선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국정과제	주관
[국정49]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행안부·국토부
[국정50]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토부·행복청
[국정51]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국토부·산업부
[국정52]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행안부
[국정53]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행안부·기재부
[국정54]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행안부
[국정55]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교육부
[국정56]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해수부
[국정57]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국토부

49 '5극3특' 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행안부·국토부)

□ 과제목표

○ 5극 초광역권 출범 지원, 3개 특별자치도에 대한 맞춤형 특례 부여

○ 사람·기업이 모이는 혁신거점 조성, 마을 및 중소도시 집약거점 육성

□ 주요내용

○ (특별지자체 출범 지원)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5극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 특별지자체 설치·운영

○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공공서비스 광역화를 위한 공공협약제도 도입,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통해 주민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 제고

○ (특별자치도 성장 지원) 5극 수준의 3특(제주·전북·강원) 육성을 위해 특별법 개정 및 특화성장지역 조성·지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 SOC 인프라 구축 등

○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전략산업 선정·지원 등 혁신거점 제도기반 마련

- 권역별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국가산단 조성 및 기존산단 개선
- 도심융합특구·기업형혁신도시·캠퍼스혁신파크 등 기업·대학·연구기능 융복합
- 외투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연구개발특구를 창업거점으로 활용

○ (광역교통망 연계) 5극3특 광역권 연계를 위한 광역철도·도로 적극 추진

- 중심도시와 인접 생활권 등 권역내부 연계를 위한 광역교통수단 확충

○ (중소도시 육성) 투자선도지구·기업혁신파크·新도시재생 등 경제거점 조성

- 주거·생활SOC 복합공간 조성, 빈 건축물 정비, 삶의 질 지수 도입
-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랜드마크 등), 관광거점 육성 등 지역 매력 확보

□ 기대효과

○ 자치분권 기반 국가균형성장으로 고르게 잘 사는 대한민국 구현

50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토부, 행복청)

□ 과제목표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등 건립 후 사회적 합의 거쳐 **완전이전** 추진

○ 행정기능 강화, 교통망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발전** 견인

□ 주요내용

○ (**국가중추시설 이전**)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설계공모, '25.下)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통합협의체 운영

※ 국가중추시설 일대를 국가 위상·정체성 상징하는 국가적 랜드마크 공간으로 조성

○ (**전국 접근성 개선**) **서울**[1시간], **전국**(주요도시)[2시간] 접근 가능한 교통망 구축

-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건설, 광역 BRT 개설*, 충청권 광역도로망 구축

* 반석-구암 BRT, 공주 BRT, 조치원 BRT

-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등 검토, BRT·CTX 등 **세종-청주공항** 연결 강화

○ (**자족기능 확충**) AI·모빌리티·바이오 등 **미래산업 기업혁신허브** 조성

-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효율성 제고

○ (**행정수도 제도기반 마련**) 국회의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 **추진**

-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행정수도 완성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 기대효과

○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국정운영 효율화 및 균형성장** 선도

51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국토부, 산업부)

□ 과제목표

○ 공론화 과정 거쳐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이전** 신속 추진

○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남부산업벨트**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 주요내용

○ (**2차 공공기관 이전**) **이전 절차**에 **신속** 착수하고, 지역 **정주여건**도 개선

-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 즉시** 실시('25.下), **추진체계** 신속 구축
- 연구·공론화 거쳐 공공기관 이전 원칙·일정 등 **로드맵 수립**('26)
- **청사 임차·공동청사 건설**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공기관 지방** 이전('27~)
- 이전기관 종사자 조기 정착을 위해 **교통·교육·의료·정주 패키지 지원**, **연구개발 캠퍼스·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 (**새만금 도약**) **RE100산단** 조성 등 **재생 에너지 허브**로 육성

- **수상 태양광 1·2단계** 등(2.7GW)은 에너지고속도로 가동시점과 연계 가동, **신규 3.3GW** 확보를 위한 풍력 발전 등도 신속 추진
- **남북3축 도로**, **새만금공항·신항**, **상수도** 관로 등 기반시설 적기 조성
- **메가특구** 설정,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으로 기업투자 촉진

○ (**남부산업벨트 육성**) **남부권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신성장거점으로 육성

- 3대 위기업종(석유화학·철강·이차전지) **특단대책** 강구, **산업위기지역 패키지** 지원
- **항공·이차전지**(동남권), **미래차·우주산업**(서남권) 국가산단 조성

□ 기대효과

○ 국토공간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국가균형거점** 육성

52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행안부)

□ 과제목표

○ 국가-지방 및 광역-기초간 협력 체계 구축, 지방자치권 강화 및 주민자치 활성화, 국가사무 지방이양 등으로 **분권 역량 확대**

□ 주요내용

○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지역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국가자치분권회의로 개편**하고 개헌을 계기로 **헌법상 기구**로 격상

○ (**자치입법권 강화**)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행정규칙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개헌을 계기로 **폭넓은 자치입법권 보장**

○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의회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등을 확대하여 **지방의회의 역량·책임성 강화**

○ (**주민자치권 확대**)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 **주민 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 실시, **주민소환제** 개선,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마련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 (**권한이양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가칭)「**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지역별 맞춤형 권한이양** 등 추진

□ 기대효과

○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통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자율적 정책 시행**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주민·지역 주도**의 **분권정책 추진**으로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창의성과 다양성**을 **실현**

53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행안부·기재부)

□ 과제목표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예산편성·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로 **지방재정 자율성·투명성** 강화

○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 발행 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 (**지방 자주재원 확충**) 장기적으로 **국세-지방세 6:4**를 지향, **7:3**까지 **개선**, 5극3특 등에 대응해 **교부세율 상향, 중앙-지방 기능 조정** 등도 함께 추진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지원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인 발행기반 조성** 및 **발행규모 확대** 지원

○ (**국고보조사업 혁신**)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 확대** 및 **보조사업별 특성** 등을 반영해 **국가-지방 간 역할의 합리적 조정**

○ (**지방재정 책임성·투명성 강화**) **재정정보 공개 확대**로 투명성 증진, **재정운용**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 심의** 내실화

○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이·통장의 노고**에 국가가 보답하기 위해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 신설

□ 기대효과

○ **실질적 재정분권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4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행안부)

□ 과제목표

○ 인구감소지역 등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재도약 기반** 마련

○ 실제 체류자 기반의 정책 추진 등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입** 촉진

□ 주요내용

○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성과** 및 **집행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 등과 연계, **기금 규모 확대**

○ (**차등 지원체계 정립**) 수도권과의 거리 및 **지역소멸도** 등에 따른 **차등 지원 원칙**과 **기준**을 정립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법인 기부 도입** 및 법인 기부금 **활용방안** 마련, **기금 사용목적 다양화** 등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 (**복수주소제 단계적 도입**) 실생활권 기반 정책 설계를 위해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특별자치도·인구감소지역 등 대상 **복수주소제** 시범 실시 및 전국 확대

○ (**생활권 중심 집약형 도시 도입**) 인구감소지역에 **주거·교통·생활** SOC 등이 **집약된 도시를 시범 조성**, 성과 평가를 통해 점진적 확대

□ 기대효과

○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입 선순환 체계 마련을 통해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지속가능성 제고**

55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교육부)

□ 과제목표

○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지역 내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교육력 제고** 및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성장** 달성

□ 주요내용

○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단계적·전략적**으로 **상향**하고, 집중 육성분야 중심으로 교육·연구 경쟁력을 제고

○ (**RISE 재구조화 추진**) **지역산업과 국립대-사립대** 간의 **동반성장** 지원

- 5극3특 행정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및 협업 강화, 지역대학 간 교육과정·교원·연구장비·시설 등의 공유·협력을 고도화

※ 지자체-대학 간 협력 강화로 한계 사립대학의 적정규모화 등 구조개선 및 역할·기능 전환 지원

○ (**열린 평생·직업교육 지원**)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체계 구축

- **직업교육기관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 산업에 종사할 실무 인력을 육성하고, 전문대를 중심으로 성인학습자의 직무역량 강화 기회 확대

* 직업계고와 전문대 간 교육과정 및 학점 연계, 산업체 경력의 학점 인정 등

○ (**대학생 취창업·진로 지원**) **입학부터 취업까지 연결**되는 지원 시스템 확립

- **산학연협력**을 통해 대학 **교육 - 실습 - 취·창업 지원을 연계**하고, 대학생의 진로 설계 역량 및 취·창업 준비 지원 강화

○ (**유연한 학교 체제 마련**)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미래형 학교** 조성

- 지역 교육혁신 플랫폼인 **'교육특구' 운영**, **통합학교** 운영 기반 마련 및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로 지역 교육력 제고

□ 기대효과

○ 지역의 교육, 취·창업, 정주지원으로 **인구 유입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다양한 연계·협력으로 **기술개발, 창업,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성장 기반** 마련

56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해수부)

□ 과제목표

○ 북극항로 시범운항 및 **상업항로화, 부산항 글로벌 거점항만** 도약

○ **국가 해상수송력 20% 확충**(1.2억톤), **외항선박**(5천톤 이상) **친환경 전환율 14%** 달성, **쇄빙 컨테이너선** 등 **신기술** 확보

□ 주요내용

○ (**해양수도 완성**)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25년 내 완료, 정부·지자체 등 **해운선사 이전협의회**를 출범하여 **HMM** 등을 부산에 **유치**

* 건물 임차를 통한 '25년 내 이전 및 신청사 건립을 병행하고, 이주 직원 지원방안 마련

○ (**북극항로 개척**) 국적선사에 **쇄빙선 건조, 보험** 등을 **지원**하여 **시범운항** 및 **상업항로화**를 추진하고, **유엔 해양총회** 개최('28) 등을 통해 국제협력 강화

○ (**거점항만 조성**) 컨테이너·LNG·원유 등 **북극 화물별 거점항만**을 육성하고, 부산항 등을 **친환경·스마트항만**으로 조성 및 **글로벌 물류허브화** 추진

○ (**해운 경쟁력 제고**)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국가수송력**을 **확충***하고, **국적선사 경영안정, 이용률** 제고 등을 지원하며, **선원 육성** 및 매력도 제고

* 친환경선박 전환 보조금 지원 확대, 한국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충 추진

○ (**K-조선업 도약**) **'완전'자율운항선박**, 무탄소 선박, **스마트·자동화** 등 기술을 개발하고, **중소조선사 지원*** 및 **美 선박·함정** 유지·보수·운영 등 신시장 개척

* 중소조선사 친환경선박 설계 지원, 선박 수주를 위한 선수금 환급보증(RG) 지원 확대

□ 기대효과

○ **북극항로 개척 기회**를 **선점**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신**(新) **해양수도권** 조성

○ **국가 해상수송력 확충**과 글로벌 허브항만 완성으로 우리 **수출입 물류**를 **뒷받침**하고, **글로벌 해양강국** 지위 공고화

57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국토부)

□ 과제목표

○ 철도·도로·항공 등 전국에 **균형 잡힌 교통 인프라** 확충

○ **대도시권 교통혼잡 완화** 및 **교통소외지역** 해소

□ 주요내용

○ (**전국 광역철도 확충**) 메가시티 지원을 위해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 수도권 외곽지역 교통편의 향상을 위한 **GTX 건설사업** 차질 없이 추진

○ (**철도·고속도로망 구축**) 전국 거점 연결 '**4×4 고속철도망**' 구축 가속화*

* 고속철도 수혜면적을 임기 내 53%(현재 39%)로 확대

- **주요 간선도로망 11개 사업** 적기 개통으로 '**10×10 고속도로망**' 구축

-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확대**, **지하고속도로 선도사업** 착공

○ (**지방 항공관문 확대**) **신공항*** **사업** 추진, **중장거리 LCC 운항** 확대

* 가덕도, 대구경북, 제주제2, 새만금, 울릉, 흑산, 백령, 서산공항 등

○ (**대도시권 혼잡 완화**) 대도시 내 **도시철도 및 BRT·광역버스** 확대

- 신도시 등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 추가, **주요거점 환승센터** 확충

○ (**농·어촌 등 교통 소외지역 해소**) 원하는 시간·장소 이용 가능한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시외버스 등 필수노선** 도입 및 **물류취약지역** 지원 강화

□ 기대효과

○ **수도권은 더 빠르게**[1시간], **전국은 더 가깝게**[2시간] 연결

○ 농·어촌 등 **교통물류 사각지대 해소**로 **전 국민 교통복지** 실현

전략 2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 **민생은 언제나 정부정책의 출발점**이자 **최우선 과제**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누적된 가계부채는 민생경제 활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민 채무부담을 완화해 나갈 필요

○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돕고**,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등 금융문턱을 낮춰 **금융소외계층**을 지원

□ 통신·교통·주거·먹거리 등 **필수 생활비 부담을 줄여** 가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소비 여력도 늘림**으로써 **민생경제의 선순환 구조** 마련

○ 민생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영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생태계 구조를 혁신**하여 **활기 도는 골목상권** 조성

□ 공공분양 등 **공적주택 공급을 강화**하고, 선호지역에 **중산층·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안정** 실현

○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 등 **다변화하는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주거급여** 확대, 노후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등 **취약계층 주거안전망** 강화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국정과제	주관
[국정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금융위**
[국정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금융위**
[국정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기재부**
[국정61]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중기부**
[국정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국토부**
[국정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국토부**

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금융위)

□ 과제목표

○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관리

○ 부동산 부문에서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유도

□ 주요내용

○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도록 **중장기 로드맵** 마련

- **명목 성장률**을 감안한 **연도별 가계부채 관리목표** 설정, **대출공급**의 **쏠림·중단**이 없도록 월별·분기별 계획 마련 등 세심하게 관리

○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관행 정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대출관리 로드맵** 마련 및 **DSR 적용 예외 범위**의 단계적 축소

- **DSR 예외대출** 취급시에도 **개인별 소득정보**를 요구·확인하여 **금융회사 대출심사**에 적극 활용토록 유도

○ (**차주 금융부담 완화**) **유한책임대출** 활성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 대출이용자의 금융부담 경감 노력 지속

○ (**부동산대출 쏠림 완화**) **부동산 관련 대출 취급**시 금융회사에 **추가적인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여 가계부문에서 **기업부문**으로 **자금운용** 전환

* 은행이 주담대 취급시 보다 많은 자본을 적립토록 의무화(위험가중치 상향),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위험에 대비한 추가 자본적립의무 도입 등

- 설비투자 등 **기업금융 관련 자본적립 의무**는 국제기준 범위 내 **완화**

□ 기대효과

○ 가계 부문 채무부담 감소를 통한 소비 여력 확충으로 **내수시장 활성화**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

○ **기업의 대출 접근성 향상**으로 설비투자,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 조달할 수 있어 **경영 안정성** 제고

59 서민 ·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금융위)

□ 과제목표

○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및 **과도한 채무부담** 완화

○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지원 확대 등 **금융 접근성 제고**

□ 주요내용

○ (**금융비용 절감**)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가산금리 산정방식** 개선* 및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 신·기보, 지신보 등 보증기관 출연금을 은행 가산금리에 과도하게 포함하지 않도록 변경

** 현재 가계대출에 대해 운영중인 '대출 갈아타기'(이용중인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변경) 서비스를 개인사업자대출까지 확대

○ (**금융문턱 완화**) **중금리대출** 확대,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및 **정교한 신용평가**를 통해 서민·소상공인 자금공급 확대

*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출연하는 기금을 신설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 소외지역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은행점포** 운영* 유도

* 은행영업점이 없는 지역은 은행대리업을 통해 우체국, 상호금융기관 등에서 은행업무 이용 등

○ (**채무부담 경감**)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장기연체채권 소각*** 및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강화**

*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약 16.4조원 소각 (약 113.4만명 수혜 예상)

** 지원대상('20.4월~'24.11월 사업영위자 → '25.6월까지로 확대) 및 채무감면율 확대 (現 최대 80% → 최대 90%로 확대)

– **정책대출**을 **성실상환** 중이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금리감면**, **분할상환**을 통한 자금부담 완화

□ 기대효과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보다 낮은 비용으로, 보다 **원활하게 자금이용** 가능

○ **상환능력 상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이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위한 발판 마련

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기재부)

□ 과제목표

○ 매일 체감하는 **통신·교통·주거비** 등 **필수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

○ 품목별 수급·가격 동향 모니터링, 대응 강화 등을 통해 **서민 물가** 안정적 관리

□ 주요내용

○ (**통신비 경감**) 전국민이 기본적인 통신·디지털 서비스를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요금제에 **데이터안심옵션***(QoS) 전면 도입, 최적요금 고지제도 시행

*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검색·메시지 전송 등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 가능

- 중저가폰 출시 확대 유도,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단말기 비용 부담** 완화

○ (**대중교통비 절감**) 전국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탑승·환승**할 수 있는 **신규 정액패스** 추진(일정한도내)

- 기본형(지하철·시내버스 등)과 통합형(광역버스·GTX 등) 정액패스 2종 출시

○ (**주거비 부담 경감**)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와 **대상주택 범위**를 **확대**하고, '25년 모집 종료된 **청년 월세 특별지원**(월 20만원)을 '26년 이후에도 지속

○ (**양육비 부담 완화**) **자녀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 (**먹거리물가 안정**) 기후변화 대응 등 농산물 **생산·유통 전반의 수급체계**를 **개선**하고, **적정 물량 비축**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 (**물가관리체계 강화**) 석유류 등 서민체감도가 높은 **필수 생활비 품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 구축

□ 기대효과

○ 생활비 경감과 서민 물가 안정을 통해 청년 등이 애로를 겪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 가처분소득 증대**로 가계의 살림살이 개선

61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중기부)

□ 과제목표

○ **당면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50만명의 **금융·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선제적인 **원스톱 재기지원체계** 구축

○ **지역대표상권 100곳 조성** 및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K-소상공인 1천개사**를 육성하고, **스마트공방 1.5만개** 보급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 (**폐업·재도전 지원**) 부실 예방을 위해 경영컨설팅부터 채무조정, 폐업, 재기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통합 소상공인 회복전담지원체계」** 구축

○ (**금융비용 절감**)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분할상환·금리감면을 확대하고,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등 **채무조정** 지원 확대

○ (**경영부담 완화**) 영세 소상공인 **공과금** 등 비용경감, **화재공제 가입대상**을 **골목형상점가**로 확대하고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강화 등 사회안전망 확충

- 경영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해약환급금**에 대한 **세부담 완화** 검토
- **부담금 분할납부** 등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 (**상권활력 제고**) K-관광·산업·문화와 접목한 **상권르네상스 2.0**을 통해 민관 협업으로 **글로컬 상권**(대형), **지역 대표상권**(중형), **소규모 골목상권**(소형) 육성

-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산

○ (**유망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AI·디지털 지원**, **맞춤형 교육** 제공, **민간 투자 연계** 등 혁신적인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스케일업**까지 체계적 지원

-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운영, 광역형 소공인 도제교육센터 운영, 중소·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추진
- 소상공인 공공구매 활성화, 소비재 중심으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 **수출 유망 소상공인 1천개사** 육성

□ 기대효과

○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자생력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통한 **유망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국토부)

□ 과제목표

○ 서민·실수요자 등을 위한 **공적주택 110만호** 안정적 공급

○ **민간주택 신속공급**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 주요내용

○ (**공적주택 공급 확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5년간 110만호** 공급

- 신혼부부·청년도 부담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
-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공적임대 주택**을 적극 확대

○ (**민간주택 공급 지원**)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신속 인허가** 적극 지원

- **우량 사업장**은 **앵커리츠, PF 특별보증** 등을 통해 원활한 추진 유도

○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용적률 상향·절차 간소화 등) 제고

- **이주자금 지원 확대** 등 **주민 내몰림 최소화**로 정비사업 공공성도 강화

○ (**유휴부지 활용 공급**) 입지가 좋은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주택공급, 민간 정비 어려운 곳은 **공공이 적극적으로 복합사업** 추진

○ (**신도시 주택 조기공급**) **3기 신도시** 등 조성 중 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노후계획도시**를 자족기능 갖춘 **미래도시**로 신속 정비

* LH 택지 민간매각 문제진단 및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 (**주거환경 개선**)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성능검사 강화, **관리비 투명화**

□ 기대효과

○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 및 내 집 마련 부담 완화**

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국토부)

□ 과제목표

○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 등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 주거 취약계층·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위한 **두터운 주거안전망** 구축

□ 주요내용

○ (**신혼부부 주거 지원**)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초기자금 부담이 적은 **맞춤형 공공분양 주택 비중**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세대통합형 주택** 시범사업 추진

○ (**고령친화주택 공급**) 의료·복지 서비스 등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실버스테이** 공급,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고령친화마을** 조성

○ (**1인가구 맞춤형 주거지원**) **1인 생활패턴 특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확충**

○ (**취약계층 주거수준 향상**) **노후 임대주택, 쪽방촌 재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

- **취약계층 임대주택 이주** 촉진 및 **최저·유도주거기준** 설정, 주거급여 확대

○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피해 지원***,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최우선변제금 보장대상 확대, 공공임대 지원, 피해주택 신속 매입 등

- **안전계약 컨설팅**, 정보제공 강화, 예방교육 확대 등 **전세사기** 사전 예방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집값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감독체계 강화

□ 기대효과

○ **두텁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으로 **주거안정** 실현

전략 3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 기술탈취, 거대 플랫폼의 횡포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창조와 혁신, 성장 유인이 약화**

○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경제적 약자**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협력과 상생을 통한 공정경제 구축**을 핵심전략으로 추진

□ **대기업**과 **거대 플랫폼**이 우월한 협상력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의 피해 구제수단**을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

○ **결혼, 장례, 금융** 등 **일상생활**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 및 **피해 구제 수단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비자 주권 실현**

□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여 **혁신과 성장 유인**을 **극대화**함으로써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을 통한 이재명정부의 '**진짜 성장**' **달성**을 지원

○ 국민들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소비·금융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국정과제	주관
[국정64]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국정65]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
[국정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위**
[국정67]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중기부**

64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 과제목표

○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및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근절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

□ 주요내용

○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소비자·입점업체 보호 및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 계약 체결·변경·이행 등 거래 全 과정의 **정보제공** 확대
-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경감**하고, 단체구성권 등을 통해 **협상력 강화**
- 대금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관리 의무 부과로 **거래대금 유용 방지**

○ (**경제적 약자 보호 기반 강화**) 가맹본부·원사업자 등 우월적 지위 사업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중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창·폐업여건 개선

-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대리점주·수급사업자·입점사업자 단체구성권 도입
- **가맹 창업 정보**가 **신속** 제공되도록 **공시제**를 도입하고, 상권 급변에 따른 **적자 누적** 등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없이 **폐업 가능**하도록 **계약해지권** 부여

○ (**부당 내부거래 감시 강화**)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 축소** ▲**자사주**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회피 방지** ▲**부당이득 비례 엄정제재**를 위한 과징금 합리화

○ (**공정한 조달시장 구현**) ▲**직권조사** 도입 ▲**조사 거부·불응** 등에 대한 **과태료** 도입 ▲**조달구매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기대효과

○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경쟁 기회** 보장

○ 계열사 지원이 없는 **독립·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 회복

65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

□ 과제목표

○ 일상생활 밀접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침해** 예방

○ **불공정·위법행위 신속 차단** 및 **실효적 피해구제** 확대

□ 주요내용

○ (**생애주기별 소비자 권익 강화**) ▲**결혼서비스** 가격표시 의무화(청년) ▲**헬스장** 등 보증보험 가입여부 표시 의무화(중년) ▲**상조업체** 자산건전성 제고(노년)

○ (**민사적 구제·집행 확충**)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수단 강화 및 피해구제 체계의 실효성 제고

- 민간이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확대*

* (기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 (확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상의 불공정행위도 포함

-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비자·중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권익증진을 위한 **기금 조성**

-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를 위한 소송 허가제 폐지 및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 **법원**이 상대방 및 공정위에게 손해 증명 **자료제출을 명령**하는 제도 확대·도입

○ (**분쟁조정 및 집행체계 강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 **조정 불성립 분쟁**에 대한 **소송지원** 근거 마련 등 분쟁조정제도 선진화

* (주요내용) 간이조정절차 및 감정·자문제도 도입, 집단조정 확대 등

- 피해구제 중 확인된 **위반사실을 한국소비자원이 통보**할 경우 **지자체의 조치·회신 의무** 신설

-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구제**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

□ 기대효과

○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

○ 불공정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 확충**을 통해 소비자·중소기업의 권익 신장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위)

□ 과제목표

○ 투자자·소비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

□ 주요내용

○ (**소비자권익 우선 제도 개선**) 금융소비자 정책·감독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민·관 합동 회의체) 신설

- **소액분쟁 사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제도(편면적 구속력) 도입
- 단기 영업실적보다 **고객이익**을 **우선**토록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KPI) 재설계

○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 **국민 편의**와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손보험 제도**를 개선

- **은행 영업점**에서도 대면으로 **全 금융회사**에 흩어진 **본인 금융정보**를 **조회**(마이데이터)하고, **다른 은행계좌**에 대한 **조회·이체** 등이 가능(오픈뱅킹)토록 개선

○ (**금융사고 발생 방지**) **금융 보안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신설

- **최대주주의 법령위반** 등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시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처분명령** 도입

○ (**금융범죄 단속 강화**)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과세당국·수사기관(검찰, 경찰) 등과 강력한 **합동 대응체계** 구축

- 통신사·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의심정보**(계좌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한 **상호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
- 불법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대포폰 및 SNS계정 등 **불법수단 차단체계*** 구축

* 불법추심 이용 대포통장은 거래관계를 종료하고, 대포폰은 전화회선 차단 조치

□ 기대효과

○ 수요자 중심의 금융소비자 제도·정책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 **보이스피싱, 불법리딩방** 등 악성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

67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중기부)

□ 과제목표

○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및 **분쟁 해소**를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대·중소기업간 임금복지 격차 해소**

□ 주요내용

○ (**기술보호제도 강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소송과정에서 피해사실 **입증부담 완화** 및 **온전한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

-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및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 추진 등 기술탈취 처벌 강화

○ (**피해구제 제도화**) 공정위·중기부 공동 **피해구제기금 조성, 중소기업의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통합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

○ (**상생환경 조성**)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및 **사각지대 차단**, 하도급대금 지급의 **안정성 제고, 상생금융지수** 도입

-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체협상권** 부여

○ (**플랫폼 공정거래 환경 구축**) **온라인플랫폼 상생협력 제도화***를 통해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와 상생을 위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 플랫폼 동반성장평가 및 실태조사 실시, 플랫폼-입점사업자 간 상생협의체 운영

○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청년의 '**참 괜찮은 중소기업***' **유입 촉진**,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 확충, **복지플랫폼·바우처** 신설

* 일자리, R&D, 해외진출 등 분야에서 우수성·성장가능성을 인정받은 중소기업
** 중소기업 재직 청년(19~34세) 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 청년미래적금' 신설

- 대기업 등 **퇴직 전문인력**과 **지역 중소기업 구인 수요**를 매칭하고, **석·박사급 외국인 유학생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

□ 기대효과

○ **공정한 시장 질서** 하에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불공정행위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중소기업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청년, 퇴직전문인력, 외국인 등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및 **장기 재직** 유도

전략 4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 일상화된 기후위기, 생산성 정체 속에서 **식량안보·먹거리 안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농산어촌**은 고령화·과소화 등 **소멸위기**에 **직면**

□ 정부는 농어업을 국민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재해 등 위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등 **농어업 정책 대전환** 추진

○ 식량안보 목표에 맞도록 농지 등 자원투입을 의무화하여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취약계층 식생활 돌봄 강화, K-푸드 수출 확대 및 농어업인과 소비자 모두에 이익이 되는 유통개혁 추진에 역점

○ 가격안정제 도입 등 **선진국형 농가소득안전망**을 구축하고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필수농자재 지원체계 마련으로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고 공동영농모델을 확산

○ 농어촌 빈집 정비,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복합인프라 조성과 재생에너지 확산 및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농산어촌 재생 프로젝트** 추진

○ 총허용어획량 중심 체계로 개편, 스마트 양식 확대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고, 어촌 청년 유입 지원, 어촌뉴딜 3.0, 어촌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연안 경제 활성화** 추진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국정과제	주관
[국정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농식품부**
[국정69]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농식품부**
[국정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농식품부**
[국정71]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해수부**

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농식품부)

□ 과제목표

○ 식량안보 체계 확립, 선제적 수급 안정으로 **쌀·식량작물 적정가격** 유지

○ 스마트농업, K-푸드 수출,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및 **농축산물 유통개혁** 추진

□ 주요내용

○ (**식량안보 강화**) **식량 자급률** 목표를 상향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관련 예산 확보와 **농지 면적 보전**을 의무화하고 법적으로 제도화

- 강력한 타 작물 인센티브로 쌀 생산과잉 사전 방지, 불가피한 과잉시 정부 매입
- 농림위성을 활용한 수급예측 고도화, 자조금의 수급관리기능 제고

○ (**식생활 돌봄 대상 확대**) 농식품 **바우처**는 **차상위계층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가구**까지, **아침밥**은 대학생에서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

- 초등학생 과일간식 및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재개

○ (**스마트농업 고도화**) **중소농**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스마트 농기자재 공유센터 도입 및 농산업 AI·로봇 등 신산업분야 R&D 투자 확대

○ (**K-푸드 수출 확산**) K-푸드 거점 재외공관 지정 확대, ODA·문화 마케팅 연계, 한식·전통주 등 수출 주력 품목 육성으로 **수출액 150억불** 달성

○ (**유통구조 혁신**) 농산물 도매유통의 **50% 이상**을 **온라인 도매로 전환하여** 도매시장 등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경매제 중심의 가격결정 시스템 다양화

- 출하자 지원기금 조성, 위탁수수료 체계 개편, 매수가격 공개 등 도매시장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고 생산자·소비자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참여 확대
- 생산·유통 일관출하 체계를 위해 스마트 APC(산지유통센터) 확대(300개소) 등 추진

○ (**친환경농업 확산**) **경축순환**(가축분뇨 퇴비화)·**탄소중립직불제** 신규 도입, 생산과정 위험요소 평가 방식으로 인증제 전환 및 친환경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

□ 기대효과

○ 식량자급률 제고 및 유통구조 혁신으로 **생산자·소비자의 이익** 상생 도모

69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농식품부)

□ 과제목표

○ 농가 소득 **기본안전망 보강**, 농산물 생산·가격 변동에도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

○ **농업재해 국가 책임성** 강화, 농가 **경영비 부담 최소화**, 농업 **세대전환** 촉진

□ 주요내용

○ (**소득안전망 강화**) 다양한 선택직불 도입 등 **공익직불을 확대**하고 **가격안정제** 도입

- **기본형 공익직불·전략작물직불·친환경직불** 단가 인상, 기후변화적응 및 동물복지축산 등 **신규 선택직불제** 도입
- 농산물 수급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정수준 이상 가격 하락 시에 대비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손해는 **재해보험료 할증 시 제외**

- **재해 복구 지원**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되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수준 차등화
- **비보험작물**에 대해 보험 방식으로 개별농가 피해를 측정·보상하는 지원제도 마련
- AI 등 활용한 재해위험지도 구축, 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전국으로 확대

○ (**경영비 부담 완화**)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정도에 따른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기관 확대(200개소) 등 농업경영 지원 강화

- 농지 임차 등으로 농지 집적화·경영 규모화를 추진하는 **공동영농법인 육성**(100개소)

○ (**농업 세대전환**)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 등으로 **청년농업인재**를 양성하고 **퇴직연금형 저축 도입,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단가 인상** 등 노후소득 보장

- **공공비축농지를 2배 확대**하고 **청년농에 우선 임대** 및 임대 상한 조정

□ 기대효과

○ **70세 미만 농가소득**을 **도시 근로자가구의 평균 근로소득 수준**으로 제고

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농식품부)

□ 과제목표

○ 주거, 일자리, 생활서비스, 기본소득으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 농어촌 에너지 자립, **햇빛소득마을** 도입 등 농어촌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산

□ 주요내용

○ (**농촌 재생 지원**)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육성**(시군별 1개소)으로 농촌공간을 **기능별**(정주·산업·경관 등)**로 재배치**하고 빈집 재생 및 인프라 확대

- **농어촌 빈집 7.8만호**를 창업·관광 공간 등으로 정비 및 재생
- **재생거점마을**(시군별 1개소) 조성,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18개소) 확대 등 생활인프라 조성 및 귀농·귀촌 지원 예산 복원

○ (**재생에너지 확산**)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농업시설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개소** 조성

- 계획입지 기반의 농지·농업법인 규제완화로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고, **농촌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및 전기 등 친환경 농기계 개발·보급 활성화

○ (**혁신 일자리 창출**) **농산업 혁신벨트**를 조성(18개소)하여 **기회발전특구**와 연계, **K-헤리티지 관광벨트** 구축, **국가정원** 확충 등 지역 특화산업 육성

○ (**필수서비스 공급**) **농촌 중심지**는 생활 SOC **인프라 확충**, **취약지역**은 의료, 돌봄, 식품 등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100개 읍면)

- 주민 수요를 실시간 반영하는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콜버스 등)하고, 왕진버스 서비스를 보건소와 연계하여 개편

○ (**기본소득 도입**) 소멸 위험이 높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부터 **햇빛·바람 연금** 등과 연계한 **농어촌 기본소득** 단계적 확산

□ 기대효과

○ 생활인구 증가,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

71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해수부)

□ 과제목표

○ **수산물 생산량 연 400만톤, 어가소득 7천만원, 해양관광 1,700만명** 달성 목표

○ K-씨푸드 **수출 천만불 기업 100개사**, 해양수산 **유망기업 2,000개사** 육성, **풍력에너지 18.3GW 달성** 지원

□ 주요내용

○ (**기후위기 대응 수산 혁신**) 어획량을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중심 체계로 재편하고, **노후어선 감척** 및 **대체건조** 지원, 청년 어선임대 확대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5개소), **상습 재해 발생 양식장 이전** 및 **품종 전환** 등을 지원하고, **재해보험 대상** 확대(30 → 40개 품목) 등 복구지원

○ (**유통 혁신**) **직거래·온라인**(60→146개 품목) 거래 확대, 노후위판장 현대화 및 **산지거점유통센터·소비지분산물류센터** 확충으로 전국단위 콜드체인 구축

- **비축품목 확대**(마른김 등), **해외수산물 수입기지 구축**으로 수급·가격 안정

○ (**어촌 활력**) 어업인 **퇴직연금** 신설 등을 통한 소득 안정망 확충, **청년 어업인 육성**(주거·일자리·금융 등 지원) 및 **어촌복지버스** 사업 전면 시행('26~)

- **지역거점**(생산·유통·가공·관광) **국가어항, 어촌뉴딜 3.0** 사업으로 **경제·생활 거점**을 육성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제** 본격 도입

○ (**연안경제 활성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국가해양생태공원 등을 조성하고, **해양에너지·바이오·블루푸드** 등 신산업을 육성*

- **국가보조항로 공공위탁**, 섬 주민·관광객 **운임 지원**, 섬·연안여객항로 관광모델 개발

* 해양바이오 특화거점 조성, 파력 등 해양에너지 상용화, 해양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기술, 차세대 해상교통 물류시스템 구축, 바다생활권 특화펀드 조성 등 추진

○ (**해상풍력 등 추진**)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에 따른 **계획입지 지정, 어업인 이익공유 모델 도입** 등을 지원하고, 염습지·바다숲 등 **블루카본** 확대

□ 기대효과

○ **양질**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어촌주민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 신산업 육성** 등으로 **연안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어촌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회복

국정목표 ❹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 1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추진하고, 기후위기 심화로 인한 재난의 대형화·복합화 양상에 따라 **피해 최소화** 필요

○ **「생명안전기본법」** 등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법령 제정**과 사회적 참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회복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등 **안전 최우선 기반 구축**

○ 재난담당 인력·조직·산업 등 국가 **전반적인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홍수, 산사태, 싱크홀, 항공사고 등 반복되는 재난과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강화**

□ **통합 범죄예방 체계** 구축,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범죄수익 환수제도 정비**, **AI기반 치안 혁신** 등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 치안 역량 강화

□ **일터**는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존엄**한 공간이어야 함에도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취약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노동자 등) **사각지대 여전**, **새로운 위험요인** 등으로 **산재보상 기간 장기화**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작업중지권 및 위험성평가 강화,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등 **산재 예방·관리·보상** 전 영역에서 **양적·질적 혁신 추진**

□ **AI기반 해양안전·재난 관리**, 전 해역 **해양감시 범위 확대**, 어선안전 장비 지원, **어선안전보건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해양사고**를 획기적으로 **저감**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국정과제	주관
[국정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행안부**
[국정73]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행안부**
[국정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법무부·경찰청**
[국정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고용부**
[국정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해수부**

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행안부)

□ 과제목표

○ 재난안전에 대한 **국가 책무확립** 및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 항공·교통 사고, 싱크홀, 건축물 화재 등 **분야별 안전사고 대책** 강화

□ 주요내용

○ (**국가 재난안전책무 강화**) 대통령실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복원**, **「생명안전 기본법」** 및 **「사회재난관리법」** 등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법령 제정

○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 재난안전산업 펀드조성, 전문육성기관 설치 등 **재난안전·소방 산업육성**, 재난안전부서 우수인력 배치 및 조직 강화

○ (**교통안전 대책강화**) 방위각 시설개선, 조류탐지 레이더 도입 등 **항공안전 강화**, 차축발열 감지시스템 확충, 첨단 선로 보수장비 도입 등 **철도안전 강화**

- **전기차·이륜차·개인이동수단**(PM) 안전대책 마련, **고령운전자** 안전운행 강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자율주행 법령제정**·주차방해처벌 등 질서 확립

○ (**건설안전 대책강화**) 지반탐사·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확대 등 **싱크홀 방지,** 화재안전 성능기반 설계 등 **건축물 화재 예방, 건설공사 全 과정** 안전대책 마련 등

○ (**생활안전 거버넌스 강화**)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확산, **주민참여형 취약지역 개선사업**, 주민점검 신청제 확대, **AI 안전신문고 도입** 등

□ 기대효과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사회** 실현

○ 생활 속 안전 강화 및 **안전사고 최소화**

73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 · 대응 강화 (행안부)

□ 과제목표

○ **홍수·가뭄·산불** 등 자연재난과 대형 사회재난 예방대책 및 대응체계 강화

○ **피해자 지원** 확대, **접경지역** 지원, **사회적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등 **국가 책임** 강화

□ 주요내용

○ (**재난 대응체계 강화**) 실시간 상황 공유, 현장 작동성 강화, **주민 대피체계 고도화, 취약계층 대피 지원, 사회재난시 관계기관 협업기반** 구축 등

○ (**재난 모니터링 강화**) AI기반 지능형 관제(CCTV) 고도화, **인파·침수·산불 등 특정재난 예측모델 선도개발, 재난 드론 활성화,** 예·경보 통합플랫폼 구축

○ (**긴급구조 역량강화**) 재난현장 지휘권 강화, **첨단 소방장비** 및 **AI기반 119시스템 등 인프라 확충,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보강,** 화재취약계층 지원

○ (**재난피해 지원확대**) 재난 피해 지원 **항목확대·요건완화·기준상향, 접경지역 피해지원, 사회적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등

○ (**홍수·가뭄 예방대책 마련**) **AI기반 홍수예보** 확대, **수해 감시 전용 통신위성** 개발, **도시침수** 예보지역 및 침수대응 인프라 확충, **수자원 연결망**을 활용한 **가뭄 위험** 대비 등

○ (**산림재난 총력대응**) **산불진화자원·특수진화대** 확대, 생활권 **산불안전공간 조성, 산사태 취약지** 사방사업 확대, **소나무재선충** 예찰 방제 확대 및 수종전환 활성화 등

□ 기대효과

○ 재난 발생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 **조속한 일상 회복**과 **사회적 갈등 최소화**

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법무부 · 경찰청)

□ 과제목표

○ **통합적인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고도화

○ **악성사기 · 금융범죄** 및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 철저히 범죄수익을 환수

□ 주요내용

○ (**범죄예방 통합체계 구축**) **「범죄예방특별법」** 등 제정, 고위험군 출소자 정보 관계기관 공유 및 보호수용 시설 확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편, 소년원 과밀해소

○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교제폭력 사건 **판결확정 전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보호명령** 도입,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고도화 및 통합지원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원스톱 지원 추진

○ (**민생·금융범죄 근절**) 보이스피싱·투자리딩 등 **다중피해 사기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민·관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신고보상금** 확대

- **독립몰수제 도입** 및 기소 전 몰수 보전 활성화, **특정 불공정거래행위 사용 의심 계좌 지급 정지**, 범죄수익환수 국제공조 강화 등 불법이익 은닉 방지

○ (**마약류 중독 대응체계 확립**) **마약류 중독자 재범 방지**, 불법 마약류 **해외 유입** 차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잠입수사·위장수사 등 도입

○ (**예방중심 치안활동 강화**) 이상동기범죄 **전조증후 분석** 고도화 및 **재범 우려자** 관리·순찰 강화, **여성 1인 가구** 등 **범죄취약계층** 대상 안전망 구축

○ (**신종범죄 대응역량 강화**) **치안AI 도입**, 딥페이크 등 기술적 위험에 선제 대처

□ 기대효과

○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소년범의 조속한 사회복귀 조력

○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체계 고도화를 통해 **평온한 일상 회복** 지원

○ **민생침해** 및 **금융 범죄** 등 **다중피해 사기** 대응체계를 구축, 민생경제 보호

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고용부)

□ 과제목표

○ **'30년까지 사고사망 비율 1만 명당 0.29명**(OECD 평균)으로 감축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

□ 주요내용

○ (**일하는 모두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업종·규모·종사자(특고, 플랫폼, 프리랜서)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등

-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 건설 발주·설계·감리자 책임 강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확대(원청, 타 업종) 등

○ (**실효적 산재예방**으로 **안전권 강화**) **위험성평가 개선**(처벌조항 신설,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화 등),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중대재해 수사체계 확충 및 신속처리

- **노동자** 안전을 위한 **작업중지권한 강화**(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작업중지·시정조치 요구권 신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

○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 **법정 재해조사기간 경과 시 선지급**, 산재 신청 시 **국선대리인** 지원 신설,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업종, 직종 확대)

- 업무상 재해 규범적 판단 명문화, **업무상 질병 추정 대상 확대** 및 **기준 완화,** 산재 판정 자료 공시, 산재판정기구 공정성·독립성 강화

○ (**새로운 위험 예방**) **신산업 안전기준 법제화**, 감정노동 보호 대상 확대·조치 강화, 과로사·과로자살 방지, **야간노동 규율*** 신설

* 야간노동 관련 최소 휴식시간, 최장 노동시간 및 연속근무일수 제한 등

□ 기대효과

○ **취약 사업장 재해** 감축, **신속한 산재 처리**,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해수부)

□ 과제목표

○ **해양과학조사·해양시설물 확충** 등을 통한 주권적 권리행사 강화

○ 해양사고 **인명피해 50% 저감**, **인명구조율 99%** 이상을 달성하고, 관할 해역 **30% 해양보호구역** 등 지정

□ 주요내용

○ (**해양주권 수호**) 서해 무단 시설물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외국어선 **불법조업**으로 부과되는 **담보금액·기준 상향** 추진

- **어업지도선** 건조 및 불법어업 단속인력 등을 확충하고, **저궤도위성·해양조사선·무인항공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감시 강화

○ (**해양안전 확립**) 5톤 미만 **소형선박**(전체 선박의 약 70%)에 대한 **운항자격**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어선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화 등 어선안전관리 강화

- **어선원안전감독관** 확충, **어선안전보건등급제** 도입, 안전장비 등 지원

- **지상파 항법시스템** 구축, 해양교통 전문 라디오 확대 운영, **해양 IoT 통신 체계** 개발 및 정보서비스센터 구축, 여객선 화재 대응장비 지원

○ (**스마트 해양관리**) **AI 기반 안전·재난 관리시스템** 구축, **전 해역 해양감시 범위**를 **확대**하고, 1,500톤급 화학방제함 등 **친환경 방제선** 도입

- 함정·항공기 정보 및 첨단기술(위성 등) 기반 **광역 감시·정보체계**(MDA) 구축

○ (**해양보호구역 확대**) **대형**(1천km^2 이상) **해양보호구역 매년 1개소 이상** 지정하고, **해양폐기물 처리 인프라** 확충

□ 기대효과

○ **해양안보 위협**에 대한 **실효적 대응**으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해양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강화**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 **독도** 등 **관할해역 감시체계 역량** 강화로 빈틈없는 **해양안보 태세를** 구비하고, 해양보호구역 확대 등으로 **청정한 바다**,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

전략 2 내 삶을 돌보는 복지

□ 사회가 **고령화·다양화** 됨에 따라 질병·장애·노령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과 가정에게 돌봄 책임을 지우는 **현 복지 체계**는 **한계**에 봉착

○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립되고 방치되는 위기가구를 제때 찾지 못하고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 지속

□ 누구나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해도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일상을 함께 책임**질 필요

□ 이재명정부는 **개인별·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돌봄 지원**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지국가 구현**

○ AI기반 **위기가구 발굴**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확대, 긴급돌봄을 강화해 저소득층의 **소득 안전망 강화**

○ 아동, 노인, 장애인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맞춤형 지원체계 내실화**

○ 영·유아기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마을기업 등 **지역사회연대경제조직 활성화**로 지역 공동체 기능 회복 추진

○ 사람·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해 (가칭)**「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공익형 표준수가제 등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국정과제	주관
[국정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복지부**
[국정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복지부**
[국정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복지부**
[국정80]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농식품부**
[국정81]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기재부**
[국정82]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	**금융위**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복지부)

□ 과제목표

○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을 통한 **생활안전망** 강화

○ **AI 기반 복지 혁신**으로 위기가구 발굴·지원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

□ 주요내용

○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대상자 **선정기준**을 '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 상향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및 **부양의무자 기준 간소화**로 대상자 확대, 사회적 입원 관리 방안과 퇴원 후 통합돌봄 연계 방안 수립 추진

  *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

-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마련, **자활기업 창업지원** 확대 등 **탈수급 지원** 강화

○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에 기반하여 AI 기술 활용 위기가구 발굴·지원 확대 및 선별의 정확도 제고

  * AI 활용 예측 복지, 복지·돌봄 기술 개발 등 핵심 과제·액션플랜 제시

- 복지멤버십에 기반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추천**으로 신청주의에 따른 **사각지대 최소화** 및 복지·돌봄·고용·금융 등 복합지원 강화

- 위기가구가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긴급복지 지원 선정기준**(소득·금융재산 등) **완화** 및 **지원금 인상**

○ (**상병수당 확대**)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평가, 사회적 논의,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상병수당 제도화 방안 마련** 및 시행

○ (**기본사회 추진체계 마련**) 헌법상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해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지향하는 **기본사회**의 법적·제도적 기반 및 추진체계 마련

- 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가칭)**기본사회위원회** 운영

□ 기대효과

○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현실화로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 보장**

○ **AI 기반 복지시스템**으로 신청주의에 따른 **사각지대 최소화**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복지부)

□ 과제목표

○ 노인·장애인 등이 시설(병원)에 입소(입원)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 보장

□ 주요내용

○ (**본 제도 시행**)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3)에 맞춰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본사업 **전국 확대 시행**

- (**대상자 확대**)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을 시작으로 **장애인·정신질환자** 등 **대상자 단계적** 확대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등급외자, 의료기관 퇴원환자,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중점군 등

○ (**서비스 확대**)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제공규모 대폭 확대

- (**장기요양**) 중증 재가서비스 월 이용한도액 확대, 단기보호 활성화 및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신규서비스 도입
- (**재가의료**) 재택의료센터 전국확대, 재택간호센터·생애말기케어 도입
- (**일상생활돌봄**) 가사·식사·이동지원 등 일상생활 서비스 확대
- (**노쇠예방**) 보건소 중심 적극적 건강관리·노쇠예방으로 건강수명 연장

○ (**서비스기관 확충**) **통합재가기관·재택의료센터** 대폭 확대 및 보건소·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재택의료 제공** 기능 강화

○ (**지원주택 확대**) 퇴원환자 대상 **단기간 돌봄·주거서비스**가 지원되는 **지원주택(중간집)** 도입 및 **단계적 확대**로 요양병원(시설) 입소 방지

○ (**지자체 중심**) 지자체 **전담조직·인력 확충 지원 등**으로 역량 및 책임강화

□ 기대효과

○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실현

○ **요양병원 입원율·요양시설 입소율 감소** 등 건강성과지표 개선

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복지부)

□ 과제목표

○ **장애인 돌봄, 자립, 건강** 등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자립지원**

○ 소득, 근로, 이동 등 **장애인 권리** 기반 강화

□ 주요내용

○ (**"권리"로서의 장애인복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지역사회 자립법」** 시행 등 장애인 권리에 대한 법적 기반 구축

-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 실시**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주택·일자리·활동지원 등 서비스 연계 지원

○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을 목표로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1.2만명에서 **3만명**까지 확대

- **최중증 대상 통합돌봄 지원 확대**, **서비스 단가**를 주간활동서비스 단가의 **200%까지 단계적 인상** 등 최중증 지원 내실화

○ (**개별맞춤형 지원 확대**)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대대적 확충

- (**건강권**) **장애인주치의, 장애친화 의료인프라** 등 건강관리 지원 강화

- (**소득보장**)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장애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

* (기존)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개선) 3급 단일장애까지 (연금액 차등)

- (**일자리**)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29년 기준, 민간 3.5%, 공공 4.0%), 기업 대상 **고용개선장려금** 신설 및 **근로지원인** 단계적 확대 추진

- (**이동권 등**)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무장애 인증** 의무 확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등 접근성 강화

□ 기대효과

○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및 장애인 권리기반 강화

○ 장애인연금 확대로 소득보장강화, 이동권·건강권 확보, 일자리 지원 등 권리기반 강화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

80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농식품부)

□ 과제목표

○ **동물 '보호'**에서 **'복지'**로 관점을 전환,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조성

○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지역의 동물진료 공백 최소화

□ 주요내용

○ (**동물복지 정책기반 강화**) (가칭)**「동물복지기본법」** 제정('27) 및 **동물복지 진흥원** 설립 추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인프라 확충

- **농장동물, 동물원·실험·봉사·레저 동물** 등 복지 개선 및 관리체계 마련

* ▲동물복지 축산직불금 도입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전면 적용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관계부처 합동) ▲은퇴견 지원센터 설립 ▲학대 말 긴급 구호시스템 구축 등 추진

○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공공동물병원** 조성,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및 민간 확산(상생동물병원, 400개소) 추진

-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을 확대**하고, **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 등록 지원 및 동물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제**를 도입('27)하고, **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27) 및 **유사 동물보호시설 규제** 등 영업관리 강화

- 시설·인력 기준의 단계적 향상, 광고 표시기준 강화 및 위반시 처분 근거 마련 등 **공장식 생산·판매체계** 개편 기반 조성

○ (**연관산업 육성**) **펫푸드** 등 **수출·창업** 지원을 위한 (가칭)**「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 제정('26)

- 영양표준 등 펫푸드 분류체계, 특수목적 영양사료 기준 등 마련

□ 기대효과

○ 동물복지 중심의 사회 원칙을 확립하고 동물학대 없는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 동물의료 접근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료비 부담 경감**

81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기재부)

□ 과제목표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 및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성장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사회연대경제 통합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포용성장**과 **지역경제 순환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

*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통일된 정의·범위 규정, 행정·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기본·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관리·지원과 개별 조직이 업종·분야별로 중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강화

- 지역 특성에 부합한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지원기관(사회적기업진흥원 등) 기능 및 시·도별 지원센터 확대, 기초지자체 단위 민관협의체 구축

○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지원* 독려 및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정비

* 지원자금 마련 위해 상호금융중앙회 내 기금 조성, 신협의 출자 허용 등

** 금융회사의 지역 자금공급, 서민대출 지원실적 등을 평가

- 금융권 자금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육성

- 미소금융 등 **도매자금**(사회연대경제조직에 임차·운전·시설자금 등을 제공)의 **대출·투자규모**와 **정책금융기관**의 **보증공급** 확대

○ (**사회연대조직 성장 지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자활기업** 등 개별 조직간 협력·연대사업 지원, 스케일업, 컨설팅·교육 등 종합적 지원 추진

- 사회연대조직이 생산한 제품·용역에 대한 **공공부문 우선구매 촉진** 의무 신설, **국·공유재산 임차료 인하** 등 경영부담 경감

□ 기대효과

○ 사회연대경제 성장을 촉진하여 **고용 창출** 및 **양극화 완화**, **지역소멸 대응**, **공동체 신뢰회복** 등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

82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 · 소득 형성 (금융위)

□ 과제목표

○ 영·유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을 보다 강화

○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 재무상담** 확대 등 **전 국민의 금융역량** 제고

□ 주요내용

○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아동이 **성인**(만 18세)이 **되기 전 목돈**(예: 약 6,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

- **정부재정**으로 펀드에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부모의 추가납입**도 허용
- **펀드 운용소득** 등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 (**청년미래적금 신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청년층 자산형성 상품인 '**청년미래적금**' 신설

- **일정소득 이하 청년층**이 **적금**을 **납입**할 경우, 정부가 **일정비율** 금액을 **매칭형태**로 지원
-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에 대해서는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주택연금 제도개선**) **주택연금 수령액 산정방식** 개선* 등을 통해 **노후 연금소득**을 확대

* 초저가주택에 대한 지원금액 확대, 가입자 납입 보증료 대비 수령액 합리화 등

- **주택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입요건**(주택가격 및 실거주 요건 등) 정비

○ (**전국민 경제·금융교육 강화**) 어린이, 청소년, 청년·군인·중고령층 등 **생애 전주기를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온·오프라인 경제·금융교육 집중 실시

- 기존 은행권·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운영중인 금융·재무상담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으로 확대·개편

□ 기대효과

○ 아동, 청년,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자산 확충**으로 생활이 안정되고, **자산 불균형도 해소**

전략 3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 고령화 등으로 인구구조가 본격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고령자에게 필요한 의료·간병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위기**가 **점차 가시화**

○ 지방 인구 소멸과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계층간 의료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공급 위기는 더욱 심화**

□ 이재명정부는 **당면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공공 의료체계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수립

○ 환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간병비**, **비급여**, **희귀·난치질환 치료비** 등 **주요 의료비 부담을 경감**

○ 국가 책임 강화와 지불체계 개편 등 **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 강화**를 통해 미래세대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 진료권 중심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지원 강화 및 공공의료인력 양성, 재원 확보**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안전망 내실화**

○ 일차의료 기반으로 국민들의 **일상 속 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한 노화 달성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국정과제	주관
[국정83]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복지부**
[국정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복지부**
[국정85]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복지부**
[국정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

83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복지부)

□ 과제목표

○ GDP 대비 국민 총 의료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관리

* ('15년) OECD 평균 8.7%, 우리나라 6.5% → ('23년) OECD 평균 9.1%, 우리나라 8.5%

○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으로 **사회적 갈등 해소** 및 **환자권리·안전** 보장

□ 주요내용

○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지속 개편하여 공정한 부과기준 확립

-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약가 산정체계 개선** 및 **주기적인 약가 조정체계** 마련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지출 요인 억제

○ (**협력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대형병원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역량 갖춘 병원 육성*** 및 **1·2·3차 병원 간 유기적인 연계·협력****체계 구축

* 필수의료 분야 24시간 진료 유지 종합병원·병원 육성 등
** 환자 협력진료 패스트트랙 구축

○ (**의료보상체계 합리적 개편**)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및 영상진단·검사 등 고평가된 수가 현실화를 위한 **상시 조정체계** 구축

-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책정된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를 **환자의 건강 성과, 효율·효과적 진료** 등 바탕의 **성과보상제**로 **전환**

○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의료현장의 정상화** 및 의료체계 왜곡 해소를 위해 국민·의료계 모두 지지하는 **의료개혁 추진체계** 및 **로드맵** 마련

- **환자권리** 및 **안전 보장**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강화

□ 기대효과

○ 미래 세대의 부담이 없도록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 환자의 건강 성과 등을 고려한 **의료보상체계 합리화**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복지부)

□ 과제목표

○ **필수의료 자체 충족률 제고** 통해 지역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 **완화**

* ('23년) 인구 10만명 당 (1위 시도)49.9명, (17위 시도)36.9명

□ 주요내용

○ (**공공의료체계 강화**) (중앙)국립중앙의료원-(권역)국립대병원-(지역)지방의료원·보건소 간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 및 **진료권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공공병원 없는 곳에 지방의료원 신설 추진,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 수행 병원 대상 공공성 평가·보상 등

-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권역 거점병원**으로 체계적 육성

○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필수의료 집중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공공정책수가 신설·확대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및 **법령 제정** 추진

- 지역의료 자원분석을 토대로 의료 취약지역을 집중 보상하는 **지역수가 제도 신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신설**, (가칭)**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

- 전공의 등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환경 혁신 등 국가지원 확대

○ (**소아·응급의료체계 강화**) 환자 중증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명확화** 및 역할에 따른 **차등 보상**,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체계** 확립

- 진료권 중심의 **중증·응급질환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및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협력체계*** 구축

* 달빛어린이병원 등 확충을 통해 (경증)달빛어린이병원-(중등증)소아긴급센터-(중증)소아응급센터 협력

○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 감염병 **예측·감시·역학조사 강화**, **방역·의료 통합대응** 체계 강화, 코호트 격리 등 방역 조치의 **인권 보호 강화**

□ 기대효과

○ **지역·계층 간 의료 격차 완화** 및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의 적시 제공**

85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복지부)

□ 과제목표

○ **만성질환 관리율*** **향상**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

* ('23) 고혈압 조절률 60.9%, 당뇨병 조절률 41.2%
** ('15) 70.6세 → ('21) 70.5세로 정체

□ 주요내용

○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체계 구축**) 다학제팀 기반의 포괄적 건강관리 제공과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 단계적 확대

* 공공의료체계(보건의료원 등) 중심 모형, 지자체 중심 의료-돌봄 연계 특화 모형, 포괄 2차병원 중심 협력지원 특화 모형 등 지역·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모형 설계

- 한의계 강점 질환을 중심으로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신설**, 거동 불편 환자 등을 위한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 (**지역기반 건강증진 강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소아비만 등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 구축

- 지역주민 건강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인력** 개편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적극 활성화

○ (**비대면진료 확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농·어촌 **의료 취약지** 대상 **보건소 비대면진료·원격협진** 체계 신설

- 의약계 등 의견수렴을 통해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운영

○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자살예방서비스* 대폭 확대,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도입 등 정신질환 치료 인프라 확충

*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 확대(12개 시도→전국),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확대(9개 시도→전국) 등

- 마약·알코올 등 **중독성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 **치료·회복체계 강화**

□ 기대효과

○ 국민들의 **일상 생활** 구석구석에서 **건강관리 체계 확립**

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

□ 과제목표

○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 70% 경감**

○ 희귀·난치질환자, 어르신, 청소년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의료비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간병 부담 완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간병비 본인부담 경감(본인부담률 100%→30% 내외)

* '30년까지 (가칭)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500개소까지 단계적 지정·확대

- 급성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한 간병 부담 완화, **간병 인력 전문성 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간병서비스 질 제고

○ (**비급여 부담 완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여 적정 진료·가격 전환 유도 및 **사전 환자 동의서 의무화**

- 의료적 필요성이 크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

○ (**희귀·난치 부담 완화**) 건강보험 **산정특례 질환**을 **확대**하여 본인부담률 인하, 의료비 지원사업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단계적 폐지**

- **희귀질환의약품** 및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신속 추진** 등

○ (**보장성 강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계절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13세 이하에서 14~18세 **학령기 청소년까지 확대**

□ 기대효과

○ 국민 **간병 부담**의 **확실한 경감** 및 일부 **과잉의료비 부담 축소**

○ 대상별·생애주기별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축소**

전략 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 **저출산·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생산인구 감소와 부양부담이 커지는 **인구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점

□ 이재명정부는 인구위기를 **중차대한 중장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저출생 극복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복지시스템 전환을 병행 추진

○ 저출생 극복을 위해 **주거지원,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 육아휴직제도 강화** 등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 이미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사회에 적합한 돌봄·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주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기능전환 방안**을 모색

□ **초고령화, 디지털 전환, 외국인력 유입 증가**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기후 위기**와 **디지털 변화**에 대응한 **실효적 대책 마련 시급**

○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적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면서 중장년의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기능**을 **강화**

○ **AI 전환** 및 **기후 위기**에 따른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뒷받침**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국정과제	주관
[국정87]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복지부**
[국정88]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여가부**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국조실 등**
[국정90]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복지부**
[국정91] 인구가족구조 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복지부**
[국정92]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고용부**

87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 · 육아 환경 조성 (복지부)

□ 과제목표

○ 난임부부 · 임산부 ·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취약·위기 아동과 청년에 대한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자립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양육지원 강화**) **아동수당**(현재: 8세 미만) 지급대상을 **매년 1세씩 점진적 확대**하여 **13세 미만까지 지급**, 부모교육과 연계 강화 및 인식개선 추진

-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통해 아동의 생애초기 자산형성 지원

○ (**난임·임산부·영유아 지원**)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가임력 검사비 연중 지원**

-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단계적 확대, 미숙아 지속 관리 전국 확대

○ (**아동보호 강화**) 국가가 책임지고 태어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지자체가 입양절차를 수행 · 관리하는 **국가책임 입양체계 안착** 및 **공공후견제*** **도입**

  * 보호대상아동 대상, 양육자 고령, 상속 · 채무 등 전문적 후견 필요시 공공후견인 선임 · 지원 가능

- **아동학대** 사망사건 **심층분석 체계구축** 및 예방적 지원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실화

- 가정위탁을 국가사업 체계로 개편하여 **가정형 보호 확대,** 보호대상아동 **전주기 원가정 복귀 지원** 강화, **아동보호전담인력**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 (**취약·위기 아동·청년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수당·맞춤형 사례관리·자립초기 재무설계 등을 통해 자립 준비 지원

- **청년미래센터** 단계적 전국 확대로 위기청년 조기발굴 · 사례관리 체계 내실화

- 가족돌봄아동 사례관리 강화 및 수용자 자녀 경제적지원 확대

□ 기대효과

○ **아동 양육부담** 완화 및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

○ 위기 아동 · 청년에 대한 **국가 보호체계** 강화

88 아동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여가부)

□ 과제목표

○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성장**과 디지털 시민성 함양 도모 및 **위기·취약 청소년** 빈틈없는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 확대로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청소년 활동·참여 활성화**) **인문활동·국제교류** 등 활동·참여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및 방과후아카데미 내 체험·학습 지원 강화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균형성장 지원사업의 단계적 확대

○ (**건강권·마음건강 증진**) 정서·행동 위기(초기상담-치료), 고립·은둔(원스톱 패키지), 경계선 지능 등 고위험 청소년 건강 증진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및 우수 건강체험 프로그램 보급

○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강화**) 아동·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 지원**,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프로그램 및 전문상담인력 확대

○ (**아이돌봄 지원 확대**) 정부지원 소득기준 단계적 완화 및 지원비율 상향, 취학 전·후 차등지원 폐지 등 **아이돌봄 지원 강화**, 돌보미의 안정적 **일자리 환경 개선***

* 돌봄수당 인상, 심야수당 신설 등

-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운영 등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및 지원금 상향, 미혼모·부·조손 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가족센터 통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초 학습 및 진로설계 등 교육 지원 강화,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등

□ 기대효과

○ 청소년 다양한 활동·참여, 위기 청소년 안전망 구축으로 **청소년 삶의 만족**도 향상

○ 안심 육아환경 조성 및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생활 안정**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국조실 등)

□ 과제목표

○ 일자리, 주거, 자산, 교육, 복지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

○ 국가 정책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청년정책** 지원체계 구축

□ 주요내용

○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 **청년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강화

* 국민취업제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및 자발적 이직자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 AI 분야 등 채용연계형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확산 등

** 지역, AI·딥테크 창업 중점 지원 및 AI 등 기술분야 청년창업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검토 등

○ (**청년 주거 안정 강화**) 청년 선호 지역에 **특화공공임대**,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숙사** 등 공급 확대 및 **청년 월세 지원** 등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

○ (**자산형성 지원 강화**) **청년 목돈마련 지원상품** 및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신설로 청년의 경제적 자립 뒷받침, **중소기업 근속 청년** 등에게는 추가 인센티브 지원

○ (**청년 교육 등 생활 지원**) **맞춤형 국가장학금**(인문100년, 희망사다리Ⅱ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식사·문화·교통** 등 청년 생활 밀착 지원*

* 천원의 아침밥, 청년문화예술패스,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

– **취약청년**(고립·은둔, 가족돌봄, 자립준비청년 등) **선제발굴** 및 **맞춤형 지원** 강화

○ (**청년 당사자성 강화**)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 시스템 강화**, **청년 신문고·공모전** 등 참여채널 다각화, 청년보좌역 제도 개선 등 청년 목소리 확대

○ (**청년정책 기반 강화**) 사회적 논의를 통한 **청년연령 현실화** 추진, **통합적 청년정책 지원체계·인프라 강화*** 및 지역의 청년 참여 기반 확산**

*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온통청년') 고도화, 전담지원 및 연구체계 구축 등

** 지역청년지원센터의 지역허브 역할 강화, 청년친화도시 및 지역특화 청년사업 확산 등

□ 기대효과

○ 사회진출·자산형성 및 생활 밀착 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자립·도약 기반 마련

○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들의 당사자성 확대 및 정책 공감·사회통합 기여

90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복지부)

□ 과제목표

○ **개선된 다층 연금체계 구축**으로 **모든 세대에게 노후소득 보장**

○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로 국민 신뢰 제고

□ 주요내용

○ (**청년·저소득층 지원 확대**)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3개월간 보험료 지원**, 특수형태근로노동자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 **군 크레딧**(연금가입기간 추가 인정)**은 12개월 →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은 연금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에 인정

○ (**불합리한 제도개선**)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상향**

* (현재)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A) → (개선) A+200만원

-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20%씩 감액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저소득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

○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국민·기초·퇴직·주택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확립***, 국회 연금특위 추가 개혁과제 논의 지원

* (퇴직연금)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 사업장·종사자 확대
(주택연금) 연금수령액 산정방식 개선, 가입률 제고 등 제도개선방안 검토

○ (**국가책임 강화·기금운용 개선**)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재정 역할 강화**, 수익률 제고 및 **기금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기대효과

○ 청년의 **국민연금 실질 가입기간** 확대(15개월) 및 사각지대 축소

○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4.5 → 5.5%)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 개선**

○ 저소득 노인의 국민·기초연금 수령액을 **합리적으로 인상**

91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복지부)

□ 과제목표

○ **분야별 어르신 지원** 강화 및 고령인구 증가로 창출되는 **신시장 활성화**

○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 ▲양질의 돌봄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대응

□ 주요내용

○ (**어르신 지원 강화**) 일자리, 식사·건강, 재무관리 등 맞춤형 종합 지원 확대

- (**일자리**) **노인일자리 지속 확대** 제공, 매년 적정 단가 인상 등 질적 개선 추진
- (**식사·건강**) ▲**경로당 식사 주 3.5회→5회** 확대 및 양곡비·부식비 지원 ▲노쇠예방 건강프로그램 보급
- (**재산관리**) 치매 어르신 등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돌봄인력 부족** 대응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AI·IoT 기술 활용 스마트돌봄서비스 확충* 및 리빙랩 등 **R&D·사업화 기반** 마련

* 돌봄로봇,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 결합 사회서비스, 웨어러블 기기 활용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 (**인구정책 거버넌스 혁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책 범위 확대, ▲기획·조정권한 강화 등 통해 대통령 중심 **인구구조변화 대응체계 강화**

○ (**사회적 고립 대응**)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및 일상회복 패키지 지원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외로움) 대응** 정책 발굴·추진

- 사회적고립(외로움) 담당 차관 지정 등 **정책 수행체계** 마련

○ (**양질의 돌봄일자리 확대 및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100% **달성**, 인력 단계적 추가 배치 등 거주시설 3교대제 도입 지원

□ 기대효과

○ **노인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보장

○ **사회적 고립 대응체계** 강화로 일상회복지원 및 고독사 예방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로 부양부담·돌봄 인력난 해소 및 신시장 부가가치 창출

92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고용부)

□ 과제목표

○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과 **퇴직연금** 의무화로 노후소득 보장

○ AI 전환·기후위기에 따른 역량 개발과 **정의로운 노동전환** 추진

□ 주요내용

○ (**정년연장 추진**) 사회적 논의 통한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추진**과 함께 세대상생방안 마련, 중장년 일자리 지원 패키지 강화

○ (**퇴직연금 강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 사업장·종사자(특고, 플랫폼 등) 확대, 노사 의견수렴과 수급권 보장 전제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검토

○ (**AI 역량강화**) 구직자 및 재직자 AI 교육 지원, AI·빅데이터 활용 고용서비스 혁신, (가칭)**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 (**정의로운 노동대전환 지원**)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재취업 등 공정한 전환지원 로드맵 마련, 내연차·철강 등 전환업종 지속 발굴·지원확대 등

-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협력사 고용안정 방안 마련, 전환산업 사회적 대화 지원, AI 전환산업 고용영향평가 및 고용안정 지원

○ (**이주노동자 통합 취업지원**) 외국인력 수급 설계,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이주노동자 법·제도 정비, 사업장 이동 규제 완화** 등 **고용허가제 개선**

- 이주노동자 맞춤형지원*, 민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업 복원 및 확대

* 근무환경, 산업안전, 주거,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강화

□ 기대효과

○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적극적 숙련 인력** 지원으로 성장동력 확보

전략 5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누구나 함께 나아가는 성장, 모두가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하는 **성장**이 필요하나,

○ 지금 한국 사회는 **기업규모, 고용형태별 노동시장 격차**가 **심화**되고, **'24년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많은 이들**이 **성장의 열매**에서 **소외**

□ 이재명정부는 **모든 노동**이 **존중**받고, **일·가정·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개인의 존엄**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기반**이라고 판단,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구축**을 **국정전략**으로 **정립**

○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일터 기본권 보장**, 근로감독행정 혁신 등을 통한 **임금체불 50%(1조 미만) 감축**, **공정 임금 제도화, 초기업별 교섭 촉진, 취약종사자**(건설·물류·소송 등) **보호** 등으로 격차 해소

□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고, 모든 국민이 **일자리로 성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고용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

○ **저소득층** 출산전후휴가 급여 **추가 지급,** 난임 유급휴가 확대 등 **육아·돌봄 국가 책임 강화**

□ 모든 국민이 **일자리로 성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급격한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직업훈련**과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지원금 상향 지원, 자발적 이직에 대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으로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강화**

○ **초광역** 및 **기초 단위 연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적가치 창출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국정과제	주관
[국정93]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고용부**
[국정94]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부**
[국정95]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고용부**
[국정96]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고용부**

93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고용부)

□ 과제목표

○ **일터 기본권** 보장, **임금체불** 50%(1조 미만) 감축, **공정임금**으로 격차 해소

□ 주요내용

○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일터 기본법** 제정 및 5인 미만·초단시간·근속 1년 미만 노동자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사전 예방형 선제적 근로감독 전환*

* ILO 수준 감독물량 확대, 근로감독관 증원,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등

○ (**비정규직 권리보장 확대**)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파견수수료 상한 설정,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의무화**, 공공부문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및 민간 확산

○ (**임금체불 근절**) 하도급 임금 구분지급제 도입,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확대,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도산시 3년까지 체불임금 지급)

○ (**공정한 임금 체계 확립**)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처우 금지 법제화, 최저임금위 운영 및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

* 도급제 최저임금 심의·지원, 특고·플랫폼·프리랜서 최저보수제 마련 및 시행

○ (**건설·물류·수송 노동자 보호 강화**) (택배)계약갱신권 실질적 보장과 과로사 방지, (배달)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화물)**안전운임제** 재도입

- **대리운전·택시·건설** 등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대리운전) 법제정·고율수수료 개선, (택시) 적정임금 보장, (건설) 적정임금제 제도화, 적정공사비·공사기간 보장, 기능등급제 활성화, 임금직불제 민간공사 적용 의무화 등

□ 기대효과

○ 취약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과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완화

94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부)

□ 과제목표

○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문화** 정착, **취약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 초기업 수준 **노·사 교섭** 확산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

□ 주요내용

○ (**노동존중문화 확산**) '근로자의날'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실질화, 노동교육 교과과정 확대 지원

○ (**취약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노동법원 설립**(법무부), 노동위원회에 특고·플랫폼 등 분쟁조정기능 부여, **민간 노동센터 활성화** 근거 마련

○ (**산업별·지역별 등 교섭 촉진**) **초**(超)**기업별 교섭단위 결정·촉진제 도입**, 창구단일화 예외 검토 등 초기업 교섭 활성화로 노동시장 격차 해소

- 공공부문 초기업 단위 자율교섭 체계구축 및 집단교섭 모델 개발·확산, 초기업 교섭 참여 공공조달 민간기업 지원 등

- 업종·산업별 단체협약 효력확장 및 행정명령 효력확장 도입, 지역적 구속력 요건 완화, 국가·지자체의 초기업 교섭 지원방안 노조법상 구체화

○ (**대화와 참여의 노사관계 구축**) 경사노위 활동 개선, **산업별·지역별·업종별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 각종 정부 위원회에 노·사 참여 실질화, **노동자대표위원회 상설화** 입법 추진

□ 기대효과

○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동자 참여 확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사회적 대화와 근로자 참여 확대로 **권리보장** 및 **직장 내 민주주의 강화**

95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고용부)

□ 과제목표

○ **연간 실노동시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

○ **일·생활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갑질 없는 행복 일터** 조성

□ 주요내용

○ (**노동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시행 ▲**포괄임금제 금지** ▲노동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 개선

- 중앙·지방정부 주 4.5일 지원 시범사업 실시, 실노동시간 단축법 제정·시행, 노·사 자율 확산 촉진·지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4.5일제 추진**

○ (**쉼이 있는 일터 구현**)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 개선***, 퇴근·공휴일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시간단위 연차 도입, 연차일수 확대, 취득요건 완화(6개월 이상 근로), 사용시 불이익 금지, 연차저축제 도입

○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설 ▲**난임 유급휴가** 확대

-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 저소득층 출산전후휴가 급여 추가 지급, 직장어린이집 지원 강화

- 자동육아휴직 제도 도입,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급여 인상,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금 인상·지급방식 및 대체인력제 개선

○ (**갑질 없는 행복한 일터 조성**) **ILO 괴롭힘 방지협약 비준 추진**과 일·생활 균형, 가족친화 자격을 갖춘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

□ 기대효과

○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양립 지원**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

96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고용부)

□ 과제목표

○ 고용정책의 혁신으로 **지역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사회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 주요내용

○ (**고용서비스 혁신**) 전국민 역량강화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업훈련** 강화, **직업계고·폴리텍(전문대) 현장 연계교육** 강화 ▲**국민역량계좌제** 도입

- **고용서비스 정책의 혁신**과 이를 위한 **조직기반 마련** 적극 검토 및 고용서비스 분야 역량 강화를 통한 **고용서비스 질 제고**로 **일자리 미스매치 최소화** 및 **재취업 지원**

○ (**지역주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칭)「**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중앙지원-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 전환, 초광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주거·복지·돌봄·교통 지원 등 **사회임금**으로 **지역 정주여건** 개선

* 지역 일자리 성과공시제 도입 및 지원예산 차등화,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혁신 등

○ (**고용안전망 확대**) **구직촉진수당 단계적 인상**, 노동취약계층 노동복지 카드 시범사업 도입

-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개선**,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 취약노동자 노동공제회 지원, 급증하는 모·부성보호급여 재원확충 방안 마련

○ (**사회통합적 고용·취업 지원 강화**)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 복원 및 지출 효율화, 청년부터 생애 1회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신설**, 청년미래적금 도입(금융위)

- 경력보유여성 취업지원 확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사업 복원

□ 기대효과

○ 일하는 사람에게 고른 **고용안전망** 제공, **지역 주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취약계층 취업지원과 일할 기회 확대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전략 6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폭력 같은 신종폭력의 증가,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 혐오와 분열 등 **성평등 의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

□ **이재명정부는 성평등을 기반으로 통합**으로 나아가며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 중앙-지자체-민간 성평등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성평등 정책 기능과 추진체계**를 **강화**

○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여성 고용유지 및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여성 경제활동의 참여를 지원**하여 **성평등한 일터** 구현

○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자**와 성착취 피해아동 지원,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으로 일상의 안전과 권익 증진

○ 딥페이크 영상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포함하여 **아동·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강화**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국정과제	주관
[국정97]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가부**
[국정98]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여가부**

97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가부)

□ 과제목표

○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성평등 체감도를 높이고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강화

○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 주요내용

○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강화하여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 성평등정책 총괄·조정, 고용평등, 교제폭력·스토킹 등 폭력 대응, 가족지원 등 기능 강화

- **중앙과 지자체의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중앙 성평등센터 신설 및 지역 성평등센터 확대 등 **전달체계 개선**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성주류화 조치 및 폭력예방교육**을 실효성 제고 방향으로 전면 개편 추진

○ (**성평등한 일터 조성**)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공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성별 임금 실태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공개

- 공공부문·민간부문의 성평등 및 일·가정양립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진단·교육 등 지원

○ (**여성 경제활동 지원 강화**) 새일센터 등을 통한 **여성의 고용유지 및 취·창업 지원 서비스 확대,** 여성벤처펀드 조성 등 여성기업의 성장기반 확충

* IT·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확대, 새일센터에 창업전담인력 배치, 새일여성인턴 확대

- '경력단절여성'을 국민 공감용어로 정비 추진, 정부포상 근거 마련 및 지역 여성 창업보육센터 확대 등 **여성경제활동 참여 촉진**

□ 기대효과

○ **모두의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한 사회** 구현

○ 기업 등 **성평등한 일자리 환경** 조성 및 **여성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98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여가부)

□ 과제목표

○ 디지털성범죄·교제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 대응 및 **피해자 지원** 확대

○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한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역사 인식 제고

□ 주요내용

○ (**디지털성범죄 강력대응**)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확충 등 기능 강화 및 여가부, 경찰청, 방통위, 방심위 등 **원스톱 대응협력체계 구축**

- AI기반 딥페이크 성범죄물 탐지·추적 시스템 고도화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선제대응 시스템 구축, AI전문 수사인력 양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추진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교제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온라인 스토킹 피해 개인정보 삭제 지원 및 교제폭력 법제화

* (기존) 긴급주거, 치료회복 등 분절적 지원 → (변경) 상담-주거-치료회복 등 통합지원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발굴-자립 지원 등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 성매매·성착취물·그루밍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괄

○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 추진, HPV 무료 접종 대상 확대(남성 청소년)

○ (**'위안부' 피해자 존엄 회복**)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처벌 근거 마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지원,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 기대효과

○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자의 신속·안전한 일상** 복귀

○ 생애과정별 **성·재생산 건강** 증진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 회복 및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 확산

전략 7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 **글로벌 AI 패권경쟁 심화**라는 대외적 환경과 **학령인구 급감, 지역소멸 위기**라는 대내적 상황에 **대응할 힘은 바로 '교육'**이므로, 지금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

□ 이재명정부는 **유·초·중등 교육**부터 **국가 책임을 강화**해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상호 존중받는 학교**를 만드는 것을 우선 과제로 인식

○ **모든 학교에서 AI를 내실있게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AI 융복합 교육과정 확산** 및 **기초학문·인문학 지원 강화** 등 **고등교육 혁신**을 추진

○ **기초학력지원 및 돌봄·방과후 체계를 강화**하고, **영유아 무상교육·보육 확대**, **특수교육**과 **학생의 심리·정서 지원 기반 확충** 추진

○ 학생이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안전체계**를 마련

○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사의 **직무 외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교육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강화**

○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 구축**으로 지역성장 기반 마련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국정과제	주관
[국정99]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교육부**
[국정100]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부**
[국정10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교육부**
[국정102]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육부**

99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교육부)

□ 과제목표

○ **모든 학교**에서 **AI를 내실있게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 국민의 AI 이해·활용 역량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AI 교육** 지원 확대

○ **AI 기반 고등교육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초학문** 및 **인문학의 교육·연구 강화**를 통해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AI 인재를 양성

□ 주요내용

○ (**초·중·고 AI 역량 강화**) **STEAM 교육 내실화** 등을 통해 **학교 AI 교육을 강화**하고, 과학고·영재학교·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AI 인재를 조기발굴·육성

-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학습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등 구축을 추진**하여 미래교육 시스템 기반 마련

○ (**AI 인재 양성 지원**) 대학(원) 대상 **AI 융복합(AI+X) 교육과정 확산** 및 산업·기업 수요에 기반한 **AI 교육·연구 지원**을 통해 AI 인재 양성 지원

※ AI 거점대학 운영, BK21 AI 분야 교육연구단 확대 및 AI 융합형 대학원 도입 추진, AI부트캠프 운영, 산업 수요기반 계약학과·정원 확대

○ (**생애주기별 AI 교육 지원**) **성인학습자 대상 온오프라인 AI 재교육 확대** 및 **사이버대 교육환경 고도화**, **전문대를 통한 기초역량 제고** 지원

※ 모든 AI/SW 분야 대학(원)생에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 (**글로벌 AI 인재 유치**) 정부초청장학생(GKS), 국제 학생교류 프로그램(CAMPUS Asia 등), 과학기술 비자·영주권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

※ GKS 석박사 이공분야 비중 45%, CAMPUS Asia 참가학생 수 30천명 달성 추진

○ (**기초학문 및 인문학 교육 확대**) **초·중·고 인문학 및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인문사회 우수장학생 지원 확대** 및 기초·**인문학 교육·연구 활성화**

□ 기대효과

○ 전 국민의 AI 친숙도와 활용 역량을 높여 **국가 AI 역량 및 경쟁력 제고**

○ 국가책임 **AI 인재의 체계적 양성**으로 'AI 3강' 도약

100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부)

□ 과제목표

○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시민교육,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

□ 주요내용

○ (**시민·헌법·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 강화**) 교육활동 전반에서 **토의·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성** 및 **공동체 역량** 강화

- **전문성·중립성**을 갖춘 학교시민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예. 헌법교육(법제처), 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환경부) 등) **활성화**

○ (**역사교육 강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심화되는 **주변국 역사 왜곡에 대해 효과적 대응 방안** 추진

- **학교역사교육 강화, 역사·영토·인권 연구 확대, 역사연구기관 운영의 정상화** 추진 등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바로세우기** 추진

○ (**문화예술·체육교육 확대**) 모든 학생의 **예술감수성 함양** 및 **신체활동 참여** 기회 확대

- **학생예술동아리** 및 **지역사회 연계** 학교예술교육 등을 지원하고, **학교 스포츠클럽** 등 내실화, **초등 체육전담교사 지정 확대** 및 **교원 전문성 강화**

○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 **초·중·고부터 대학 진학 - 사회 진출 - 출산 - 퇴직 - 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

- 초·중·고 **경제·금융 수업모델 확산**, 성인 **K-MOOC 경제·금융 강좌** 보급, 시니어 '한글햇살버스' 등을 통해 전 생애 **디지털 경제·금융교육** 실시

□ 기대효과

○ 올바른 시민 의식, 균형 잡힌 역사 인식, 예술적 감수성 및 신체적 소양, 합리적인 경제관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전인적 소양 및 공동체 역량 증대**

10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교육부)

□ 과제목표

○ **학령인구의 급감 및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기초학력 지원, 특수·통합 교육 여건 개선, 심리·정서 지원 등 **복합적 지원 추진**

○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모든 학생·학부모에게 격차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하여 **아이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

□ 주요내용

○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기초학력 선도학교** 확대, **기초학력 전담교원 확충**, **이주배경학생 한국어 교육** 등으로 기초학력 보장 강화

-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조성하여 **수준별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개선** 등을 통해 학생 수요를 고려한 **맞춤 교육 실현**

  *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 자기주도학습 공간과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습관리 제공

○ (**방과후·돌봄체계 구축**)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으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프로그램·강사 검증을 강화**하여 방과후학교 체제 확립

-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모델**을 마련·확산하고, (가칭)**온동네 돌봄·교육센터를 확충**하여 돌봄·교육의 질 제고

○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틈새돌봄 확대** 및 수요 맞춤 **교육·방과후 과정** 등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보장받는 **교육·돌봄체계** 구축

○ (**특수교육 개선**) **특수학급 신·증설**, **특수학교 20개교** 설립, **특수교사 정원 확충**, **통합학급 협력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특수교육 여건 개선

○ (**마음건강 지원**)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선별검사*** 내실화, **전문기관**** **연계** 확대 등 **예방-발견-상담-치료 전 단계**를 아우르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

* (정기) 정서행동특성검사, (수시) 마음EASY검사 / ** Wee센터,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지원기관, 병의원 등

□ 기대효과

○ 영유아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의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돌봄·교육 부담**을 **경감**하여 **공교육 신뢰도 제고**

102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육부)

□ 과제목표

○ 교사·학생·학부모가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마련** 및 교육활동 보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교원의 교육활동·기본권 보호**

○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교육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 교육주체들의 **참여와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추진

□ 주요내용

○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마련**) 교사·학생·학부모가 존중·협력하는 학교 운영기반 마련

-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학부모회 기능·권한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추진** 및 가정-학교 협력을 위한 학부모 역량 강화 지원

○ (**교권 보호 및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 지원** 및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 추진**

○ (**모두가 안전한 학교 조성**) 학교 안팎 위기요인을 제거하여 모두의 안전을 확보

-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 내 지원 전담 기구 역할 강화 및 관련 법령 제정, 학교급식 위생·영양관리 강화 및 조리환경 개선 등

- 맞춤형 예방교육 등 학교 내 신종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활동 시간 중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가이드라인 정비, **CCTV 확대** 등 추진

○ (**국가교육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 **국가교육위원회** 확대 및 구성·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에 **국민 참여 확대**

- 국가교육위원회 내 국민참여위원회의 **숙의·공론화 기능 강화** 등 역할을 확대하고, 연 1회 이상 **대국민 보고회 실시**

□ 기대효과

○ 교육주체의 실질적 참여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 교원의 교육활동·기본권 보호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 구성원 **모두를 위한 학교 문화 조성**

전략 8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 **국민 삶의 질과 행복에 직결되는 문화**는 누구나 일상에서 누리는 기본적 삶의 권리가 되어야 하나, **소득·세대·지역 등**에 따라 **문화 향유 격차 여전**

○ 전 국민이 문화적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문화복지를 확대**하고,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활동 참여 지원**, **지역 문화 환경 개선**

○ 상상력과 창의성의 원천이자, 콘텐츠산업의 토대인 문화예술의 가치를 감안, **자유로운 예술의 창작 환경 조성**과 사회적 투자로서 **예술인 복지 확대**

□ K-팝, K-드라마 등 **K-컬처의 세계적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나, 콘텐츠 산업의 성장세 둔화, 글로벌 미디어·플랫폼 환경 급변, 인공지능 대전환 등 도전적 환경에 직면, **미래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한 제2도약 필요**

○ **게임, 음악, 영상, 웹툰 등**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세제, 문화 기술 R&D 등 투자 확대, **AI시대 콘텐츠산업의 혁신**을 위한 전략 수립

○ **글로벌 OTT**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규제혁신** 및 **공정 생태계 조성**, **콘텐츠·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및 **AI기술을 통한 혁신** 지원

○ K-푸드, K-뷰티 등 **한류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 K-콘텐츠를 넘어, 예술, 생활문화(라이프스타일), 전통 등 K-컬처로 확장, **세계 속 문화적 영향력**을 높여 나가는 **문화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 동시에 스포츠 강국으로서 **생활체육 환경 조성, 전문체육인 육성** 및 **복지**, AI 기반 **스포츠 기술개발**과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등 추진

○ **K-관광 3천만 시대**를 열기 위한 **K-컬처 연계, 방한 관광 전략 시장 재구조화**, 크루즈·치유 등 **고부가시장 육성, 지역 관광 특화** 및 **산업 AI 전환 지원**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국정과제	주관
[국정103]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문체부**
[국정104] 전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문체부**
[국정105]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문체부**
[국정106]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문체부**
[국정107] 3천만 세계인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	**문체부**
[국정108]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방통위**

103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문체부)

□ 과제목표

○ **K-콘텐츠** 및 뷰티 등 **한류 연관 산업 동반 성장**으로 **K-컬처 300조원 시대** 개막

○ **AI 혁신**과 **저작권 보호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콘텐츠 성장환경** 구현

□ 주요내용

○ (**K-콘텐츠 성장기반 확충**) 세계적 **콘텐츠 기업 육성**을 목표로 '콘텐츠 미래전략펀드'* 신설 등 **정책금융 10조 원** 공급,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연장, 웹툰 등 **세제지원** 확대

* 대·중소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대작 IP 확보, AI 활용 콘텐츠 개발 등에 집중 투자

○ (**K-콘텐츠 핵심산업 육성**) **8대 분야*** 중심 장르별 전략적 지원체계 가동

* 게임,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 웹툰, 방송영상, OTT콘텐츠

- 대작·인디게임 지원 확대, 중소·독립영화 제작 지원, 비즈니스 인재양성 및 뮤지션 해외진출 지원, 영상·웹툰·출판 분야 글로벌 IP 콘텐츠 제작·해외진출 지원

○ (**AI 활용 콘텐츠산업 혁신**) AI 시대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 AI 기반 창·제작 지원, 한국문화 학습데이터 축적, AI 업계-창작자 협력 모델 마련

○ (**한류 연관 산업 글로벌 도약**) 범부처 '**한류산업진흥 기본계획**'* 마련, 한류 연계 뷰티·식품 등 산업별 맞춤형 지원 및 동반 해외 진출

* 민·관 합동 한류정책협의회 운영, 한류 콘텐츠 현지화·공동제작 지원, 연관산업 기업 컨설팅· 비즈매칭 지원

○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저작권 보호를 위해 AI 기반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인터폴·각국 수사기관과 공조 확대, 불법 유통사이트 접속차단 강화

* AI·빅데이터 활용 저작권 침해 적발-심의-차단-수사까지 원스톱 지원

□ 기대효과

○ K-콘텐츠 핵심·연계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으로 **글로벌 문화수출*** **확대**

* ('24) 26.6조 원 → ('30) 50조 원

○ 콘텐츠·연관 소비재 기업의 동반 성장으로 **K-콘텐츠의 파급효과**를 산업 전반 확산, **진출지역 다변화**로 글로벌 소프트파워 제고

104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문체부)

□ 과제목표

○ **국민 문화 향유 확대**로 **문화예술관람률 70%**('30년) 달성('24년 63%)

○ 전통문화·언어·예술 등 K-컬처 근간이 되는 **한국문화의 해외 확산** 및 **국가유산 보존·전승**

□ 주요내용

○ (**문화국가 정책인프라 마련**) 문화정책·산업 전략 수립, 국제 문화리더십 확대를 위한 (가칭)'**문화강국위원회**' 설치, **문화재정** 대폭 확대

○ (**일상 속 문화향유·참여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생애주기 **독서 활동 지원** 확대, '꿈의 예술단' 등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역량 개발**

* 취약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지원금 상향

○ (**문화로 지역 성장**) 문화환경 **취약지역 특별지원*** **신설,** 문화공간 활용 **주민생활문화활동 복원,** 지역 특성에 맞는 **거점형 문화시설** 조성

* 지역 문화 격차로 문화예술활동, 접근성이 낮은 지역 대상 인력·프로그램 등 통합 지원

○ (**전통·유산 보존 및 가치확산**) 전통사찰 등 자연재난대응 인프라 확충, 무형유산 전승자 발굴·집중 육성, 국가유산 유네스코 등재 확대

○ (**글로벌 K-컬처 확산**) **K-아트·한국어·전통문화** 등 **해외 진출 지원**, 개발도상국 세계유산 조사·보존, 문화예술교육 등 **문화 협력** 확대, **K-컬처 해외 네트워크 확충***

* 세종학당 확대, 해외문화교류 거점 코리아센터 확충

□ 기대효과

○ 문화정책 인프라 강화로 **일상 속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국민 만족도 향상**

○ K-컬처의 세계 확산·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문화역량 강화** 및 **글로벌 문화강국 위상 제고**

105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문체부)

□ 과제목표

○ 문화강국의 소프트파워를 키우는 사회적 투자로서 **예술 창작지원** 및 **복지 강화**

○ **지역 문화예술기관·단체**의 성장 지원 및 **청년·장애예술인**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주요내용

○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환경 조성**) **창작공간·인프라*** 확대,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기준 마련 등 **계약 관계 개선, 권리침해 조사 강화**

*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국립한국문학관, 국립공연예술센터, 정동극장 재건축

○ (**촘촘한 예술인 복지 제공**) 예술인 융자 등을 전담하는 **복지금고** 조성,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임대주택·자녀돌봄 확충 등 **예술인 생활 서비스** 강화

○ (**문화예술 지원체계 개선**) 지역 **문예회관**을 지역예술 **창·제작 거점으로 육성**, 소액 정부지원 사업 **자부담 폐지**, 효율적인 예술인 정책지원을 위한 **경력정보 통합관리**

○ (**청년·장애예술인 기회 확대**) 청년예술인 자산 형성을 위한 **적립계좌** 지원, 국립예술기관 **청년 인턴십*** **강화**, 지역대표 장애예술단체 육성, 장애예술인 창·제작 장르별 지원

* 국립예술단체 교육·연수단원, 국립청년예술단체, 무대기술인력·공공디자이너 인턴십 등

□ 기대효과

○ 예술인들의 **기본 생계·생활 서비스 여건을 마련**하여 누구나 걱정 없이 창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예술인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 K-컬처의 근간인 **기초예술 생태계** 강화

106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문체부)

□ 과제목표

○ 어디서나 운동하기 쉬운 **생활체육 환경 조성**으로 **국민 생활체육참여율 65%,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율 40%** 달성('30년)

○ 스포츠 강국 위상에 맞는 **체육인 복지 실현** 및 **국제 스포츠 교류*** **확대**

*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총회('25.9월/서울),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25.12월/부산),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26.2월) 등

□ 주요내용

○ (**전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스포츠활동*** 지원, 전 국민 대상 **스포츠 참여 포인트 제공**, 모든 지역에 균등한 스포츠 기회 제공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확충**

* 유아친화형 스포츠 교실, 청소년 방과후 스포츠클럽, 파크골프장 등 어르신 선호시설 지원

○ (**전문체육 투자 확대**)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체육영재학교 신설 추진, 체육인 복지*** 및 일자리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스포츠 거버넌스 구축**

* 체육인 공제사업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산재 보험 적용 등

○ (**스포츠 인프라 통한 지역 발전**) K-컬처·관광·스포츠가 결합되는 **공연형 아레나 건립**(5만석 규모) 및 지역 스포츠의 거점인 **특화지구*** 조성

* 시설 개선, 전지훈련 유치, 스포츠기업 육성 등 5년 이상 중장기 지원하는 특화지구

○ (**차별없이 누리는 장애인 체육**) **반다비체육센터** 및 **유·청소년 통합 체육교실** 확대, **장애인 전문선수*** 발굴·육성 강화

* 기관 합동 장애인 선수 발굴단 운영, 훈련·국제대회 참가 지원 확대

○ (**K-스포츠 위상 강화**) **국제대회 참가·유치·개최** 지원, **e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가상 태권도 경기규칙 정비 지원

□ 기대효과

○ 저출생 고령화 시대 체육활동으로 **전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실현

○ **스포츠 인재**가 자긍심을 느끼고, **운동에 전념**하여 **최상의 경기력** 달성

107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 (문체부)

□ 과제목표

○ 매력적인 방한관광시장 조성으로 **방한 관광객 3천만 시대 개막**('30년)

○ **지역 특화자원의 관광 자원화** 통한 **지역관광 성장동력*** **강화**

* (지역관광발전지수) 지역관광발전지수 1등급 '23년 8개 지역 → '30년 25개 지역 확대

□ 주요내용

○ (**방한관광 홍보·편의 개선**) **K-컬처 연계 방한 관광*** **홍보**, 치유·MICE 등 **고부가 관광** 육성, 범부처 연계 **외래관광객 5대 관광 불편**** 전반적 개선

* 대규모 글로벌 이벤트 연계 방한마케팅, 대형 한류스타 협업 전방위 K-관광 세일즈

** ①입·출국, ②교통·이동, ③쇼핑·식음, ④숙박, ⑤관광정보 안내

○ (**특화자원 연계 지역관광 육성**) 지역·콘텐츠 중심 **광역관광개발, 미식·축제·공연·국가유산** 등의 **K-관광콘텐츠화, 글로벌 관광특구*** 제도 신설

* 규제 완화·재정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관광 핵심거점으로 육성

○ (**관광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AI 활용 관광기업 서비스 혁신**, 현장 연계형 **전문인력 양성**, 호텔업 등급평가 개선 등 **규제 합리화**

○ (**누구나 누리는 관광환경 조성**) **국민휴가지원** 확대·신설*,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 대상 무장애 관광 인프라·프로그램 확충

* 근로자 휴가지원 확대,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대상 지역사랑 휴가 지원금 신설

□ 기대효과

○ **관광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관광산업의 **미래 성장동력화**

○ 지역 콘텐츠의 매력적인 관광자원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내수 증대** 기여

108 미래지향적 디지털 · 미디어 생태계 구축 (방통위)

□ 과제목표

○ **글로벌 미디어 경쟁력** 제고, **상생성장**을 위해 법·제도 정비 및 투자 촉진

○ **디지털 역기능 대응**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 **투명**하고 **공정**한 **디지털·미디어** 경쟁환경 구축

□ 주요내용

○ (**미디어 법제 정비 및 성장기반 마련**) **신·구 미디어를 아우르는** 합리적 미디어 **법제** 마련, **네거티브 광고체계** 도입 등 방송광고·편성 등 규제완화

※ 국무총리 직속의 민·관 합동 위원회((가칭)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운영

○ (**디지털·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K-플랫폼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불법사이트 차단**, 콘텐츠 **투자 활성화** 및 방송미디어 전과정 AI 도입으로 생태계 혁신

○ (**디지털·미디어 상생성장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과 방송광고·유료방송 연계 지원, **공정한 외주**제작 거래 환경 조성, **청년·위치정보 스타트업** 지원 추진

○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온라인상 **정보·콘텐츠 건전성** 제고와 **AI 역기능**(딥페이크 성범죄 등) **대응**을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제체계 정비 및 **이용자 피해구제** 지원

- **디지털 성범죄물** 및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한 법·제도 개선, **불법스팸 규제**체계 강화, **디지털 유산 승계**절차 마련

○ (**디지털 이용자 권리 보장**) 쇼핑·배달·OTT·여행 등 실생활 밀접 **플랫폼·앱마켓**에서의 **이용자**(**이용사업자** 포함) **피해 방지**, **유·무선 통신 이용자 선택권 보장**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 보완 및 조사·제재 강화

□ 기대효과

○ **분산**된 디지털·미디어 **법제 정비**를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불필요한 **규제 혁파**와 **투자지원**을 통한 미디어 미래 **성장동력** 확보

○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서비스·플랫폼**을 활용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업자는 **공정**하게 **경쟁**하는 **디지털 환경** 조성

국정목표 ⑥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전략 1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환경**, 질적·양적으로 고도화되는 **北 핵·미사일** 및 **재래식 군사력 위협**, 기술 발전에 따른 **전쟁 양상의 변화** 등 안보위협 증대

○ 이러한 불확실하고 도전적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군의 **자주 국방 역량** 강화 필요

□ 북핵·미사일·사이버 등의 위협에 대비한 **강한 군사력을 건설**하여 **독자적인 억지력을 확보**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군을 정예화**

□ 한미동맹 기반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고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능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안보 불안 해소**

□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총체전력 차원의 국방개혁안을 마련·추진**하고,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통해 군 구성원의 **사기·복무의지 고양** 및 군으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방산수출 진흥 및 방산기업 육성을 통해 **K-방위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제도혁신을 통해 **방산 4대강국 도약**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국정과제	주관
[국정109]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	국방부
[국정110]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부
[국정111]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	국방부
[국정112] 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국방부
[국정113] 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강국 진입	방사청

109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 (국방부)

□ 과제목표

○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하여 **전방위적 방어 및 억제체계** 고도화

○ AI 등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군사력 건설**

□ 주요내용

○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감시·정찰** 및 **정밀타격능력(Kill Chain), 방어능력(KAMD), 보복능력(KMPR)** 고도화

○ (**국방우주전략 고도화**) 우주전력 확충 및 **우주전략 고도화** 등 국방우주력 발전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우주전략사령부**' 창설 단계적 실현

○ (**유무인복합체계 고도화**) 전쟁양상 및 기술발전 속도를 고려, 재래식 전력에 무인체계를 접목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 및 시험인프라 확보

- 소부대단위에서 드론, 로봇 등 최신 무인기술을 활용, 대응능력 강화

○ (**국방AI 첨단기술 활용**) AI 신속개발·활용을 위해 **국방 데이터 관리·보안체계**를 개선하고, 맞춤형 **획득프로세스**를 마련하며, **인프라 투자 확대**

- 전장, 운용, 인사관리 등 국방 전분야에서 AI 활용 촉진

○ (**합동작전능력 향상**) 시공간을 초월하여 **정보공유** 및 **작전지휘**가 가능하도록 **차세대 지휘통제체계** 구축

○ (**사이버 위협대응체계 공고화**) 범정부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방 차원에서 **사이버·전자기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

□ 기대효과

○ 북한의 재래식 도발 및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 억지력**을 확보하고 **군을 정예화**함으로써 경제발전과 평화를 견인하는 **국방태세 확립**

110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부)

□ 과제목표

○ 확장억제를 내실화하는 등 한미동맹 기반의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

○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보강하여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주요내용

○ (**전방위 억제능력 확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효과적 운용을 통해 **확장억제 내실화**

-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을 작전계획 수준으로 구체화시키고, 도상연습 등 연합 연습·훈련 강화

- 한·미간 호혜적 관계에 기반하여, 군사, 첨단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수준을 강화하여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 (**전작권 전환**) 한국군의 **전·평시 연합방위 주도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신속 보강

-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체제 정립을 위한 전략문서 정비

- 한국이 연합방위작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 능력 확보

□ 기대효과

○ 북한의 전방위적 위협에 대한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책임국방을 실현**하고, 한미동맹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안정 확보**에 기여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능력 확보**

111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국방부)

□ 과제목표

○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군병력 정원감축, 병과 개편, 민간자원 활용, 예비전력 정예화** 등 총체전력 차원의 **국방개혁 로드맵** 구축

□ 주요내용

○ (**국방개혁 로드맵 마련**) 병력감축 상황 및 총체전력 차원에서, '**AI·첨단과학 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 로드맵 마련** 및 추진

○ (**준4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 **해병대의 독립성과 독자적인 작전권**을 보장하고, 부대구조 증강 및 사령부의 역량·위상을 제고

○ (**병과체계·인사제도 개혁**) **대병과 체제**로의 개편, **간부 장기복무** 선발률 향상, **병력 모집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전문성·숙련도를 갖춘 군 인력 확보

○ (**여군 확대 및 복무여건 개선**) **여성 초급간부 선발을 확대**하고, **여군 인사관리** 제도 및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추진

○ (**민간자원 활용**) 군수, 시설관리, 교육, 복지, 인사관리 등 군의 비전투 분야 임무를 민간이 수행하도록 하는 '**국방분야 민간 전환**' 확대

○ (**예비전력 발전**)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하여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장비보강 및 동원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발전 종합계획** 수립·추진

□ 기대효과

○ 군구조 개혁과 부대임무 효율화, 민간자원 활용 등 **국방개혁 로드맵**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최적의 군체계를 수립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육성**

○ 군 본연의 전투·작전 임무 수행 역량 강화

112 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국방부)

□ 과제목표

○ **군 복무와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군인·군무원·군가족의 **복지를 개선**

○ 민군상생을 위해 **국방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군 점유부지 이전** 추진

□ 주요내용

○ (**군인 복무여건 개선**) **군인들의 처우와 복지를 개선**하여 **사기 진작** 및 **우수인력 획득** 기반 마련

- **초급간부 급여 현실화** 및 중견간부들의 전월세 정책자금 지원 확대
- 장기근속자에 대한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 병 대상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급식 개선

○ (**군 복무 - 가정 양립 복무체계**) **가족 친화적이고 안전한 복무여건** 및 군인·군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 실현

- **당직근무비의 인상**과 함께 근본적으로 군의 당직시스템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당직을 줄이고**, 한정적으로만 시행해 온 **유연근무 확대**
-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대응, 장병 **인권보호** 강화 및 **성범죄 근절**대책 추진
- 군인·군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가족 대상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 (**민군상생 규제완화**) **군 공항 이전**의 원활한 추진,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민군 상생** 여건 마련

□ 기대효과

○ **군 구성원의 사기·복무 의지 고양**을 통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

○ **중견간부 이탈 방지** 및 **장기복무 확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숙련된 군인을 오래 활용**하고 인재가 계속 유입될 수 있는 기반 마련

113 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강국 진입 (방사청)

□ 과제목표

○ 방산수출기업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으로 **방산 4대 강국** 도약

○ AI 등 첨단전력 **획득체계 혁신** 및 방산 소재·부품 **공급망 안정화**

□ 주요내용

○ (**방산수출**) 방산수출에 대해 **재정·금융·세제 지원**, 산업협력 등 **패키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범정부적 총력지원 실시

* 방산육성, 수출산업화, 수출지원·허가 업무를 단일조직으로 통합·보강하여 일관된 정책수립 및 지원

○ (**중소·벤처기업 육성**) 기업의 **성장단계별**(진입·성장·확장·고도화) **집중 지원** 및 방산 **소부장 전방위**(All-Round) 지원, 민간 기술이전 등을 통한 '**글로벌 슈퍼-乙**' 양성

* (진입) 국방벤처 인큐베이팅 사업, (성장) 방산혁신기업100 사업, (확장)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위한 GVC30 사업, (고도화) 선도연구기관 및 한국형 빅테크 육성

○ (**획득체계 혁신**) 방위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무기도입·R&D **체계 혁신**을 통해 군사력 건설의 효율성과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 (**첨단기술 산업기반 구축**) AI, 항공엔진, 반도체, 우주, 드론·로봇 등 **첨단 전략분야 R&D** 및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한국형 빅테크 기업** 육성

* (가칭)「국방첨단전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첨단 방산분야 제품 표준·인증, 방산혁신전문기업 육성, 전반적 산업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입법

○ (**공급망 안정화**) 우리 군이 운용 중인 **100대 무기체계 소재·부품**에 대한 **공급망 지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국제협력, 소재·부품 국산화, 비축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 및 **자립도** 강화

□ 기대효과

○ 방산 수출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집중 지원을 통해 **국가 안보에 기여**함과 동시에 방위산업을 **국가경제의 주력**으로 육성

○ 첨단기술 및 첨단산업 기반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미래전장환경**에 대비

전략 2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 **'평화로운 한반도'**는 우리의 **경제, 안보, 일상을 지키는 대전제**임에도 불구, 그간 압박에 치중한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 단절, 한반도의 불안정성 고조

○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

□ 남북교류 중단 장기화로 교류기반 소실 및 민족 동질성 약화, **호혜적·안정적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체계를 정비**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 남북간 대화·협력을 통해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강화**

□ 국민의 **민주주의, 평화회복 열망**에 부응하고, **국민 합의에 기반한 대북·통일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확대·제도화**

○ **사회적 대화 활성화**로 대북·통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 합의에 기반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및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 추진

□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한반도 평화경제**를 구현하여 남북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 **평화경제특구** 및 **DMZ 생태·관광지구** 조성 등을 통해 **접경지역**을 **평화경제 거점**으로 발전

○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주요 경협사업**의 **발전적 재개** ▲**남-북-국제사회 다자협력** 추진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국정과제	주관
[국정114]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통일부**
[국정115]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통일부**
[국정116]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국정117]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통일부**
[국정118]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통일부**

114 화해 · 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통일부)

□ 과제목표

○ 통일부 **조직·기능 정상화** 및 **화해·협력·평화공존**으로 **대북·통일정책 전환**

○ 남북간 **대화 재개**, **긴장완화·신뢰구축**, **제도화**를 통해 **평화공존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통일부 조직 정상화 및 역량 강화**) 남북대화·교류협력 전담부서 회복, **사회적 대화** 및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기능 확충 등 신속 추진

-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통일부의 위상·역량 지속 강화

○ (**남북대화 재개**) 남북간 **우발적 충돌 방지** 및 **재난, 인도적 사안 등 해결**을 위한 채널 가동 추진, 당국·민간·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대화 재개 노력** 경주

- 연락채널 복원시 수준별·분야별 남북대화 재개 및 정례화·제도화 추진, 이를 통해 남북 합의사항의 실효적 이행방안 마련

○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 남북 상호간 **적대적·대결적 행위 청산** 및 단계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통한 **실질적·제도적 신뢰 형성**

- 전단, 확성기 관련 남북 상호 중단 조치 및 사후 관리 강화
- 접경지역 평화, 주민 안전 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법제 정비 추진
- 남북 군통신 및 「**9.19 군사합의**」 **복원**,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군사적 신뢰 구축 진전

○ (**남북 평화공존 기반 구축**) 국내 **대북·통일정책 추진기반을 제도화**하고, **남북 합의**를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토대 마련

- ▲평화공존의 대북정책 수립 ▲남북 평화공존의 원칙·규범 등을 규정한 「**남북기본협정**」 **체결** ▲주요 남북합의의 국회 논의 절차* 마련 등 추진

* 국회와 협력하여 남북간 주요 합의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초당적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안」 마련 및 법치주의·국민주권(참여) 원칙을 반영한 (가칭)「한반도평화통일기본법」 제정 추진

□ 기대효과

○ **남북간 긴장 완화** 및 **화해 협력 복원**을 통해 접경지역의 일상의 평화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 해소**

○ 남북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여,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

115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통일부)

□ 과제목표

○ **호혜적·안정적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추진체계** 정비

○ 사회문화, 인도협력, 기후대응 등 **다방면**에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 주요내용

○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 정비**) **민관 남북교류 거버넌스를 재건·강화**하고, **민간교류**의 제도적·물적 지원체계를 개선

- 남북교류 관련 민-관 협업체계, 중앙정부-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제도화·활성화하고,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역할 강화 및 기능 확대
- 민간 주도의 남북교류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교류협력법 ▲협력기금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종교·문화·체육 등 다양한 민간교류 지원**) **교류단체·지자체** 등과의 **협력** 하에 **주요 국제행사** 등 계기를 활용하여 **민간교류 재개**

- 체육·종교 등 국제대회와 남북 합동공연 및 전시회 등 문화예술 분야를 접목, 다층적·융합적 교류협력으로 발전
- 겨레말큰사전 편찬·개성만월대 공동조사 등 기존 중단사업을 재개하고, 민족문화유산 보존·활용 관련 유네스코 협력 확대

○ (**기후 공동대응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 추진**)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 남북간 **인도적 협력 통로 복원**

- 민간·국제기구 협업 하 영양·백신, 보건, 물·위생, 농축산 등 지원
- 감염병 및 산림협력 등 기존 합의사항부터 협의 재개,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위기에 대한 남북·다자 공동대응 방안 모색

□ 기대효과

○ **민간**이 **주도적·안정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다방면의 **남북교류 재개**, **남북간 화해 협력을 증진**하고 동질성을 회복

116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 과제목표

○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북한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 도모

○ **지역협력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구축 및 **사회통합** 강화

□ 주요내용

○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간 **인도적 대화 복원**을 통한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확인·화상상봉·고향방문** 추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방안** 협의

- '이산가족의 날',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법정기념일 행사 계기, 이산가족·납북자 가족 등의 아픔 치유 및 대내외 공감대 확산 추진

○ (**북한주민 인권의 실질적 증진**) **북한주민**의 **자유권·사회권**을 **통합 증진**하는 방향에서 민간단체 활동 지원, **민간 주도 북한주민 인권 개선** 추진

-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남북관계 발전·평화정착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 추진

-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북한과 국제사회의 인권 협력 지원

  * 북한이 참여하는 유엔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활용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고용·심리안정**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 주민과 **사회통합 촉진**

- 하나원 기초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선, 지자체와 함께 일자리·교육* 등 거주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자조·자립 커뮤니티를 통한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 정규·대안학교 지원체계 정비를 통해 차별없는 교육지원 추진

□ 기대효과

○ 분단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고통 해소** 및 **북한주민 삶**의 실질적 개선

○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안착·통합**될 수 있는 여건 개선

117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 · 통일정책 추진 (통일부)

□ 과제목표

○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국내외 **평화공존·통일담론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기반** 마련

○ **평화·통일·민주주의**를 통합한 **새로운 통일교육**을 추진하고, **북한자료**의 **대국민 공개를 확대**하여 국민의 대북·통일인식 제고 및 정책 참여 역량 강화

□ 주요내용

○ (**사회적 대화 활성화**)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제도화하는 사회적 대화 추진체계** 구축·운영

- ▲모든 국민에게 열려있고, 정부·국회·시민사회가 협업하는 기구 구성 ▲다양한 의제·방식의 대화 추진 ▲국민제안 등 정책화 체계 마련

○ (**평화·통일 담론 확산 및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 **민간**이 **평화·통일 담론**의 **생산** 및 **확산**을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 구축

- 국민참여형 평화·통일문화행사, 청년·여성 주도형 소통 창구 확대, 지역별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운영, 민간 통일·북한 연구 생태계 강화 지원 등
- 미국 등 주요국 대상 협력을 내실화하고, 재외동포·국제시민사회 등으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외연을 확장, 우호적 통일환경 조성

○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추진**) 통일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발전

-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개념 정립 및 통합 추진체계 구축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 ▲전문강사 양성 ▲학교·지역사회·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확산
-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위한 K-보이텔스바흐 합의* 추진

* 독일이 사회적 합의로 형성한 민주시민교육 원칙(강요금지, 논쟁성, 이해·관심 유도)

○ (**북한자료 공개 확대**) **국민 알권리 보장**과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고려한 **북한자료 공개 법·제도**를 마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이용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 평화·통일 공감대**에 기반한 **정책 추진 여건 조성**

○ **국민의 균형된 통일·북한관 확립** 및 **평화·통일·민주시민 역량 제고**

118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통일부)

□ 과제목표

○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청사진** 마련, **평화경제 이행기반** 조성

○ **평화경제특구 조성** 및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개발** 추진

○ 관광, 철도·도로, 개성공단 등 **주요 경제협력 사업**의 **발전적 재개** 추진

□ 주요내용

○ (**(가칭)「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마련**)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통한 **남북 공동성장** 및 **경제공동체 형성** 비전과 이행계획을 수립

-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추진방안 구체화 및 이행

○ (**평화경제특구 조성**)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를 신속히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25년 기본계획 확정, '26년부터 특구지정 착수)

- 북 호응시, 평화협력벨트의 교두보로서 인접 북한 지역과의 연계 발전 추진

○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개발**) 한반도 DMZ가 갖는 **생태적·평화적 가치**를 활용하여 세계인들이 찾는 '**한반도 평화관광**' **명소**로 개발

- DMZ 보전·평화적 이용 법률 제정(범정부 추진체계 및 DMZ 이용 규범 정립), DMZ 이남 접경지역 중점 개발(DMZ 평화올레길 조성 등), 학술·전시·공연 추진

- 국내외 지지 및 북한 호응을 유도하여 남북 협력지구 개발로 연계·확대

○ (**경제협력 사업 재개 및 다자협력 추진**)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관광, 철도·도로, 개성공단 등 **발전적 정상화** 추진

- 아울러, ▲다자협력을 통해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촉진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과 미래 기술·산업을 접목한 새로운 경협모델 개발

□ 기대효과

○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수립, **남북경협**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 마련

○ 평화경제특구 조성 및 주요 경제협력 사업 재개를 통해 **접경지역을 평화경제 거점으로 전환**하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촉진**

전략 3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 글로벌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신흥안보위협**, **기술 경쟁 심화**, **경제안보 위협** 증대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

○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능동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

□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 동맹을 상호 이익의 확대 균형이 가능하도록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고도화** 추진

□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해 **경제안보 조정·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외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해외발 리스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유리한 대외환경 조성

□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글로벌사우스**를 포함한 핵심 협력 지역과의 **외교지평을 다변화**하여 **G7+ 외교 강국으로서의 위상 확립**

□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해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한반도 평화구조 프로세스를 병행 진전**시켜 나감으로써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을 실현

□ 재외국민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를 적극 전개함으로써 **K-컬처의 확산, 청년의 해외 진출 지원** 등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외교 추진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국정과제	주관
[국정119]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외교부**
[국정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외교부**
[국정121]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외교부**
[국정122]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추구	**외교부**
[국정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외교부**

119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외교부)

□ 과제목표

○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미·일·중·러 4개국**과의 관계 발전을 추구

□ 주요내용

○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 안보, 통상, 첨단기술 등 분야별 협력을 뛰어넘어 **포괄적 틀에서 상호 이익 확대 균형 확보**

- 한미 동맹 현대화 및 우리 안보 역량 강화
-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국민 권익 보호
- 한미 동맹을 토대로 국익의 견지에서 한미일 3국 협력 증진

○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 ▲**셔틀외교 재개**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 ▲**경제, 문화** 등 분야 협력 및 **미래세대 교류 확대 추진**

- 과거사 등 현안 관련 우리 기본 입장 견지 下 일측 호응 유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 지속**
- 한일중 3국 협력체제의 제도화, 내실화를 위해 관련국 및 한일중 협력 사무국과 긴밀 협력

○ (**한중관계를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노력 지속 및 **비핵화·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협조** 확보

- 정상교류 및 전략적 소통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인적교류 활성화, 문화 컨텐츠 산업 中 시장 진출, 우호정서 제고 등 국민체감형 성과를 실현
- 서해 등 우리 해양권익 수호 노력 배가

○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발전 추진**) 우리 국민·기업 권익 보호 및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소통 지속**

- 양국간 호혜적 협력 관계 복원을 위한 공감대 확대 노력 경주

□ 기대효과

○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동맹의 전략적 가치와 실효성 강화

○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발전시켜 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나가고 우리의 전략적 공간 확대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외교부)

□ 과제목표

○ 급변하는 국제 정치·경제·안보 환경에서 **전략적·경제적 외교 지평**을 확장

○ 신흥안보, 기후 위기 등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에 책임 있게 기여하며, K-이니셔티브 플랫폼으로서 **재외공관 역할 확대** 및 **국민 공공외교** 추진

○ G7+ **외교강국**에 걸맞은 **외교 인프**라(조직·인사·교육훈련 제도) 혁신과 외교 인력 전문성 제고 및 재외공관의 역할 강화

□ 주요내용

○ (**외교다변화**) **국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외교다변화 추진

-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계승·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유망 글로벌 사우스**로의 외교 지평 확대
- **유럽, 인태지역 유사입장국, 중동**과 전략적 협력 심화

○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책임있는 국가로서 **국제 평화·안보, 사이버, 신기술, 기후·환경 위기, 인권** 등 대응에 적극적 역할 수행

- ▲국제규범 형성 기여 ▲다자·소다자 협의체 활용 ▲전략적 재정 기여

○ (**통합적·효과적 ODA**) **ODA 중장기 전략 수립**과 **통합적 무상원조 ODA 체계** 구축을 통한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ODA 수행

- 전략적 조정 강화, 저성과·부실사업 최소화, 역량 있는 시행기관 중심의 사업 수행, 산출 중심 성과관리체계 도입을 통한 ODA 체질 개선

○ (**국민 공공외교 및 K-이니셔티브 실현**) 국민들의 **공공외교** 직접 참여 기회·제도 확대, K-이니셔티브 해외 진출 교두보 역할 강화

- 지자체·재외동포·전문가그룹·기업 등 다양한 국민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공공외교 역량 강화 및 추진 체계 구축,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

○ (**외교 인프라 혁신 및 외교 인력 전문성 증진**) G7+ 외교강국 실현을 위한 외교 인프라 정비 및 인사·교육훈련 혁신을 통한 **전문인력 육성·확보**

○ (**재외공관의 통합·조정 역할 강화**) 재외공관 역할 강화를 통한 범정부 차원의 대외 집행 체계 혁신

□ 기대효과

○ 우리 외교의 역할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사회와 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키고 안보·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 국익 신장**에 기여

○ 글로벌 현안 대응과 국제규범 형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다자외교 리더십을 확보하고 **외교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121 경제 안보 ·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외교부)

□ 과제목표

○ **경제안보 조정·통합** 기능 강화 및 **신흥·첨단기술 분야 과학기술 외교** 적극 추진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외부 충격에 대한 효과적 대응 기반 마련

○ 다자경제 협의체 의장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논의를 선도하고 재외공관 수출·수주 지원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국가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

□ 주요내용

○ (**경제 안보 조정·통합 강화**) 글로벌 통상·경제안보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경제안보점검회의」** 정례화 추진

○ (**다자경제 협의체 의장국 수임을 통한 글로벌 경제외교 선도**) **'25년 APEC, '28년(잠정) G20 의장국**으로 글로벌 현안에 적극 대응

- 디지털·AI, 기후, 공급망 등 글로벌 현안 논의를 주도하고 개도국과 선진국 간 교량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에 우호적 여건 조성

○ (**우리기업의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재외공관의 전진기지화**) **민관 협업 체계**를 수립하고, **재외공관의 정보수집·네트워킹·홍보** 등 역할 강화

○ (**신흥·첨단기술 분야 중심의 과학기술외교 강화**) 주요국들과 **기술-안보 융합형 첨단기술 외교**를 강화하고,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는 과학기술외교 전개

- AI·우주·퀀텀·바이오 등 첨단기술 관련 양·다자 협의체에 적극 참여

□ 기대효과

○ 경제안보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민관 소통을 강화하여, 해외발 리스크가 우리 경제·민생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경제의 회복력과 안정성** 제고

○ 글로벌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여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유리한 대외 경제환경 조성

122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추구 (외교부)

□ 과제목표

○ **한미협의**를 기반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 촉진** 및 **단계적 비핵화** 전략 마련·추진

○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를 유기적·병렬적으로 진행

□ 주요내용

○ (**한미협의와 한반도 긴장 완화로 북핵 대화 여건 조성**)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와 한미 간 협의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북미협상 촉진**

-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기반 위에 중·러 등 주변국의 건설적 역할 견인

○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한 비핵화 진전 추구**) 한미협의를 바탕으로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 마련** 및 이행 추진

- 단계적 합의, 동시행동을 통해 합의 이행을 촉진시켜 나가고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지속 강화

○ (**비핵화-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병행 추구**) **남북대화 및 북미협상을 병행** 추진하여,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 이행 여건 조성

- **▲비핵화-평화체제 ▲남북대화-북미협상 선순환적 발전** 추진

- 중장기적으로 한반도·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4자·6자 협력 틀** 가동 추진

□ 기대효과

○ 한반도 긴장 완화로 남북, 북미 간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기반으로 비핵화 조치 및 상응 조치의 단계적 합의-동시이행을 통해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비핵화 달성** 추진

○ 남북대화와 북미협상을 선순환적으로 발전시켜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평화구조**를 구축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외교부, 동포청)

□ 과제목표

○ 해외위난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체계 선진화 및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영사서비스 개선**

○ 동포사회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 민원 해결 등을 통해 **재외동포 지원**을 **강화**하고, **동포 역량을 활용**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

□ 주요내용

○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망 구축**) **선제적 예방 중심**의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재외국민 보호망 구축

- ▲해외안전여행 정보 플랫폼 및 영사콜센터 상담시스템 고도화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6-'30) 수립 ▲해외재난 유관부처간 협력 및 민관 협력 강화 등

○ (**국민 편익 증진**) 해외출국자 수 3천만 명 시대에 발맞추어 **해외 출입국·체류 편익 증진** 및 **청년 해외진출** 강화

- ▲여권사무 대행기관 확대 설치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민간 개방 ▲사증면제·운전면허 상호인정·워킹홀리데이 협정 대상국 확대 등

○ (**맞춤형 동포 지원**) 동포들의 **한인 정체**성 함양, 역사적으로 **희생·헌신한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

- ▲한글학교 역량 강화 ▲복수국적제도 개선 ▲재외선거 참정권 보장 확대(재외선거 참여 편의 제고) ▲사할린동포 및 입양동포 등 지원 강화 ▲재외국민의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 (**동포 역량 극대화**) 동포사회의 **민간외교 활동** 지원, 국내 체류 동포 지원 강화, **동포 청년인재**의 국내 유치·정착 지원, **「한상경제권」** 구축

- ▲다양한 동포구성원의 민간외교 활동 지원 강화 ▲국내 동포 정착 지원을 위한 지자체·시민단체와의 협업 강화 ▲국내청년 해외동포기업 인턴십 확대

- ▲「동포기업-국내기업」 연계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재외동포와의 소통 플랫폼 구축 등

□ 기대효과

○ 동시다발적 해외위난 및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 국민의 **해외 출입국·체류 편익** 증진 및 **청년 해외 진출** 확대

○ **재외동포의 체감 만족도**를 제고하고, **동포사회의 역량**을 국가발전에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기반 마련

Ⅳ.
12대 중점 전략과제

1. 개요 및 추진방향
2. 중점 전략과제별 주요 내용

Ⅳ. 12대 중점 전략과제

< 개요 및 추진방향 >

□ 개 요

○ 새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국정과제와 별도로 제시

○ 중점 전략과제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 과제로서,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국정과제를 재구조화하여 구성

- 다부처·다분야에 걸친 과제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성과 도출 추진

□ 중점 전략과제

과 제 명	분야
①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3%^{잠재}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②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천시대 도약 ③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 ④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함께 달성	경제
⑤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⑥ 인구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 ⑦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 ⑧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 ⑨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사회	사회· 문화
⑩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 ⑪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 ⑫ 참여와 소통의 국정운영으로 국민통합의 정치 실현	공통 기반

□ 추진방향

○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 또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통해 체계적 추진

○ 재정·입법 등 가용한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추진일정, 주무부처 등을 구체화하여 실행력 제고

1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성장 전략 (3%[잠재]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1. 한국경제 진단

1 (현황) 공급, 수요 측면 **성장동력 저하** → 10년내 잠재성장률 **0%대**로 **하락 전망**

○ **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향후 5년내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구조적 변환점**에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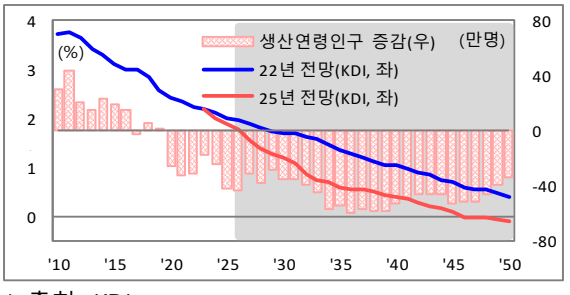
- (공급) **생산연령인구 감소**(L)('25~'35년 △400만명), **해외투자 순유출**(K) ('22~'23년 840억불),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 등 **경쟁력 저하**(A)

  * 산업별 세계시장 점유율(%, '13→'23년): <반도체>6.8→6.3 <디스플레이>11.3→7.5 <이차전지>6.4→4.2

- (수요) (소비)**全연령**대에서 평균 **소비성향 하락**, (투자)**설비투자 2년**('22-'23년) **연속 감소**, (수출)**반도체 外 수출 정체**, (정부)**소극적 재정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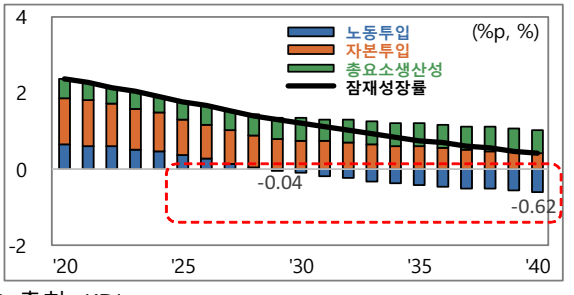
  * 평균 소비성향(%, '13→'23): ('29세 이하)58.4→57.4 (30대)57.6→52.9 (40대)65.2→58.4 (50대)57.1→53.8 (60세 이상)61.3→51.1
  * 연간 수출액(2010=100, '13→'24): (반도체)113→280 (반도체 外)121→130
  * 총지출 증가율(본예산, %): ('23)5.1 ('24)2.8 ('25)2.5 <역대 최저>

잠재성장률 추이



* 출처: KDI

잠재성장률 기여도 추이



* 출처: KDI

2 (문제점) **기술혁신 지체**와 **인구위기** 등이 **경제활력**을 **구조적**으로 **저하**

① **추격성장**의 **한계** 직면 +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혁신 부진**

②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지역·기업·계층**간 **격차 확대**

③ **기술탈취** 등 **불공정한 시장질서** +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④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돈의 흐름 편중** + **소극적 재정운용** 및 **낡은 규제**, 공공부문 **비효율 상존**

☞ **생산성**의 **가속적** 향상, **노동·자본투입 확대** 등 **전방위적 노력** → **지속·체감**할수 있는 **진짜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반전** 추진

2. 새정부 성장전략

비전 경제·산업 대도약 (AI 3대강국 + 잠재성장률 3% + 국력 세계5강)

3+1 전략 ① 기술선도 성장 ② 모두의 성장 ③ 공정한 성장 + 지속성장 기반 강화 〈 자금순환(돈의 흐름) 大전환 + 정부 혁신 〉

원인 및 문제점	15대 핵심 추진과제
1 추격성장의 한계와 기술혁신 지체 ❶ AI 대응 미흡, 선도국과 격차 확대 ❷ 신산업 혁신 부진·주력산업 경쟁력 저하 + 에너지 전환 지체 ❸ 과학기술혁신 정체 ❹ 교육전환 지체로 첨단산업 인재 부족 ❺ 보호무역 전 세계적 확산	**1 기술로 도약하는 글로벌 선도국가** ❶ AI시대 경제·사회 大전환 ❷ 미래전략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업그레이드 + 에너지 大전환 ❸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 생태계 강화 ❹ 교육시스템 혁신을 통한 혁신인재 양성 ❺ 경제영토 확장 및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2 인구구조 변화와 부문간 격차확대 ❶ 대-중소기업간 격차 확대 ❷ 수도권-지방간 격차 확대 * '15~'24년간 수도권인구+57만/비수도권△68만 ❸ 실질소득 정체 및 가계부채 누증 * '22~'23년 실질임금 2년연속 감소 ❹ 양극화 심화와 사각지대 지속 ❺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 급감	**2 모두가 함께하는 국민성장** ❶ 창업·벤처 붐의 상시화를 통한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❷ 국토공간 혁신 → 지역균형 성장 ❸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❹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❺ 인구위기 극복
3 불공정한 시장구조 ❶ 플랫폼 독과점·기술탈취 등 불공정 시장질서 ❷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 중기 비정규직/대기업 정규직 임금비율: 41.5%('24)	**3 기회가 열리는 공정 경제** ❶ 공정한 시장질서 및 소비자주권 확립 ❷ 일한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4 비생산적 자금 쏠림+ 공공부문 비효율 ❶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쏠림 ❷ 혁신을 저해하는 낡고 경직된 규제 ❸ 소극적 재정운용 및 공공부문 비효율	**4 지속성장 기반 강화: 자금순환 大전환 + 정부 혁신** ❶ 성장을 북돋는 금융 ❷ 규제 합리화 ❸ 적극적인 재정·공공혁신

☞ 3%[잠재]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세부 로드맵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추진(8월)

3. 주요 추진과제

(1) 기술선도 성장: 기술로 도약하는 글로벌 선도국가

1 AI시대 경제·사회 大전환

① (AI 인프라·활용)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확충('AI고속도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등을 통해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AI 3대 강국 도약

* 국가AI 컴퓨팅센터, GPU 5만장↑ 확보, 6G 상용화('30), 국가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26)

② (AI 인재) 파격적 보상 등을 통해 최고급 AI 인재를 양성하고, 차세대 AI반도체 원천기술 및 피지컬AI(로봇 등) 핵심기술 확보

③ (AI 정부) 국가AI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납세·법무·돌봄 등 대국민 서비스를 AI로 혁신하는 등 세계 1위 AI정부 실현

2 미래전략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업그레이드 + 에너지 大전환

① (첨단 제조강국) A(AI)·B(바이오)·C(컬처)·D(방산)·E(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소·부·장 경쟁력 강화 등 주력산업 업그레이드

* (A) AI 팩토리, 산업용 AI로봇 확산 등 (B)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AI 의료기기 개발 등 (C) K-컬처 핵심 장르별 지원 등 (D)항공엔진 등 핵심 소부장 개발 등 (E)기후테크, 배터리 신산업 육성 등

② (에너지 大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RE100산단 등 재생에너지 확대

⇨ 100조원 규모 (가칭)국민성장펀드[별첨1] 신설 등 가용수단 총동원

3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 생태계 강화

○ 국가R&D 거버넌스 개혁 등을 통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술패권 경쟁을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 New, Emerging, eXponential Tech: 차세대·신흥기술 中 기하급수적 성장으로 신산업을 이끌 분야

4 교육시스템 혁신을 통한 첨단 핵심인재 양성

① (교육시스템) AI 거점대학 중심 학과 재구조화 등을 통해 첨단분야 인재 양성 저변을 확대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연장·확충

② (핵심인재) 청년 과기인 3종 패키지(장학금-연구생활장려금-기본연구) 등을 통해 전주기 성장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 인재 유치('Brain to Korea' 프로젝트) 강화

5 경제영토 확장 및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 글로벌사우스(ASEAN, 아프리카) 협력 확대, 품목 다변화 등을 통해 수출 1조불 시대를 구현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 확대 등 경제안보 강화

(2) 모두의 성장: 모두가 함께하는 국민성장

1 창업·벤처 붐의 상시화를 통한 동반성장 생태계 강화

① (벤처투자) 모태펀드 출자규모 확대 등을 통해 **연 40조원 벤처투자 시장**을 **조성**하고 **50개 혁신·딥테크 유니콘 육성**

② (창업국가) **딥테크 창업패키지**(2,500개사) 신설, **청년 창업가 양성** 등을 통해 AI·딥테크 중심 **'모두의 창업' 활성화**

③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통합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스케일업** 지원·**자금공급 확대** 등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2 지역 균형성장 및 국토공간 혁신

① (5극3특 체제)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균형성장** 달성

② (지역성장거점) '**서울대 10개 만들기**' 및 **행정수도 완성**,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통해 **권역별 중심도시 육성** 추진

3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① (가계부채) **DSR** 중심 **관리**기조 확립 및 DSR **적용 예외범위 축소**

② (포용금융) **취약계층 채무**를 **경감***하고 **금리·수수료** 부담을 완화

* 7년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 소각(113만명),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확대 및 채무감면율 확대(10.1만명)

③ (생활비) **교통비** 등* 절감, **공적주택 공급확대**(5년 110만호)로 **주거안정**

* (교통) 전국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탑승·환승할 수 있는 정액패스 신규도입(일정한도내) (통신) 全 요금제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 (주거비) 청년 월세특별지원 상시화, 월세 세액공제 확대

④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및 **폐업**, **재기지원**까지 **선제적·원스톱 지원**, 영세 소상공인 **공과금, 보험료** 등 **경영비용 절감** 및 **지역상권 활성화**

4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① (안전망) **기본사회위원회 신설,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 책임제** 도입 등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간병비** 등 **의료비** 부담 완화

② (자산·소득 형성) **우리아이 자립펀드**, **청년미래적금** 등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5 인구위기 극복

① (경활율)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등 **청년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기반** 강화 등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

*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초등저학년자녀 예체능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추가 등

② (정년연장) **인구감소, 소득절벽 현상** 대응을 위해 사회적 논의 통한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추진

(3) 공정한 성장: 기회가 열리는 공정 경제

1 공정한 시장질서 및 소비자 주권 확립

① (공정한 시장질서)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 보호 및 **불공정관행** 개선

② (**소비자 주권**)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고, **집행권한**의 **지자체 이양** 등 **공정거래 법 집행체계** 강화

③ (**상생협력**)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술탈취 근절**

2 일한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① (**공정한 노동시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노동조합 권리 강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② (**안전한 노동환경**)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 및 **주 4.5일제** 확산,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체계** 구축 추진

(4) 지속성장 기반 강화: 자금순환(돈의 흐름) 大전환 + 정부 혁신

1 (금융 개혁) 혁신적·생산적 부문으로의 돈의 흐름 大전환

① (**생산적 금융**)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기 위한 **건전성 규제*** 개편,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제도** 마련 및 **ESG 금융** 강화

*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위험에 대비한 추가 자본적립의무 도입,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검토

② (**자본시장 혁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고, **자본시장 체질 개선*** 등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 MSCI 선진국 지수편입,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 등 시장 수요기반 확충 및 시장구조 개편 등 추진

2 (규제 합리화) 경제·산업 도약 및 민생안정을 위한 규제 전면 재설계 별첨2

① (**핵심 신산업 규제제로**) **AI, 바이오헬스** 등에 대해 **일정 기간**(3년, 5년 등) **규제적용**을 **배제하고, 글로벌 미니멈 규제**를 목표로 **신산업 규제** 설계

② (**메가특구**) **지자체**의 **규제특례 설계**와 **중앙정부**의 **정책 패키지**(정책금융, 생활·산업 인프라 등) 제공을 통해 **대규모**(초광역 포함) **특화산업 성장 공간** 조성

3 (재정·공공 혁신) 적극적·전략적 재정운용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혁

① (**재정**)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적극적**이며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민간 투자재원** 활용,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 제고

② (**공공**) 경영 **자율성·책임성 강화**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혁** 추진

* 기관장 경영평가 신설 및 임기규정 개정, 공운위 민간위원 확대 및 민관공동위원장 체제 전환 등

< 별첨 ① :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방안 >

□ (추진배경) 적극적 금융지원으로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 공공주도기금과 민간자금을 함께 활용하여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100조원 펀드 조성**

□ (자금조성)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재정투입 최소화**(5조원 이하), **민간자금 조달** ☞ ❶**정부보증채**(50조원) + ❷**민간**(50조원+@) **유치**

(가칭)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민간자금 50조원	- (구성) 일반국민 공모자금 + 연기금·민간금융 - (역할) 풍부한 유동성 제공, 투자수익 향유
공공주도 기금(정부보증) 50조원	- (구성) 정부보증 기금채 + 산은 출연 - (역할) 투자시 위험 先분담, 초저수익 대출

※ 민관합동 투자시 **기금+재정**이 후순위보강 등을 통해 **손실**을 **우선 부담**하여 **민간자금**의 첨단산업 분야에의 **투자유인 제고**

□ (**투자대상산업**) **인공지능**(AI, 최소 20조원 이상)을 중심으로 한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 **전략산업** 관련 **기술·벤처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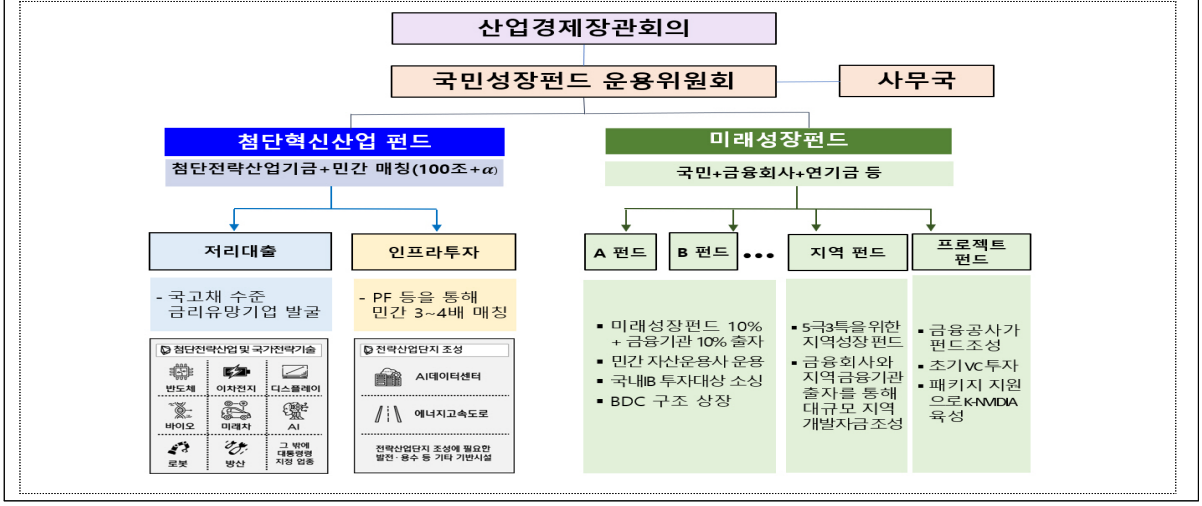
※ **자금 지원시** 균형발전 필요성 및 지역 주력산업 등 **지역 특성**을 **고려**
(예 : 동남권 이차전지·전력반도체, 서남권 미래차·바이오, 충청권 디스플레이·배터리 등)

□ (**맞춤형 지원**) **기업 수요, 프로젝트 특성** 등을 감안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식** 활용

○ **벤처·중소** → 대출이자 부담이 없는 **지분투자***·**후순위보강 지원**
수출·수주 → **대규모 설비투자 자금**을 **2%대 저리**로 **대출**

* 당장의 이자부담 없이 장기간 경쟁력 강화에 집중 → 성과발생시 민간과 공유

○ 프로젝트별로 **직접 지분투자, 민관협동 금융**(신디케이션, 기금 후순위 보강, PF, 정책펀드의 LP 참여 등) 등 활용



< 별첨 ② : 경제·산업 도약 및 민생안정을 위한 규제 재설계 >

□ (**핵심 신산업 규제 제로**) AI, 바이오헬스 등 기술발전 파급효과가 큰 **국가 핵심산업 분야**에 대해 **일정 기간**(3년, 5년 등) **규제적용 유예**

○ 신산업 분야 법령 조사를 통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사후 위험관리**를 위해 **민사적 책임 강화**(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디스커버리) 병행

□ (**규제샌드박스 레벨업**) **분절화**(8개 분야)**된 운영**에 따른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샌드박스 **신청-심의-실증-법령정비-상용화** 전 주기 **통합 관리**

○ **상용화 성공 중심**으로 평가·관리, 실증특례 종료시 **원칙적으로 법령정비, 다부처 과제** 등에 대한 **전략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 (**메가특구 도입**) 지역·산업 맞춤형 **광범위한 규제특례**와 함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특화 전략산업** 육성

* 메가특구안 마련·신청(지자체, 지방의회 동의) → 규제특례안 승인 및 정책 패키지 지원(정부 합동)

□ (**경제형벌 합리화**) 기업 경영 및 중기·소상공인 **영업부담 완화**를 위해 **형벌 중심의 제재**에서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체계로 전환

* ▲필요·최소한의 정도 ▲행정제재 등으로 대체 여부 등을 기준으로 형벌 조항 완화

□ (**관광산업 활성화**)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외국 관광객 **출입국 편의 증진** 및 불합리한 **관광규제 개선**

*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시행, 호텔업 등급 평가 간소화 등

□ (**생명·안전 보호**) **재난·재해 대응** 위해 긴급한 경우 **규제 유예**(**국민안전 규제특례제** 도입), **생명·안전 규제**는 **폐지·완화시**에도 **규제심사**

○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해소**(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개선 등) 및 **사회적 약자** 대상 **불합리한 규제 개선**(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규제완화 등)

□ (**추진체계 정립**)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사무기구를 보완하는 등 **분산된 추진체계를 단일화**

○ 일반 국민, 경제단체, 지역사회 등 **모든 규제애로·건의** 사항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처리, **현장방문** 및 **소통 확대**

○ 공무원의 적극적 규제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개혁위** 또는 **기관별 적극행정위**를 거친 경우 **감사원 감사 면책**

2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천시대 도약

1. 추진배경

□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될 필요

○ 그간 기업가치 제고 노력, 공매도 제도개선, 외국인 투자등록 폐지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하였으나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지속**

☞ [1]**주주가치** 중심 **경영문화**, [2]**공정·투명**한 **시장질서**, [3]**수요기반 확충** 및 **자금 선순환 기반 조성**을 3대 축으로 자본시장 **근본적 혁신**

→ '**코리아 프리미엄**' 시장으로 전환

2. 과제목표

□ **일반주주 권익** 강화 등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경영 문화** 확산을 통해 기업 성장의 **성과**를 **일반국민**이 공정하게 **향유**하는 자본시장

□ 불공정거래 **적발·엄단**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여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 증시의 **장기 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업**들이 **성장단계별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자본시장

< 전략체계도 >

비전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천시대 도약		
목표	국민이 기업성과를 공정하게 향유하는 자본시장	국민이 믿고 투자하는 신뢰받는 자본시장	기업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자본시장
실행 전략	[1] 주주가치 중심 기업경영 문화 확산	[2]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3] 증시 수요기반 확충 및 자금 선순환 기반 조성
	개정 「상법」의 시장 안착 일반주주 보호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 검토	불공정거래 엄단 불공정거래 탐지·적발 역량 제고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ESG 공시 인프라 고도화	장기 안정적 수요기반 마련 벤처·중소기업 성장자금 공급 자금시장 선순환 기반 조성

3. 실행전략별 주요 내용

실행전략 1 주주가치 중심 기업경영 문화 확산

□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위한 개정 **「상법」***의 **시장 안착** 및 **추가 입법 논의 지원**('25.7.22 일부 개정완료)

* 주주 충실의무 명시, 독립이사 선임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는 개정완료('25.7.22)

□ (**합병·분할 등 관련 제도개선**) **합병** 등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개선

○ 합병 등 결정시 **이사회**가 목적·효과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고, 중립적 **제3자**의 **외부평가**를 받도록 의무화

○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일정 공모 신주**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기업 인수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고 소액주주의 회수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통한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수탁기관의 **이행여부 점검** 및 **결과 공시**

* 예) [적용자산유형] 기존 "상장주식" → "채권·비상장주식 등"까지 확대
[수탁자책임 범위] 기존 "지배구조" → "환경·사회" 요소까지 확대

□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 방안 검토**) **관계부처, 시장전문가,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 방안 마련

○ **상법 개정없이** 자사주 **소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은 **별도 우선 추진**

* (예) 자사주 보유공시 대상 확대(발행주식총수의 5%→1%), 향후 1년간 자사주 처분·소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서식 구체화 등

○ **대기업**의 **자사주** 취득·보유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준 개선***(공정거래법 개정)

* (예)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판단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사주 제외

실행전략 2 공정 ·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불법이익 박탈**을 통한 불공정거래 **엄단**

○ ①**불법이익 의심계좌 지급정지**, ②**과징금**, ③**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 **先행정조치**로 **주가조작**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엄벌

○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은 **가중처벌**하는 등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상장법인 **임원 중요전과 공시 의무화****

* (예) 투자상품 거래 제한기간 및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기간을 연장, 과징금 기준 상향
** (예) 업무수행과 무관하더라도 사기·횡령 등 중요 전과 공시 의무화

□ (**불공정거래 탐지·적발 역량 제고**)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조직·인력 확충, 시장감시체계 개편**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적발**

○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협업**하여 **주가조작**을 **탐지·조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한국거래소에 설치하여 **중요사건 원스톱 처리**

○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 → 개인기반 감시체계***로 **전환**

* 동일인의 주가조작 시세 관여율 판단이 쉬워지고, 감시·분석대상이 약 39% 감소

□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부실기업**은 **적시**에 **퇴출**하고,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

○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부실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해 **상장유지 요건**(시가총액·매출액 등) **강화** 및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 미공개정보 이용 방지를 위해 **내부자**에 대해 상장회사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의무화**(미공개정보 이용 여부 무관)

□ (**ESG 공시 인프라 고도화**) **국제적 정합성***, 투자자 **유용성**, 기업 **수용성** 등을 관계부처·이해관계자 협의 후 **ESG 공시기준** 및 **로드맵**(대상·시기) 마련

* (공시기준) EU·日 확정 / 英·中 논의중 / 美 보류
(공시로드맵) EU 확정(완화 논의중) / 英·中·日 논의중 / 美 보류

실행전략 3 증시 수요기반 확충 및 자금 선순환 기반 조성

□ (**장기 안정적 수요기반 마련**) **해외자본 유입여건** 조성, **정책펀드·연기금 투자 확대, 세제혜택**(기재부 협의 필요) 등을 통해 증시에 **충분한 유동성 공급**

○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MSCI 및 글로벌 투자자 등과 **대외소통** 강화

○ **금융중심지 내 글로벌 자본 유치**를 위해 외환·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및 지자체 등과 협력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

○ **국민성장펀드, 우리아이자립펀드** 등으로 조성될 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코스닥벤처펀드**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

* 코스닥벤처펀드 세제혜택 연장 및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 강화

○ **연기금**의 **자본시장 투자 확대** 유도

□ (**벤처·중소기업 성장자금 공급**) **중기·소상공인** 등도 **자본시장**에서 사업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토큰증권**(STO) **제도화**

○ 벤처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및 **세제혜택** 부여 검토

○ **초대형 증권사**(IB)에 일정수준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 부여

□ (**자금시장 선순환 기반 조성**) **성장유망 기업**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투자자금 회수**가 **용이**하도록 **주식시장 진입·퇴출 요건**을 전반적으로 **개편**

* (예1)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에 따라 코넥스-코스닥-코스피 시장의 역할 재정립
(예2) 기술특례상장의 심사기준(현재 "바이오" 분야만 정성적 심사기준 세분화·구체화)을 혁신기술별로 세분화·구체화

○ **혁신기업** 주식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을 **제도화**하고, **세컨더리·M&A펀드**를 지속 **조성**하여 투자자금 회수 적극 지원

○ 합리적 공모가 기반의 건전한 **IPO**를 위해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수요예측** 합리화 등 추진*

* 코너스톤투자자 및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확대, 주관사 책임 강화를 위한 환매청구권(풋백옵션) 실효성 제고 등

4. 주요 과제별 추진일정

과제명	추진기한						주관
	'25	'26	'27	'28	'29	'30	
1 주주가치 중심 기업경영 문화 확산							
· 주주 충실의무 등「상법」개정	▬						법무부
· 합병·분할 등 관련 제도개선	▬	▬					금융위
·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	▬					금융위
·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 검토	▬	▬					법무부 금융위 공정위
2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	▬	▬	▬	▬	▬	금융위 검찰청
· 금융회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제재 가중	▬	▬	▬	▬	▬	▬	금융위
· 부실기업 신속 퇴출	▬	▬	▬	▬	▬	▬	금융위
· 미공개정보 이용 사전 예방	▬	▬	▬	▬	▬	▬	금융위
· ESG 공시 인프라 고도화	▬	▬					금융위 산업부 환경부
3 증시 수요기반 확충 및 자금 선순환 기반 조성							
· 해외자본 유입여건 조성	▬	▬	▬				기재부 금융위
· 정책펀드, 연기금 투자 확대 촉진	▬	▬	▬	▬	▬	▬	금융위 기재부
· 벤처·중소기업 성장자금 공급	▬	▬	▬	▬	▬	▬	금융위 기재부
· 주식시장 역할 재정립	▬	▬	▬				금융위

3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

1. 추진배경

□ AI는 자료 분석·관리 등 **업무 보조를 넘어** 소통·창작 등 **인간의 사고·행동까지 대체**하며 **경제·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범용기술**로 자리매김

○ **우리나라**는 ICT **인프라**와 **자동차·반도체·가전** 등 **제조업** 분야의 **수준급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AI 관련 기술·생태계**는 **美·中과의 격차**가 **심화**

□ 특히, **AI가 국가 전략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글로벌 AI 패권경쟁 하에서 **독자적인 AI생태계 확보**가 **국가 경제**와 **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부상**

☞ **국가 AI경쟁력**을 **세계 3강 수준**으로 **제고**하여 **국민·기업·정부**가 잘 **활용**하고, **AI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모두의 AI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

2. 과제목표 및 전략체계도

□ **첨단 GPU 5만장** 이상 **조기 확보** 및 **양질의 데이터 확충**으로 **세계 최고**의 **'AI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산업·지역의 AI 대전환** 기반 마련

□ **전 국민의 AI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재난 안전 대응 및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세계 1위 AI 정부 실현**

□ AI로 금융·식량·재난 등 **잠재 위험**을 분석해 **사회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기업-정부 **모두**가 **AI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전략체계도 >

비전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			
목표	**GPU 5만장 이상 조기 확충 등 AI고속도로 구축**	**세계에서 가장 AI를 잘쓰는 나라 구현**	**AI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실행 전략	**① AI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② AI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사회**	**③ AI로 일 잘하는 정부**	**④ 안전한 모두의 AI 기반 조성**
	GPU, 데이터, 네트워크 등 국가AI인프라 구축	전 국민 AI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접근성 제고	공공 AI 전환을 위한 고용·복지·조달 등 30대 핵심과제 추진	AI 오남용 대응 및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체계 마련

3. 실행전략별 주요 내용

실행전략 1 (기업) AI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 ‘AI고속도로’ 구축

○ (AI컴퓨팅인프라 확충) 세계적인 AI 역량 확보를 위해 학계·연구계 및 중소·벤처기업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GPU 5만장 조기 확보 추진

※ 국내 GPU 수요를 6개월 주기로 조사하여, GPU 확충 규모를 수요탄력적으로 대응

- 투자 세액공제 확대, 특별법 제정 등 AI데이터센터 생태계 육성 견인
- AI에 최적화된 6세대 이동통신(6G) 상용화('30) 등 초지능 네트워크 구축

○ (데이터 구축·개방) 국가 공공·민간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26)으로 데이터 소재를 단일 창구로 제공하고, 분야별(의료·제조 등)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 AI가독성 확보를 위한 공공데이터 포맷 전환 및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

□ 초격차 선도 인재·기술 확보

○ (핵심인재 양성·유치) SW 중심대학을 AI 중심대학으로 전환·확대(30개), 대학·대학원 간 패스트트랙 운영 및 해외인재 유치(AI 우수신진연구자 200명 등)

- (융합인재 양성) 다양한 산업 수요 기반 AX 인재 양성을 위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및 ‘산업AI 아카데미’ 확대, AX대학원 설립 추진(15개)

○ (차세대 AI원천·상용화기술 확보) 글로벌 수준의 AI모델 개발·확산(오픈소스化) 및 저전력·고성능 AI반도체, 피지컬AI 등 차세대 AI 선도기술 확보

□ 산업·지역 AI 확산 및 AI 스타트업 육성

○ (산업AI 전환 촉진) 제조기업의 AI팩토리 전환, 중소기업 대상 AI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서비스업(법률·의료 등)의 AI 전환 지원

- AI 기반 자율차·UAM·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AI 전환 촉진

○ (지역AI 전환 지원) 지역특화산업의 AI전환거점인 광역 단위 AI혁신거점을 구축하고, 첨단 산단을 AI로 전환하는 AX실증산단(지원프로그램 집적) 조성

○ (혁신AI스타트업 육성) AI혁신펀드 운영 및 성장 사다리 지원(장기, 대규모 지원), 예비· 초기 창업가 AI창업패키지 등 AI 창업, 스케일업 지원

실행전략 2 (국민) AI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사회

□ 전 국민 AI 역량 강화

○ (**미래인재 양성**) **모든 학교에서 AI를 배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AI 기반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AI 인재 양성

- **AI 중점학교 확대**, **STEAM 교육 내실화** 등으로 초중고 AI 교육 강화
- **대학(원)의 AI 융복합 교육과정 확산** 및 산업 수요에 기반한 연구 지원

○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 재직자·구직자 대상 AI 관련 **비학위 교육과정 확대** 및 **AI·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대상 **역량 강화** 추진

□ 더 인간다운 복지·돌봄

○ (**복지 사각지대 해소**) AI 기반 위기가구 **선별모형 고도화** 및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 제고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 서비스 접근성 제고**

- (가칭)**「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 수립, 향후 5년간 추진할 **핵심과제** 제시
- **AI 상담·복지멤버십**을 통해 **신청 없이도 개인별 맞춤형 복지 설계·추천**

○ (**스마트 돌봄**) **AI 로봇, AI 상담** 등 AI 기술을 적용한 **취약노인 대상 돌봄** 확대

- 유망 돌봄 기술 대상 **R&D 투자 강화** 및 **돌봄 현장의 디지털 전환** 지원

□ AI와 함께 일하는 직장

○ (**AI 전환 대응**) **AI 직업 훈련 강화**, **AI 전환**에 따른 **고용영향 사전평가** 및 **업종별·직업별 세부 고용안정 지원방안 마련·시행**

- **AI 전환**에 따른 노동인권 침해, 불공정한 노동조건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가칭)**「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개발

○ (**AI 고용서비스 고도화**) **AI·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의 취업과 기업의 채용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획기적 개선

* ▲(구직자) 직업탐색에서 역량분석·개발, 직업훈련·일자리 추천까지 AI 원스톱 서비스
▲(구인기업) 구인공고 작성부터 채용 확률, 인재 추천까지 AI 맞춤형 서비스

실행전략 3 (정부) AI로 일 잘하는 정부

□ AI 기반 재난·안전 예방·대응 강화

○ (**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 **홍수·산불** 등 재난 예방·대응에 **AI기반 실시간 감시 체계 적용·강화**, **AI CCTV** 등 **지능형 관제체계 추진**

- AI 활용 **싱크홀 예방** 및 **터널 화재사고** 실시간 대응 등 **건설안전 관리체계** 구축, AI 기반 **항공보안 위협정보 시스템** 구축 및 **철도 관제** 도입 등 **교통안전** 강화

□ 세계 1위 AI 정부 실현

○ (**공공AI 대전환**) 납세·법무·복지 등 **대국민 서비스**를 **AI**로 **혁신하는 30대 핵심과제 추진** 및 **정부·지자체**가 **AI**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AI 혁신제품 공공조달 도입**, 수요예보제 등 **공공수요**를 마중물로 **국내 AI 기업 성장 지원**, **공공데이터**를 **AI학습·활용**이 **용이한 방식***으로 개방·지원

* ▲ AI가 판독 가능한 문서 형식 사용 ▲ 가명·익명처리 ▲ 합성데이터 생성 지원

○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AI 모빌리티·물류·건축·에너지** 등 도시서비스 제공

□ AI 융합 기반 제로리스크 사회 구현

○ **AI**로 금융·식량·재난 등 **잠재 위험**을 분석해 **사회 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주도하는 '**제로리스크 사회 프로젝트**' 추진

< AI 융합 기반 제로리스크 안전 사회 구축 프로젝트(안) >

분야	프로젝트
금융	■ AI가 소비자의 지출패턴과 경제 흐름을 분석하여 맞춤형 금융상담을 제공하는 등 AI 기반 개인금융지원시스템(FDSS)으로 포용금융안전망 구축
식량	■ 기후·토양·해충 데이터를 종합하여 작황 상황을 예측하고 선제 대응 지원
재난	■ 위성, 센서, 기상, 소셜 데이터를 융합해 재난 위험 조기 경보 및 선제적 대응 추진

□ AI로 튼튼한 첨단 강군 육성

○ (**국방AI 도입 확대**) AI 신속개발·활용을 위해 **국방 데이터 관리·보안 체계를 개선**하고, 맞춤형 **획득 프로세스 마련** 및 **인프라 투자 확대**

- 전장, 운용, 인사관리 등 **국방 전 분야**에서 **AI 활용 촉진**

실행전략 4 (기반 조성) 안전한 '모두의 AI' 기반 조성

□ 모두의 AI 활용 환경 조성

○ (**'모두의 AI' 기반 구축**) **누구나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통합 환경**을 **제공**하고, 회계·매장관리 등 **국민·소상공인 대상 AI서비스 발굴·활용** 지원

○ (**AI 안전·신뢰 확보**) **딥페이크** 등 **AI 오남용 대응**을 위한 **판별시스템 구축** 등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 **AI 시대에 대응**하는 **정보보호제도 재편**, **보안시스템 구축** 등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피싱·스미싱**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 마련

○ (**개인정보 안전·활용 체계 확립**) 반복되는 **대규모 침해사고**로부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예방 조치** 및 **피해보상 강화**

□ 국가 AI 거버넌스 정립

○ (**국가AI위원회 역할 강화**) **AI 관련 예산·투자**에 대한 **범국가적 파악·관리**, 다부처 AI **정책·사업의 총괄·조정** 등 **실질적 AI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법제·규제 정비**) **진흥에 중심**을 두고 **AI기본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규제 샌드박스**(AI트랙 신설) 및 **국가AI위원회**를 통해 **AI 규제 선제적 발굴·개선**

- 고품질 **원본데이터**(개인정보 포함) **활용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AI 특례**) 도입

□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확보

○ (**글로벌 AI협력 강화**) 글로벌 파급력 있는 AI모델 개발, **글로벌 AI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산업·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 추진

* 국제사회에 글로벌 AI기금 조성을 주요 의제로 하는 (가칭)'글로벌 AI 컨소시엄' 제안, 태평양·인도·중동 국가 등이 보유한 데이터 공유·협력, AI 서비스 공동 개발·사용 등

- **AI·디지털 분야 통상** 활성화를 위한 **안전한 데이터 이전 수단** 마련

- 우리 **AI 기술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하고, 글로벌 **AI 규범·표준 정립 선도**

4. 주요 과제별 추진일정

과제명	추진기한 '25	'26	'27	'28	'29	'30	주관
[1] AI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 GPU 5만장 신속 확보	■	■	■	■			과기정통부
· AI 학습용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	■	■				과기정통부 전부처
· AI-Native 6G 시범서비스 개시	■	■	■	■			과기정통부
· AI 중심대학 신설 및 전환		■	■	■	■	■	
· NPU·PIM·뉴로모픽 등 AI반도체 핵심 원천·상용화 기술 확보	■	■	■	■	■		과기정통부 산업부
· AI 창업패키지 신설·도입		■					중기부
· AX 실증산단 구축	■	■	■	■			산업부 국토부
· 레벨4 자율주행차 출시 및 실증도시 인프라 구축	■	■	■				
[2] AI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사회							
· AI 디지털 배움터 운영		■	■	■	■	■	과기정통부
· AI 활용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위기가구 발굴 역량 강화 로드맵 수립	■	■					복지부
· AI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돌봄 확대	■	■	■				
· AI 전환에 따른 고용영향 사전평가 실시	■						고용부
· 업종별·직업별 세부 고용안정 지원방안 마련 및 시행		■	■	■	■	■	
[3] AI로 일 잘하는 정부							
· AI 정부 대전환을 위한 30대 핵심과제 선정	■						행안부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개통	■						행안부 과기정통부
· AI 혁신제품 공공조달 촉진 방안 마련	■						조달청
· AI 융합 기반 제로리스크 사회 프로젝트 전략 수립 및 기획	■	■					과기정통부
· AI 등 활용 홍수 예보 체계 개선	■	■	■	■	■	■	환경부
· AI 기반 지하 안전 관리 체계 구축	■	■	■	■	■		국토부
[4] 안전한 모두의 AI 기반 조성							
· 진흥에 중심을 둔 AI기본법 하위법령 마련	■	■					과기정통부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AI 특례 도입)	■						개보위
· 국민·소상공인 대상 AI서비스 발굴		■					중기부
· AI 시대 대비 정보보호 종합계획 수립	■						과기정통부
·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딥페이크 판별시스템 구축	■	■					방통위
· 글로벌 AI 공동투자기금 조성·운영			■	■	■	■	과기정통부
· AI 시범도시 우선사업지구 조성	■	■	■	■			국토부
· 국가AI위원회 역할 강화	■						범부처

4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함께 달성

1. 추진배경

□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대전환**은 **시대적 과제**이자 **경제성장**의 핵심 전략

□ **전력망 부족**으로 반도체, AI, RE100산단 등에 **재생에너지 공급 차질**

□ 기후위기는 **국민과 경제사회 전반을 위협**하고, 탄소중립은 **추진동력이 약화**

> ☞ 초고속 통신망에 이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능력 제고

2. 과제목표 및 전략체계도

□ **에너지고속도로를 신속 건설**하여 산업의 RE100 달성과 경제성장 벨트 완성

- ○ **기후테크**와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산업화
- ○ **햇빛·바람 연금, RE100산단** 등으로 지역 균형성장과 소득 증대에 기여

□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책임있는 달성과 2030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 제시

- ○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탄소 감축**과 탈플라스틱 등 **순환경제 활성화 기여**
- ○ 기후위험에 대한 **경제사회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취약계층과 지역**을 보호

□ **사회적 합의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탄소중립 이행력 확보

< 전략체계도 >

비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함께 달성**			
목표	**에너지고속도로로 성장하는 경제**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탄소중립 추진**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
실행 전략	**①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 및 기후테크 산업 육성**	**②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③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	**④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및 정의로운 전환**
	전력망 신속 건설과 전력시장 혁신 등으로 경제성장 달성	재생에너지 확대, 햇빛·바람 연금·RE100산단으로 지역균형 성장	2030 NDC 달성을 위한 분야별 조치와 이행기반 강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산업·인프라 전환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3. 실행전략별 주요 내용

실행전략 1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 및 기후테크 산업 육성

□ **전력망 신속 구축으로 지역균형 성장과 첨단산업 지원**

○ '30년대 **서해안 전력망** 구축, '40년대 **한반도 U자형 전력망*** 완성

* 서해안-남해안-동해안을 잇는 HVDC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 **새만금-서화성 선로**(HVDC) **조기구축** 및 **HVDC 기술개발 추진**
- 재생e 수용을 위한 서해안 **육상 에너지고속도로***도 조기·적기건설 추진

* 신계룡-북천안, 광양-신진천, 신고창-고덕#3, 새만금#2-신서산, 군산-신기흥

- 총리 주재 **전력망 위원회** 통한 **전력망 건설 갈등 관리·소통 추진**

○ 전력망 구축에 더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계통안정화 설비를 확충**하여 재생에너지의 **호남권 접속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철회**

○ **AI 활용**하여 **전력시장과 전력망을 효율화**하고, AI기반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 및 에너지데이터 공개 확대**

- **AI데이터센터 지방 배치**로 전력수요 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기후테크 산업 육성과 전력시장 혁신으로 신성장동력 창출**

○ 전력수급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시장** 도입 및 재생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등 기후테크 산업 육성**

-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개설 확대**

* '25년 제주 68MW, '26년 육지 500MW·제주 40MW 구축

- 수요반응(DR) 제도* 간소화, **보상체계 보완**으로 **시장참여 유인 강화**

* 전력수요가 높고 공급이 부족할 때 전력수요자가 소비를 줄여서 보상받는 제도

- 소규모 전원들을 통합(태양광 + 풍력 + ESS)하여 하나의 발전소로 입찰하는 **가상발전소**(VPP) **활성화**
-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 히트펌프** 산업 육성

○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 풍부 지역** 등에 **산업체 이동** 유인 제공

○ **공정한 전력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전기위원회의 전문성**과 인허가 등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

실행전략 2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 재생에너지 확대 및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 **재생에너지 목표('30. 78GW)를 상향**하는 **로드맵*** 수립·이행

* 제6차 신재생기본계획('25.下), 2035 NDC 계획 수립,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 **계획입지 발굴, 집적화단지 신속 조성, 인허가 의제** 처리 등을 통한 **서남해·제주 해상풍력 단지 구축**
- 산단·영농형·수상·주차장·지자체 소유 공공부지 등 **태양광 입지 다각화**
- **조력·수열** 등 재생에너지 다각화, **'40년 석탄발전 폐지** 추진

○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를 **계약시장으로 단계적 개편**하고 **소규모 사업자 보호장치도 마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혁신

* 이격거리 완화·폐지 추진, 전파영향평가 기준 완화, 풍황계측기 설치허가 개선 등

○ **태양광 산업생태계 복원·강화, 해상풍력 공급망 육성** 등 **산업기반 강화**

- **탠덤 태양전지** 등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R&D·실증·양산** 등 지원
- **해상풍력 터빈·기자재 기술개발, 설치선 건조·전용항만 설치**

□ 햇빛·바람연금 확대*,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등을 통한 지역소득 증대

* 전력망 인근 지역, 인구소멸지역, 재생에너지 풍부 지역 등

○ 성공사례 분석을 통한 **주민 주도의 태양광·풍력 사업**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육성·활용을 통해 주민 수용성 제고

* 재생에너지 모집·인허가·설치·유지보수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마을·아파트 단위 「**태양광(PV) + 에너지저장장치(ESS) + 히트펌프(HP)**」 패키지로 구성된 에너지자립 시범사업 실증 추진

□ RE100산단 구축으로 전력수요 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시범사업 후 전국으로 확산**하고, 조성 중인 **첨단 국가산단**(17개) **중 기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RE100 달성 지원**

○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RE100산단 조성 특별법」 제정**

- 기업유치를 위한 **분산형 모델**(재생e 직접 거래) 및 **재생e 요금** 강구
- 교통·용수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기업 분양가 부담 완화**
- 기업투자와 인재유치 위한 **정주·교육 여건조성** 및 **신도시 기반** 마련

실행전략 3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

□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책임 달성 및 이후 감축 로드맵 정립

○ 2030 NDC('18년 대비 40% 감축) 책임 달성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

* 엄격한 배출허용 총량 + 유상할당 비율 상향, 기후대응기금 확충·재편 등 이행 강화

○ 2030 감축목표보다 상향된 2035 감축목표 수립('25.下), 2050 온실가스 장기 감축 경로('31~'49)를 마련하여 **「탄소중립기본법」**에 반영

○ 탄녹위를 실효적 의사결정 기구로 개편, 탄소중립 **시민 참여** 확대(기후시민회의), 과학적 기후정책 권고·자문 체계 마련 등 **거버넌스 개편** 추진

□ 주력 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

○ 산업 구조 탈탄소화 및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지원할 **「탄소중립 산업법」** 제정 추진

○ 철강·석유화학 등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가속화를 위해 감축사업 재정지원 확대, **전환금융** 도입, 업종별 탄소감축 R&D 운영·확대

○ 「기업의 ESG 도입·확산 지원법」 제정 추진, 다배출업종의 글로벌 탄소규범 대응 원스톱 지원 등 ESG 활성화

□ 건물·수송·농업 분야 탄소 감축 강화

○ 신축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확산*, 기축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이자지원 재개, 직접지원 사업 검토 등), **히트펌프** 보급 확대 등 추진

* 공공건축물 ZEB 3등급 의무화 추진, 민간건축물 설계기준을 ZEB 5등급 수준으로 강화

○ 차종별·수요자별 여건을 고려한 **내연차 퇴출전략** 수립, 내연차의 실질적 감축을 위한 전환지원금 신설, 임기 내 국내 **전차종 전동화** 모델 출시 유도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추진

□ 탈플라스틱 추진과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 플라스틱 감량·생산·회수·재활용 전주기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고, 산업부문 **순환경제 3×3**(재제조·재사용·재자원화 × 생산·소비·회수) **전략** 수립

* (감량) 다회용품 확대, (생산) 에코디자인, (회수) EPR 확대, (재활용) PET 재생원료 의무율 강화

○ 기업·산단 **순환경제100 선언** 확산, 규제샌드박스 운영, 순환경제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R&D** 확대·신설 등 순환경제 확산 추진

실행전략 4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및 정의로운 전환

□ 강력한 기후적응 컨트롤타워 구축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개발, 사회·경제적 기후위험 영향 **통합평가 모델** 및 **기후위험지도** 구축 등 과학적 감시·예측 기반 마련

○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추진('25),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등 범정부 적응대책 추진체계 확립

□ 기후위기에 대비한 국가 인프라 대전환

○ (**하천**) 최근 승격된 **국가하천**(20개 구간, 467km) 및 **배수영향구간**(지방하천) **제방 및 배수시설** 등 정비 추진*

* 국가하천 제방정비 비율 : ('24) 79% → ('30) 90%

○ (**댐**)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가능최대홍수량**, 안전성 검토, 이를 반영한 댐 설계기준 강화 및 댐 보강 등 검토

○ (**철도**) 구조물 진단·평가, 개량·보수, 첨단기술을 활용한 차량 및 선로 관리를 통해 이상기후로 인한 탈선 등 **대형 열차사고** 사전 예방

○ (**항만**) 재해취약 **항만시설** 정비, 연안개발 사업의 침식·침수 영향 사전 검토 의무화 등 **재해예방 체계*** 구축

* 관리해안선 설정, 재해위험이 높은 연안육역 토지를 매입하여 완충구역 확보 등

□ 사회·경제 전 부문의 기후적응 역량 강화

○ 산업계 업종별 **기후변화 대응 매뉴얼** 보급·시행, **기후적응형 고품질 신품종** 육성·보급, 안정적 농·수산물 수급·유통 등 산업 적응력 강화

○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 **기후보험**(정부·지자체 지원) 도입 추진, 이상기후 시 온열질환·감염병 응급 조사·대응

□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지원

○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통해 탄소중립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연구개발·신산업육성 등 지원

○ 석탄발전 폐지 및 대체발전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로 인한 고용·지역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법」** 제정 추진

4. 주요 과제별 추진일정

과제명	추진기한 '25	'26	'27	'28	'29	'30	주관
[1]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 및 기후테크 산업 육성							
· 서해안 및 U자형 전력망 구축			▬	▬	▬	▬	산업부 해수부 기재부
· HVDC 핵심기술개발	▬	▬	▬				산업부
· AI 기반 차세대 전력계통운영시스템 개발		▬	▬	▬	▬	▬	산업부 과기정통부
· ESS 중앙계약시장 및 VPP 제도 설계	▬	▬	▬	▬	▬		산업부
· 지역별 요금 설계안 마련	▬	▬					산업부 지자체
[2]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 제6차 신재생기본계획 수립	▬						산업부 환경부
·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개편	▬	▬					산업부
· 햇빛·바람연금 확대 및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	▬	▬	▬	▬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 해상풍력 설치선 건조·전용항만 설치		▬	▬	▬	▬	▬	산업부 해수부
· RE100산단 특별법 제정	▬	▬					산업부 국토부 교육부 환경부
[3]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							
· 2035 NDC 계획 수립	▬						환경부 국조실
· 기후대응기금 확대·개편	▬	▬	▬	▬	▬	▬	기재부
·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	▬					환경부 산업부
·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마련 및 착수	▬	▬					금융위 기재부 환경부 산업부
· 기축건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	▬	▬	▬	▬	▬	국토부
·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	▬	▬	▬			환경부 산업부
[4]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및 정의로운 전환							
· 강력한 국가 기후적응 컨트롤타워 구축	▬						환경부 기상청
· 기후위기에 대비한 국가 인프라 대전환	▬	▬	▬	▬	▬	▬	환경부 행안부 국토부 해수부
· 사회·경제 전 부문의 기후적응 역량 강화	▬	▬	▬	▬	▬	▬	산업부 농식품부 고용부 금융위 질병청
·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운영	▬	▬	▬	▬			고용부 산업부

5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1. 추진배경

□ 급속한 고령화 및 사회적 양극화, 지역 간 의료자원·돌봄서비스 격차, 장시간 노동·임금체불 지속 등에 따라 **국민의 삶 전반의 불안정이 심화되는 추세**

☞ 국가가 돌봄·소득·의료·일-삶의 균형·일터권리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전환 필요**

2. 과제목표 및 전략체계도

□ **누구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돌봄·소득·의료·주거·이동·통신·에너지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

○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및 연금제도 개선, 진료권별 책임의료기관 100% 확보,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70% 완화 등

○ 연간노동시간 OECD 평균 도달 및 임금체불 50% 감축, 정년연장, 육아지원 등

○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교통물류 사각지대 해소, 주거·교통비 경감 등

< 전략체계도 >

비전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 실현**						
목표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 생활 유지**		**의료비 부담 완화, 진료권별 책임의료기관 100% 확보**		**실근로시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 임금체불 50% 감축**		**주거안전망 구축 및 교통접근권 확대**
실행 전략	**1 통합 돌봄체계 구축**	**2 소득안전망 강화**	**3 국민의 건강권 보장**	**4 일·삶의 균형,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5 임금체불 근절 일터권리 보장**	**6 주거·교통 등 기본서비스 보장**	**7 기본사회 실현 위한 기반 마련**
	재가서비스 확충, 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기초생활보장 제도 강화 및 연금제도 개선	공공병원 혁신·확충, 일차의료 강화, 간병비 급여화,	노동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 정년연장	임금체불 대폭감축, 노동존중 사회 실현	주거안전망 구축, 편리하고 부담없는 교통서비스 추진	추진·지원 체계 마련

3. 실행전략별 주요 내용

실행전략 1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구축

□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실현**

○ (**통합돌봄체계 구축**)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이 시설·병원에 입소(입원)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마련**

- **사업** : 「통합돌봄지원법」 시행('26.3)에 맞춰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전국 시행**
- **대상** : 입원·입소 경계선에 있는 노인부터 장애인·정신질환자까지 확대

○ (**서비스·인프라**) **재가서비스 다양화** 및 **양적 확대, 제공기관 확충 추진**

- **장기요양** : **통합재가기관** 확대, **중증 재가 서비스 월 이용한도액** 단계적 인상,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신규서비스 도입
- **재가의료** : 재택의료센터 확대, 재택간호센터·생애말기케어 도입
- **일상생활돌봄** : 가사·식사·이동지원 등 일상생활 서비스 확대
- **노쇠예방** : 경로당 순회 운동처방 등 적극적 건강관리 및 스포츠 활동 지원*

* 스포츠클럽 세대별 프로그램(노인형 포함) 지원 확대, 시니어형 국민체육센터 확충

- **퇴원환자** : 단기거주 지원하는 지원주택('중간집') 운영으로 사회적 입원 최소화

□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권리 기반 마련**

○ (**장애인 권리 법·제도 기반 마련**)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법」** 시행('27.3) 등 장애인 권리에 대한 법적 기반 구축

-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 실시**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주택·일자리·활동지원 등 서비스 연계 지원

○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을 목표로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1.5만명에서 **3만명**까지 확대

- **최중증 대상 통합돌봄 지원 확대** 등 최중증 지원 내실화

○ (**개별맞춤형 지원 확대**)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대대적 확충

- ▲건강권 **장애인주치의, 장애친화 의료인프라 확대,**
  ▲소득보장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장애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연금액 차등),
  ▲이동권 **특별교통수단** 국비지원 **확대**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시설 **확대**

실행전략 2 국민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소득안전망 강화

□ 저소득층 소득안전망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확대** 및 **선정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수준 제고

-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단계적 상향**
- **의료급여 : 부양비*** **폐지** 및 부양의무자 기준 간소화로 **대상자 확대**, **통합돌봄과 연계**하여 의료급여가 **적재적소에 지원**되도록 **정비**

*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

- **자활 :** 근로능력·연령 등 개인별 역량에 따른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마련, **자활기업 창업지원 확대** 등 **탈수급 지원 강화**

○ (**상병수당**) **상병수당 본제도** 도입을 통해 질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

□ AI기반 복지시스템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위기가구 발굴**) AI 등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상담**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선별의 정확도 제고**

* 사각지대 발굴대상 20만명 → 위기정보 입수대상 900만명 + 생성형 상담

- 복지멤버십에 기반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추천으로 신청주의에 따른 사각지대 최소화 및 복지·돌봄·고용·금융 등 복합지원 강화

○ (**위기가구 지원 확대**) 위기가구가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긴급복지 지원 선정기준**(소득·금융재산 등) **완화 및 지원금 인상**

□ 모든 사람에게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제도 개선

○ (**청년**)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3개월간 보험료 지원, 군 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여 청년층의 **실질 가입기간 제고**

- **출산 크레딧** 사전지원(30%)으로 **미래세대 부담 경감** 및 여성 수급권 강화

○ (**노인**)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을 상향**하여 일하는 노인의 소득 보장,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의 **감액비율 단계적 축소**

○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 대상 **보험료 지원 확대**

실행전략 3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장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 (**공공의료체계 강화**) (중앙)국립중앙의료원–(권역)국립대병원–(지역)지방의료원·보건소 간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 진료권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권역 거점병원**으로 체계적 육성

○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필수의료 집중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공공정책수가 신설·확대**,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및 **법령 제정** 추진

- 지역의료 자원분석을 토대로 의료 취약지역을 집중 보상하는 **▲지역수가 제도 신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 (**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신설**, (가칭)**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지역의대 신설** 추진 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 공고화**

○ (**응급의료체계 강화**) 중증·응급질환 대응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구축

□ 일차의료 기반 건강·돌봄 강화

○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체계 구축**) 다학제팀 기반의 포괄적 건강관리 제공과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 단계적 확대**

○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자살예방서비스 대폭 확대, 집중치료 병원·낮병동 신설 등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 인프라 확충**

- 마약·알코올 등 **중독성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 **치료·회복체계 강화**

□ 의료비·간병비 부담 완화

○ (**의료비 부담 완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희귀·난치질환 치료비** 및 **비급여 의료비** 부담 완화

-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여 적정 진료·가격 전환 유도, 사전 환자 동의서 의무화

○ (**간병비 부담 완화**)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실행전략 4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

□ 일과 삶의 균형

○ (**노동시간 단축**) 범부처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시행, **포괄임금제 금지, 연차휴가** 활성화** 등 **노동시간 단축**으로 **쉼이 있는 일터** 구현

* 중앙·지방정부 주 4.5일 지원 시범사업, 실노동시간 단축법 제정·시행을 통해 노·사 자율 확산을 촉진하고 이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주4.5일제 추진

** 연차일수 확대, 사용시 불이익 금지, 시간단위 활용 허용 등

○ (**휴가·휴직 활성화**) 배우자 유·사산휴가 도입,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허용, 난임 유급휴가 확대로 **일**과 **가정**이 **공존**하는 **일터 조성**

- 저소득층 출산전후휴가급여 추가 지급,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금 인상 등 실질적 사용여건 개선

□ 정년 연장과 청년 노동시장 진입 지원

○ (**법정 정년 연장**)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을 추진**하고 세대상생방안 마련, 중장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확대·내실화

○ (**청년 구직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단계적 인상, 자발적 이직에 대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채용연계형 직업훈련 확대 등 **청년 구직 지원 강화**

□ 통합·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지원

○ (**산학 연계 직업역량 강화**) 급격한 **기술변화 적응**을 위해 학교와 산업 현장 연계교육을 확대하고 **국민역량계좌제 도입** 등 **전국민 직업역량 강화**

○ (**안정적 고용서비스 제공**) 공공 고용서비스 연계·통합 및 AI 활용 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혁신**, 노동취약계층 노동복지카드 도입 등 **안전망 확충**

○ (**지역일자리 성장 지원**) **초광역·기초 단위 연계 지역일자리 창출** 촉진, 사회적가치 창출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실행전략 5 공정 임금 실현과 일터 기본권 보장

□ 임금체불 근절, 공정 임금 실현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

○ (**노동자 생존권 보장**) **근로감독 혁신***, 하도급 임금 구분지급제 도입,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등 노동자 생존권 보장

* 예방감독 중심, ILO 수준 감독 확대, 근로감독관 증원, 중앙·지방 협력 등

○ (**노후소득 보장**)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 **사업장·종사자 확대** 등 임금체불 구조적 방지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

○ (**공정한 임금 보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처우 금지** 법제화,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 등으로 **일한만큼 공정한 보상**

* 도급제 최저임금 심의·지원, 특고·플랫폼·프리랜서 최저보수제 마련 및 시행

□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일터 기본권 보장

○ (**노동자 권리 보장**) **일하는 모든 노동자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 5인 미만·초단시간·근속 1년 미만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 (**비정규직 권리 보장**)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분쟁시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공공부문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등 **비정규직 권리 보장**

○ (**취약노동자 구제 강화**) **노동법원 설립**(법무부), 노동위원회에 **특고·플랫폼 등 분쟁조정기능** 부여 등 **취약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문화 정착

○ (**노동 존중문화 확산**)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실질화

○ (**노동조건 개선**) 공공부문 초기업 단위 자율교섭체계 구축, 집단교섭 모델 개발·확산,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 도입으로 **업종·산업 전반의 노동조건 개선**

□ 대화와 참여의 노사관계 구축

○ (**노동자 소통 활성화**) 경사노위 활동 개선, 산업·지역·업종별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노동자대표위원회 상설화 입법으로 **노동자 참여 제도화**

실행전략 6 주거·교통 등 기본생활서비스 보장

□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 (**공적주택 공급 확대**) 서민 주거안정 위해 **공적주택 5년간 110만호 공급**

- 신혼부부·청년도 부담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고,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공적임대 주택**을 **적극 확대**

-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신속 인허가**를 지원하고, 도심 등 **우수입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사업성** 제고, **노후청사·국공유지 등 활용 공급** 추진

□ 주거안전망 구축으로 주거지원 강화

○ (**주거 안전망 구축**) 신혼부부·고령자·1인가구 등 수요대상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주거 취약계층 등을 위한 **두터운 주거 안전망** 구축

- **청년월세지원** 등을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공급 등 신혼부부 **내집마련 지원**, **고령자복지주택·실버스테이 年 5천호 공급** 등 추진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주거급여**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고, 촘촘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처벌강화, 안전계약컨설팅 등 사전예방 추진

□ 편리하고 부담없는 기본교통

○ (**인프라 확충**) 지방권 광역철도 및 고속철도망 등 **균형 잡힌 교통인프라** 확충

- **대도시권 혼잡 완화**를 위해 도시철도, BRT, 광역버스 등을 확대하고, **교통취약지역**은 수요맞춤형 교통수단(DRT) 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원** 강화

○ (**대중교통비 절감**) 대중교통비 지출이 큰 **일반 국민, 청년, 어르신** 등 대상으로 대중교통비를 획기적 절감할 수 있는 (가칭)**정액패스** 신규 도입

□ 누구나 안정적으로 누리는 통신·에너지 기본서비스 지원

○ (**보편적 통신서비스**) 전국민이 기본적 통신·디지털 서비스를 부담없이 이용하도록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

- 데이터안심요금제 도입, 최적요금제 주기적 고지 의무화 등 부담완화 정책 추진

○ (**에너지 기본권 보장**) 저소득층에 에너지바우처 등 비용 지원, 효율 개선 사업,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개선

* 주거 형태별 태양광 등 발전설비 지원, 공공부지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등

실행전략 7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 추진체계 마련

○ (**거버넌스 구축**) 기본사회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 추진 **거버넌스** 및 **민관협력 통합 지원체계 구축**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장

- 국민이 행복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 및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가칭)**기본사회위원회** 출범

- **기본사회 종합계획** 및 **전략과제** 수립, 주요정책 추진상황 점검, 시민사회와의 협업체계 구축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한 **기본사회 비전 공유·확산** 추진

○ (**운영계획 마련**)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의 운영(안)** 마련

- 추진체계 입안을 위한 실무준비조직인 **기본사회 추진단**(TF)을 설치하여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에 필요한 법안 마련 및 행·재정적 지원

- 분야별 기본사회 측정 지표 개발, 해외사례 분석 및 지역사회 내 주민자치조직 등과의 **민관협력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부처별 기본사회 관련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우수사례** 발굴·확산

- 기본사회를 글로벌 **브랜드화**하기 위한 **프로젝트 및 국제포럼** 추진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추진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양극화 완화,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 **경제·사회 문제 해결의 기제**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연대경제의 역할** 강조

- 사회연대경제의 정책 지원 및 협업 제고를 위한 기본법 제정 등 **법적 기반** 마련, 민관협력 통합 지원체계 구축으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경쟁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추진

4. 주요 과제별 추진일정

과제명	추진기한						주관
	'25	'26	'27	'28	'29	'30	
1 통합돌봄체계 구축							
·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실시							복지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복지부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본사업 실시							복지부
2 소득안전망 강화							
·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복지부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추진							복지부
· 군크레딧 기간 전체 확대 및 출산크레딧 사전지원							복지부
·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							복지부
3 국민의 건강권 보장							
· 지역의사제 도입 및 (가칭)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복지부
·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도입							복지부
·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4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시행							고용부
· 포괄임금제 금지, 연차휴가 활성화							고용부
· 저소득층 출산전후휴가급여 추가 지급							고용부
·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추진							고용부
· 구직촉진수당 단계적 인상							고용부
5 임금체불 근절과 일터 권리 보장							
· 범부처 TF 등을 통해 임금체불 합동 대응 방안 마련							고용부
·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고용부
· 일하는 모든 노동자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시행							고용부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고용부
· 초기업 단위 교섭 활성화							고용부
6 주거·이동 및 기본생활서비스 보장							
· 공적주택 세부 공급방안 마련							국토부
·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국토부
· 대중교통 정액패스 사업 준비·시행							국토부
7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 기본사회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							행안부
·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기재부

6 인구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 · 균형 성장

1. 추진배경

□ 출생아 수의 가파른 감소,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 지역 간 인구 불균형 가속화 등 **인구변화의 사회경제적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음

○ 그간 인구정책은 **단기적 출산율 제고에 치중**하여 인구문제의 근본적 원인 해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한계

□ 인구구조 변화는 복지·교육·고용 등 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산업·국방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므로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한계

○ 특히, 수도권 인구집중 등 인구 불균형은 자치단체의 존립에도 위협적

☞ **인구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2. 과제목표 및 전략체계도

□ **인구위기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실현**

○ 저출생·고령화, 인구 불균형 등 인구위기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 전략체계도 >

비전	**인구위기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실현**		
목표	**누구든 원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	**인구변화 적극 대응으로 국민의 삶의 질 유지**	**어디서든 살 수 있는 국가의 기초 구축**
실행 전략	**1 저출생 극복** ◦ 출산·육아 지원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양육 친화적 문화 확산 ◦ 공교육 기반의 돌봄·교육 체제 마련 ◦ 청년 기본생활 보장	**2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인구 거버넌스 기능강화 방안 마련 ◦ 선제적인 사회·경제적 제도 정비 ◦ 혁신과 성장을 통한 초고령사회 대응	**3 지역인구 불균형 완화** ◦ 국가 균형성장 거점 육성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지속가능 성장 견인 ◦ 교통 인프라 확충 및 교통 서비스 격차 해소 ◦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인재 양성

3. 실행전략별 주요 내용

실행전략 1 저출생 극복

□ **출산·육아 지원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프라** 구축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 난임 예방·치료, 공공조리원 설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임산부·영유아 대상 건강관리 사업 확대
-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부모교육 내실화로 가정 양육역량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서비스 역량 제고로 안심 육아환경 조성

□ **일·생활 균형 강화와 맞돌봄 지원으로 양육 친화적 문화 확산**

○ 부모와 일터 및 **국가가 출산·육아 부담을 함께 분담**하는 제도 설계를 통해 육아부담 경감 및 일-가정 양립 실현

-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저소득노동자 출산전후휴가 프리미엄 급여,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인상 등 실질적인 육아휴직 사용권 강화
-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급여 인상, 배우자 유사산휴가,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허용으로 맞돌봄 문화 확산

□ **공교육 기반의 돌봄·교육 체제를 마련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

○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보육 서비스**로 교육기회 균등 및 공교육 신뢰 제고

- 기초학력 진단체계 강화, 성취수준별 맞춤형 학습지원과 함께 기초학력 전담교원 양성,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
-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으로 학교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교육 기반의 돌봄·방과후 체계 완성

□ **청년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으로 사회적 주체로의 성장 지원**

○ 청년세대 대상 **주거·취업 지원**으로 자립기반 강화 및 안정적 생활 보장

-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과 신혼가구 인센티브 제공으로 주거 안정 도모
- 청년미래적금 도입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및 청년창업 인센티브로 일할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적 안정 제고

실행전략 2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거버넌스 기능 강화방안 마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범위 확대 및 기능 강화

- 저출산·고령화 외에 경제인구 확대·외국인 정책 등 전반적인 인구 전략을 수립하고, 인구 관련 예산의 기획·조정 권한 강화

※ 위원회의 정책범위·기능 확대에 맞춰 위원회의 명칭도 (가칭)'인구전략위원회' 등으로 개칭

□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제도 정비

○ 사회변화에 따른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

- 돌봄 인력난에 대응하여 '수요 예측-인력 양성-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고립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태파악 및 대응정책 개발·추진

- 다변화되는 주거수요에 대응하여 고령친화 설계를 반영한 고령친화주택, 1인가구 생활패턴에 맞는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 만족도 제고

- 병력자원 감축에 대비하여 병력 절감형 군구조 설계 등 군구조 개편과 함께 여군비율 확대, 비전투임무 민간자원 활용 활성화로 정예 군사력 육성

○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한 **고용·생산성 제고방안** 마련

- 단계적 정년 연장, 재취업 지원 등 중장년 일자리 안전망 구축은 물론 전 생애 직무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개방형 평생·직업교육체계 조성

- 노동시장 전망에 맞춰 분야·직능수준별 외국인력의 수급 설계·관리 및 근무·주거환경, 한국어교육 등 특화지원을 통한 통합지원 로드맵 수립

□ 혁신과 성장을 통한 초고령사회 대응

○ 든든한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혁, AI 등 **혁신기술과 결합**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통해 돌봄부담 경감 및 신규시장 선점효과 확보

-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등 **다층 연금체계 구축**으로 노후소득 보장 강화, ESG 원칙의 대체투자 등 전 **자산군 확대 적용**으로 인구변화 대응 지원

- AI 로봇 등 은퇴세대 수요에 맞는 Age-Tech 기반 고령친화산업 육성으로 스마트 돌봄을 확대하고, 노인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강화

실행전략 3 지역인구 불균형 완화

□ 실질적 권한 이양 및 포괄적 지원으로 국가 균형성장 거점 육성

○ **권역단위 성장전략**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 및 국가 성장동력 다양화

- 5극 초광역권 및 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지역자율·주도적 성장 견인
- 광역교통망 연계와 함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기업의 지방투자·이전 지원 확대 등을 통한 혁신공간 조성으로 권역단위 특화발전 지원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활력 제고 및 지속가능 성장 견인

○ 수도권과의 **거리를 고려한 차등지원**으로 지역 간 실질적 기회·평등 보장,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전략** 수립으로 농산어촌 자생력 확보

- 지역소멸 위기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생활권 중심 집약형 도시(Compact City)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지속가능성 제고
-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위한 복합인프라 조성 등 재생프로젝트 추진, 지역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농산어촌 일자리 창출

□ 교통 인프라 확충 및 교통서비스 격차 해소로 지역 간 접근성 제고

○ 인구 이동 편의성 제고 및 지역 간 **연계·협력 기반이 되는 교통망** 구축, 국민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교통소외지역 이동수단** 확보

- 도시철도 확충,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으로 대도시권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철도망 확충 및 국가 간선도로망 구축을 통해 전국 주요 거점 연결
- 장거리 이동의 최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을 도입하고, 생활권 내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DRT) 확대

□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산업 생태계** 형성 지원 및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청년인구 이주·정착 유도

- ‘서울대 10개 만들기’(지역 거점국립대 육성 전략)로 국가균형성장 추진
-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교육특구로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지역과 학교가 상생하는 통합학교 기반 조성

4. 주요 과제별 추진일정

과제명	추진기한						주관
	'25	'26	'27	'28	'29	'30	
1 저출생 극복							
·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		▬	▬	▬	▬	▬	복지부
· 배우자 유사산휴가 도입 및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허용		▬	▬	▬	▬	▬	고용부
· 저소득노동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프리미엄 추가 지급			▬	▬	▬	▬	고용부
·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확대	▬	▬	▬	▬	▬	▬	교육부
· 청년이 필요한 구직지원(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등) 강화		▬	▬	▬	▬	▬	고용부
2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인구정책 거버넌스 개편	▬	▬	▬				복지부
· 군구조 개편 및 여군비율 확대			▬	▬	▬	▬	국방부
·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확대(공모선정)	▬	▬	▬	▬	▬	▬	국토부
·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 로드맵 수립·추진		▬	▬	▬	▬	▬	고용부
·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도입		▬	▬	▬	▬	▬	고용부
· 국민연금 대체투자 책임투자 적용 단계적 시행	▬	▬	▬				복지부
3 지역인구 불균형 완화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확대 및 맞춤형 투자협약제도 도입	▬	▬	▬				국토부
· 비수도권 맞춤형 지원을 위한 차등지원 기준 마련	▬	▬					행안부
·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	▬	▬	▬	▬	▬	▬	농식품부
· 수요응답형 교통(DRT) 확대 지원	▬	▬	▬	▬	▬	▬	국토부 농식품부
· 경쟁력 있는 거점국립대 육성		▬	▬	▬	▬	▬	교육부
· 교육특구 지정·운영		▬	▬	▬	▬	▬	교육부

7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

1. 추진배경

□ **(현황 및 진단)** 음악·영화·드라마 등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와 함께 노벨문학상, 토니상 수상 등 **우리 문화의 국제적 인정 및 영향력 확산**

○ 한류로 인한 K-푸드, 뷰티 등 소비재 수출 증대 및 방한 관광 확대 등 **K-컬처의 세계적인 영향력**은 타 산업과 분야로 **긍정적 외부 효과*** 유발

* 한류영향계수 : 해당 분야 수출 가운데 한류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24,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식료품(17.4%), 화장품(17.1%), 관광(13.9%)

□ **(문제점)** K-콘텐츠산업은 역대 최고 매출·수출액 달성했으나, 현재 **성장 둔화*** **추세**로 **새로운 혁신 동력 마련 위해 과감한 투자 필요**

* 최근 5년간 평균 6% 성장했으나, '23년 성장률은 2.1%로 조정국면 돌입

☞ ▲지속적 산업 성장과 도약의 핵심원천인 **글로벌 IP 콘텐츠·기업 집중 육성** ▲K-푸드·뷰티 등 **연관산업 전략적 지원** ▲재외 공관·문화원 등 **해외 네트워크 확충**과 더불어, ▲**K-컬처의 근간이 되는 문화예술·인문 창작 역량 강화 필요**

2. 과제목표 및 전략체계도

□ 한류의 원동력인 **K-콘텐츠 집중 육성**을 통한 **K-컬처 300조원 시대 개막**

□ K-컬처 및 **한류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 확산**으로 **K-컬처 파급효과 극대화**

□ **K-컬처 이니셔티브**를 위한 국제협력 고도화로 **글로벌 문화 리더십 강화**

□ **문화강국**의 토대를 구축하는 **자유로운 창작 환경 조성** 및 **인문·창작 역량 강화**

< 전략체계도 >

비전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목표	**K-컬처 시장규모 300조원**	**문화수출 50조원**	**국가이미지 긍정평가 비율 80%**
실행 전략	**1 K-컬처 시대를 위한 핵심 콘텐츠 육성**	**2 K-컬처 연관 산업 전략적 지원**	**3 K-컬처 이니셔티브 협력체계 고도화**
	IP 기반 콘텐츠산업 육성 및 K-컬처, 아트 세계 확산 지원	K-푸드, 뷰티, 관광 등 한류 연관 산업 연계 강화 민관협력체계 구축	K-이니셔티브를 위한 국제문화교류 강화, 해외 거점 및 저변 확대
	4 K-컬처의 근간, 문화예술·인문 창작 역량 강화		
	창작 인프라·예술인 복지 등 창작 환경 조성,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역량 개발, (가칭)'문화강국위원회' 등 정책인프라 마련		

3. 실행전략별 주요 내용

실행전략 1 K-컬처 시대를 위한 핵심 콘텐츠 육성

□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 기반 강화

○ (K-콘텐츠 성장기반 확충) 세계적 콘텐츠 기업 육성을 목표로 '콘텐츠 미래전략펀드'* 신설 등 **정책금융 10조 원 공급,**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연장, 웹툰 등 세제지원 확대**

* 대·중소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대작 IP 확보, AI 활용 콘텐츠 개발 등에 집중 투자

○ (K-콘텐츠 핵심산업 육성) 8대 분야* 중심으로 **장르별 전략적 지원체계** 가동

* 게임,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 웹툰, 방송영상, OTT콘텐츠

- 대작·인디게임 지원 확대, 중소·독립영화 제작 지원, 비즈니스 인재양성 및 뮤지션 해외진출 지원, 영상·웹툰·출판 분야 글로벌 IP 콘텐츠 제작·해외진출 지원
- 중·대형 공연형 아레나 건립(수도권 5만명 수용, 1개소 등)을 통해 K-팝 공연 인프라를 확충하고 K-컬처, K-관광의 랜드마크로 확장

○ (AI 활용 콘텐츠산업 혁신) AI 시대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 AI 기반 창·제작** 지원, 한국문화 **학습데이터** 축적, **AI 업계-창작자 협력 모델** 마련

○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저작권 보호를 위해 AI 기반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 **구축**, 인터폴·각국 수사기관 **공조 확대, 불법 유통사이트 접속차단** 강화

* AI·빅데이터 활용 저작권 침해 적발-심의-차단-수사까지 원스톱 지원

□ 문학·미술·뮤지컬 등 K-아트 핵심장르 육성

○ (글로벌 진출 지원) 번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미술 작가·화랑 및 공연·전시 해외 진출** 지원, **뮤지컬 글로벌 아카데미** 운영 등 지원 확대

○ (성장기반 확충) **뮤지컬 전용 국립공연장·국립근대미술관** 건립 지원, 세계적 공연예술축제, 미술축제, 문학축제 등 **국내외 유통 강화**

□ K-뮤지엄·헤리티지·한국어·전통 등 K-컬처 지평 확대

○ (K-문화유산) AI 융합 뮤지엄·K-뮤지엄 아카데미 설립 통한 **K-뮤지엄 글로벌 표준화, 유네스코 유산 등재**·공유문화유산 발굴 등 **국제 협력 강화**

○ (한국어·전통문화 세계 확산) **세종학당 확충**, 국제행사·해외 박람회 연계 **전통문화**(한복·한지·한식 등) **전시·체험·유통 확대**

실행전략 2 K-컬처 연관산업 전략적 지원

□ K-뷰티 해외진출 및 지속 성장 지원

○ (**K-컬처 연계 수출**) **국내·외 한류 박람회** 및 **문화축제**에 **K-뷰티 전시·체험존** 확대, 북미·유럽·아시아 등 **K-뷰티 유망 지역별 진출 전략** 고도화

○ (**중소기업 수출 촉진**) **뷰티, 패션** 등을 **중소기업 수출 전략품목화**, 중소기업 제품 **전용면세점** (인천국제공항 6개소) **고도화** 통한 **글로벌 레퍼런스 확보** 지원

○ (**정책기반 강화**) **화장품 수출국 규제대응, 해외진출 지원**(홍보관, 해외 판매장 등), 산업 육성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미래화장품 **R&D 투자 확대**

* (가칭)「화장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고기능성 맞춤형 화장품, 기초소재 등 개발

□ K-푸드·씨푸드 수출 및 소비 촉진

○ (**핵심 수출품목 육성**) **한식·전통주** 등 **주력 품목 육성** 및 K-컬처 연계로 **K-푸드 수출 150억불 달성, K-씨푸드 수출 최고품목**(김), **전략품목**(굴, 넙치 등) 육성

○ (**방한관광객 대상 소비 촉진**) (가칭)**K-푸드 페스티벌** 개최 및 히트상품 체험·관광·쇼핑상품 확대 등 **방한 관광객**의 **K-푸드 소비자화** 지원

□ K-컬처 관광 콘텐츠 개발로 3천만 방한관광 실현

○ (**방한관광 홍보·편의 개선**) **K-컬처 연계 방한 관광* 홍보**, 치유·MICE·크루즈 등 **고부가 관광** 육성, **외래관광객 5대 관광 불편**** 총체적 개선

* 대규모 글로벌 이벤트 연계 방한마케팅, 대형 한류스타 협업 전방위 K-관광 세일즈
** ①입·출국, ②교통·이동, ③쇼핑·식음, ④숙박, ⑤관광정보 안내

○ (**특화자원 연계 지역관광 도약**) 지역·콘텐츠 중심 **광역관광개발, 미식·축제·공연·국가유산 등의 K-관광콘텐츠화, 글로벌 관광특구* 제도 신설**

* 규제 완화·재정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관광 핵심거점으로 육성

□ K-컬처와 한류연관산업의 동반성장 협력체계 확충

○ (**한류 연관 산업 글로벌 도약**) 범부처 '**한류산업진흥 기본계획***' 마련, 한류 연계 뷰티·식품 등 **산업별 맞춤형 지원 및 동반 해외 진출**

* 민관 합동 한류정책협의회 운영, 한류 콘텐츠 현지화 공동제작 지원, 연관산업 수출 정보 맞춤형 제공

○ (**분야·단계별 지원**) **한류 콘텐츠 기업과 연관산업 기업 간 비즈매칭**, 한류 IP 활용 **상품 기획·개발에서 유통까지 단계별 지원*** 추진

* (1단계) 콘텐츠×연관산업 네트워킹 → (2단계) 한류 IP 활용 상품 기획·개발 → (3단계) 우수 한류 연관산업 제품 선정·홍보 → (4단계) 국내외 박람회 등 마케팅·유통

실행전략 3 K-컬처 이니셔티브 협력체계 고도화

□ K-이니셔티브 강화 위한 재외 거점 네트워크 구축

○ (**재외공관**) 해외진출 공공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원스톱 종합 서비스센터**'화

○ (**재외 한국문화원**) **코리아센터*** 확충으로 문화·관광·식품 등 수출 시너지 창출하여 **해외 문화교류 거점 기능 강화**

* 재외 한국문화원, 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코트라, 중진공, aT센터 등 물리적으로 집적화

□ 글로벌 소프트파워를 높이는 문화외교 확장

○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문화행사 및 국제 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문화관광 행사**를 통한 **한국 매력** 홍보

* 만찬장 연계 신라금관 특별전 개최(신라금관 6점 최초 합동 전시), 실감 콘텐츠 전시 등

○ (**문화외교 강화**) **정상외교, 수교 등** 주요 계기* 활용, 한국문화의 품격을 보여주는 **예술·공연·전시 등 문화행사**로 국가 위상 제고

* ▲주요국 '상호문화교류의 해' 협약('26년 한·중·일) ▲수교·올림픽 등 주요 계기 문화행사('26년 프랑스 140주년,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 등)

○ (**문화 협력사업 확대**) 국가유산·문화산업·문화예술교육 등 **개도국 대상 문화 협력사업** 중점 추진

□ K-컬처 글로벌 협력 역량 강화

○ (**K-컬처 글로벌 인재양성**) **K-컬처 확산**을 위해 **글로벌 청년 봉사활동 확대**, **국제스포츠 인재양성**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학위취득 지원

○ (**현지 수요형 프로그램**) **재외문화원·세종학당·현지 대학** 등과 연계하여 우수 공연·전시 순회하는 **투어링 K-아츠, 코리아시즌** 등 한국문화를 해외에 소개

○ (**K-스포츠 위상 강화**) **국제대회 참가·유치·개최** 지원, **e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및 가상 태권도 경기규칙 정비 지원

실행전략 4 K-컬처의 근간, 문화예술·인문 창작 역량 강화

□ 예술인의 자유롭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

○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환경 조성**) **창작공간·인프라*** 확대,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기준 마련 등 **계약 관계 개선, 권리침해 조사 강화**

*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국립한국문학관, 국립공연예술센터, 정동극장 재건축

○ (**촘촘한 예술인 복지 제공**) 예술인 융자 등을 전담하는 **복지금고** 조성,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임대주택·자녀돌봄 확충 등 **예술인 생활 서비스** 강화

○ (**청년·장애예술인 기회 확대**) 청년예술인 자산 형성을 위한 **적립계좌 지원,** 국립예술기관 **청년 인턴십 강화,** 지역대표장애예술단체 육성·장애예술인 장르별 창·제작 지원

□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역량 개발

○ (**학교예술교육 내실화**) 음악·미술 등 학생 소질을 살리는 **학생예술 동아리** 및 **악기교육** 지원,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 개최 지원**

○ (**지역 문화예술교육 확대**) 취약계층 아동의 문화예술 역량을 개발하는 **꿈의 예술단**을 **지역·분야별로 확대**하고, **예술교육 공간 시범거점** 조성

□ 일상속 인문학 대중화로 개인의 창의성 및 사회가치 제고

○ (**인문학 교육**) 질문 중심 수업 선도학교 운영을 통한 **초중등교육 인문학 강화**, 대학 교양 교육 혁신 및 **인문사회 융합 인재 사업 등 추진**

○ (**문화시설 연계 인문 프로그램**) **작은 도서관** 등 **일상의 가까운 문화시설**에 인문 프로그램* 운영, **생애주기 맞춤형 인문·독서 활동**으로 '삶의 역량' 함양 지원

*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등 인문을 쉽게 접하도록 강연·탐방·토론 프로그램 제공

□ 문화국가 정책 인프라 마련

○ (**문화강국위원회 설치**) **범부처·민간**이 참여하는 문화정책 방향·문화산업 전략 자문기구로서 (가칭)'**문화강국위원회**' 설치·운영

○ (**문화재정 확충**) 창작자와 국민 모두의 **창의 역량 강화** 위해 **문화재정 대폭 확충**

4. 주요 과제별 추진일정

과제명	추진기한						주관
	'25	'26	'27	'28	'29	'30	
[1] K-컬처 시대를 위한 핵심 콘텐츠 육성							
· 콘텐츠 미래전략 펀드 신설							문체부
· K-방송영상·OTT 콘텐츠 및 유통 생태계 발전방안 수립							문체부·관계부처
· 중대형 공연형 아레나 조성							문체부
· K-아트 신성장동력 활용, 해외진출 지원							문체부
· 한국어·전통문화 신한류 성장산업 육성							문체부
· AI 융합 뮤지엄 및 K-뮤지엄 아카데미 추진							문체부
· K-국가유산 유네스코 등재 등 세계적 확산							유산청
[2] K-컬처 연관산업 전략적 지원							
· 한류정책협의회 운영							문체부·관계부처
· 뷰티, 패션 등 중소기업 수출 전략품목 육성							중기부
· K-컬처 연계 통한 K-푸드 홍보							농식품부
· K-컬처 활용 K-뷰티 해외진출							복지부
· K-컬처 연계 방한 관광 홍보 및 콘텐츠 개발							문체부
[3] K-컬처 이니셔티브 협력체계 고도화							
· 코리아센터 확충							문체부·관계부처
· K-컬처 해외거점 확대							문체부
· 재외공관 활용 K-컬처 확산							외교부
·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문체부·외교부
· K-컬처 봉사단 추진							문체부
· 국제스포츠 외교 강화							문체부
[4] K-컬처의 기반, 문화예술·인문 창작 기반 강화							
· 분야별 표준계약서 및 대가기준 개선							문체부
·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및 복지사업 시범 추진							문체부
· 꿈의 예술단 지역·분야별 확대							문체부
· 학교 교육과정 내 인문학 교육 강화							교육부
· 문화강국위원회 설치							문체부

8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

1. 추진배경

□ (**인재양성**)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재**의 **절대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 **교육부터 취업까지 소요기간 증가****로 **인재양성이 부진**

* 국내 이공계 석·박사 현황(교육통계) 및 전망(STEPI) : ('23) 9.3만 명 → ('50) 5.1만 명

** 국내 대졸 신입사원 평균연령은 '98년 25.1세에서 '20년 31세로 증가(HR인크루트, '24.9.1.)

○ 교육·연구·산업 현장에서 **신기술 분야**의 **우수인재, 실무인재 등 다층적 인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은 역부족***

* '25~'29 신기술분야 인력수급전망(고용부) : 57.1만 명 부족, AI 분야 학사 이상 4.51만명 부족

□ (**인재유치**)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유입 매력도**는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IMD 조사 대상 국가**(총 67개국) **중 중하위권 수준**

* IMD 고급인재 유치 매력도 : ('22) 49위 → ('23) 43위 → ('24) 38위

○ 우수인재에 대한 **낮은 대우 및 처우 수준, 경력단절 우려, 제약적 연구환경, 자녀 교육 문제** 등이 유치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반면, **해외 선진국은 국가 차원의 유치 전략을 발표***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프로그램을 앞다투어 도입하는 상황

* (중국) 천인계획(외국 우수인재 영입) + 만인계획(국내 청년 인재양성)
(유럽 및 호주) 최근 미국 과학자 영입을 위해 Choose Europe 이니셔티브, Global Talent Attraction 프로그램 등 발표(장기 연구지원, 이주 과학자에 대한 정주패키지 제공 등)

□ (**인재유출**) **매년 약 3만명의 이공계 학생**(학부, 석·박사)이 **국외**로 **유출***되고, **교수급 인재의 해외 이직****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 이공계 학생 유출 현황(대한상공회의소) : ('21) 2.8만 명 → ('22) 3.2만 명 → ('23) 2.9만 명

** 지난 5년 간 서울대 교수 56명(인문사회 28명, 이공학 24명, 기타 4명) 해외 이직(교육부)

○ '19~'21년 **국내 유입 해외인력은 감소한 반면, 해외 유출 국내인력은 증가**하여 **인재 순유출 폭 확대**(△7.8만명→△8.4만명, '25 대한상공회의소)

□ (**기존 정책의 한계**) **인재 정책**은 산업, 일자리, 정주(비자, 자녀교육) 등 다양한 정책들이 **유기적·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부처별·분야별 분절적 추진**

○ 특히 국가 인재정책 컨트롤타워 및 국가 차원의 인재정책 방향 부재로 **칸막이***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정책 효과성 저해**

* 외국인력은 각 부처 관리, 제도적 칸막이로 인해 인력 활용에 어려움('24.7. 국회예산정책처)

** 정부 R&D(29조 6천억원) 대비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 예산은 1.0%(2,996억원) 불과

☞ 인재양성-해외인재 유치-유출 방지를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인재확보·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IMD 두뇌유출 지수 20위권 내 진입**('24년 30위) 및 **AI·첨단·기술·산업 우수인재 2,000명 유치**

2. 과제목표 및 전략체계도

□ **첨단산업 및 인문사회, 기초분야를 선도할 청년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적시·신속한 양성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 각 분야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만큼 존중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 비자발급, 정주 여건, 연구환경 및 기회 등 **해외 인재의 이주여건을 개선**하고, **대상별 인재유치 사업을 패키징 브랜드화**하여 국가 매력도 제고

□ (가칭)'**대한민국 인재지도**(인재 종합 DB)'를 **구축**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인재정책 컨트롤타워를 기반**으로 **국가역량을 결집**하여 적극적 인재 확보

< 전략체계도 >

비전	**대한민국 진짜 성장 견인을 위한 인재 강국 실현**			
목표	**IMD 두뇌유출 지수 20위권 내 진입**		**AI·첨단·기술·산업 우수인재 2,000명 유치**	
실행 전략	**1 사회 수요에 기반한 균형 있는 인재양성**	**2 안정적 지원과 충분한 예우로 인재유출 방지**	**3 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한 전략적 해외인재 유치**	**4 지원체계 강화로 세심한 인재관리 추진**
	균형 있는 인재양성 인재 패스트트랙 도입 실무형 인재양성	안정적 지위 보장 충분한 활동기회·대우 국가적 예우 강화	유치 사업 브랜드화 정주여건 개선 해외인재 정주 유도	인재지도 구축 국가인재위원회 운영 전략적 홍보·인재풀 관리

3. 실행전략별 주요 내용

실행전략 1 사회 수요에 기반한 균형 있는 인재양성

□ 첨단산업 및 인문사회·기초학문 분야에서 균형 있는 인재양성

○ **첨단산업 분야 특성화대학원을 확대**하고, **중견기업-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사업***으로 기업·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첨단 전략산업 분야 석·박사 배출**

* 기업 기술개발 과제에 대학원생을 참여시켜 이론·실무를 겸비한 석·박사 전문 연구인력 양성

○ **인문100년장학금 확대,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BK21, 청년 과기인 3종 패키지*** 등을 통해 **인문·이공분야**** **인재 체계적 양성**

* 학부(장학금)부터 석·박사(연구생활장려금), 신진연구자(기본연구)까지 논스톱 지원

** 기본적인 연구 인프라(시설·인력·행정)를 포괄 지원하는 대학 단위 지원 방식을 도입, 이공분야 석·박사급 인재가 안정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강화

□ 우수인재가 조기 배출될 수 있도록 성장 경로 단축

○ 과학고·영재학교 중심 AI **영재 발굴** 및 AI 거점대학 **학·석·박사 통합 과정**(5.5년) **개설**을 통해 AI 영재는 고교 입학부터 **7.5년만에 박사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에 재직 중인 인재가 경력 단절 없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기업 중심의 사내대학원 설치 확대** 및 (가칭)**'산업학위제'** 도입* 추진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결과물 등으로 박사논문 대체

□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양성

○ **AI 부트캠프**를 통해 대학-기업 공동 **단기**(1년 이내)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산업계 수요기반 교육과정·연구과제** 및 **멘토링** 등 제공

○ **K-Digital Training**(KDT)을 **AI·빅데이터 위주로 개편**하여 첨단분야 업무 경험을 제공하고, 직업계고-폴리텍 대학 연계를 통해 실무인재 육성

○ **산업AI 아카데미, 산업AI 마이크로 디그리** 등으로 재직자·취준생의 AI 역량을 키우고,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통해 **중소기업 AI 현장 기술 훈련을 지원**

* 주치의가 중소기업 "훈련 진단→처방→프로그램 설계 및 훈련 연계" 등을 패키지로 지원

○ **AI 등 전문·연구인력 2.5만명**을 양성·채용지원하고, 산학협력 프로젝트형 AI 아카데미 신설 및 수준별 교육으로 **중소기업 재직자 10만명**의 **AI 역량 제고**

실행전략 2 안정적 지원과 충분한 예우로 인재유출 방지

□ **인재의 중도 이탈,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지원 추진**

○ **'박사후연구원'**을 명문화하여 **대학 내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방산·AI 등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상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문연구요원 우선 배정** 추진

○ **박사후연구원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공제급여 가입 및 4대 과기원 중심 **융합연구 지원** 등 박사후연구원의 다양한 진로 개발과 연구역량 강화 추진

○ **전체 AI/SW 분야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추가** 지원

□ **국가 우수인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이에 따른 충분한 대우 제공**

○ **민간 기업 우수인재**를 **대학교원**으로 **임용**하고 **대학교원**의 **기업 겸직**을 **허용**하는 **이중 소속** 활성화

○ **대학**이 **퇴직 우수 교원**을 **비전임교원**으로 **재임용**하여 **정년 후**에도 실질적으로 **교육·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비전임교원 정년 연장**(예: 70세) 추진

○ **국립대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 **규제 특례** 활용, 인사혁신처 협의를 통해 **인건비 상한액**(총장 연 보수) **초과 보수** 지급

○ **출연연 우수 신진인력 확보 및 고경력 연구자의 지속활약을 위해 통상적 처우개선 외 추가개선, 정년환원** 및 **임금피크제 폐지 추진**

□ **석학급 인력의 국가 기여에 대한 예우 강화**

○ **학문 분야 탑티어 교수**를 선정하는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신설하여 **정년**(65세) **제한 예외** 인정 및 **최고 수준의 연구 지원**

○ 은퇴한 우수 교원·연구자가 머무를 수 있는 **'대학 연계 은퇴자 공동체' 조성을 추진**하고, 연구 외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촉진

○ **명예교수도 전임교원과 동등한 지위**에서 대학 시설(연구시설 포함)을 이용 및 강의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개정

실행전략 3 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한 전략적 해외 인재 유치

□ 해외 우수인재 유치 사업을 브랜드화하여 전략적 인재유치

○ A, B, C, D, E, F 등 **전략기술 분야** 위주로 핵심 이공계 분야에서의 대한민국 인재유치 프로젝트 **"Brain to Korea 2000*"** 추진

* 석학급, 신진 연구자급, 박사후연구원 등 2,000명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

※ 대상탐색 국제학술DB 등을 활용한 전략적 탐색 → 맞춤형 지원 세종펠로우십(포닥), 브레인풀+ 및 최고급 AI 인재 유치 사업 등 → 전주기정착 지원 비자·주거·교육·취업 등 지원

○ 산업계 **최고급 인재에게 탑티어비자 발급**(F-2) 및 **정착을 종합지원***하는 **'K-Tech Pass' 적용 확대**** 및 **홍보강화**(온·오프라인 인재·기업 대상 설명회)

*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전세대출 및 보증한도 내국인 수준으로 확대, 통장 개설, 전입신고 등에 동행·안내 서비스 제공

** 반도체·바이오·디스플레이·배터리 → AI·미래모빌리티·로봇·방산 등까지 확대

※ 인재발굴 Tech-GPT 등 온라인 인재발굴 서비스 제공 → 현장홍보 인재유치 거점무역관(해외)· 해외 인재 유치센터(국내) 활용 정책홍보·매칭 → 정착지원 'K-Tech Pass 프로그램' 활용 비자·정착지원

□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자녀교육, 연구환경 개선 등 추진

○ (**자녀 교육**) 탑티어 비자(F-2) 인재 자녀의 **정원 외 입학 확대**(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 포함) 및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에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 설립 지원**

○ (**비자 정책**) 기존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K-STAR 트랙'**으로 **확대·개편***하고, **세계 200대 대학 졸업자에게 구직비자**(D-10) **발급**

* (기존) 5개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 한정 → (개선) 우수 일반대학까지 대상 확대

○ (**연구환경 및 기회**) 해외 인재의 **네트워크 및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국내 교원 겸직제한 완화, 국제 공동연구 확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접근성 제고*

* 공고 및 신청·평가·수행 등에 필요한 관련 문서를 영문 번역 및 영어 컨설팅 제공

□ 한국에 우호적이고 관심이 있는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

○ (**해외 청년인재 유치 확대**) **정부초청장학금**(GKS)에 **재외동포 인재** 및 **한국전쟁 참전국 인재에 대한 장학생 쿼터를 확대**

○ (**개도국 인재 유치**) 기업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개도국 명문대 졸업생 대상 현지교육** 및 **국내 지역기업 매칭 사업**을 통해 개도국 인재 유치 추진

실행전략 4 지원체계 강화로 세심한 인재관리 추진

□ 대한민국 인재지도 구축

○ **거시적 관점에서 국내 및 해외인재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지도' 구축**

- 대상별 맞춤 유치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 및 전문가 **인재풀을 지역별, 분야별, 학위 수준별로 식별할 수 있도록 제공**

- 각 부처가 보유한 각종 DB(예: 국가인재DB, 국제학술DB, 재외한인DB) 등 공공정보와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인재·기술·기업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

□ 국가 인재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인재위원회 설치·운영

○ 기존 **인재양성전략회의,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개편**하여 산업계, 국내 유입 석학급 인재, 각 부처 등을 망라한 **국가인재위원회 신설 검토***

* ▲(위원 구성) 인재정책 소관 부처 장관, 시도지사, 교육감, 민간(산업계, 학계)
▲(역할) 국가 인재정책 방향 설정, 국가 인재정책 기본계획 수립, 부처 인재정책 총괄·조정, 부처 인재정책 사업 성과 점검, 인재영향평가 등

-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조정기구인 **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대통령)를 중심으로 **범부처 과학기술 인재 정책·예산 조정 기능** 강화

* 과학기술 인재양성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우수 과기 인재의 유입·교육·양성·활용까지 단절 없는 지원과 전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전략적 홍보 및 인재풀 관리 추진

○ 재외공관, 코트라,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과기·ICT협력센터 등 **관련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각종 사업을 해외 인재에게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대상을 지속적으로 관리**

4. 주요 과제별 추진일정

과제명	추진기한						주관
	'25	'26	'27	'28	'29	'30	
[1] 사회 수요에 기반한 균형 있는 인재양성							
· 첨단산업 분야 특성화대학원, 중견기업-지역혁신 얼라이언스	▬	▬	▬	▬	▬	▬	산업부
· 청년 과기인 3종 패키지	▬	▬	▬	▬	▬	▬	과기정통부
· AI 거점대학 지정		▬	▬	▬			교육부
· K-Digital Training,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운영	▬	▬	▬	▬	▬	▬	고용부
· 전문·연구인력 양성, AI 혁신 아카데미, AI 리터러시 교육,		▬	▬	▬	▬	▬	중기부
[2] 안정적 지원과 충분한 예우로 인재유출 방지							
· 박사후연구원 명문화		▬					교육부 과기정통부
· 방산·AI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문연구요원 우선 배정		▬	▬	▬	▬	▬	국방부
· AI/SW 휴먼캐피털 도입		▬	▬	▬	▬	▬	교육부
[3] 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한 전략적 해외 인재 유치							
· Brain to Korea 2000 프로젝트 추진		▬	▬	▬	▬	▬	과기정통부
· K-Tech Pass 프로그램 운영	▬	▬	▬	▬	▬	▬	산업부
· K-STAR 트랙 도입		▬					법무부
· 국내대학 교원의 외국대학 겸직 특례 마련		▬					교육부
[4] 지원체계 강화로 세심한 인재관리 추진							
· 대한민국 인재지도 구축·운영		▬	▬	▬	▬	▬	교육부 관계부처
· 국가인재위원회 운영		▬	▬	▬	▬	▬	교육부
· 전략적 홍보 및 인재풀 관리	▬	▬	▬	▬	▬	▬	교육부 관계부처

9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사회

1. 추진배경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정립하여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사회 구현 필요**

□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재난이 대형화하고 복합화함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강화 필요**

○ 국가간 이동 증가, 바이러스 변이 등으로 **신종감염병 재출현 가능성 증가**(WHO)

<최근 10년간 자연재난 원인별 인명피해 현황 (출처: 재해연보)>

(단위: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평균
호우	2	-	1	7	2	-	44	3	19	53	131	13.1
태풍	-	-	6	-	2	18	2	-	11	-	39	3.9
태풍·호우	-	-	-	-	1	-	-	-	-	-	1	0.1
대설	-	-	-	-	-	-	-	-	-	-	-	-
폭염	미산정				48	30	29	39	34	85	241	24.1
한파	미산정									2	2	0.2
합계	2		7	7	53	48	75	42	64	140	414	41

□ **일터**는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존엄**한 공간이어야 하나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취약노동자**(특고, 플랫폼 등) **사각지대 여전**

○ **모든 사람**의 **일터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관리·보상** 전 영역에서 **양적·질적 혁신 필요**

☞ **재난** 및 **안전사고**와 **산업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 존중의 가치가 우선하는 **"안전한 생명존중 사회"** 실현

2. 과제목표 및 전략체계도

□ 명확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확립**과 **「생명안전기본법」** 등 **생명 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법령 제정**으로 **안전 최우선 사회의 기반 구축**

○ 재난안전부서 **우수인력 배치 및 조직강화**, 피해자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등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 **항공·철도·전기차** 교통안전, **건축물화재·싱크홀·공사장** 건설안전, **보행 취약지역** 생활안전 등 **반복되는 주요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

○ 주민참여 안전취약지 개선 등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 협력 거버넌스 강화**

□ **풍수해·폭염·지진**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대응체계 강화**로 재난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 **AI기반 지능형 관제, 드론** 활용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과 감시 강화

○ 재난현장 **소방 지휘권** 강화, **첨단 소방장비 확충** 등 긴급구조 역량강화

□ 홍수, 산불 등 **주요 재난**에 대한 **예방대책 강화**

○ **홍수예보체계 개선** 및 침수대응 인프라 강화, **가뭄 대비 끊김 없는 물 공급**

○ **산불 진화자원·특수진화대 확대**, 위험지역 **주민대피계획수립 의무화**

○ 감염병 위기 상황 **조기 발견·억제, 신속한 백신개발·공급체계** 구축

□ 일하는 모든 사람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실효적 산재 예방** 등을 통해 **'30년까지 산재사고 사망만인율 OECD 평균(0.29‰)으로 감축**

○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 및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

< 전략체계도 >

비전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사회**				
목표	**국가책임 강화로 안전사회 기반 구축**		**재난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30년까지 산재사고 사망만인율 감축(OECD 평균)**
실행 전략	**1 국민안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2 반복되는 주요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	**3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 강화**	**4 주요 재난 예방대책 강화**	**5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 일터와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
	• 국가책무강화 •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 사회적참사 등 재난피해지원 확대	• 교통안전 대책강화 • 건설안전 대책강화 • 생활안전 대책강화	• 자연재난 대응강화 (풍수해,폭염,지진 등) • 사회재난 대응강화 • 재난모니터링 강화 • 긴급구조 강화	• 홍수대책강화 • 가뭄대책강화 • 산림재난대책 강화 • 감염병대책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확대 •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 관리 • 실효적 산재 예방 •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추진

3. 실행전략별 주요 내용

실행전략 1 국민안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 국가 재난안전책무 강화

○ 대통령실이 **국정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국가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임을 명시(「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개정)

○ 생명 존중 안전 사회를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및 재난유형별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강화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 **「사회재난관리법」** 등 법령 제정

* "안전권" 법률 명문화, 국가·지자체·기업·단체 등 책무 명시, 안전사고 정보 공개, 독립 조사기구 설치, 안전약자 보호, 기억과 추모 등 피해자 권리보장 지원 원칙 확립

□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 부서에 **우수 인력을 배치**하고 대형 재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기관 간 지휘협조체계 활성화** 및 조직강화

○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우수기업 육성**과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재난안전산업 펀드조성**, 전문육성기관 설치 등

○ **소방기술 사업화** 지원, **영세 소방장비업체 공공 조달** 등 내수시장 활성화, 외국에 **소방장비 무상양여** 확대 등 **소방장비 수출 선순환** 체계 구축

□ 재난피해 지원 확대

○ 재난피해자들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폭넓고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 **소상공인·중소기업** 시설복구·경영안정 **지원 신설,** 1차산업 피해의 **주 생계수단 요건 삭제, 비보험 농작물의 복구단가 현실화**(실거래가대비 100%) **등**

○ 대남 소음방송·오물풍선 등에 따른 **접경지역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사회적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참사 원인과 대응 적정성에 대한 **조사 요구 및 참여, 기억과 추모**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등 제도 마련 등

실행전략 2 반복되는 주요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

□ 교통안전 대책강화

○ 항공·철도 등 **중대형 교통안전** 관리 강화 및 보행·전기차·이륜차 등 **주민 밀착형 교통안전** 체계 고도화

- **방위각 시설 개선·조류탐지레이더 도입** 등 안전한 공항환경 조성, 운행중**차축발열 감지시스템** 확충, **AI 관제** 도입 등 첨단기술 활용 **열차사고 사전 예방**

○ **전기차** 제작·운행·사용 후까지 **배터리 全 생애주기 관리**체계 구축,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 제정, **이륜차 전면 번호판** 시범 사업 등

○ **고령운전자** 안전운행 강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자율주행** 도로운행관련 법률 제정, **주차방해·장기주차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교통안전 질서 확립

□ 건설안전 대책강화

○ **건축자재 관리 강화, 화재안전 성능기반설계** 등 설계기준 고도화로 대형화·복합화 되어가는 건축 여건에 맞춰 **건축물 화재예방** 대책 추진

○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 재난'** 신설, **지반탐사 확대**, 지반탐사 **결과통합 제공***,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등 싱크홀 예방 지하안전대책 마련

* (기존) 국토안전관리원 실시 지반탐사 → (개선) 지자체 등 외부기관 지반탐사까지 결과 제공

○ **건설공사 발주～설계～시공～감리 全과정 안전대책*** 강화

* (발주)현장여건·가격변화를 공사비 산정기준에 반영, (설계)민간공사도 설계안전성 검토, (시공)시공전문 안전점검업 신설, (감리)국가인증감리 매년 선정 등

□ 생활안전 거버넌스 강화

○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확산, **주민참여형 취약지역 개선사업**, **주민점검 신청제** 확대, 자원봉사지원단 협력체계 강화 및 **자율방재단 참여 범위 확대** 등

○ **AI 기반 안전신문고를** 도입하여 신고 **처리시간 단축**(신고내용 자동분류·이송) 및 국민 참여 안전신고 고도화*

* 별도 신고 내용 작성 없이 사진만 첨부하여도 신고할 내용이 자동 생성·정리, 외국어로 신고시 자동 번역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

실행전략 3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 강화

□ 풍수해, 폭염, 지진 등 자연재난 대응체계 강화

○ 중앙·지자체간 **실시간 정보 공유**, **취약계층 대피지원** 강화, 주민대피 **협력방안** 및 **법적근거*** 마련, 인명피해 **3대 유형**** 등 **위험지역 중점 관리**

* 주민대피기본법 제정(대피지원 인력지정 등), **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무더위쉼터·그늘막 등 **피해저감 시설 설치 확대,** 폭염 위기경보단계 **발령기준 개선 등** 제도 합리화

○ 민간건축물 중 다중이용시설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공공시설 **'30년까지 91.6%**('35년 100%) **내진보강** 완료, **지진대피훈련 및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 사회재난 대응체계 강화

○ 지자체장 중심으로 지역 내 **관계기관 협업**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

- **산불, 다중운집 인파사고 등** 대규모 주민 대피·현장 관리 등이 필요한 재난에 대해 **지자체장의 예방조치·권한 등 강화**

○ 대형재난 시 **재난관리주관 기관을 중심**으로 기능별 **관계 부처가 통합대응**, **재난관리 주관기관 미비 시 행안부**가 선제적으로 관계부처를 총괄하여 대응

□ 재난 모니터링 강화

○ AI기반 지능형 관제(CCTV) 고도화, **인파·침수·산불 등 특정 재난 예측 모델 선도개발**, **재난 드론 재난상황실 연계** 등 재난 예측·감시 강화

○ **다매체 동시활용** 및 광역·기초단위 **일제 발령**이 가능한 표준화된 **재난 예·경보 통합플랫폼 확산**으로 신속한 전파 체계 구축

□ 긴급구조 역량강화

○ 재난현장 지휘권 강화, **첨단 소방장비** 및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등 **인프라 확충**, **화재취약계층** 지원 등 **소방안전강화**

- **AI기반 차세대 119시스템** 도입,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고도화**, **국립소방병원 응급의료 기능 강화**와 소방심신수련원 확충

○ 희생자 신원확인 고도화를 위한 '**재난피해자 신원확인단**' 운영 및 규정 신설

실행전략 4 주요 재난 예방대책 강화

□ 홍수 대책 강화

○ 국가하천뿐만 아니라 지류·지천까지 **AI기반 홍수예보 확대**, **수해감시 전용 통신위성** 개발, **도시침수 예보** 지역 지속 확대 등 예보체계 개선

○ 침수우려 지역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로 확대, 펌프장 신·증설 등 **침수 대응 인프라** 지속 확충*

* 도림천 지하방수로 사업 지속 추진,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준공 등

□ 가뭄 대책 강화

○ 가뭄 위험지역과 **기존 수자원 시설 간 연결망** 구축(워터그리드), 하천수 허가량 대비 **실제 이용량 조사**를 위한 계측기 설치 및 사용량 보고체계 개선 등

○ 각 기관에 분산된 가뭄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는 **통합가뭄상황판 구축**

□ 산림재난 총력대응

○ 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고성능 **진화자원·특수진화대 확대** 및 진화 인력 **처우개선·전문성 강화**

- **생활권 산불예방 벌채 허가 면제**, **산주 동의 없이 벌채 허용**으로 산불 **안전공간 조성 확대** 및 산림 연접 건축 **산림재난위험도 사전평가**

○ **산사태취약지역·생활권** 중심 **사방사업 확대** 및 **산사태 예측 고도화**, 산림재난 위험지역 **주민대피계획 수립 의무화**로 선제적 대피체계 구축

○ 소나무재선충 **예찰**(헬기·드론+LiDAR)·**방제** 확대 및 **수종전환 활성화** 등

□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 감염병 위기 상황 **조기 발견 및 억제**,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응한 **방역·의료 통합거버넌스** 구축 및 **감염병 병상 확충·재정비**

○ 새로운 팬데믹 위기에 대비한 **mRNA백신 등 차세대백신 플랫폼 국산 개발** 및 필수 백신, 신종·미해결 감염병 치료제 집중 개발

실행전략 5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 일터와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 일터 구현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업종·규모·종사자**(특고, 플랫폼, 프리랜서)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 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② 안전보건투자 규모, ③ 안전보건 활동실적 및 계획 등

○ **안전보건교육 의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체험교육 활성화 등 **안전보건교육 내실화**

○ 공공기관과 50인 이상 제조업에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하청 노사**의 **참여 보장**

□ 예방과 현장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 **위험성평가** 의무 불이행시 **벌칙**을 **신설**하고 **노동자대표 참여**를 **의무화하여** 자기규율 예방체계 안착

○ 급박한 위험 발생 우려시 **노동자의 작업중지·시정조치 요구권 신설,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로 **노동자 안전권 강화**

○ **신산업 안전기준 법제화, 야간노동자 보호 강화***, 감정노동 보호 대상 확대·조치 강화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야간노동 관련 최소 휴식시간, 최장 노동시간 및 연속 근무일수 제한 등

□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

○ 업무상 재해 조사기간을 법정화하고 경과시 **산재보험급여 선 지급, 업무상 질병 추정 제도를 확대**하여 **산재보상 강화**

○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사각지대 해소

□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전문화·첨단화

○ **범정부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중대재해 수사체계 확충** 및 **신속 처리** 강화

○ 산업안전관리 기준 및 표준 연구 등을 위한 **R&D 전담기관 설립***

* 산업안전보건 데이터 민간 활용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 AI 기반 직업성암 예측 및 질병 판정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지능형 산업안전보건 솔루션 개발 등

4. 주요 과제별 추진일정

과제명	추진기한 '25	'26	'27	'28	'29	'30	주관
1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 대통령실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복원							행안부
·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법령(생명안전기본법, 사회재난관리법) 제정							행안부
· 재난안전·소방 산업 기술·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행안부 소방청
· 피해복구 단가 현실화 및 피해지원 비율 상향							행안부
· 사회적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행안부
2 반복되는 주요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							
· 항공 및 철도 안전 관리강화							국토부
·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제도개선·보행자배려 문화확산 등							행안부
· 건축물 화재예방 및 全주기 건설안전 강화							국토부
· 싱크홀 예방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환경부
· 주민 참여 취약지역 종합 개선 및 AI기반 안전신문고 고도화							행안부
3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 강화							
· 풍수해·폭염·지진 대응체계(주민대피) 강화							행안부
· 대형산불, 다중운집인파사고 등 통합 대응체계 구축							행안부
· 재난안전드론 중앙·지방 재난안전상황실 연계 및 역량강화							행안부
· 첨단 소방 장비 확충 및 119시스템 고도화							소방청
· 신원확인체계(K-DVI) 고도화							경찰청
4 주요 재난 예방대책 강화							
· AI 홍수예보 지점 확대 및 도시 침수 대응 인프라 개선							환경부
· 국가가뭄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행안부
· 산불 진화 장비·인력 및 산사태 취약지역 예방사업 확대							산림청
·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및 mRNA 백신 국산화							질병청
5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 일터와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단계적 확대							고용부
· 기업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고용부
·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							고용부
· 위험성평가 개선, 노동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등							고용부
· 산재보험급여 선 지급,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고용부

10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1. 추진배경

□ **수도권 집중, 지역산업의 위기, 인구구조 급변**의 삼중고와 **국가적 위기**

□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배려' 중심의 **기존 균형발전 전략**을 5극3특* 중심 '**지역이 국가성장의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

* **수도권 일극체제**를 뛰어넘어 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초광역권 및 전북·제주·강원 등 특별자치도가 산업·인프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5극3특 다핵형 국토 구조**로 재편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치분권 강화**를 **기반전략**으로 병행

2. 과제목표 및 전략체계도

□ **목표** : 5개의 성장엔진으로 **잠재성장률 3%** 회복
수도권과 함께 성장하는 **비수도권의 GRDP 50%*** 회복

*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 : ('13) 51.3% ⇒ ('23) 47.7%, 10년간 3.6%p 감소

□ 전략체계도

비전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목표	**잠재성장률 3%+**	**비수도권 GRDP 50%+**		
4대 실행 전략	**1 진짜 성장엔진, 지역**	**2 최적의 국토공간, 5극3특과 행정수도 완성**	**3 에너지 전환과 성장의 프론티어, K-농산어촌**	**4 어디서나 함께 누리는 균등하고 고른 삶**
	▸5극3특 성장협약 ▸성장엔진 합의 ▸성장5종세트	▸교통·인재 집중투자 ▸행정수도 조기완성 ▸공공기관 2차이전 ▸중소도시 육성	▸농어촌 기본소득 ▸재생에너지프론티어 ▸K-푸드 세계진출 ▸체류·치유·관광지	▸공공의료 강화 ▸지역중심돌봄체계 ▸K컨텐츠/관광자원 ▸지역교육 혁신
기반 전략	**자치분권 강화를 통한 실행력 제고**			

3. 실행전략별 주요 내용

실행전략 1 진짜 성장엔진, 지역

□ **국가산업전략** 및 **지역여건**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5극3특별 성장엔진** 선정

* 절차: ①정부 산업전략 제시 → ②지역수요 공모 → ③중앙·지자체 검토·선정 → ④성장협약 체결
* 성장엔진(예시): ①A권역→휴머노이드, ②A권역 內 광역시도→모터, 이차전지, 센서, 완제품 양산

□ 규제·혁신·금융·인재·재정 등 **'5극3특 성장 5종세트'**를 성장엔진과 연계 지원

① 초광역·광역별 **메가특구**(거대 규제프리존) 지정으로 **투자를 부르는 규제철폐**

* (A권역) AI휴머노이드, (B권역) AI자율주행차, (C권역) 바이오AI/의료데이터, (D권역) 기후테크 등

② **R&D·인프라·조달·창업** 등 혁신 지원 패키지 제공

* (R&D) 성장엔진 기술개발 + 범부처 사업 종합 메뉴판 제공 → 원스톱 협상
* (인프라) 생산·물류·주거·문화·교육 등 성장엔진 인프라 구축 → 기업유치·인재유치 동력화
* (혁신조달) 공공조달시장 규모 확대, 지역제품구매 인센티브 강화,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등
* (혁신창업) 지역창업도시 10개소 선정, 권역별 엔젤투자허브 확대, 지역성장펀드 조성 등

③ **국민펀드·벤처펀드** 등 대규모 자금을 성장엔진 육성에 집중 투자

* 100조원 국민펀드 → 지역 첨단산업 펀드, 40조원/年 벤처투자 → 지역 벤처 펀드, 지역투자공사 검토 등

④ 권역별 **대학·출연연·기업연구소**를 **인력양성·인재유치의 허브**로 전환

*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연계 → 권역별 대학 관련 전공을 성장엔진 전문인력 양성기지로 활용
* 지역이 R&D사업을 기획·집행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지는 지역자율 R&D체계 운용
* 3특 대상 과학기술원 협업형 특성화 대학원 설립 검토 → 석박사급 성장엔진 핵심인력 육성
* 대학·출연연·기업연구소 → 해외인재 확보를 위한 「(가칭)한국형 천인계획」 전진기지로 활용

⑤ **집중적 재정지원**을 통해 **성장 속도 배가**

* 성장엔진 특별 보조금 도입 검토(기술개발, 생산·투자,인재확보, 수요창출·판로개척 등 지원)

□ 부처·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5극3특별** 강력한 **추진체 구축**

실행전략 2 최적의 국토공간, 5극3특과 행정수도의 완성

□ 5극3특 기반 성장전략을 통해 **국가균형성장 미래비전** 제시

○ **지방**은 **4극**(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및 **3특**(전북·제주·강원)별 **성장엔진·교통망·교육** 등 집중 투자를 통해 성장 지원

○ **수도권**은 **글로벌 경제수도·금융허브**로 육성, **수도권 내 균형성장**도 추진

□ **행정수도 세종 조기 완성**

○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완공 및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지원

○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및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중추기능 완전 이전

□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거점 육성**

○ 임기 내 속도감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주여건 개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지정**, **재생에너지 거점 조성** 및 **인프라 확충**

○ 위기업종(석유화학·철강·이차전지) 지원, 신규산단 조성 등 **남부산업벨트 조성**

□ 5극3특 **교통망 구축**으로 **국토공간 연결성** 강화

○ 권역간 국가간선 철도·도로망 구축·연계, 권역 내부 광역교통망 연결

○ 지역별 **신공항**을 조속 추진, **UAM·자율주행차** 등 첨단교통 조기도입·상용화

○ 도시내 **도시철도·BRT** 등 수준 높은 **대중교통 구축** 및 **보행환경** 개선

□ 5극3특 대학 혁신과 인재양성으로 **혁신거점 인적기반** 확충

○ 권역별 국립대 연계협력특화사업과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함께 추진

○ **초광역 RISE 센터** 설치를 통한 권역대학 협력·혁신기반 강화

□ 5극3특 내 균형발전을 위한 **중소도시 육성**

○ 산업·일자리 등 **경제기반**(기업혁신파크 등) 확충 및 **지역매력**(랜드마크 등) 제고

○ **도시 주거환경 개선**(빈 건축물 정비, 주거 복합공간 확충 등) 및 **낙후소외지역 지원**

○ 평화경제특구 포함 **접경지역 개발** 지원

실행전략 3 에너지전환과 성장의 프론티어, K-농산어촌

□ 기후위기·고령화·지역소멸 극복을 위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농림어업 육성**

○ **스마트팜 대중화**, **스마트양식 확충**, **공동영농모델*** 확산으로 생산성 증대

* 농지 임차 등을 통해 농지를 집적화하고 경영을 규모화하는 영농 모델

○ **가격안정제 도입**, 필수농수산자재 지원 추진, 재해보험 할증 최소화 및 양식재해보험 대상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등 **국가책임 강화**

○ 소멸 위험이 높은 인구감소지역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확산

○ **청년 농어업인재 양성 프로그램** 신설,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농지 이양은퇴직불 확대 및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등으로 **세대전환 촉진**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확대,** 경매중심의 가격결정 시스템을 다양화하는 등 **유통구조 개혁**으로 생산자 수취가는 높이고, 소비자 구매가는 인하

○ 농어촌 공간을 문화·산업 등 기능별로 재배치하고, 빈집을 창업·관광 공간 등으로 정비·재생하여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농산어촌 조성**

□ **국토의 89% 농산어촌, 국토면적의 4.5배 바다**의 **무한한 자연**(햇빛·바람·파도)을 재생에너지로 활용하여 **에너지고속도로**를 주도하고 RE100 실현

○ 태양광·풍력·파력·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발전 인프라** 구축 및 **계통 제약 해소** 등으로 농산어촌 **무탄소 에너지 생산** 확대

○ 햇빛·바람 연금 등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공유 모델**을 **정착**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및 전기·수소 등 농기계 개발로 **농림어업 RE100** 추진

□ 세계로 진출하는 **K-푸드** 및 세계인이 찾아오는 **체류·치유·관광 벨트** 조성

○ 외교·ODA 및 문화·기업 교류와 연계한 **전략적 마케팅**(K-푸드 수출기획단), **블루푸드-푸드테크 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농수산 수출 190억불 달성**

* 수산식품산업에 바이오·디지털 기술을 융합하여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클러스터

○ **K-헤리티지 관광벨트**(농어업유산 등), **산림동서트레일**(울진~태안, 849㎞), **K-Ocean 블루투어리즘 네트워크**(동·서·남해/해양-내륙 연결) 등 관광루트 개발

실행전략 4 어디서나 함께 누리는 균등하고 고른 삶

□ 의료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기반 확립**으로 **건강한 삶** 실현

○ **주치의제, 만성질환관리, ICT 기반 건강관리**로 일차 의료체계 강화

○ 정신건강·환자 안전 중심의 **지역 건강환경 조성** 및 **지역 통합건강관리** 실현

○ 지역공동체 기반의 **예방-회복-자립 체계 구축**으로 포용 사회 조성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 중심 **돌봄, 안전체계 강화**로 삶의 질 개선

○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 **사회서비스 확대** 및 **노후시설 정비**, 기관·시설 재구조화

○ AI, ICT 기반 **복지행정 인프라 확충**, 대상자 발굴 등 **위기 대응역량** 강화

○ 공공 **돌봄서비스** 인프라 강화 및 **생활SOC 복합공간**을 통한 통합서비스 확대

○ 지역별 **재난안전, 산업안전 불균형 해소**로 생명존중 실현

□ **문화 취약지역 지원 강화** 및 **지역 고유 문화**의 **K-콘텐츠화**

○ 문화 환경 취약지역에 인력 및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하고, **지역의 정체성·역사·문화 자산**을 발굴하여 **K-콘텐츠 관광 자원화**

○ 기획자·활동가·대학·청년문화 **인력양성*** 및 지속 가능한 **문화 일자리 창출**

* 지역 인문·예술 대학과 협업하여 지역 현장 기반형 문화기획자 양성교육 지원 검토

○ 중소도시-읍면의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구축

□ **지역교육 혁신**과 **생태계 서비스**를 활용한 지역사회 동반성장 견인

○ 광역 기반의 **혁신적 교육 플랫폼**을 조성하고, **교육특구*** 운영 및 **초중고 통합학교**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유연한 교육여건 조성

* 교육규제 합리화 및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교육특구 지정·운영 추진계획」 마련('26.上)

○ 자연자산을 활용한 **생태교육** 체계 구축 및 **휴양공원·국가정원** 등 지역 연계 강화

기반전략 자치분권 강화를 통한 실행력 제고

□ **자치분권 확대**와 **주민참여 실질화**를 통한 **지역 혁신동력 확보**

○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로 지방이 원하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핵심 안건이 논의되는 **중앙-지방 소통·협력체계 구축 및 위상 강화**

○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 **주민 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 실시,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마련** 등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 (가칭)**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특별지자체 설치·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분권 역량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 강화**를 통한 **지역 주도 성장 기반 구축**

○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6:4를 목표로 7:3까지 개선), **5극3특** 등 국가균형 성장에 대응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

○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화, 운영재량 확대** 등 지방의 재정 자율성 강화로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정책 추진**

○ 지방자치단체 예산·결산안 주민 공개, 주민참여예산 내실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 책임성·투명성 강화**

□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및 **공공서비스 광역화**로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 **복수주소제**와 **생활권 중심 집약형도시**(compact city) 도입,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지방소멸대응기금** 적극 활용 등으로 소멸위기지역 **인구유입 촉진**

○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수도권과의 거리 및 지역소멸도 등에 따른 **차등 지원 원칙과 기준 정립 등**을 통한 **소멸위기지역 지원 강화**

○ 공공서비스 광역화를 위한 **연계협력사무 개발, 공공협약제도 활성화** 등 추진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4. 국가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구조혁신 과제

◈ 범부처적 균형성장 전략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거버넌스 구축**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전략·제도 혁신·법령 정비** 등 신속 추진

□ (**거버넌스**) 균형성장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위원회 기능 강화**

○ (가칭)**국가 균형성장 전략회의**를 신설, 이행상황 지속적으로 점검

□ (**재정**) 5극3특 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 대폭 확대**

○ 기존 부처의 **지자체 보조금**을 시도가 편성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25년 3.8조원 규모)'으로 이관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초광역권 계정***' **신설**

* 초광역권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 → 예산 편성 → 예산 집행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4.7조원) **예산 사전조정권**을 **지방시대위원회**에 부여

○ 초광역권이 계획하고 국가가 패키지 지원하는 **지역투자협약*** 활성화

* (기존) A부처 → a/b/c지자체 ⇨ (협약방식) ABC부처+지방위+초광역권 → 초광역권

□ (**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5극3특 성장전략의 **투자 효율성 극대화**

○ 지역 SOC, R&D 등 적기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개편** 추진

① 지역 SOC 적기추진을 위해 예타대상 상향(500→1,000억원), ② 지역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사업은 예타 제외, ③ 5극3특 미래산업의 성장효과를 측정하는 평가항목 신설

○ 난립한 **지역특구**(87종, 2,437개)의 **단계적·점진적 정비**를 추진하고, 유사·중복 개발지원 기구를 **5극3특별로 연계·통합**하여 집중 지원

○ 그간 지자체 부담을 유발한 부처의 **칸막이식 공모사업**에 **통합플랫폼***과 지역특성을 감안한 **지정공모제** 방식 도입

* 예시) 지역경제활성화: 도시재생(국토부) + 상권활성화(중기부) + 민관상생(국토부)

□ (**법령**) 지방분권·재정 강화, 행정수도 완성, 특별지자체·자치도 특례 마련 등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도 속도감 있게 진행

* 「지방자치법」,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행정수도 특별법」, 「국회법」 등

5. 주요 과제별 추진일정

과제명	추진기한						주관
	'25	'26	'27	'28	'29	'30	
1 진짜 성장엔진, 지역							
· 5극3특 성장엔진 선정							산업부
· 5극3특 성장협약 체결							범부처
· 5극3특별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범부처
· 5극3특 성장 5종세트 지원 및 성과 창출							범부처
2 최적의 국토공간, 5극3특과 행정수도의 완성							
· 광역권성장지원특별법 제정							국토부
·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마련 및 이전계획 수립							국토부
·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국토부
· 서울대 10개 만들기 및 RISE 재구조화							교육부
3 에너지 전환과 성장의 프론티어, K-농산어촌							
·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합리화							농식품부, 해수부
· 재생에너지 발전 인프라 구축							농식품부, 해수부
· 블루푸드-푸드테크 융합 클러스터 조성							농식품부, 해수부
· 산림 동서트레일 전면 개통							산림청
4 어디서나 함께 누리는 균등하고 고른 삶							
·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증진							복지부
· 문화환경 취약지역 시범사업							문체부
· 교육특구 지정 및 통합학교 기반 조성							교육부
· 한반도 생물다양성 복원 및 가치 증진							환경부
5 자치분권 강화를 통한 실행력 제고							
· 제3차 일괄이양법 제정							행안부
· 지방세법·지방교부세법 개정							행안부
· 지특회계 개편							행안부, 기재부
· 중앙-지자체 협력기구 위상강화(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행안부

11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

1. 추진배경

□ 지난 3년간 남북관계가 전면 단절되고, 북한이 핵 고도화, 적대적 2국가 선언, 북·러 밀착 등을 지속하면서 **평화가 흔들리고 '한반도 리스크'**가 부각

□ **압박에 치중한 대북정책과 이념적 접근**을 통해서는 남북간 적대와 대결을 극복하고,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를 진전시키는 데 한계

> ☞ **강력한 안보태세 확립, 국익 중심 실용외교,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 프리미엄' 구현

2. 과제목표 및 전략체계도

□ **정예 군사력**과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 억제능력**에 입각한 강력한 안보태세 확립

□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 가동**, 북핵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 **남북간 화해·협력**을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경제 구현**으로 공존·번영 촉진

< 전략체계도 >

비전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			
목표	**강력한 안보태세 확립**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남북관계 정상화 및 공존·번영 기반 구축**	
실행 전략	**① 정예 군사력과 전방위 억제능력으로 北 도발 불용**	**②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北 비핵화-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병행**	**③ 남북간 상호 존중과 실용에 기초한 화해 협력**	**④ 한반도 평화경제 구현으로 공존과 번영의 미래 준비**
	北 위협에 대한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병행	비핵화-평화체제, 남북관계-북미관계, 한반도-동북아 평화 선순환 추구	실용적 접근으로 대화·협력 재개 및 평화공존의 제도화 추진	남북경협 재개 및 국제사회와의 다자협력을 통해 공존·번영 추진

3. 실행전략별 주요 내용

실행전략 1 정예 군사력과 전방위 억제능력으로 북한 도발 불용

□ **3축 방어체계 고도화**

○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위성체계 등 감시정찰 및 **정밀타격능력(Kill Chain), 방어능력(KAMD), 보복능력(KMPR)** 등 3축 방어체계 고도화

- 아울러 **재래식 전력에 AI·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유무인 복합체계를 발전**시키고, 소부대 단위의 전투 혁신 견인

□ **전방위 억제능력 확보**

○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효과적 운용을 통해 **확장억제 내실화**

-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을 작전계획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도상연습 등 연합 연습·훈련 강화

○ 한미 간 호혜적 관계에 기반하여, **군사·첨단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

○ 인구 감소·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전투 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을 위해 **총체전력 차원**에서 **국방개혁 로드맵** 마련 및 추진

-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군구조 개혁과 부대 임무 효율화, 민간 자원 활용, 예비전력 정예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개혁 추진

□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 **남북 상호간 적대적·대결적 행위 청산** 및 단계적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해 제도적·실질적 신뢰 구축

- **남북 군 통신 및 「9.19 군사합의」 복원,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군사적 신뢰 구축 진전

실행전략 2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병행

□ 북핵 대화 재개 여건 조성

○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와 한미 간 협의**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북미협상 촉진**

-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기반 위에 중·러 등 주변국의 건설적 역할 견인

□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한 비핵화 진전

○ **한미협의 下 단계적 비핵화 전략 마련** 및 이행 추진

-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및 상응조치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미국과 협의
- 비핵화 관련 대화 재개시, **단계적 합의· 동시행동**을 통해 합의 이행 촉진
- 한반도 평화·안정 및 북핵 문제 해결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지속 강화

□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 이행

○ **남북대화 및 북미협상을 병행 추진**하여,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 진전

- **▲비핵화-평화체제 ▲남북대화-북미협상의 선순환적 발전** 추진
-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4자 및 6자 협력 틀 가동** 추진

□ 국익 중심 실용외교 추진

○ **한미동맹을 포함한 주변 4국과 안정적 관계 발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조성 및 공고화

- **▲미·일**과 한반도 문제 관련 **각급에서 소통·공조 강화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 견인
- ▲우크라이나전 동향을 보면서 한반도 평화·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 확보**

실행전략 3 남북간 상호 존중과 실용에 기초한 화해 협력

□ 남북대화 재개

○ **남북 당국간 연락채널 복원**을 최우선으로 추진, 남북간 우발적 충돌 방지 및 재난·재해, 인도적 사안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당국과 민간,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남북 대화 재개** 추진

- 대화 재개시 수준별·분야별 남북회담을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남북 합의 사항의 실효적 이행 체계 구축

□ 다방면에서 호혜적 남북교류 추진

○ 민간교류 및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이러한 방향에서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등 정비

○ 민간단체·지자체·국제기구 등과 협력, 국제행사 등 계기를 활용하여 **체육·종교·문화 등 다방면의 민간교류 재개**

- ▲국제체육경기, 종교행사, 합동공연 등을 접목한 융합적 교류 추진 ▲겨레말큰사전·개성만월대 등 중단사업 재개 △기후 대응 등 인도적 협력

□ 남북 평화공존 제도화

○ 국내 대북·통일정책 추진기반을 제도화하고, **남북 합의를 통해 평화공존의 원칙·규범 등을 규정한 「남북기본협정」** 체결 추진

- ▲주요 남북 합의의 국회 논의 절차 진행 등 초당적 이행 기반 마련 ▲(가칭)「한반도평화통일기본법」 제정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안 마련

○ 국민 참여 및 소통을 확대·제도화, **국민이 공감하는 대북·통일정책** 추진

- **모든 국민에게 열려있고, 정부·국회·시민사회가 협업하는 사회적 대화** 추진, 갈등·쟁점 사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정책의 지속성 확보

실행전략 ④ 한반도 평화경제 구현으로 평화공존 및 공동번영의 미래 준비

□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수립·이행

○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남북이 동반 성장하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

- ▲남북 접경지역에서 한반도·동북아로 확장 ▲중단된 경협사업을 재개하고 미래 신사업 발굴 ▲우선순위·실현 가능성이 높은 초기 사업 선별 추진

* (대통령 6.25 기념사)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

□ 접경지역을 한반도 평화경제의 거점으로 조성

○ 남북간 군사적 긴장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구」** 및 **「DMZ 국제생태·평화관광협력지구」**로 개발

- ▲평화경제특구 신속 지정('26) 및 실효적 지원제도 마련 ▲DMZ 이남 접경지역을 '평화 올레길'로 조성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창출

- 접경지역의 평화·경제·생태가치 부각, **北 호응을 유도**하여 **남북협력** 추진

□ 경제협력사업 재개 및 다자협력 추진

○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관광, 철도·도로, 개성공단** 등 **중단된 남북경협사업의 발전적 재개** 추진

- 중단된 사업의 재개(re-opening)를 넘어, 한반도 평화경제와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을 진전시키는 새로운 협력사업으로 재설계(re-building)

○ **남-북-국제사회의 다자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북한이 국제협력에 호응하도록 유도하고, 남북 협력수요와 **미래 기술·산업을 접목한 新사업 추진**

- ▲관광 등 남·북·미 협력사업 발굴 ▲나진-하산 프로젝트(남·북·러), 두만강 개발계획(남·북·중·몽골·러시아) 등 기존 다자협력사업의 발전방안 마련

4. 주요 과제별 추진일정

과제명	추진기한						주관
	'25	'26	'27	'28	'29	'30	
1 정예 군사력과 전방위 억제능력으로 북한 도발 억제·대응							
· 감시정찰 위성체계 구축	▬	▬	▬				국방부
· 3축 방어체계 고도화	▬	▬	▬	▬	▬	▬	국방부
· 한미 국방당국간 정례협의체 운용(SCM, KIDD, NCG등)	▬	▬	▬	▬	▬	▬	국방부
· 국방개혁 로드맵 구축·추진	▬	▬					국방부
· 남북 군 통신선 복원 및 남북군사회담 재개	▬	▬					국방부 통일부
· 「9.19 군사합의」 복원 및 이행조치 추진	▬	▬	▬	▬			국방부 통일부
2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병행							
· 북핵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한미 전략 협의	▬						외교부
· 남북·북미관계의 선순환적 발전 추진	▬	▬	▬	▬			외교부 통일부
· 주요국(일·중·러 등) 협력 모색	▬	▬					외교부
· 단계적 비핵화 진전 추진 및 대미 협의		▬	▬	▬	▬		외교부
·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진전		▬	▬	▬	▬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 4자·6자 다자 협력틀 가동			▬	▬	▬	▬	외교부
3 남북간 상호 존중과 실용에 기초한 화해 협력							
· 전단, 확성기 등 남북간 적대행위 중단	▬						통일부 국방부
· 남북간 연락채널 복구를 통한 위기관리체계 복원	▬	▬					통일부 국방부
· 수준별·분야별 남북회담 정례화 및 제도화			▬	▬	▬	▬	통일부
· 종교·문화·체육 등 다양한 민간교류 지원	▬	▬	▬	▬	▬	▬	통일부
· 기후·재난·감염병 대응 등 남북간 인도적 협력 추진	▬	▬	▬	▬	▬	▬	통일부
· 국내 대북·통일정책 제도화(남북 합의 국회 절차 추진, 통일방안 발전안 마련, (가칭)「한반도평화통일기본법」 제정)	▬	▬	▬				통일부
·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위한 「남북기본협정」 체결 추진			▬	▬	▬	▬	통일부
4 한반도 평화경제 구현으로 평화공존 및 공동번영의 미래 준비							
·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수립, 평화·번영의 청사진 마련	▬	▬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 남북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 조성	▬	▬	▬	▬	▬	▬	통일부
·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개발	▬	▬	▬	▬	▬	▬	통일부 국방부
· 주요 남북경협사업 재개(교역, 관광, 철도·도로, 개성공단 등)			▬	▬	▬	▬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 남-북-국제사회의 다자협력 및 미래지향적 경협 발굴·추진			▬	▬	▬	▬	통일부 외교부

12 참여와 소통의 국정운영으로 국민통합의 정치 실현

1. 추진배경

□ 계엄·탄핵을 거치며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으로 민주헌정질서를 평화적으로 지켜냈으나 **정치적·사회적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

○ 민주주의의 회복 없이 민생과 경제의 회복도 어렵다는 점이 입증되었으나, 여전히 정치권의 불신과 반목이 시민 참여와 성숙한 공론형성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

※ 국민 92.6%가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 조사, '25.1월)

□ 성숙한 민주주의로부터 후퇴했다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국제 평가와 국가기구**에 대한 **국민 신뢰도 하락**

○ 최근 한국은 독재화를 겪고 있는 나라로 분류되는 추세로, 특히 **참여 및 숙의**, 표현의 자유, 정치문화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 배경

※ (이코노미스트 민주주의 지수) '20년 23위,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 '24년 32위,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하락(flawed democracy)

연도	한국 순위	민주주의 지수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정부작동	정치적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
2020	**23위/167개국**	8.01	9.17	8.21	7.50	7.50	7.94
2024	**32위/167개국**	7.75	9.58	7.50	7.22	5.63	8.82

※ (V-dem 민주주의 지수) '20년 자유민주주의 → '24년 선거민주주의

* V-dem은 정치체제를 선거/자유지수를 이용하여 그 수준/성격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권위주의, 폐쇄적 권위주의로 구분

연도	한국 순위	선거민주주의 지수	자유지수	평등지수	참여지수	숙의지수
2020	**17위/179개국**	21	17	25	39	17
2025	**41위/179개국**	45	34	26	44	48

※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지수) '20년 51% → '24년 38% (에델만 신뢰지수)

☞ **국민중심**의 **통합과 개혁**을 위해 **참여와 소통**을 국정원리로 제도화하고, **시민숙의**를 기반으로 한 **상호 존중**과 **신뢰**의 **협치 시스템** 구축

☞ **마을에서 국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참여와 숙의, 소통과 협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 전략** 마련과 체계 구축

2. 과제목표 및 전략체계도

□ ‘**성숙한 민주주의**’, ‘**완전한 민주주의**’ 수준의 **민주주의 지수 회복**

○ **민주주의 지수**를 **세계 10위권**으로 회복하고, 특히 지수가 낮은 참여, 숙의, 정치문화, 정부 분야의 지수 개선

□ **참여·소통의 제도화**로 **시민참여국가**의 기반 구축

○ **시민 참여 기반**의 **정책 및 정부 운영**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확대

○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국민과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숙의공론 활성화**

□ 시민사회와 국가기구의 **민주적 해결 역량**과 **국민통합 강화**

○ **헌법 및 시민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주권자 국민의 민주주의 역량** 강화

○ **정부·국회, 정부·시민사회** 간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협치 시스템** 구축

< 전략체계도 >

비전	**성숙한 시민참여국가, 국민주권·국민통합 정부 실현**				
목표	‘성숙’하고 ‘완전’한 민주주의로의 회복과 도약 (세계 10위권)	참여·소통의 국정운영과 숙의민주주의 정착	시민사회와 국가기구의 민주적 해결력과 국민통합 강화		
실행 전략	**1 참여와 통합을 위한 4대 종합 추진체계 구축**	**2 참여·소통의 일상화와 제도화**	**3 숙의 공론의 확대와 정착**	**4 민주시민·헌법 교육 활성화**	**5 국민통합과 개혁의 정치 실천**
	○ (시민참여) 국가시민참여위원회 ○ (국민통합) 국민통합위원회 ○ (사회개혁) 정부-정당-시민사회 소통협의체 ○ (여야협치) 정부-국회 및 여-야-정 협의체	○ 국민소통·민원플랫폼 구축·운영 ○ 주민자치권 확대 ○ 참여경로 확대 및 정책 책임성·투명성 강화	○ 정책 영역별 숙의공론 확대 ○ 숙의공론 제도 마련·운영 및 공론화 사업 추진 ○ 개헌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직접민주주의 강화	○ 학교 민주시민 교육 강화 ○ 공직·군장병 민주시민·헌법교육 강화 ○ 지역사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통합·개혁을 위한 정부-정당-시민사회 협치 ○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정리,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 ○ 통합을 저해하는 혐오·차별 방지

3. 실행전략별 주요 내용

실행전략 1 참여와 통합을 위한 4대 종합 추진체계 구축

□ **(시민참여 추진체계)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운영

○ 다양한 부처로 분산된 시민참여, 숙의, 민주시민교육 및 시민사회 활성화 업무를 전담하는 (가칭)**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추진

※ (가칭)「시민 참여와 숙의 및 시민사회 활성화에 관한 기본법」(약칭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추진

기능	국가시민참여위원회의 주요 업무(안)
시민참여 보장	•시민의 국정·공익활동 참여 종합 계획 수립·시행·평가·개선권고, 제도개선 추진
숙의공론 증진	•국가·지역·의제특성에 맞는 공론화 정책 연구·개발, 계획 수립·시행 •국가주요의제에 대하여 의제별로 공론화 위원회((가칭)국민공회) 구성·운영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기본원칙 수립, 교재·인력 개발, 실행체계 구축
시민사회 활성화	•풀뿌리 민주주의 생태계 구축 정책·계획 수립, 시민사회 지원·협력 업무

□ **(국민통합 추진체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실질화**

○ **다름의 인정**과 **존중**을 기반으로, 사회갈등*의 구조적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가는 **경청과 소통**의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 마련

* 5대 사회갈등 : 이념, 젠더, 경제적 양극화, 지역, 세대

○ **정견·세대·지역·성별·사회적 약자**의 고른 참여에 기초해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부처 협업체계** 강화 및 **대국민 보고회** 등 제안 실효성 확보

□ **(사회개혁 추진체계) 정부·정당·시민사회 소통협의체** 설치·운영

○ 정치·사회 개혁 정책에 관해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참여**하여 논의하는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 설치 추진

○ 정당과 시민사회가 추천한 **관련 전문가, 이해당사자, 부처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논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 마련

□ **(여·야 협치 추진체계)** 정부·국회 상설 협의체, 여·야·정 협의체 설치·운영

○ 주요 정책현안 및 입법·예산 등에 대하여 **당·정 사전협의, 여·야·정 협의체** 등 **정부·국회 간 협치체계** 제도화

실행전략 2 시민 참여 · 소통의 일상화와 제도화

□ **범정부 소통·민원 플랫폼**에 기반한 **국민 중심의 문제해결 제도화**

○ **'모두의 광장'** 및 **'국민신문고'**를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국민**과의 **소통 상시화 추진** 및 **국민**의 **정책 효능감 제고**

* 플랫폼에서 제기된 민원과 제안을 AI를 활용하여 원인분석 및 정책의제화

○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 **현장 중심으로 불편을 개선**하고, 인·허가 등 **복합민원**은 부서 칸막이 없이 **원스톱 처리** 등으로 **적극 해결**

□ **주민자치회 활성화 등 주민자치권 확대**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강화**

○ **읍·면·동 주민자치회** 등에 대한 **법적 근거***와 활성화 방안** 마련

* 주민자치회 기능·구성, 주민자치위원 정치적 중립, 지자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등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운영모델 마련 및 컨설팅, 마을기업·주민참여예산제 등 다양한 사업 연계 추진

○ **'주민 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실시** 등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 자지체 예산·결산안 공개, 주요 재정 정보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 **주민소환·주민발안·주민투표** 등 **주민 참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한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마련

* 주민소환투표권자 연령 18세 하향, 주민소환청구요건 및 확정·개표요건 완화 등

□ **국민의 국정참여 경로 확대** 및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 **정보공개 확대** 및 접근성 제고*를 통해 국민 **알권리 보장**

* 정보 비공개 사유 구체화, 정보목록·원문정보 공개 확대 등 정보공개시스템 개편

○ **정부위원회 구성**의 **다양화***와 **운영 내실화****로 정책 품질 향상

* 전문성과 함께 지역, 세대, 직능, 사회적 약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표성 반영
** 정부위원회 회의록, 예산집행 내용, 운영 실적 등을 공개

실행전략 3 숙의 공론의 확대와 정착

□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숙의공론의 확대와 정착

○ 중요한 정책 과제에 대하여 **숙의 공론을 통한 정책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와 소통 기반 확대**

○ 숙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집단의 균형있는 참여**를 확보하여 논의의 정당성과 대표성 확보

< 주요 정책 분야별 숙의공론 추진방안(안) >

- 국가교육 정책에 관한 (가칭)국민참여배심위원회 구성
-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가칭)기후시민회의 구성 및 사회적 합의 마련
-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숙의공론 정례화 추진
- 지속가능한 남북평화공존, 평화·통일방안 합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 지역·일터의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별·업종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
-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참여포털의 활성화, 청년 참여 플랫폼 제도화
- 국민통합위원회를 통한 5대 사회갈등 관련 대화의 장 마련

□ 숙의공론 제도 마련·운영 및 공론화 사업 추진

○ **국가·지역 현안과 의제 특성**에 맞는 **공론화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 마련 및 체계화

○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국가 주요의제**에 관해 **의제별로 공론화 위원회**((가칭)국민공회)를 구성하고, **숙의공론 프로세스 운영**

※ (가칭)국가시민참여위원회가 숙의공론 제도 마련·운영, 의제별 공론화 사업 수행

□ 개헌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직접민주주의 강화

○ **여·야·정 협치**와 **국민참여**에 기초하여 **헌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국민적 공감대 확보**

○ 국민주권 구현 및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국민발안제 도입**을 검토하고, **국민투표제 확대**

실행전략 4 민주시민 · 헌법 교육의 활성화

□ 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

○ **학생 참여형 시민·헌법·기후환경·생태전환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민교육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교육 활성화 지원

○ 전문가·교원·학생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교육의 목표·원칙** 및 **내용요소에 대한 합의 도출**을 추진하고, **시민적 가치**를 학습하는 **역사교육 활성화**

○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과 외 활동 전반에서 **학생의 자기주도성** 강화,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법률안·조례안 작성 및 국민·주민참여예산안 작성 프로그램 등의 운영으로 헌법·민주주의 체험 기회 마련 등

□ 공직사회와 군장병에 대한 민주주의·헌법 교육 강화

○ 공직 신규자 및 재직자 대상 기존 '공직가치·국정비전' 교육에 **시민의식, 민주주의 가치** 등을 내용으로 한 **헌법가치 교육 확대**

※ 헌법정신·시민의식·민주주의 가치 등 헌법 관련된 심화된 콘텐츠를 마련하고, 국가공무원 대상 특화 전문교육과정 신설 병행

○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에 대한 **장병(간부, 병) 및 군무원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대상별(부대·학교) 맞춤형 교육 시행

※ 외부인사를 포함한 TF에서 교육 커리큘럼을 정비하고, 오프라인 교육을 포함한 간부교육 의무화

□ 지역사회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 민주시민교육 전담기관((가칭)국가시민참여위원회) 중심으로 **교육원칙**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확산** 및 관련 기관·단체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민주시민 교육 관련 콘텐츠 및 시민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 전문기관·강사 기준마련 등

○ **학교 및 지역사회**에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념 정립 및 추진기반 정비, **지역 밀착형 교육** 추진

실행전략 5 국민통합과 개혁의 정치 실천

□ **통합과 개혁**을 위한 **정부-정당-시민사회 협치**

○ 민생 및 경제 관련 **여야 대선 공동공약** 이행 협의

○ **정당-시민사회 공동선언*** 이행 : 거부권 행사 민생법안 재처리,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 국민참여 개헌, 주요 사회개혁 의제 협의 등

*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 및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공동선언문('25.5.9)

□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정리** 및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

○ **과거사**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등을 통해 인권신장·국민통합 및 화합의 사회적 기반 구축

* 제3기 진실과화해위원회(진화위) 출범, 여수·순천 사건, 노근리 사건 등

○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하여 **합당하게 보상**하고 **예우**함으로써 정부의 책임과 의무 실천

*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고령·독거 보훈가족에 대한 맞춤형 복지 추진, 제대군인 군경력 인정 의무화 등

○ **'독립·호국·민주'**의 가치를 균형 있게 아우르는 **특별주기*** **기념사업** 추진

* 광복 80주년('25), 6·10만세운동 100주년('26),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10주년('29), 6·25전쟁 80주년, 4·19혁명 70주년, 5·18민주화운동 50주년('30)

□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혐오·차별 방지**

○ **혐오 표현 방지**를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및 전면적 대응, 혐오·차별 방지 법제화를 위한 공론장 마련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금지, 허위사실 유포금지 등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4. 주요 과제별 추진일정

과제명	추진기한 '25	'26	'27	'28	'29	'30	주관
1 참여와 통합을 위한 4대 종합 추진체계 구축							
· 시민참여기본법 마련 및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국조실 행안부
· 국민통합위원회 근거규정 개정							행안부
· 정부-정당-시민사회 간 사회개혁 소통협의체 설치							총리비서실
· 정부-국회의 협치 체계 규정 마련 및 협의체 구성							총리비서실
2 시민 참여·소통의 일상화와 제도화							
· 범정부 국민 정책 참여 디지털 플랫폼 구축							행안부 권익위
· 지능형 국민신문고 구축							
·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							행안부
·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마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							행안부
·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법률 정비							행안부
· AI기반 정보공개 시스템 마련							행안부
· 정부위원회 대표성 강화 및 운영 내실화							행안부
3 숙의 공론의 확대와 정착							
· 숙의공론을 위한 위원회 및 대화기구 구성							국교위 환경부 통일부
· 위원회 및 대화기구 운영							여가부 국조실
· 국가 주요의제에 대한 공론화사업 추진							국조실 행안부
· 개헌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직접민주주의 강화							국조실
4 민주시민·헌법 교육의 활성화							
· 학생 참여형 시민·헌법·생태환경 교육 체계 마련·확산							교육부
· 학교 시민교육 플랫폼 개편							교육부
· 국가공무원 대상 헌법 전문교육과정 신설							인사처
·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에 대한 장병 및 군무원 교육 확산							국방부
· 민주시민 교육 원칙 수립 및 지역사회 확산							국조실 행안부
· 학교·지역사회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확대							통일부
5 국민통합과 개혁의 정치 실천							
· 통합과 개혁을 위한 정부-정당-시민사회 협치							국조실
· 제3기 진실과화해위원회(진화위) 출범							행안부
·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 방안 마련							보훈부
· 혐오표현 대응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인권위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금지 등 근거규정 마련							여가부

V.
지역공약 추진방향

1. 현황 및 경과
2. 추진 원칙
3. 실천 방안

Ⅴ. 지역공약 추진방향

1 현황 및 경과

□ 이재명정부 지역공약은 **시·도별 공약**과 **우리동네 공약**으로 구성

○ **시·도별 공약**은 **광역공약 124개**와 **시·도 연설문 공약 164개**로 구성

○ **우리동네 공약**은 226개 기초지자체별 생활밀착형 과제 **1,260개**

□ 지역공약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능

○ 목적에 따라 **지역산업 혁신**, **삶의 질 제고**, **SOC 및 지역개발**로 구분*

* 시·도 공약 기준 지역산업 혁신 136건, 삶의 질 제고 73건, SOC 및 지역개발 79건

□ 국정기획위원회는 **지역공약의 중요성**을 인식, 면밀히 분석해 **이행방안 강구**

○ 정부, 지자체, 국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 수렴**

- 정부부처(7.3~4) 및 지방시대위(7.14) 간담회로 **균형성장 국정전략 논의**
- 시·도 광역지자체(7.7~8)와 4대 지방협의체(7.11)로부터 **지역현안 청취**
- 국회(7.15)·전문가(7.2)·시민단체(7.16)로부터 균형성장 관련 **정책제언 수렴**

○ **국가균형성장특위**를 중심으로 **시·도별 공약 구체화** 및 이행력 제고

- **특위**는 발표된 광역공약 및 연설문을 토대로 **공약-추진과제 초안 구성**
- **지자체**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공약-추진과제 구체화 방안** 제시
- **특위**는 **지자체 안**에 대한 국정과제 연관성,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부처 검토를 거쳐**, 공약을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로 재구성

* 세종특별자치시는 공약 내용을 감안하여 5대 공약, 10대 추진과제로 구성

○ **특위**는 **우리동네 공약관리**에 필요한 **기초사항**(유형, 지원 필요사항 등) **조사**

2 추진 원칙

□ **국정과제**를 토대로 지역공약 **시너지 제고**

○ 5극3특, 지역 성장엔진, 고른 삶의 질, K-농산어촌 등 **핵심 전략과 연계**

□ **중앙과 지방의 신뢰**에 기초한 **지역공약 관리체계** 마련

○ 지역공약 이행·관리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부처-지자체 간 협업체계** 마련

○ 체감 가능한 효과 창출을 위해 공약 관리 과정에서 **주민 의사 반영 노력**

□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 이행 및 **투자 재원** 다양화

○ **국정과제 상 핵심과제**를 우선 검토하고 **지자체의 정책 우선순위**도 고려

○ 국가, 지자체의 재정 투입 외에 **공기업**과 **민간 역량**도 적극 활용

3 실천 방안

1 이행체계

□ (**총괄**) **대통령실 자치발전비서관** 및 **지방시대위원회**가 총괄·조정

○ **국정과제와 연계**한 공약의 질서 있는 추진, 국가-지자체 간 **이해 조정**

□ (**중앙-지방 연계**) **지방시대위원회** 내 '**지역공약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약이행 현안 및 대안 공동 모색

2 이행지원 방안

□ (**계획반영**) **「균형발전법」** 제6조의 (가칭)'**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5년 단위)'에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 반영** 및 **매년 시행계획**으로 이행 방안 구체화

□ (**예산지원**) 지역공약 관련 예산이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자체-부처 논의를 거쳐 **재정당국**에 의견 제시

□ (**이행점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반기별 점검** 및 **컨시어지**(통합 지원) 수행

3 시·도별 공약 유형별 추진방안

□ **계속사업 및 제도개선 : 즉시 추진**

○ (**계속사업 등**) 연차별 **적정 예산 소요** 반영 노력

- **계속사업** 및 **사전절차**(예타, 인허가 등)가 완료된 **신규사업** 중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은 추후 **예산 확보**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 노력

○ (**제도개선**)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 **신속한 협의**를 거쳐 추진

-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필요시 이해관계 조정, 공약 보완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검토

□ **지역산업 혁신 및 삶의 질 제고 : 구체화 선행**

○ (**구체화**) **추진과제**는 타당성 용역, 부처 컨설팅 등을 통해 **실행가능한 내용**으로 **보완**(규모조정, 기관협의 등)하고 **균형성장 종합계획**으로 관리

○ (**단계적 추진**) **파급효과**가 크고, 계획이 **성숙된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

□ **SOC, 기관 설치·이전 : 사전 행정절차 이행**

○ (SOC) **국가계획 반영**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예타 등 후속절차** 추진

-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은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추진

-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은 부처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수정** 등 대안 마련

○ (**기관설치·이전**) **국가 전체 관점**에서 필요성·형평성·중복성 등 검토 선행

- 검토안은 법령 제·개정,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이행

< **우리동네 공약 이행관리 계획** >

○ 지방시대委 지역공약특위 내 '**우리동네 공약 분과**'를 설치하여 전담 관리

○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통해 **시·도별 공약에 준하는** 체계적 지원 추진

○ 공약 유형*에 따라 **중앙정부-시·도-시·군·구 간 역할 분담** 명확화

* 국책사업, 국고보조사업, 초광역권사업, 지자체 사업(지방이양 사업 포함) 등

□ 17개 시도별 공약 및 추진과제

	7대 공약 – 15대 추진과제
서울	1. 서울을 금융허브·국제업무지구 특화도시로 조성하여 '글로벌 경제수도'로 도약시키겠습니다
	① 국제 금융허브 조성(여의도)
	② 국제 비즈니스 허브 조성(용산)
	2. 미래산업을 육성하여 서울의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 문화수도 도약으로 3천만 관광객을 유치하여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③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홍릉·상계)
	④ 도심 제조업 밸리 조성(세운상가·성수·남대문·동대문)
	⑤ AI·IT 산업밸리 조성(구로·금천·테헤란로·양재)
	⑥ 세계 문화콘텐츠의 중심, K-콘텐츠 산업 인프라 확충(상암·도봉)
	⑦ 서울 MICE 산업 경쟁력 강화
	3. 철도 지하화, 도로 지하화, 경전철 재추진으로 교통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⑧ 철도 지하화 적극 추진
	⑨ 고속도로 지하화 적극 추진
	⑩ 경전철 재추진
	4. 수도권 올패스로 누구나, 수도권 어디든,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⑪ 수도권 올패스 추진
	5.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⑫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⑬ 유휴 국공유지 생활SOC 복합공간 조성
	6. 서울시민 누구나 누리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⑭ 거점 공공의료원 확충 및 필수·응급(어린이,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강화
	7. 청년일자리, 대학에서 늘려가겠습니다
	⑮ 대학과 협력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육성
부산	1.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해양강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①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전
	2. 100대 기업 유치로 부산 경제를 활성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②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 부산 이전, 해사법원 신설 추진
	③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추진
	3. e스포츠 산업을 부산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워갈 'e스포츠 진흥재단', 'e스포츠 메모리움(박물관)'의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④ 부산을 e-스포츠 중심지로 육성
	4.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육해공 트라이포트로 부산을 육성하겠습니다
	⑤ 가덕도 신공항과 동남권 철도 사업 차질 없이 준비
	⑥ 북극항로 개척으로 부울경을 육해공 물류 융합 중심지로 육성
	⑦ 북극항로 전용 선박건조 지원, 극지 해기사 등 인력 양성
	⑧ 극지항로 최적화 인프라 구축
	⑨ 트라이포트 배후단지에 글로벌 소부장 산업 집적지 육성
	5.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부울경 30분대 생활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⑩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기 개통
	⑪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지원
	⑫ 부전역을 동남권의 중심역으로 격상
	⑬ 거가대교 민자사업 재구조화로 이용자 부담 완화
	6. 경부선 철도 단계적 지하화로 단절된 부산의 도심을 잇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⑭ 경부선 철도 단계적 지하화
	7. 공공기관 재배치로 국가균형발전 선도 도시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⑮ 공공기관 부산으로 이전

	7대 공약 – 15대 추진과제
대구	1. '대한민국 AI로봇 수도'로 거듭나겠습니다
	① 대구AI로봇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딥테크(첨단,혁신기술) 유니콘 육성
	2. 미래모빌리티 산업으로 전환,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②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재활용 리사이클링 기술개발지원
	③ 이차전지 규제 합리화,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④ 대구경북 자동차부품업체 친환경차 첨단부품 업종으로 전환지원
	⑤ 자동차부품업체 친환경차 전환 금융 및 세제, 교육지원
	3. 동북아 최고,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으로 대구 청년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⑥ 신약 개발, 혁신형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신산업 육성
	⑦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4.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문화예술의 도시,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⑧ 글로벌 문화예술 허브 조성
	5. 대구를 교통 허브로 성장시키겠습니다.
	⑨ 도시철도 순환선(5호선) 단계별 건설
	⑩ 철도인프라 확충 *신공항 순환철도(대구-신공항-의성-군위-영천-대구), 대구경북 대순환철도 (대구-구미-김천-문경-영주-봉화-울진-포항-영천-대구) 추진 및 대구광주 달빛철도 조속 추진
	⑪ 대구 도심구간 경부선 철도 지하화 단계적 추진
	⑫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지연 해소 및 원거리 노선 공항 조성
	6. 염색산단 이전, 취수원 다변화 등 주민 숙원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⑬ 대구 섬유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도화 지원
	⑭ 취수원 다변화
	7. 독립·호국·민주의 성지 대구, 혁신의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⑮ 독립·호국·민주 역사 교육 및 홍보지원
인천	1. 인천공항경제권을 K-콘텐츠, 관광, 문화, 첨단산업이 융합된 글로벌 허브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① 영종 항공산업특화단지 조성
	② 세계 문화콘텐츠의 중심, K-콘텐츠 산업 인프라 확충(청라·영종)
	③ 인천 MICE 산업 경쟁력 강화, UN 산하기구 등 국제기구 유치·집적(인천 송도)
	2. 인천을 글로벌 바이오 혁신과 해운항만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④ 송도·영종도 세계적인 바이오 중심지로 육성
	⑤ 공항-항만-배후도시 연계 글로벌 물류 허브 대도약, 인천 해사법원 신설 추진
	3. 인천 5개 지역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도시의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⑥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계획도시를 미래형 스마트 도시로 구축
	⑦ 남동공단 등 인천 노후산단 스마트그린산단 전환
	4.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지원, 부평 캠프마켓 주민 친화형 공원 조성 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⑧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지원
	⑨ 부평 캠프마켓, 인천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주민 친화형 공원으로 조성
	5. 경인철도 및 인천대로·경인고속도로 단계적 지하화와 사통팔달 교통혁명으로 인천의 교통주권을 확보하겠습니다.
	⑩ 철도 인프라 구축 * GTX-B 및 연장 노선 차질없이 추진, GTX-D·E 단계적 추진, GTX 플러스 적극 검토, 인천-경기-강원 경강선 연결
	⑪ 남북협력 대비 '동서평화 고속화도로' 적극 추진
	⑫ 경인철도 및 인천대로(서인천IC-공단고가교), 경인고속도로(신월IC-청라) 단계적 지하화
	6.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3개 신설 자치구(제물포·영종·검단)의 성공적 출범과 정착을 위해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⑬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전환
	⑭ 3개 신설 자치구(제물포·영종·검단)의 성공적 출범과 정착 지원
	7. 공공의대 및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검토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⑮ 공공의대 및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검토

	7대 공약 – 15대 추진과제
광주	1.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① 고성능 반도체 집적 '국가 AI 컴퓨팅센터' 등 광주 AI 산업 인프라 조성 ② AI 집적단지와 미래 모빌리티 부품 클러스터 조성 ③ RE100 산업단지 구축 ④ 주민 참여형 '햇빛·바람연금' 확산
	2.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⑤ 광주 군 공항 이전 지원
	3. 광주를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⑥ 광주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로 육성
	4.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3.0시대'를 열겠습니다
	⑦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고도화 ⑧ K-문화컨텐츠 허브 조성
	5. 영산강, 광주천 수변 활력도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⑨ 영산강 유역 물순환 체계 구축 ⑩ 시민 친화적 '광주천 도심하천 생태복원'
	6.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인프라 구축을 통해 글로벌 첨단기술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울산·광주·강원 공동 추진)
	⑪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인프라 구축
	7. 호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발전과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⑫ 호남권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한 에너지 경제공동체 구축 ⑬ 첨단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등 호남권 메가시티 지역발전 산업 육성 ⑭ 철도 인프라 구축 * 호남고속철 2단계 조기완공, 경전선 전철화 지원, 광주대구달빛철도 조속추진, 광주-나주, 광주-화순 광역철도 연장 신속 추진 ⑮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고흥-광주-전주-세종) 국가계획 반영 지원
대전	1. 대전을 과학기술 수도로 발전시키고, 혁신도시를 조속히 완성하여 명품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① 대전혁신도시 지역 경쟁력 고려 공공기관 이전 추진 ②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 강화 ③ 인재양성 인프라 지원 ④ 연구원, 기술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 위한 성과지원 확대 ⑤ 무너진 연구환경 생태계 복원 ⑥ 대덕연구특구 AI·우주산업 중심지 육성
	2. 광역교통망 조기 완성 및 CTX-A 광역철도 추진을 통해 메가시티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⑦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적기 착공 ⑧ 대전 도심 철도지하화 단계적 추진 ⑨ CTX-A 광역철도 추진
	3. 도심 연결도로 신설 및 수소트램 조기 개통을 통해 교통난을 해소하겠습니다
	⑩ 도심 연결도로 신설 및 수소트램(대전 2호선) 조기 개통
	4. 글로벌 테크아트 허브를 구축해 신한류의 중심을 만들겠습니다
	⑪ 글로벌 테크아트 허브 구축
	5.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⑫ 교정시설 이전 등으로 도시기능 재창조 ⑬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 지원
	6. 3대 하천 갑천 월평습지 자연생태 보전 및 녹지 조성을 통해 도심 속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힐링도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⑭ 3대 하천 갑천 월평습지 자연생태보전 및 시민힐링 녹지 조성
	7.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⑮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

	7대 공약 – 15대 추진과제
울산	1.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어린이치료센터를 특화한 울산의료원을 설립하겠습니다
	① 어린이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설립
	2. 국가 고(高)자기장연구소를 설립하여 신소재 분야 첨단산업을 창출하겠습니다 (울산·광주·강원 공동 추진)
	②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설립
	3. 반구천암각화 유네스코 등재로 반구천 일원을 세계적인 자연문화유산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③ 반구천 세계유산 역사문화공간 조성
	④ 반구천암각화 보전 지원
	4. 북극항로시대를 대비해 울산항을 오일·가스 등 고부가 에너지 물류 신북방 전진 기지로 만들겠습니다
	⑤ 고부가 에너지 물류 중심의 울산신항 개발
	5. KTX산천 노선 강화 등으로 태화강역 시대를 열겠습니다
	⑥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지원
	⑦ 동남권 철도 사업 차질 없이 준비
	⑧ 태화강역 KTX 노선 강화
	⑨ 태화강역 활성화 지원
	6. 울산의 자동차·석유화학·조선산업을 미래 친환경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⑩ 완성차 기업·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
	⑪ 맞춤형 R&D와 고용 안전망 제공
	⑫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구조 전환 지원
	⑬ 조선산업 자율운항, 친환경 선박기술 개발 지원
	⑭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 조성 추진
	7. 세계적 규모의 문화·엔터테인먼트 파크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⑮ 문화엔터테인먼트 파크 조성 지원
세종	1.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여 대한민국 대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조기 추진
	②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조기 추진
	③ 국회본원, 대통령집무실 이전 사회적 합의로 추진
	④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 조속 재개
	2. 광역교통망 CTX 건설로 세종과 충청을 하나로 연결하는 충청권의 핵심 교통허브를 구축하겠습니다
	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적기 착공
	3. 산업·주거·문화가 융합된 기업혁신 허브를 조성하겠습니다
	⑥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 연계, 스마트·디지털 행정허브로 조성
	4.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세종시를 만들겠습니다
	⑦ 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 확대
	⑧ 세종시 전역에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
	5. 미래의 행정수도에 걸맞는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여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⑨ 행정수도에 걸맞는 국가상징공간 조성
	⑩ 행정수도에 걸맞는 공공 인프라 구축
경기	1. 경기도를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고,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①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성남-수원-용인-화성-평택-안성) : AI반도체 설계·생산·연구개발까지 완결형 생태계 구축
	2.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② 경기 테크노밸리(판교·광교·안산·양주·고양 등) 특화발전 지원 : IT·게임·자율주행·바이오·방산 등
	③ 경기 고양, 판교, 부천, 안산, 의정부, 파주 등에 출판, 웹툰, 게임 영상 음악 등 K-콘텐츠 핵심 산업기반 강화
	④ 경기 MICE 산업 경쟁력 강화

	7대 공약 – 15대 추진과제
	3. 철도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촘촘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⑤ 철도지하화 적극 추진
	⑥ 철도교통망 구축 * GTX-A·B·C 및 연장 노선 차질없이 추진, GTX-D·E·F 단계적 추진 및 GTX플러스 적극 검토, 인천-경기-강원 경강선 연결, 경기 북부 KTX(파주)/SRT(양주) 연장 운행
	⑦ 도로교통망 구축 * 남북협력 대비 '동서평화 고속화도로', '서울-연천 고속도로' 적극 추진
	4.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⑧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경기(수원·용인·안산) 노후계획도시를 미래형 스마트 도시로 구축
	⑨ 경기 노후산단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재정비
	5. 경기 북부 평화 경제 기반을 조성하여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⑩ DMZ 생태·관광·협력지구 개발
	⑪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시행을 통한 주민 보상 신속 추진 및 방음시설 설치 지원
	⑫ 미군 반환 공여지·주변지역 주민 국가지원 확대
	⑬ 경기 북부 국가주도 산업과 SOC 대개발: 평화경제특구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 적극 검토, 인프라 확충, 산업역량 강화, 신사업 육성
	6. 인구 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연령별 지원을 확대하고, 역사와 문화를 향유하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⑭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7. 경기 동북권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보전과 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하겠습니다
	⑮ 경기 동부 경제적 기반 확대 및 수도권 규제 합리적으로 조정
강원	1. 바이오 등 강원도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키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① 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②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
	2. 연구개발특구 등 권역별 첨단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③ AI·디지털 기반 첨단 의료복합 산업 육성(춘천·원주·강릉)
	④ 반도체 교육·소재·부품 산업 육성(춘천·원주·강릉)
	⑤ 폐광지역 성장 기반 구축(태백·삼척·영월·정선 등) : 청정에너지, 의료, 관광 등 미래산업 육성
	3. 사통팔달 1시간대 강원교통망 구축으로 강원발전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⑥ 철도교통망 확충 *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동해북부선(강릉제진) 적기 완공, GTX-B(마석[-가평-춘천]) 춘천연장, GTX-D(김포·인천~팔당·원주) 원주연장 적극 추진, 강원내륙선(원주철원), 홍천-용문철도 적극 추진
	⑦ 도로교통망 확충 * 강원내륙고속도로(양구-영월-영천), 동서평화고속도로(강화-고성) 적극 추진
	4. 접경지역의 인구감소와 경제침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⑧ 평화경제특구(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등)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 적극 검토 : 인프라 확충, 산업역량 강화, 신사업 육성
	⑨ 접경지역 주민 지원 :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시행, 방음시설 설치, 군사시설보호구역 합리적 조정, 작전상 불필요한 군 방호벽 철거
	⑩ 접경지·DMZ 생태·관광·평화 콘텐츠 개발
	5. 지방자치·분권의 출발, 강원특별자치도가 앞장섭니다
	⑪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 통과 지원, 강원형 자치모델, 교육·산업·국토계획·환경 등 실질적 권한 이양, 강원 주도 산업·인재육성
	6. 닥터헬기·강원형 소방헬기 도입과 은퇴자 공동체 조성으로 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⑫ 최고 수준 강원형 통합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닥터헬기 추가 도입(영서-춘천, 영동-강릉), 산간지역 응급이송 체계 구축, 소방헬기 확충 산불·재난대응 능력 대폭 강화
	⑬ 강원형 골드타운 조성 및 은퇴자 정주단지 조성 : 춘천·원주·평창 등 미니 신도시형 은퇴자 정주단지 조성, 주거·의료·문화·일자리를 갖춘 복합 커뮤니티 조성
	7. 호수·해양레저·산림휴양·국제관광특구 등으로 미래형 관광 허브를 조성하겠습니다
	⑭ 올림픽 유산 활용 K-문화·스포츠 복합 관광지 조성 : 평창·강릉 등 K-팝·스포츠·자연 융합형 체험 관광지 조성
	⑮ 동해안과 강원 등 세계적 관광특구 육성 : 복합 해양레저, 산림휴양, 의료·힐링 관광 개발

	7대 공약 – 15대 추진과제
충북	1.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①청주공항 민간 전용활주로 신설하여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2. 청주교도소 이전을 통해 교육문화특구를 조성하겠습니다
	② 청주교도소 이전 ③ 교육문화특구 조성
	3. 다목적방사광가속기 활용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④ 다목적방사광가속기 활용 산업클러스터 구축
	4. 충북을 바이오첨단산업단지로 육성하겠습니다
	⑤ 충북혁신도시 중부내륙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 ⑥ K-바이오 스퀘어 조기 조성 ⑦ 글로벌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육성 ⑧ 이차전지, 반도체 산업 초격차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
	5. 국토의 중심에서 수도권과 중부·남부권을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⑨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충남서산-충북청주-경북울진) 조기 확정 ⑩ X자형 강호축 철도망 구축 ⑪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적기 착공 ⑫ 수도권 내륙 광역철도 조속 추진
	6. 물이 살아있는 미호강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⑬ 미호강 프로젝트 도민의 뜻모아 추진, 수질개선 및 관광·휴양지 조성
	7. 충북 내륙 휴양관광벨트 완성을 위한 관광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⑭ 충주호와 단양8경 호반 관광·휴양벨트로 연결 ⑮ 소백산-속리산-민주지산 등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 지원
충남	1. 수도권 1시간 생활권, 동서남북 종횡무진 원활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충남서산-충북청주-경북울진) 조기 확정 ② GTX 천안, 아산 연장 조속 추진 ③ CTX-A 적극 추진 ④ 제2 서해대교 건설 적극 검토
	2.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국방으로 이어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⑤ 국제경쟁력, 생산성 갖춘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 산업의 메카로 조성 ⑥ 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 유치하여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 지원
	3. 백제고도, 금강권역 명소화로 세계인이 찾는 역사문화생태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⑦ 백제고도 역사문화 도시 조성 ⑧ 금강권역 생태관광 도시 조성
	4. 충남 친환경에너지 핵심거점 조성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겠습니다
	⑨ 보령, 태안,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를 태양광, 풍력, 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 전환
	5. 서해안권 해양생태 복원으로 명품 해양관광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⑩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및 해상교량 건설 ⑪ 서천 브라운필드, 재자연화로 생태관광 명소 탈바꿈 ⑫ 서산 부남호, 간월호 해수유통으로 생태계 복원 및 해양신도시 지원 ⑬ 금강하구 해수 유통으로 자연성 회복지원
	6. 충남의 공공의료 및 치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⑭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인프라 확충
	7. 지역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끌겠습니다
	⑮ 충남혁신도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

	7대 공약 – 15대 추진과제
전북	1.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K-컬처 메카로 육성하고, 초광역권 연결망 확대로 글로벌 전북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①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전폭 지원
	② K-컬처 메카 육성
	2. AI 연계 융복합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으로 대한민국 미래산업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③ AI 기반 농생명 융복합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
	④ 군산 조선소 재도약 및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3. 새만금을 풍력·태양광·조력 에너지 기반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새만금 SOC 조기 완성을 통해 전북의 위대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⑤ 새만금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이차전지 기업 유치 지원
	⑥ 해상풍력·태양광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조성
	⑦ RE100 산업단지 조성
	⑧ 새만금 SOC 조기 완성
	4. 첨단정밀농업육성과 푸드테크 혁신, 치유농업 확대 등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육성하겠습니다
	⑨ 푸드테크와 스마트농업 기반 국가식품클러스터 고도화
	5. 청년이 모이는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를 조성하고,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⑩ 전주를 제3 금융 중심지로 추진
	⑪ 전북에 국립의대 설립으로 인력양성·의료 사각지대 해소
	6. 사통팔달 교통·물류 전북광역권 인프라 구축으로 전북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⑫ 철도인프라 구축 * 전라선 고속철도 신속 추진, 광주-대구 달빛철도 조속추진, 서해선 철도 고속화 추진(군산-새만금-목포 연결추진)
	⑬ 도로인프라 구축 *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고흥-광주-전주-세종) 국가계획 반영 지원, 전주-대구 고속도로 조속 추진,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 지원, 부안~고창 노을대교 착공
	7. 재생에너지 확대로 생명과 자연이 조화로운 탄소중립 선도 미래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⑭ 에너지고속도로 및 주민참여형 '햇빛·바람 연금' 확산
	⑮ 내륙 생태·전통·농촌 관광 활성화
전남	1. 공공의대 설립 등 전남도민의 건강과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① 전남에 국립의대 설립으로 인력양성·의료 사각지대 해소
	2. 여수석유화학산업 대전환을 통해 에코산단,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② 여수·광양산업단지를 친환경·고부가산업으로 전환
	3.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광 집중육성으로 신재생 에너지 허브 전남을 만들겠습니다
	③ 해상풍력, 태양광 재생에너지 기반 신산업 육성
	④ 주민 참여형 '햇빛·바람연금' 확산
	⑤ 에너지고속도로로 주요 산업단지 연결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4. 미래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⑥ 화순 백신 특구를 백신·항암·면역 중심지로 도약
	⑦ 미래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5.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 육성 및 초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⑧ 철도교통망 확충 * 호남고속철 2단계 조기 완공, 전라선 고속철도 신속 추진, 서해선 철도 고속화 추진(군산-새만금-목포 연결 추진), 경전선 전철화 지원, 광주-대구 달빛철도 조속 추진, 광주-나주, 광주-화순 광역철도 연장 신속 추진
	⑨ 도로교통망 확충 *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고흥-광주-전주-세종) 국가계획 반영 지원, 서남해안 일주 관광도로와 완도·고흥 연결 지원
	⑩ 광주 군 공항 이전 지원

	7대 공약 – 15대 추진과제
	6. 미래 농수축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⑪ AI 농업, 친환경 농기계 도입
	⑫ 스마트팜, 자원 순환형 축산시스템
	⑬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7.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문화 허브를 조성하겠습니다
	⑭ 서남해안 해양·치유 관광, 내륙 생태·전통·농촌 관광 활성화
	⑮ 남해안의 해양·문화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
경북	1. 대구경북신공항 스마트 물류 단지 조성, 영일만항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① 대구경북신공항 스마트 물류 단지 조성
	② 포항이 북극항로 기항지 되도록 항만확충 사업 지원
	2. 세계로의 도약 경주APEC 성공적 개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③ 회의장, 숙소 리모델링, 미디어센터 등 인프라 확충지원, 경주APEC이 지역경제 회복의 계기 되도록 준비, 민주주의 선도국 위상 회복
	3. 미래 신성장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④ 한국형 바이오 백신산업 클러스터 육성
	⑤ 농업, 의료, 바이오헬스, 식품 등 바이오 전후방 산업 육성
	⑥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의료 소외지역 경북 북부권 의료서비스 강화
	4. 이차전지·미래차, 녹색철강·수소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⑦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재활용 리사이클링 기술개발 지원 : 이차전지 규제 합리화,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⑧ 대구경북 자동차부품업체 친환경차·첨단부품 업종으로 전환지원 : 자동차부품업체 친환경차 전환 금융 및 세제, 교육지원
	⑨ 포항 수소철강 신소재 특화지구 조성·발전 : 수소환원 제철지원 수(水)전해 수소생산 설비 산업 육성
	5. 영남의 생명줄 낙동강을 살리고, 대형산불재난에 대응하겠습니다
	⑩ 영남의 생명줄 낙동강 살리기
	⑪ 대형산불재난 대응체계 전면 재구축
	6.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설립 검토 및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지원하겠습니다
	⑫ 경북 의과대학 설립 및 상급 종합병원 유치 지원
	7. 동서남북 사통팔달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⑬ 통합신공항 사업추진 지연요소 조속 해결 및 울릉공항 조속한 완공과 안전성 확보 지원
	⑭ 철도인프라 구축 * 신공항 순환철도(대구-신공항-의성-군위-영천-대구), 대구경북 대순환철도(대구-구미-김천-문경-영주-봉화-울진-포항-영천-대구) 추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울진-문경-천안-서산) 신속 추진, KTX(이음) 구미역 정차
	⑮ 도로인프라 구축 * 남북 9축(경북 영천-청송-영양-봉화-영월-정선-평창-홍천-인제-양구), 남북 10축(영덕-삼척) 고속도로 국토부 계획 반영
경남	1. 광역GTX망 구축 등 부울경 30분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①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기 개통
	②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지원
	③ 거가대교, 마창대교 등 민자사업 재구조화로 이용자 부담 완화
	④ 동남권 철도 사업 차질 없이 준비
	2. 스마트조선·해상풍력 특화단지 조성으로 해상풍력의 전진기지를 만들겠습니다
	⑤ 고부가가치 선박 경쟁력 강화
	⑥ 중소형 조선사 선박금융 지원 확대
	⑦ 해상풍력 특화단지 조성

	7대 공약 – 15대 추진과제
	3. 경남의 제조업 명예를 회복시키겠습니다
	⑧ 경남산업단지에 AI 기반 첨단스마트 공장 확산
	⑨ 중소기업 AI 활용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4. 경남의 신성장동력을 키워가겠습니다
	⑩ 경남을 글로벌 G4 방산 집적지로 육성
	⑪ 동북아 우주 항공산업 허브 도약
	5. UN국제물류센터 유치 지원 등으로 산업도 성장하고 세계적 위상도 높이겠습니다.
	⑫ 트라이포트 배후단지를 물류 융합 중심지로 육성
	⑬ UN 국제물류센터 유치
	6. 경남 국립청소년수련원 설립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미래를 대비하겠습니다
	⑭ 경남 국립청소년수련원 설립 지원
	7.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 지원으로 문화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⑮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 지원
제주	1. 2035 탄소중립을 목표로, 제주를 청정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 혁신 선도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① 해상풍력·태양광 기반 청정 전력망 구축
	② 전기차 100%, 탄소제로 주택 보급
	③ '햇빛·바람 연금'으로 에너지 수익 환원 및 세계적 자원순환 혁신 선도지역 조성
	2. 제주를 글로벌 워케이션 및 스포츠·해양레저 허브로 육성하여 제주 관광의 부가가치를 한층 높이겠습니다
	④ 요트·서핑 등 해양레저 인프라 확대, 국제 전지훈련센터, 재활 클리닉 조성으로 스포츠·해양레저 허브 육성
	⑤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읍면동 특화 관광 콘텐츠 연계
	⑥ 글로벌 워케이션 인프라 구축
	3. 의료기반 확충으로 도민 건강을 지키고, 제주를 체류형 힐링 치료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⑦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격상 추진
	⑧ 천연 바이오 자원 DB화, 신약 개발 기반 조성
	⑨ 제주형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 완성
	4. 제주 농·어업을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고, 1차산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⑩ 디지털 농업 플랫폼 구축
	⑪ 농산물 스마트 가공센터 적극 지원
	5. AI 융복합 인재 양성 등으로 제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이 정착하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⑫ AI 융복합 인재 양성 등 산업 전환 뒷받침
	⑬ 제주경제 활력 제고로 청년이 찾는 제주 조성
	6. 물류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 물가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⑭ 해상운송비 부담 완화 정책 병행 추진
	7. 4·3의 명예회복과 세계화를 통해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⑮ '제주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과 평화의 섬 조성

VI.
재정지원 계획

1. 개요
2. 재정투자 계획
3. 향후 계획

Ⅵ. 재정지원 계획

1 개 요

□ (의의) 주요 공약과 이를 토대로 한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 뒷받침

○ 국민주권정부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주요 공약**을 **선정**하고, **5년 시계** 하에서 **추진시기·투자규모** 등을 **구체화**하여 **재정투자계획** 수립

○ **새정부 재정운용**의 **중점 투자방향** 및 **투자 우선순위**를 사전에 제시하여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세제개편** 시 **준거**로 활용

⇨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임기 內**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는 데 **재정역량**을 **집중**

□ (추진방향) 추가 재정부담 없이, 재정투자계획 및 재원대책 마련에 중점

○ (대상사업) **대규모 재정수반** 공약,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공약 등 **중요도**를 고려하여 **주요 재정사업(군) 선정**

- 그 외 공약과 관련된 사업은 **’26년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기존 재원 범위 내에서 **최우선 반영**

○ (재정투자계획) **5년간**(’26~’30년) **국정과제 이행**에 **추가로 소요되는 투자액** 산출

- **신규사업**은 **5년간 투자액 전액**을, **계속사업**은 **’25년 예산 대비 5년간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을 소요재원으로 추계

○ (재원대책) **재정**에 **추가부담 없이 국정과제**에 대한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입 확충** 및 **재정혁신**(지출구조조정 등) 노력 병행

-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정부재정 외에도 **민간투자**(PPP), **연기금 벤처투자** 등 **민간 투자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

2 재정투자계획

1) 전체 모습

(단위: 조원)

재정투자계획(안)	
◇ 합계	210
< 재정지출 >	178*
❶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1.3
❷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54
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60
❹ 기본이 튼튼한 사회	58
❺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5.2
< 지방이전 >	32

재원조달계획(안)	
◇ 합계	210
❶ 세입확충	94
❷ 지출절감(지출구조조정 등)	106
❸ 민간 투자재원 활용	10

* 주요 재정사업 중 '25년 추경에 반영된 4.9조원 포함(예: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역사랑상품권 등)

□ **(투자규모)** '25년 예산 대비 **5년간**('26~'30년) **210조원** 추가 지출

○ **(재정지출)** 핵심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5대 분야 주요 재정사업(군)에 178조원 투자

○ **(지방이전)**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감안,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교부세(금)* 증가소요 등 지방재정 32조원 확충

* 내국세의 40.03%(지방교부세 19.24% + 교육교부금 20.79%)

□ **(재원대책)** 세입확충, 지출절감 등 **추가 재정부담 없이 210조원** 조달

○ **(세입확충)** 前정부 감세 정상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제개편, 성장을 통한 세입 확충, 조세행정 효율화, 세외수입 등 ⇨ 94조원

○ **(지출절감)** 관행적·낭비성 지출 절감 등 지출구조조정, 국정과제 이행 관련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 ⇨ 106조원

○ **(민간 투자재원)** SOC 등 필수인프라 조기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확대, 연기금 벤처투자 ⇨ 10조원

2) 재정투자계획

(단위: 조원)

구분	'25년 본예산	'26~'30 총순증	비고
【 합 계 】	75.5	210	▸ '25년 추경 4.9조원 포함
< 재정지출 >	75.5	178	
1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3.5	54	❶ AI 3대 강국 도약 +25조원 ❷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22조원 ❸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7조원
2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17.6	60	❶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15조원 ❷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33조원 ❸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12조원
3 기본이 튼튼한 사회	50.6	58	❶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5조원 ❷ 내 삶을 돌보는 복지 +24조원 ❸ 인구위기 극복과 창의교육 +17조원 ❹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9조원 ❺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3조원
4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3.8	6.5	❶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1.3조원 ❷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5.2조원
< 지방이전 >	-	32	

1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54조원

○ AI 인프라 확충, AI 원천·융합 기술 및 인재 양성,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AI 혁신기업 육성 등 AI 3대 강국 도약

○ 차세대 전략기술 R&D, 스마트 제조혁신, 年 40조원 규모 벤처투자 조성 등 벤처 4대 강국 구현을 통해 산업 르네상스 지원

○ 녹색금융, 무공해차 보급 등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실현, 태양광·풍력 중심 에너지 전환, '분산형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2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60조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행정수도 및 해양수도 완성 등 지역혁신거점 조성을 통해 국가균형성장 뒷받침

○ 채무조정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청년·신혼부부·어르신** 대상 **공적주택** 공급 확대, **정액패스** 신규 도입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

○ **농어촌 기본소득** 신설, **공익기능증진직불** 확대 등 **농어민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식품바우처** 등 **농산품 소비** 촉진

3 기본이 튼튼한 사회: 58조원

○ **공공·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국가재난안전 예방·대응** 역량 제고, **산업재해보험** 보장성 강화 등 **생명존중 안전사회** 구현

○ **우리아이자립펀드·청년미래적금** 신설, **지역 통합돌봄체계** 구축, **기초생활 보장** 강화, **장애인 돌봄·소득** 지원 확대 등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현

○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매년 1세씩 상향), **유아 무상보육·교육 확대** 등 **육아부담 완화**,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 등 **어르신 소득보장 강화**

○ 사업장 도산시 **체불임금 국가가 대신 지급**, **청년 생애 첫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지급,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존중받는 일터** 구현

○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 **음악·게임·웹툰** 등 **콘텐츠 제작·수출** 지원, **예술인 복지금고** 등 **창작안전망 강화**를 통해 **K-컬처 성장기반** 확충

4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1.3조원 /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5.2조원

○ **저연차 공무원**(14만명) **및 경찰·해경·소방** 등 **현장공무원**(10.9만명) **처우개선**, **보훈대상자**에 대한 **소득·의료** 등 **지원** 확대

○ **군장병 복무여건** 개선, **K-방산 사업화·수출** 지원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남북 교류·협력 기반 조성** 등

3) 재원조달계획

1) 세입확충: 94조원

○ **(국세수입) 세제개편, 성장**을 통한 **세입 확충, 조세행정 효율화**

▪ **(세제개편)** 법인세·증권거래세 세율 환원 등 **前정부 감세조치 정상화, 비과세·감면 정비, 세제 합리화** 등

-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에 따른 **조세지출** 등 포함

* **(성장 지원)** AI 데이터센터 등 투자세액공제 강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확대,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등

* **(민생 지원)**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추가,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추가 등

▪ **(세입기반 확충)** 잠재성장률 제고 등 **성장**을 통한 **세입 확충**, **AI 기반 조세행정 혁신** 등에 따른 **중장기 세입 기반 개선**

○ **(세외수입) 배당출자, 부담금, 유휴 국유재산 매각,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확대

▪ **(배당출자)**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증가 추세* 감안 **한은잉여금 정부납입 증액,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단계적 상향** 검토 등 **출자수입 증액**

* 한은 당기순이익(상반기 기준, 조원): ('22) 1.2 → ('23) 0.9 → ('24) 3.6 → ('25) 4.6

▪ **(기타) 부담금 현실화**, 정부 보유 필요성이 낮은 **토지** 및 **국세물납증권 매각, 과태료·과징금** 등의 **수납률 제고**

2) 지출절감: 116조원

○ **(지출구조조정) 年 20조원**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추진 ⇨ **96조원**

▪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관행적·소규모 낭비성 지출**까지 **철저하게 점검·효율화** 추진

▪ **(재량지출)** 인건비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7~10% 수준 구조조정 목표**

- **집행부진·성과미흡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제도개선·통폐합**을 통해 **정비**

▪ **(의무지출)** 경제·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제도 현실화, 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한 **누수방지**(예: 반복 수급) 등 **지출효율화** 추진

※【참고】 **지출구조조정(예시)**

- **(ODA)** 우크라이나 지원 등 한시소요 정상화, 초청연수 통폐합, 비생산적 ODA 폐지 등
- **(국방)** 박격포·대형헬기 등 재래식 무기 감축 → 드론·로봇·AI 등 첨단무기에 재투자
-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대상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강화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 최소화

○ **(기금 여유재원)** 공약 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도시·전력·산재기금** 등의 **여유자금 활용** ⇨ **10조원**

○ **(민간 투자재원)** 기존 **재정사업**(SOC, 안전투자, 공공청사 등)의 **민간투자 전환**(7조원), **연기금 벤처투자**(3조원) 등 ⇨ **10조원**

3 향후 계획

□ **('26년 추진과제) 계속사업**, 사전절차를 이행한 **신규사업** 등은 **'26년 정부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중점 반영

○ **대규모 재정투자** 수반 **신규사업** 중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 **('27년 이후 추진과제) 예비타당성조사, 입법** 등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

□ **(제도설계 후 추진과제) 사회적 합의, 사업 구체화** 등 **제도설계**가 **필요한 과제***는 **토론회·공청회** 등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 본격 착수

* 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퇴직급여제도 정착 지원 등

Ⅶ.
입법 추진계획

1. 의의와 필요성
2. 추진 방향
3. 입법 필요사항
4. 입법계획 관리·지원체계

Ⅶ. 입법 추진계획

1 의의와 필요성

□ 123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5년간의 국정운영을 효율적으로 뒷받침

□ 정부 전체적인 **입법 노력**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고 점검·평가를 통해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관리

2 추진 방향

□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지원하는 **입법계획 수립**

○ 국정과제 이행·완료의 제도적 기반 조기 완성을 위해 **법률안 국회 제출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추진**

○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이행이 가능한 국정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연내 개정 완료** 추진

○ 계획적 입법 추진·관리를 위해 **법률안 제출·발의 시기, 하위법령 완료 시기를 세부적으로 설정·관리**('25년 월별, '26년 이후 분기별)

□ 입법의 적기 추진을 위한 **상황 관리 및 지원** 강화

○ 정부와 국회의 **입법 추진** 단계 전반에 걸쳐 **진행 상황 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평가

○ 입법이 제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지원,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해소**

□ **국민 체감도 제고**

○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법령안의 주요 내용을 적기에 **국민께 설명**하여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3 입법 필요사항

□ **입법 조치 필요 국정과제**

○ 123대 **국정과제 중 117개 과제, 564개 실천과제 중 428개의 과제가 이행**을 위한 **입법 조치 필요**

□ **입법 필요 법령 및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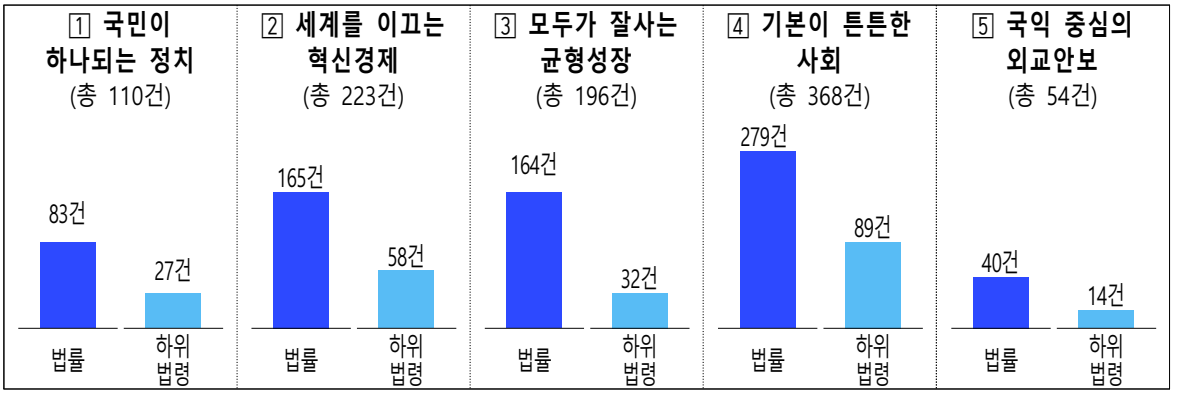
○ 법률 731건, 하위법령 220건 등 **총 951건**의 **입법** 필요

- **법률안**의 경우 기제출 법률안(204건) 포함, 48%에 해당하는 353건을 금년 내 제출, 87%에 해당하는 **634건**을 **'26년까지 국회 제출**
- 법률안 중 79%에 해당하는 575건은 개정, 나머지는 제정(156건) 추진
- **하위법령** 220건 중 **81건**(37%) **연내 정비 완료** 계획

【 국정과제 입법계획 총괄표 】

제·개정 필요 법령안		법률						하위법령			
		소계	旣제출	제출계획	제출시기			소계	정비 완료 시기		
					'25년	'26년	'27년이후		'25년	'26년	'27년이후
951		731	204	527	149	281	97	220	81	97	42
	개정	575	153	422	113	230	79	204	75	89	40
	제정	156	51	105	36	51	18	16	6	8	2

□ 5대 국정목표별 입법계획



4 입법계획 관리 · 지원체계

□ 국정 **입법 상황**의 **관리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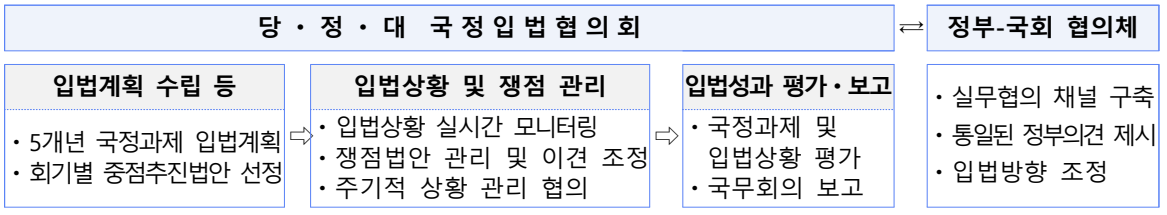
○ **입법 총괄·관리**를 위해 당·정·대간 **국정입법협의회** 설치·운영
5개년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기초로 **계획적·전략적 입법 추진**

○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정과제 **입법**을 **지원·조정**하고, **점검·평가**

- 입법상황의 실시간 모니터링(법제처 입법상황실)을 통해 입법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 및 장애요인**을 **조기 파악, 집중 지원**
- 국정과제 이행 점검 주기에 맞추어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국무회의 보고

○ 신설되는 **정부·국회 간 협의 채널**을 통해 입법 노력 경주

【 국정입법상황 관리시스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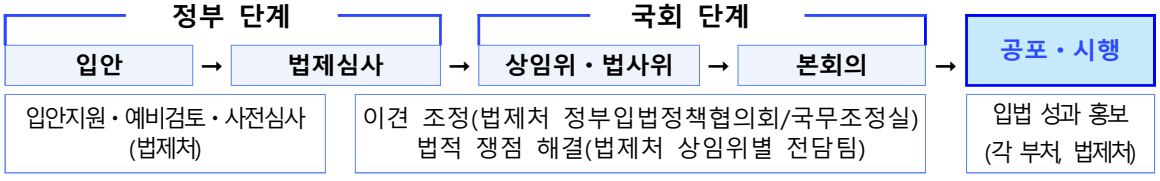
□ **입법 지원 및 성과 홍보**

○ 국정과제 입법계획과 입법 상황을 토대로 입안 준비부터 국회 통과까지의 **全 단계에 걸쳐 법령별로 문제해결형 지원**

- **입안지원**(조문화), **의원발의법안 예비검토**(법정합성 및 쟁점 검토·조정), **사전심사**(입법예고 시 법제심사 병행) 등 입법 지원 강화를 통해 신속 입법 추진
-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상임위별 전담팀(법제처)을 통해 **법안 제출 전·후 부처 간 이견 및 법적 쟁점 해결 집중 지원**

○ 국정과제 입법에 따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이행 법안의 **입법성과**를 공포·시행 전에 구체적으로 **국민께 널리 홍보**

【 입법 추진 단계별 지원체계 】



Ⅷ.
후속조치 계획

1. 국정과제 추진체계
2. 국정과제 관리방안
3. 국정과제 공유·확산

Ⅷ. 후속조치 계획

1 국정과제 추진체계

□ **대통령 직속** (가칭)**'국가미래전략위원회'** 신설

○ (**역할**) ▲**미래전략·정책방향 제시** ▲**국정과제 조정·보완** ▲**정책네트워크 구축·관리** ▲**대내외 소통** ▲**의제 공론화** 등 수행

- **국가 차원의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성장동력 발굴, 구조개혁 및 사회갈등 해결, 신규 정책아젠다 관련 **이슈 발굴** 및 **정책제언**

- **국정과제 성과**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제언, **신규 정책아젠다** 등을 토대로 **국정과제 조정·보완 추진**

- **국책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등 **국내 정책네트워크**과 함께 **국제적 싱크탱크와의 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 정책네트워크** 강화

- 국정과제 **추진성과**에 대한 **공유·확산** 및 **대내외적 의견수렴** 실시

- 미래전략 관련 **정책의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형성 기반 강화

○ (**운영**) 산하에 **사무처**를 두고 **대통령실·국조실**과 유기적 협력, **부처·국책연구기관·기업연구소** 등과도 연계체계 구축

*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산하에 분과위 설치 검토

→ **보고대회**를 통해 활동성과 공유·확산 및 정책화

□ 정부 내 **국정과제 관련 범부처 협의체계** 운영

○ (**역할**) 각 부처의 **국정과제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과정 상 애로사항을 해결, **신속한 성과창출**을 지원

○ (**운영**) **국조실** 주관으로 국정과제 관련 **대통령실, 부처 실장급** 참여, **핵심 국정과제 및 주요 현안** 관련 **상황점검 및 대응방안 모색**

-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조정회의, 국정협의체** 등과 연계하여 후속조치 추진

2 국정과제 관리방안

□ 국정과제 점검·관리

○ **과제별 특성**을 감안,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속도감 있는 성과창출 지원

- **입법지원, 예산지원, 이견조정** 등 정부 내 가용자원을 집중지원
- 국조실 중심으로 **주기적 추진상황 점검** 실시, **중요·현안과제**는 조직·재원 투입, 성과확산·홍보, 법령 개정 등 종합관리

○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의견을 반영

○ 국정과제 점검결과는 **국무·차관회의에 보고**

□ 국정과제 조정·보완

○ **연말 종합점검 및 연두 업무보고** 등 계기시 여건 변화, 신규 아젠다 반영 등을 위한 국정과제 **이행계획 조정·보완** 실시

○ 필요시 **국정과제도 조정·보완**하되 (가칭)**국가미래전략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무회의 보고 후 확정**

□ 성과 평가

○ 정부업무평가 체계를 통해 각 부처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실적**에 대해 성과 중심 평가 추진

- 평가에 **국민 체감·만족도 조사결과 반영**을 확대

3 국정과제 공유 · 확산

□ **신속하고, 폭넓은 국정과제 공감대** 확산 추진

○ (**공직사회**) **장차관 워크숍, 고위공무원** 대상 강연, **지자체 설명회, 당정 간 워크숍** 등으로 국정철학·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

- 내부 확산을 위한 **국정과제 자료집**, **매뉴얼** 등을 제작·활용하고, 국회와의 협업(토론회, 포럼 등)도 강화

○ (**언론**) 장차관 및 실국장 등의 **방송출연, 기자단 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설명

○ (**이해관계자**) **부처별 집중적인 현장방문**을 실시, '**경청**'·'**공감**'을 토대로 의견수렴에 집중하여 국정과제 추진에 반영하는 '**쌍방향 소통**' 추진

○ (**일반국민**) 언론매체에 출연하고, 부처별 홍보콘텐츠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SNS 맞춤형 등)

- **민간의 생생한 의견, 과감한 아이디어**를 시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공직사회 전반에 **국정철학·국정과제**를 착근

○ 국정과제 추진의 핵심 동력인 **중간간부·실무자 대상 교육** 강화

○ 중앙부처는 물론, 공공기관, 지자체 일선 공직자 등 국민과 직접 대면하고 일선 **현장까지 전파되는 국정철학 교육** 추진

□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국민의견을 국정과제 추진**에 반영

○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소관부처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관련 **국민의견 수렴 창구**를 개설

○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대국민 공개

부록

1. 대상별 과제

2. ‘모두의 광장’ 정책제안 국정과제 반영 현황

부록1 대상별 과제

1 아동·청소년

과제	주요내용	주관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 만19세 성인이 되기전 목돈(예: 5천만원) 마련	금융위
양육지원 강화	▪ **아동수당**(현재 8세 미만)을 **매년 1세씩 점진적 확대**하여 **임기내 만 13세 미만**까지 지급대상 확대	복지부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및 지원금 상향** ▪ 미혼모·부·조손 등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초 학습 및 진로설계** 등 교육 지원	여가부
의료보장성 강화	▪ **계절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13세 이하**에서 **14~18세 학령기 청소년**까지 확대('26~)	복지부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 피해자 지원 확대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발굴, **자립 지원** 강화 ▪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대응 시스템** 구축	여가부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시스템 구축	▪ 정부지원 **소득기준 단계적 완화** 및 **지원비율 상향**, 취학 전후 **차등지원 폐지**	여가부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 ▪ (가칭)온동네 돌봄·교육센터 확충	교육부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 **틈새돌봄** 확대 ▪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교육부
학생의 마음건강을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	▪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 예방-발견-상담-치료 전 단계를 아우르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	교육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안전체계 강화	▪ 학교 내 **신종 디지털 성범죄** 예방 ▪ 교육활동 시간 중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교육부
일상 속 국민 문화향유 확대로 문화강국 실현	▪ 한국판 엘 시스테마 **'꿈의 예술단'** 확대를 통한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 역량 개발**	문체부
누구나 어디서든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	▪ **인구감소지역**(89개) 대상 **유아친화형 스포츠교실** 운영 ▪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가상현실 스포츠 교실** 지원	문체부
천원의 아침밥 등으로 국민 식생활 돌봄 강화	▪ **초등학생 과일 간식** 공급 재개	농식품부

2 청 년

과제	주요내용	주관
맞춤형 고용·창업지원을 통한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 자발적 이직자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	고용부
공공주택 확대 등 청년 주거 안정 보장	▪ **특화공공임대**,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숙사** 공급 확대 ▪ **청년 월세 지원** 등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	국토부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 **청년 목돈마련** 지원상품 및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신설	금융위
청년 교육·복지 등 기본생활 보장 확대	▪ **맞춤형 국가장학금**(인문100년 장학금, 희망사다리Ⅱ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교육부
청년미래적금 신설	▪ 자산형성 지원 및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 신설 ▪ **중소기업 근속 청년** 등에게는 **추가 인센티브** 지원	금융위 중기부
청년 과학기술인의 전주기 성장 지원 강화	▪ 3종 패키지 (**국가우수장학금**·**연구생활장려금**·**기본연구**) 및 **거주**·**병역** 지원	과기정통부
1인가구에 맞춘 주거지원 강화	▪ **1인 생활패턴 특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국토부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제도 개선 및 저소득층보험료 지원 확대	▪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3개월간 보험료 지원** ▪ **군 크레딧**(연금가입 추가 인정) 12개월 →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 **출산 크레딧** 연금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에 인정**	복지부
군인 복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	▪ 초급간부 **급여 현실화** ▪ 중견간부들의 **전월세 정책자금** 지원 확대 ▪ 병 대상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급식 개선** ▪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국방부
조국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경력**을 **공공부문 포함** 의무화	보훈부
청년·장애 예술인 기회 확대	▪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및 국립예술기관 **청년인턴십** 확대	문체부
생애주기별 소비자 권익 증진	▪ **결혼서비스 가격 표시** 의무화	공정위
문화복지로 촘촘히 보장하는 문화향유 기회	▪ **청년 대상 공연·전시** 등 **관람 지원 확대**	문체부

3 어르신

과제	주요내용	주관
100세 시대를 위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 **주택연금 수령액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예 : 초저가주택 월 지급금 확대)하여 노후 연금소득 확대	금융위
불합리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20%씩 감액**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국회 연금특위 논의)	복지부
고령자를 위한 고령친화주택 공급 확대	▪ **고령자 복지주택·실버스테이** 공급(2.5만호, 5년간) ▪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고령친화마을** 조성	국토부
국민 간병 부담의 확실한 경감	▪ 급성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 요양병원 중심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본인부담 경감(본인부담률 100%→30% 내외)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확대	▪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을 시작으로 장애인·정신질환자 등 **대상자 단계적** 확대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 (장기요양) **중증 재가 서비스** 월 이용한도액 확대, 단기보호 활성화 및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신규서비스 도입 ▪ (재가의료) 재택의료센터 전국확대, **재택간호센터** 및 **생애말기케어** 도입 ▪ (일상생활돌봄) **가사·식사·이동지원** 등 일상생활 서비스 확대 ▪ (노쇠예방) 보건소 중심 적극적 **건강관리·노쇠 예방** 추진	복지부
고령자 돌봄을 위한 지원주택 확대로 주거와 돌봄 문제 해결	▪ **퇴원환자**가 단기간(2개월) 머물면서 돌봄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받는 **중간집** 및 **지원주택** 운영 ▪ **고령자 돌봄**을 위한 **지원주택** 확대	복지부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및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도입	▪ **노인일자리 134만개** 제공(~'30년), 매년 **적정 단가 인상** ▪ **치매 어르신** 등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복지부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지역 인프라 지원	▪ **경로당 식사 주 3.5회→5회** 확대	복지부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체계 구축	▪ 한의계 강점 질환 중심으로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추진('26) ▪ 거동불편 환자 등을 위한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복지부
누구나 어디서든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	▪ 어르신 **선호·지역 특색 반영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 파크골프장 등 **어르신 선호 체육시설 확충**	문체부
생애주기별 소비자 권익 증진	▪ 상조 가입정보 조회·피해보상 원스톱 플랫폼 구축 등 **상조서비스 소비자보호 제도 개선**	공정위

4 여 성

과제	주요내용	주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 새일센터 등을 통한 **여성의 고용유지** 및 **취·창업 지원** 서비스 확대 ▪ **여성벤처펀드** 조성 등 여성기업의 성장기반 확충	여가부
여성폭력, 교제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 피해자 지원 확대	▪ **교제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 및 교제폭력 법제화 ▪ **온라인 스토킹** 피해 **개인정보 삭제** 지원	법무부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강력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	▪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능 강화 ▪ **AI 전문 수사인력** 양성, **디지털 성범죄 수사·처벌** 강화 ▪ AI기반 **딥페이크 성범죄물 탐지·추적 시스템** 구축	여가부 경찰청
생애과정별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 ▪ **여성 생리용품** 지원대상 확대 추진	복지부 여가부
과학기술인 처우개선 및 여성·고경력 등 연구자 지원 강화	▪ 경력복귀 여성과학기술인 **전용 연구과제** 지원 ▪ **연구지원전문직**으로의 **경력복귀 지원**사업 **신설**	과기정통부

5 장애인

과제	주요내용	주관
발달장애인 등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긴급돌봄·가족지원 등 **24시간 돌봄** 지원 제공	복지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확립	▪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복지부
장애인 개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와 건강권 보장	▪ **장애인주치의**, **장애친화 의료인프라** 등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할 기회 확대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장애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 ▪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복지부
장애인 이동권 강화	▪ **교통약자 이동수단** 확대 ▪ 다중이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복지부
통합·특수교육 강화로 모두의 학습권 보장	▪ **특수학급 신·증설**, **특수학교 20개교** 설립(~'30) ▪ **특수교사 정원** 확충	교육부
장애 예술인 기회 확대	▪ **장애예술인 창·제작 지원** 강화, **지역대표 장애예술단체** 육성	문체부
차별없이 누리는 장애인 체육	▪ 반다비체육센터 확대 등 **장애인 생활체육 접근성** 개선 및 **장애인 전문 선수 발굴**·육성 강화	문체부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관광 환경 조성	▪ **무장애 관광을 위한 시설·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문체부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시청자권익 제고	▪ 시·청각 장애인의 시청 편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TV 보급** (연간 35,000대)	방통위

6 노동자

과제	주요내용	주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법체계 구축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업종·규모·종사자(특고·플랫폼·프리랜서) 별로 단계적 확대	고용부
산재보험 선 보장, 전국민 산재보험, 신속 처리 실현 등 산재보험제도 혁신	▪ 업무상 재해 조사기간을 법정화하고 경과시 **산재보험급여 선지급** ▪ **업무상 질병 추정 대상 확대** 및 기준 완화 ▪ 산재 신청시 **국선대리인 지원** 신설 ▪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업종·직종 확대)	고용부
작업중지권 등 노동자 참여권 강화로 안전한 일터 조성	▪ 노동자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 **작업중지·시정조치 요구권** 신설 등	고용부
새로운 유해·위험으로부터 일하는 사람 보호	▪ **신산업 안전기준** 법제화 ▪ **감정노동** 보호 대상 확대·조치 강화 ▪ **과로사·과로자살 방지** 및 **야간노동 규율**	고용부
일터 권리 보장법 제정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	▪ **5인 미만·초단시간·근속 1년 미만 노동자**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고용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고용부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감독 전면혁신	▪ **하도급 임금 구분지급제** 도입 ▪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고용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정립과 공정한 보상 실현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처우 금지** 법제화	고용부
물류, 수송, 건설 등 국토교통 취약노동자 보호 강화	▪ (택배) **계약갱신권** 실질적 보장과 과로사 방지 ▪ (배달)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 (화물) **안전운임제** 재도입	국토부

과제	주요내용	주관
노동법원 설립 및 취약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 임기 내 **노동법원** 설립 ▪ **노동위원회**에 특고·플랫폼 등 **분쟁조정기능** 부여	고용부 법무부
주 4.5일제와 실노동시간 단축 및 포괄임금제 금지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시행 ▪ **포괄임금제** 금지	고용부
연차휴가제 개선과 쉼이 보장되는 일터	▪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 개선** ▪ 퇴근·공휴일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고용부
육아·돌봄 국가보장으로 일·가정 양립 실현	▪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허용 ▪ **저소득층 출산전후휴가급여 추가 지급** ▪ **난임 유급휴가** 확대('25년 2일→'30년 6일)	고용부
퇴직연금 강화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후 보장	▪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 사업장·종사자(특고,플랫폼 등) 확대	고용부
구직지원금 확대, 전 국민 고용보험 완성 등 든든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 **구직촉진수당** 단계적 인상(현 50만원 →'28년 70만원) ▪ 노동취약계층 **노동복지카드** 시범사업 추진 ▪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개선,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	고용부
대중교통비 절감	▪ 전국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탑승·환승(일정한도 내)할 수 있는 **정액패스** 신규 도입	국토부
통신비 경감	▪ 모든 요금제에 **데이터안심옵션**(제공량 소진 후에도 기본 통신서비스 이용 가능) 전면 도입	과기정통부
주거비 부담 경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와 **대상주택** 범위를 확대	국토부
양육비 부담 완화	▪ **자녀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 확대	금융위
누구나 누리는 관광환경 조성	▪ **근로자 휴가 지원**('25년 15만명 → '30년 20만명)	문체부
식생활 돌봄 강화	▪ **천원의 아침밥** 지원 대상 대학생에서 **근로자까지 확대**	농식품부

7 소상공인 · 자영업자

과제	주요내용	주관
소상공인 취약계층 금융비용 경감	▪ 보증기관 출연금을 은행 가산금리에 과도하게 포함하지 않도록 **은행권 가산금리 산정방식 개선** ▪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이용중인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변경) 도입 ▪ **중금리대출** 확대,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금융위
소상공인·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 빚 걱정 없이 다시 일어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분할상환·금리감면** 확대 ▪ **장기 연체채권 소각**(7년이상 5천만원 이하, 약 16.4조원)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강화 - 지원대상('20.4월~'24.11월 사업영위자 → '25.6월까지로 확대) 및 채무감면율 확대(現 최대 80% → 최대 90%)	금융위 중기부
가맹점주·대리점주·입점사업자 등의 협상력 강화 및 창·폐업 여건 개선	▪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대리점주·수급사업자·입점사업자 단체구성권** 도입 ▪ 적자누적 등 불가피한 경우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	공정위
한 번에 OK, 폐업부터 재도전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 경영컨설팅부터 채무조정, 폐업, 재기까지 원스톱 지원을 위한 통합 **소상공인 회복전담지원체계** 구축	중기부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 **화재공제 가입대상**을 골목형 상점가로 확대하고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강화	중기부
AI·디지털로 무장한 K-소상공인, 세계를 무대로	▪ 중소·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추진 ▪ 소상공인 **공공구매** 활성화 ▪ 소비재 중심으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진출	중기부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	고용부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환경 조성	▪ **온라인플랫폼 상생협력** 제도화 ▪ 소비자와 상생을 위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공정위 중기부

8 중소 · 벤처기업

과제	주요내용	주관
AI 스타트업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소송과정에서 **피해사실 입증부담 완화**	중기부
벤처·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	▪ 딥테크(바이오·반도체 등) **맞춤형 보증** 신설 ▪ **혁신 벤처·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펀드 조성	중기부
혁신 AI 스타트업 육성	▪ **AI혁신펀드** 운영 및 **성장 사다리** 지원(장기간, 대규모 지원) ▪ **예비·초기 창업가 AI창업패키지** 등 AI벤처·스타트업 창업·스케일업 지원	과기정통부 중기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 **공동 기술개발**, **대기업 기술이전**, **공급망 협력** 등 협력모델 확산·지원	산업부
연간 40조원 벤처투자시장 육성	▪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및 정부출자 확대 ▪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확대·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중기부
"Next Unicorn Project"로 딥테크 유니콘 50개 육성	▪ **AI 등 딥테크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집중 육성·투자(13.5조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개시	중기부
벤처·스타트업을 지역 성장엔진으로 육성	▪ 5극3특 **거점 창업도시** 10곳 조성 ▪ **권역별 엔젤투자허브**(+10곳) 등 투자 인프라 확충 및 **지역성장펀드** 조성(3.5조원)	중기부
인재 유인부터 시장 조성까지 지속가능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구현	▪ 신산업 분야 창업가 **세제특례** 확대 검토 및 **주식연계보상** 확대 ▪ 신산업 분야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설	중기부
R&D 사업화로 기업성장 촉진	▪ **한국형 STTR*** **사업** 추진 (* 美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Program : 10억 달러 이상 R&D 예산을 지닌 미국 연방기관에 중소기업-연구기관간 R&D 협력·사업화 지원 의무화) ▪ **중소기업 R&D** 예산 회복·확대 ▪ 성장단계별 **민간투자연계형**(TIPS) **R&D 지원**체계 확립	중기부
뿌리부터 첨단까지 AX 대전환으로 생산성 혁신	▪ 기초·AI 고도화 등 수요기반 **스마트공장** 지원 다양화·확대(+3만개)	중기부
新무역질서를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기회로 전환	▪ **중소기업 수출 품목·국가 다변화** 촉진 및 **K-수출전략품목**(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육성 ▪ 수출 10대 품목 탄소감축 R&D 및 **탄소중립 고효율 설비전환** 지원	중기부
신속하고 실효적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제도화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조성 ▪ 중소기업의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통합 **전담지원체계** 마련	공정위 중기부

과제	주요내용	주관
납품대금 제값받는 공정거래 실현 및 상생환경 조성	▪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 **하도급대금** 지급의 안정성 제고	중기부 공정위
공공조달 혁신	▪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시장** 확대(130 → 170조원)(~'30)	조달청 중기부
촘촘하고 강력한 기술보호 제도 구현으로 기술탈취 근절	▪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소송과정에서 **피해사실 입증부담 완화**	중기부 공정위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	▪ **진입·성장·확장·고도화 단계별**로 마케팅, 연구개발, 실증시험, 해외 공급망 진입, 표준·인증 부여 등 지원	방사청

9 농어업인

과제	주요내용	주관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위한 재생프로젝트 추진	▪ **농어촌 빈집** 7.8만호를 **창업·관광 공간** 등으로 정비·재생(~'30) ▪ **재생거점마을**(시군별 1개소) 조성 ▪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30년 18개소) 확대	농식 품부
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한 농어촌 에너지 자립	▪ **농업시설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 구축 ▪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개소 조성(~'30)	농식 품부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18개소) 및 **기회발전특구**와 연계 ▪ **K-헤리티지 관광벨트** 20개 조성 ▪ **국가정원 확충** 등 지역 특화산업 육성	농식 품부
필수서비스 공급을 통한 복지 농어촌 구현	▪ (농촌 중심지) **생활 SOC 인프라** 확충 ▪ (취약지역) **의료, 돌봄, 식품** 등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100개 읍면)	농식 품부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 소멸 위험이 높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부터 **햇빛·바람연금** 등과 연계한 **농어촌 기본소득** 단계적 확산	농식 품부
선진국형 농가 소득 안전망 구축	▪ **기본형 공익직불·전략작물직불·친환경직불 단가** 인상 ▪ 기후변화적응 및 동물복지축산 등 **신규 선택직불제** 도입 ▪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식 품부
기후적응형 농업을 위한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손해는 **재해보험료 할증시 제외**	농식 품부
인력·농자재 등 필수 농업자원 지원 강화	▪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 정도에 따른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농식 품부

과제	주요내용	주관
미래 농업을 견인할 청년농업인재 양성	▪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 등으로 **청년농업인재** 양성 ▪ **공공비축농지**를 2배로 확대하고 **청년농에 우선 임대**	농식품부
노후가 보장되는 농업 실현	▪ **퇴직연금형 저축** 도입,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단가 인상	농식품부
기후위기에 대응한 수산업 혁신	▪ 어획량을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중심 체계**로 재편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5개소), ▪ **상습 재해 발생 양식장 이전** 및 **품종 전환** 등 지원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 확대(품목 30 → 40개)	해수부
수산물 신선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식품 수출 확대	▪ **직거래·온라인 거래** 확대(60 → 146개 품목) ▪ **산지거점유통센터·소비지분산물류센터** 확충	해수부
청년 어업인을 육성하고, 어촌어항을 경제·생활 거점으로 조성	▪ **청년 어업인** 육성(거주·일자리·금융 등 지원) ▪ **지역거점 국가어항**, **어촌뉴딜 3.0 사업**으로 경제·생활 거점 육성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해수부
어업인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 지원, 해양수산 탄소중립 추진	▪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에 따른 계획입지 지정, **어업인 이익공유 모델** 도입 등을 지원	해수부

10 동물반려인

과제	주요내용	주관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인프라 확충 - ▲동물복지 축산 직불금 도입('26),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전면 적용('28),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28), ▲은퇴견 지원센터 설립('27), ▲학대 말 긴급 구호시스템 구축('26) 추진	농식품부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 **공공동물병원** 조성,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26) 및 민간 확산(상생동물병원, 400개소) 추진 ▪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 확대	농식품부
동물학대 없는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제**, **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27) 및 **유사 동물보호시설 규제**	농식품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원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25) ▪ 영양표준 등 **펫푸드 분류체계**, 특수목적 영양사료 기준 마련	농식품부

부록2 ‘모두의 광장’ 국민 정책제안 국정과제 반영 현황

	국민제안자 / 제안내용	반영된 국정과제(실천과제)
1	**(10620/안○현)** 국비 지원 **직업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에게 정부 주도의 **기업 매칭제도 도입**을 건의합니다.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맞춤형 고용·창업 지원을 통한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
2	**(7767/박○배)** **직업계고-전문대-폴리텍의 기능 연계**를 강화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해 주세요.	
3	**(6707/양○국)** 청년 **창업 실패 후** 회생을 지원하는 **패자 부활** 인큐베이터 **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4	**(8783/안○현)** 3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은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고, 재도전 창업자에게 투자해 주세요.	
5	**(9206/서○성)** 객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대학교 기숙사를 확충**해 주세요.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청년 주거 안정 보장)
6	**(1835/안○현)** **빈집과 폐교를 활용**하여 청년들을 위한 **리모델링 숙소 건립**을 건의합니다.	
7	**(7366/서○성)** 대학 인근 또는 수도권 외곽에 **지자체와 대학 협력형 기숙사를 확대**해 주세요.	
8	**(10561/조○필)** **역세권 근처**에 장기 거주 가능한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9	**(3282/김○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정부** 적립금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자산형성 지원 강화)
10	**(6116/김○태)** '서울 영테크 사업'처럼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을 통해 청년들의 올바른 금융태도 형성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7212/지○용)** 저출산 대응 대책으로 **다자녀가구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방안 도입**을 건의합니다.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청년 교육·복지 등 기본생활 보장 확대)
12	**(3284/김○주)** 실효성 있는 청년 자산형성제도를 부활시켜주시고, 제2차 **청년기본계획을 내실있게 준비**해 주세요.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지속가능한 청년 정책 제도기반 구축)
13	**(12368/김○환)** 지자체 및 정부의 청년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기준을 상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1071/김○근)**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위해 **3단계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DSR 한도를** 30% 이내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국정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상환능력 범위 내 여신관행 정착으로 가계 채무부담 절감)
15	**(5524/남○진)** **배드뱅크** 정책을 통해 채무를 상환해 줄 때 상환하고 끝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같이 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정66)**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소상공인·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
16	**(7377/강○선)** 농수산물 경매 등을 개인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조직에서 관리해 **농수산물 가격을 안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비용부담 완화)
17	**(7771/민○현)** **현재 유통시스템**, 농민과 국민 사이의 유통구조와 가격 책정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18	**(10312/박○태)** 농수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삶의 질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유통구조를 개선**해 주세요.	**(국정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컨트롤타워 가동 등 범부처적 역량 총동원)
19	**(8465/서○형)** 기부한 금융기관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사회적 금융에 기여**한 **금융기관을 평가에서 우대**해 주세요.	**(국정81)**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사회연대금융 활성화)
20	**(4875/진○우)**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해 조직 간 장벽 해소 및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도록 건의합니다.	**(국정81)**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등 법적기반 마련)

	국민제안자 / 제안내용	반영된 국정과제(실천과제)
21	**(2885/이○주)** 식당과 소비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앱 비용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국정64)**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플랫폼 시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경쟁 촉진)
22	**(8611/한○현) 결혼 필수 항목**(웨딩홀·드레스·메이크업·스냅촬영 등)에 대한 **정찰제 전환 유도**를 건의합니다.	**(국정65)**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생애주기별 소비자 권익 증진)
23	**(1664/윤○근)** 헬스장·필라테스 등 **계속거래 체육시설의 보증보험 가입** 및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피해구제 지원센터를 설치**해 주세요.	
24	**(8175/우○석)**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주세요.	**(국정65)**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민사적 구제수단 확충을 통한 공정거래 집행 체계 강화)
25	**(585/손○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 주세요.	**(국정65)**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공정거래 감시·제재 역량 및 분쟁조정제도 강화)
26	**(5401/김○흥)** 불완전판매, 허위설명 등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해당 판매사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해 주세요.	**(국정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금융제도 선진화)
27	**(9126/김○모)** 매출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성, 신성장성** 등을 **고려**해 **벤처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세요.	**(국정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첨단·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28	**(5187/남○희)** KRX 경제교육 포털에 환율 이해하기, 금리 계산기, 모의 주식투자 등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을 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국정82)**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청년 등 전국민 경제·금융교육 강화)
29	**(8241/박○준)**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토큰증권(STO)**, CBDC 등 디지털 금융 핵심 인프라에 대한 **규제 정비 및 실증 환경 구축**을 건의합니다.	**(국정48)**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토큰증권의 법제화)
30	**(6507/박○규) 공공기관 감사의 중립성**, 객관성,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국정18)**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혁신(공공기관 경영 자율성·책임성 강화)
31	**(7469/김○혜)** 내부 구성원 및 외부 전문가의 평가 참여 확대 등 **경영평가 운영**의 **투명성과 참여성을 강화**해 주세요.	**(국정18)**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혁신(맞춤형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제고와 역량 개선)
32	**(6925/문○현)** 규모와 업종이 상이한 공공기관의 특성을 무시하고, 줄 세우기만 하는 **현행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33	**(6091/진○우) 공공기관의 평가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남을까?"가 아니라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34	**(4971/제○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항목별 배점에 따른 일관된 평가가 아닌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배점 기준이 필요**합니다.	
35	**(1919/오○영) 기관 특성에 맞는 경영평가로 개편**하거나, 기관장 임기에 맞춘 책임경영평가 제도 도입을 건의합니다.	
36	**(132/박○원) 경영평가를 위해** 불필요한 **일을 만들어서 하게 되는 관행을 멈춰 주세요.**	
37	**(10170/신○호) 출연연 고유 미션 정립** 및 영역을 분리하고, 중장기 미션을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해 주세요.	**(국정18)**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혁신(정부출연연구기관 PBS제도 개편 및 연구역량 강화)
38	**(10849/김○수)** 연구비 수주 경쟁에 내몰리게 하는 **PBS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39	**(8245/박○준)** AI·양자컴퓨터·로봇·자율주행 등 **신기술 육성 및 규제 개선**을 건의합니다.	**(국정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AI, 바이오헬스, 재생에너지 등 핵심 신산업 규제 제로)

	국민제안자 / 제안내용	반영된 국정과제(실천과제)
40	**(8783/안○현)** 신산업 분야는 규제 유예지역을 설정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및 제로베이스 규제 도입 확대**를 건의합니다.	**(국정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성과 중심 규제샌드박스 레벨업)
41	**(7863/김○수)** 삭감했던 **R&D 예산 복원**뿐 아니라, **이공계 연구자**들이 국제학술지에 논문 게재 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건의합니다.	**(국정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규제특구 고도화를 통한 지역성장 촉진)
42	**(10131/김○식)** **고등학교 이공계** 특화반 학생에게 장학금 및 해외 선진 기술 습득을 위한 유학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주세요.	**(국정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과학기술 인재양성 지원체계 일원화)
43	**(8263/박○준)** 주거, 비자, 자녀, 교육 지원 등 **외국인 기술인력 대상 정착 패키지 제공**을 제안합니다.	**(국정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해외 우수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Brain to Korea" 추진)
44	**(1067/박○진)** **이공계** 비전임 교원의 최저 임금 기준 마련, 겸직 허용 범위 확대 등 **연구자 처우를 개선**해 주세요.	**(국정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과학기술인 처우개선 및 여성·고경력 등 연구자 지원 강화)
45	**(2588/민○현)** **메가샌드박스를 조성**하고, 외국기업도 관심을 가질만큼 '샌드박스 내 **파격적 규제혁신**'이 필요합니다.	**(국정29)**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 국가 도약(신성장동력 육성 여건 조성 및 전략 수립)
46	**(10370/김○수)** 국가 안보와 전략산업의 핵심인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국정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등 첨단전략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47	**(8306/박○준)** 첨단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기술 자립화를 **지원**하고, 기업 간 협력 확대를 위한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주세요.	**(국정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소재·부품·장비 경쟁력 및 공급망 안정성 강화)
48	**(10343/박○준)** 국내 **소부장 제품의 성능 검증**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첨단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및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정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소재·부품·장비 경쟁력 및 공급망 안정성 강화)
49	**(9884/서○준)**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해 국내기업 **부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의 도입을 건의드립니다.	**(국정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통상·경제안보 추진체계·기능 및 산업·통상 연계 강화)
50	**(2592/민○현)** 기술 기반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과 **지역 에너지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소프트웨어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정38)**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 고속도로의 구축(AI기반 분산에너지 확산 및 전력망 안정성 제고)
51	**(369/정○근)** **영농형 태양광** 설치 허용 **대상과 입지를 전면 확대**해 주세요.	**(국정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52	**(6511/남○희)** 가전제품처럼 **주택에도 에너지등급제**를 도입하고, **높은 등급** 주택에 주어지는 **혜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정41)**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건물의 에너지효율화 및 전생애주기 저탄소화)
53	**(4830/김○흥)** **기업** ESG평가에 **자원순환 지표**를 도입하고, **제로웨이스트 시범도시를 지정** 및 확산할 것을 건의합니다.	**(국정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순환경제 내재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54	**(4363/김○지)** 국가에서 **공영식당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식사권을 보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정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천원의 아침밥 등으로 국민 식생활 돌봄 강화)
55	**(2699/조○준)** AI, 로봇, 드론, 자율주행농기계 등으로 운영되는 **대규모 스마트팜 건설을 지원**해 주세요.	**(국정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스마트 데이터 농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

	국민제안자 / 제안내용	반영된 국정과제(실천과제)
56	**(10796/박○준)**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현지화 전략을 강화해 한국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주세요.	**(국정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세계시장으로 뻗어가는 K-푸드)
57	**(7495/김○수)** 지역 농민이 **못난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해 주세요.	**(국정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농업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유통개혁 추진)
58	**(4729/김○흥)** 공공 AI기반 농수산물 **직거래 플랫폼 구축**과 **유통 거래 이력 공개** 및 감시 제도운영을 건의합니다.	
59	**(4939/박○미)** 산림경영인의 손길이 있어야 산림의 가치도 살아납니다.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국정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림축산업 발전)
60	**(8499/안○현)** 시장**가격 급락시 자동 매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입대상이 아니더라도 **손실에 대해 일정 보상금을 지급**해 주세요.	**(국정69)**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선진국형 농가 소득 안전망 구축)
61	**(3056/신○섬)** **지자체**가 정해진 급식소를 운영해 배설물이나 먹이 등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등 **유기동물의 복지**를 생각해 주세요.	**(국정80)**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62	**(6462/김○석)** 기초 의료항목 지원, **진료비 공개제도** 정착, **민간 보험 활성화** 등 **반려동물용** '부분형 **공적 의료보장제**' 도입을 건의합니다.	**(국정80)**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63	**(23/원○섭)**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반려동물** 세금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64	**(771/차○은)** **동물학대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및 감시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정80)**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동물학대 없는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65	**(6466/김○석)** **폐어구에 대한 종량 현금 보상**과 **무단 배출 단속** 강화 및 인센티브 정책 동시 실행을 건의합니다.	**(국정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건강한 해양생태계, 청정한 우리바다 조성)
66	**(8849/이○훈)** 해양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연안에 **광역 해양폐기물 매립지를 조성**하면 좋겠습니다.	
67	**(9316/이○영)**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모태펀드 조성 기반 정비**와 **글로벌** 혁신**투자 유치 지원**을 제안합니다.	**(국정34)** 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AI·딥테크 중심의 "모두의 창업"으로 창업국가 완성)
68	**(4423/박○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 참여 **인원도 늘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정64)**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주거환경 개선 지원 강화)
69	**(5698/신○익)** 특정 관리업체가 아닌 지역 LH가 임대 아파트를 직접 관리해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부담을 줄여**주세요.	
70	**(9728/김○규)** **공공임대주택**이 청년층을 위한 실효성을 갖기 위해 **거주환경과 복지 측면에서의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1인가구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71	**(7892/천○희)** **집주인 변경**시 **임차인**에게 신원 및 체납정보 **통지를 의무화**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의 설명의무를 강화해 주세요.	**(국정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처벌 강화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72	**(5435/장○찬)** 임대인 부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열람하게 하고, **직접매입제도를 개선**해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73	**(2418/양○영)** **고속철도 통합**으로 SRT와 KTX로 **이원화된 서비스 불편을 해소**해 주세요.	**(국정57)**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철도·고속도로망 확충)
74	**(430/조○봉)** 혁신도시 실정에 맞는 소규모 공공병원 설립, 공공기관과 연계된 특수목적고 신설 등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세요.	**(국정51)**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2차 공공기관 이전 정주여건 개선)

	국민제안자 / 제안내용	반영된 국정과제(실천과제)
75	**(6056/정○영)** 꼭 필요한 **희귀필수 의약품**의 **수급 안정성**을 보장하고 **비용부담을 완화**해 주세요.	**(국정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희귀·난치질환 부담 완화 및 1형 당뇨병 등 국가책임 강화)
76	**(2203/김○구)** **희귀필수의약품**의 국내**생산을** 확대하거나 **수입** 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77	**(407/이○기)**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78	**(10630/방○배)** 의료계 및 국민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의대 설립을 합리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국정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진료권 중심 공공의료체계 강화)
79	**(1107/김○)**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통해 **지방의료를 활성화**해 주세요.	**(국정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필수의료 지원 법제화 및 필수의료 기금 신설)
80	**(12406/최○진)** **미용 목적**의 **비대면처방 제외** 등 정비를 요청합니다.	**(국정85)**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81	**(12206/이○진)** **비대면 진료 시 약물사고** 등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82	**(12448/차○화)** 의료본질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 **비대면진료의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83	**(6549/안○현)**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규정과 생계급여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해 주세요.	**(국정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84	**(11902/민○홍)** **고독사 예방**을 위해 **AI, 챗봇 등 스마트 돌봄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AI기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확대)
85	**(9384/안○현)** 발달된 **AI기술** 등을 활용하여 중장년층 등을 위해 **다가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세요.	
86	**(12415/이○영)**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해 주세요.	**(국정87)** 아이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지원(아동수당 확대로 양육 지원 강화)
87	**(1138/문○광)** **아동수당 대상 확대**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88	**(6791/류○화)**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의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정91)**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양질의 돌봄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89	**(4942/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준수** 및 상향 등이 필요합니다.	
90	**(6542/이○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주십시오.	**(국정79)**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발달장애인 등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91	**(10527/주○호)**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통합플랫폼** 등 이동권을 강화해 주세요.	**(국정79)**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장애인 이동권 강화)
92	**(2002/신○아)** 이용 편의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 통합 앱** 및 전국 **호환 시스템**을 구축해 주세요.	
93	**(8444/장○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해 **6.25 참전수당 증액** 등을 제안합니다.	**(국정11)**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합리적 보훈보상체계 재정립)
94	**(5151/배○호)** 나라를 위한 희생에 걸맞도록 **6.25 유자녀 수당 개선**을 요구합니다.	
95	**(8243/박○우)** **지자체별** 상이한 **보훈명예수당의 형평성 제고** 및 수훈별 차등 인상 등 필요합니다.	
96	**(5546/고○일)** 참전유공자 어르신을 위한 **보훈급여금을 인상**해 주세요.	

	국민제안자 / 제안내용	반영된 국정과제(실천과제)
97	**(4594/조○찬) 장기복무 명예퇴직 경찰, 소방공무원** 등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정12)**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국민 체감 보훈문화정책 추진)
98	**(7310/강○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방지**가 필요합니다.	**(국정98)**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여성 폭력, 교제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 피해자 지원 확대)
99	**(10513/안○현)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100	**(3942/고○민) 남자 청소년**들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해 주세요.	**(국정98)**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생애 과정별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101	**(3931/김○희)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남자아이**들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102	**(335/신○옥) 느린학습자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세요.	**(국정88)**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건강권 및 마음건강 증진)
103	**(4552/정○지) 경계선지능 아동**이 학교 또래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104	**(3457/남○민)** 고립, 은둔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활 등 충분한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105	**(7697/김○찬)** 미래주역인 **청소년들의 우울증 진단** 등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106	**(5624/문○원)** 학생 연령에 맞지 않는 **선정적인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국정88)**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강화)
107	**(3870/김○련)** 마약, 범죄 등 **유해 콘텐츠 유통에 대해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108	**(8863/안○현)** 어린 학생들이 폭력 등 **유해 콘텐츠**에 물들지 않도록 **점검과 교육** 등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109	**(5565/안○주)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110	**(2244/조○숙)** 인터넷 **불법도박 중독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111	**(8833/남○희)** 돌봄 공백이 없도록 **심야시간에도 가능한 아동돌봄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국정88)**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시스템 구축)
112	**(2244/은○미)** 육아부담이 없도록 맞벌이 부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경감**을 요청합니다.	
113	**(12199/최○용)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국정93)**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일터 권리 보장법 제정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
114	**(156/이○찬)** 온라인플랫폼 등 **디지털 노동자를 위한 권익보호 법제화**를 제안합니다.	
115	**(1937/권○우) 공무직**의 안정적 공무수행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정93)**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116	**(5710/조○명) 물가상승률**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을 개선해 주세요.	**(국정93)**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정립과 공정한 보상 실현)
117	**(8301/구○현) 배달노동자의 유상보험 및 안전교육 의무화**와 산업안전 보건법 적용 등으로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93)**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물류, 수송, 건설 등 국토교통 취약노동자 보호 강화)
118	**(6804/안○민)** 현재 사각지대인 **배달노동자**의 배달료 등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119	**(10890/김○남)** 학교 **교육과정**에 **근로관계 내용을 포함**해 주십시오.	**(국정94)**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근로자의날 명칭 변경과 전 생애 노동교육 등 노동존중문화 확산)

	국민제안자 / 제안내용	반영된 국정과제(실천과제)
120	**(4/이○용)** 과도한 업무 해방과 일과 삶의 균형 등을 위해 **주4일제를 도입**해 주십시오.	**(국정95)**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주 4.5일제와 실노동시간 단축 및 포괄임금제 금지)
121	**(8963/박○우)** 야근을 해도 보수는 동일한 **포괄임금제를 폐지**해 주십시오.	
122	**(1468/김○현)** 개인을 희생시키는 **포괄임금제**를 폐지 또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	**(11917/강○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공짜 노동 **포괄임금제를 없애** 주십시오.	
124	**(10184/이○웅)** **포괄임금제**에 대한 **단계적 폐지** 등을 제안합니다.	
125	**(6583/박○빈)** **포괄임금제의 폐지** 등을 위한 모니터링, 요건 강화 등을 제안합니다.	
126	**(12486/남○진)** 4차혁명 시대에 필수인 **디지털 역량교육 인프라와 교육을 확대**해 주십시오.	**(국정99)**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AI 인재 양성 기반인 기초학문 및 인문학 교육 확대)
127	**(8250/박○준)** 세계적 석학 배출을 위한 **창의융합형 STEAM 교육**, 디지털 교육 등을 제안합니다.	
128	**(5661/이○수)** 미래 **AI** 개발자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적합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129	**(3164/장○진)** **AI**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학교 교원과 학생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선**을 제안합니다.	
130	**(1729/박○진)** **AI** 시대 **실천형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합니다.	
131	**(6684/박○일)** **AI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학을 혁신**해 주십시오.	**(국정99)**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AI 융복합(AI+X) 인재 양성)
132	**(8262/박○준)**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인재 유치 전략**을 **제안**합니다.	**(국정99)**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글로벌 AI 인재 육성 체계 구축)
133	**(9253/지○정)** 책과 학생이 가까워 질 수 있도록 **초중고 독서수업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국정99)**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AI 인재 양성의 기반인 기초학문 및 인문학 교육 확대)
134	**(4455/김○민)** 학생과 공동체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 헌법교육** 등을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국정100)**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시민·헌법·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 강화)
135	**(1070/김○문)**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실질적인 **민주주의 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136	**(6604/이○은)**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시민교육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137	**(10206/김○희)** **헌법을 가르치는 수업을 공교육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	**(4880/김○흥)** 역사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교육 및 학습자료 구축** 등을 제안합니다.	**(국정100)**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교육 강화)
139	**(5277/진○)** 경제, 노동 등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국정100)**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경제·금융·노동교육 강화)
140	**(5187/남○희)** 실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경제교육**이 필요합니다.	
141	**(11924/안○현)** 학생들이 쉽게 스포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학교 스포츠 교육과 클럽 등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국정100)**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활성화)
142	**(6421/박○라)** **어린이집 교사 1인당 보육아동수**를 줄여주세요.	**(국정10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143	**(1035/전○옥)** 장애인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특수학급과 교사 인력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국정10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통합·특수교육 강화로 모두의 학습권 보장)

	국민제안자 / 제안내용	반영된 국정과제(실천과제)
144	**(2210/한○대)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를 위해 **학부모** 대표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정102)**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마련)
145	**(1072/강○조)**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권을 두텁게 보호**해 주십시오.	**(국정102)**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권 보호 및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146	**(400/주○현)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147	**(5776/하○환)** 권위주의적 행정에서 벗어나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148	**(6575/안○현)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지원해 주십시오.	
149	**(4110/홍○천)** 교실이 무너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150	**(2399/민○기)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을 통한 민주사회 성숙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151	**(2283/전○슬)** 학부모의 교사 폭행 등 **교권침해행위를 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주세요.	
152	**(9944/양○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153	**(12236/오○정)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학교 밖 식자재 **위생관리 방안** 등을 제안합니다.	**(국정102)**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안전체계 강화)
154	**(10137/장○채) AI**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국정99)**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초중고 AI 교육 강화 및 데이터 기반 미래교육체제 구축)
155	**(7630/안○현) 국가교육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 교육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국정102)**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국가교육위원회의 확대 개편 및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
156	**(8253/박○준)** 재정투입 및 산학협력 등으로 **지방거점대학을 육성**해야 합니다.	**(국정55)**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국가균형성장 추진)
157	**(9866/천○진) 외교적 연계**를 통한 교육, **인재양성, 연구 협력 전략**을 제안합니다.	
158	**(9421/이○선) 지방산업 연계** 등을 통해 지방거점**대학을 특성화**하면 좋겠습니다.	**(국정55)**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지역산업과 국립대-사립대 동반성장을 위한 RISE체계 재구조화)
159	**(4882/김○흥) 지역산업-대학-지자체 협력** 중심의 **융합교육**과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세요.	
160	**(4372/김○련)** 계열별, 지역별 대학 **특화구조 마련**으로 **지역대학의 발전**을 촉진해 주십시오.	
161	**(4206/박○일) 지역인재 양성** 등을 위한 **교육특구** 등을 제안합니다.	**(국정55)**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 구축)
162	**(5125/오○준) 인구소멸지역**에 **통합학급 도입**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163	**(8322/강○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국정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 강화)
164	**(11906/홍○아) 시민**들의 자발적 **탄소중립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안합니다.	**(국정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기후시민' 참여 기반 구축)
165	**(4830/김○흥)** 자원순환을 위해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해 주세요.	
166	**(12324/윤○호)** 한국 제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전략적 해외진출**을 제안합니다.	**(국정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기후·환경분야 K-이니셔티브 창출)

	국민제안자 / 제안내용	반영된 국정과제(실천과제)
167	**(495/김○관) 지역별 맞춤형 홍수총량제**를 통한 홍수 예방 및 가뭄 대비를 제안합니다.	**(국정43)**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미래 기후위험 대비를 위한 국가 인프라 혁신)
168	**(10911/정○종) 기후 위기를 맞아 꼼꼼한 점검**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해 주세요.	**(국정43)**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사회 전 부문의 기후적응 역량·강화)
169	**(117/이○호) 세종보 철거, 하천 준설 중단 등 재자연화**를 이뤄주십시오.	**(국정45)** 4대강 자연성 회복 및 한반도 생물 다양성 회복(4대강 재자연화 및 하천 고유성 되찾기)
170	**(7237/이○규)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국민참여 확대 등 **종합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정45)** 4대강 자연성 회복 및 한반도 생물 다양성 회복(신뢰받는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171	**(2276/김○성)** 생활주변의 미세먼지와 도로 위의 **미세먼지를 해결**해 주십시오.	**(국정44)**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172	**(10629/안○현)** 전국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더 많이 설치**해 주세요.	
173	**(4663/김○련)** 제품 내 **환경호르몬 함유 여부**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등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국정44)**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위해 화학물질 및 제품 피해로부터 안전한 사회)
174	**(1801/김○중)** 용산어린이 정원의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여 안전성을 확보해 주세요.	
175	**(2444/김○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시스템을 **재사용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재사용 및 순환경제를 구현해야 합니다.	**(국정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국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 추진)
176	**(2542/이○지) 일회용 비닐 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친환경 **다회용 제품**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도록 해주세요.	**(국정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통한 순환이용성 제고)
177	**(8616/박○형)** 전자담배 등 **배터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정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통한 순환이용 확대)
178	**(4633/김○훈)** 병, 캔, 플라스틱의 **분리수거 방법을 개선**해 주세요.	
179	**(457/정○근)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를 강화**하여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세요.	
180	**(5777/홍○경)** 우리나라 **토종 플랫폼을 활성화**해 주세요.	**(국정103)**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의 국가 전략산업화 추진(K-콘텐츠·플랫폼 핵심산업의 전략적 육성·지원)
181	**(2541/곽○규)** 불법 웹툰, 불법 애니메이션, 불법 드라마, 불법 영화 등 **불법 헤비업로더를 단속**해 주세요.	**(국정103)**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의 국가 전략산업화 추진(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및 저작권 보호 강화)

	국민제안자 / 제안내용	반영된 국정과제(실천과제)
182	**(4385/김○예)** 공교육 내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전에 삭감하였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복구**해 주세요.	**(국정104)**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K-아트, K-컬처의 세계 확산 지원)
183	**(9002/조○화)** **해외박물관 전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정104)**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일상 속 국민 문화 향유 확대로 문화강국 실현)
184	**(10135/최○은)** 암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티켓 재판매 사이트**를 만들어 주세요.	
185	**(9076/김○재)** 암표 거래 유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예매 사이트의 취소 수수료를 완화**해 주세요.	
186	**(8834/박○윤)** 암표 거래와 관련하여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187	**(2827/최○실)** 공연 **암표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중고거래와 관련한 플랫폼 사업자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 주세요.	
188	**(7467/이○현)** 소중한 언어 유산인 지방 **사투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정104)**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문화가 이끄는 지역발전 및 생활문화 기반 강화)
189	**(4257/장○휘)** **DMZ 세계평화공연** 개최를 제안합니다.	**(국정118)**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개발)
190	**(8244/박○준)** 지역관광, K-콘텐츠 연계 등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정107)**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지역 관광 자원 특화로 지역 경제성장 견인)
191	**(8170/김○경)**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정108)**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192	**(1143/박○진)** **스팸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점검해 주세요.	
193	**(38/김○섭)** **스팸 메시지, 전화 방지 정책** 만들어 주세요.	
194	**(4802/윤○식)** 인앱결제강제방지법 등 **해외 앱마켓 운영자의 우회 행위** 및 **수수료 착취 구조를 개선**해 주세요.	**(국정108)**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디지털 이용자의 권리 보장)
195	**(2286/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세요.	**(국정25)**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확립(중대사고 엄정제재와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상 실질화)
196	**(154/이○찬)** 플랫폼상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사망자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국정25)**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확립(디지털 잊힐 권리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197	**(3503/천○정)** 법적 근거가 희박한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하여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정05)**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정책감사 중단을 위한 법제화 등 감사체계 재정립)
198	**(3828/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 공개된 공간에서 **차별, 비하, 혐오 표현 사용을 제한**하여 인권과 공공질서를 보호해 주세요.	**(국정08)**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 선진국 실현(혐오·차별 방지 및 인권존중문화 확산)
199	**(9011/김○훈)**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에 대한 염려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주세요.	**(국정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자 전방위적 보호체계 구축)

	국민제안자 / 제안내용	반영된 국정과제(실천과제)
200	**(8273/이○학)** 사후적발 및 처벌 위주의 **부패방지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주세요.	**(국정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글로벌 반부패 경쟁력 및 국가청렴도 제고)
201	**(5305/육○국)** 사회복지 분야 **부정 수급을 차단**하여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2	**(10240/박○규)** **AI 도입** 등을 통해 **국민신문고 정책제안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제안 처리에 있어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주세요.	**(국정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AI국민권익플랫폼 구축)
203	**(10428/이○영)** 검찰청 등 **주요 사정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세요.	**(국정0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검찰청의 폐지와 (가칭)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
204	**(10621/안○현)** 벌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금액을 소득과 재산 수준에 비례하여 부과**해 주세요.	**(국정06)**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국민 참여와 인권 중심의 사법 제도 개선 및 사법개혁 추진기구 설치)
205	**(7235/김○욱)** **대법관을 증원**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정06)**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재판 보장을 위한 인력 구조 및 제도개선)
206	**(5042/서○리)** 범죄수사나 형사소송 과정에서 약자들의 진술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국정06)**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범죄피해자 보호 및 변호인 권리 보장 강화)
207	**(536/김○주)** **범죄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주세요.	**(국정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관계성 범죄 방지를 위한 선제조치 도입 및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고도화)
208	**(3308/장○빈)** **마약 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어 주세요.	**(국정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및 예방 강화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209	**(1587/서○오)**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폐지**해 주세요.	**(국정04)**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210	**(6221/박○욱)** **공영주차장**이나 도로변에 **장기간 주차된 차량을 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해 주세요.	**(국정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주민 밀착형 교통안전(보행·전기차·이륜차·PM) 체계 고도화)
211	**(9093/장○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률**을 조속히 만들어 주세요.	
212	**(7241/지○수)** 따로따로 관리되고 있는 **지상과 지하의 공간정보를 연계**해서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국정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싱크홀 예방 지하안전대책 마련)
213	**(4164/이○관)**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화셔터와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주세요.	**(국정73)**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재난 현장 긴급구조 대응 역량 강화)
214	**(1777/박○관)**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소방 점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주세요.	
215	**(1345/장○영)** **사회적 참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조사 과정에 유가족 등의 참여를 보장해 주세요.	**(국정73)**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사회적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회복지원)
216	**(5854/이○용)**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입법권을 확대**해 주세요.	**(국정52)**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217	**(4088/정○혁)** 공공건축물 수준 제고 및 실력있는 건축가들의 성장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건축 설계 공모 시장을 조성**해 주세요.	**(국정49)**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중소도시 육성 지원)
218	**(6266/안○영)** **지역사랑상품권**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보완**해 주세요.	**(국정53)**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및 발행규모 대폭 확대)
219	**(9790/강○현)**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체납관리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체납 세액**을 엄정하게 **징수**해 주세요.	**(국정53)**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지방교부세율 22%까지 단계적 상향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

	국민제안자 / 제안내용	반영된 국정과제(실천과제)
220	**(10998/강○덕)** 국군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해 주세요.	**(국정02)**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합동성 강화를 위한 군 교육기관 및 양성체계 혁신)
221	**(9150/김○환) 국군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중증외상 외과의와 기피 의료과 의사를 충원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222	**(5001/이○아)** 여군의 비율을 확대하고, **여군의 복무환경을 개선**해 주세요.	**(국정111)**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만 전념하는 군체계 확립(여군비율 확대 및 역량 강화 지원 등 여군 복무여건 개선)
223	**(8739/안○홍) 예비군**의 사기 진작과 동기 부여를 위해 **수당을 지급**해 주세요.	**(국정111)**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만 전념하는 군체계 확립(예비전력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예비전력 정예화)
224	**(11092/강○현)** 군과 경찰의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군인과 경찰관**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해 주세요.	**(국정02)**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부당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225	**(1863/양○철) 군무원**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부 정책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국정02)**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국방 문민화)
226	**(234/손○화) 군무원도 정책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세요.	
227	**(4869/김○흥)** 군에서 발생한 사건이 은폐되지 않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군 사법시스템을 개선**해 주세요.	**(국정02)**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 개혁)
228	**(9061/이○호)** 군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세요.	**(국정112)** 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군인 복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
229	**(8791/송○석) 직업 군인의 급여를 현실화**하고 관사 신축, 개보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세요.	
230	**(4453/한○흥)** 군 **초급간부와 부사관**의 사기진작을 위한 급여 인상과 **복지제도 확충**을 희망합니다.	
231	**(8715/이○구)** 전투기 소음에 고통받는 대구 동구 주민을 위해 **대구군 공항을 이전**해 주세요.	**(국정112)** 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민군 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 및 군 공항 등 군 점유부지 이전)
232	**(4866/김○흥) 군납 시스템을 개선**하여 군납 **비리를 예방**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정113)** 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강국 진입(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
233	**(724/남○희) 경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 사업**을 실시해 주세요	**(국정115)**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종교·문화·체육 등 다양한 민간교류 지원)
234	**(4692/홍○희)** 제3국에서의 봉사활동 등 **남북한 청소년이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235	**(8937/김○환)** 노령의 남북한 **이산가족**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봉할 수 있도록 **교류사업을 추진**해 주세요.	**(국정116)**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236	**(724/남○희) DMZ내 국제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분단의 상징을 생명의 공간으로 바꿔주세요.	**(국정118)**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개발)
237	**(1093/이○원)** 개성공단 재개 등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정상화**해 주세요.	**(국정118)**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경제협력 사업 재개 및 다자협력 추진)